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성과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CONTENTS

0 [총론]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1.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비전과 전략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06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본 이념
   녹지 민주주의 11
3. 정책과제 제안 및 선정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 16
4. 정책과제의 전문적 조사·연구를 위한 운영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4

1 [1분과 :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구축 및 지역별 국가도시공원 계획

1. [과제총론] 국가상징공간 조성 필요성 발의
   새로운 시대의 국가상징공간 28
2. [세부 정책과제-1] 국가상징공간의 이론적 기반 구축과 기본구상
   국가상징공간의 인지와 표상 32
3. [세부 정책과제-2] 국가상징공간의 가치와 장소
   국가상징공간의 장소적 가치 발굴과 회복 37
4. [세부 정책과제-3] 선도사업을 통한 국가상징 거점공간 확산 기반 구축
   국가상징 거점공간 조성 45
5. [세부 정책과제-4] 국가상징공간의 확산 전략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전국적 확산 54
6. [세부 정책과제-5]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재정립과 활성화 전략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56

2

[2분과 : 건축문화진흥-ESG+A]

ESG+Art 기반 기후변화 대응 도시·건축 선도

1. [과제총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ESG+A 도시공간 혁신 전략 64

2. [세부 정책과제-1]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 영위를 위한 기본 이념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67

3. [세부 정책과제-2] 일상 영역에서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녹지향유권 실현
   거리그린벨트 조성방안 모색 74

4. [세부 정책과제-3]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문화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 80

5. [세부 정책과제-4]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 혁신전략 제안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전략 제안 83

6. [세부 정책과제-5]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산업계 경쟁력 확보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 89

3

[3분과 : 정책조정-ICT 융복합 K-도시]

ICT 융복합형 K-도시, K-건축 사업모델 개발 및 수출

1. [과제총론] 스마트와 전통의 융합
   K-도시건축의 비전 98

2. [세부 정책과제-1] 전통의 아름다움과 기술의 연합
   스마트 K-HOUSE 활성화 105

3. [세부 정책과제-2] 디지털 전환 시대, 차별화된 융복합 건축 전략
   스마트 그린 K-건축 플랫폼 구축 116

4. [세부 정책과제-3] 설계에서 운영까지, 건설혁신의 출발점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129

5. [세부 정책과제-4] 건축품질 및 안전관리의 디지털 통합
   스마트건설 기술 환경구축 138

4

[4분과 : 건축문화진흥-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 고령화 사회 대응 국가도시·건축 계획

1. [과제총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건축·도시적 대응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 전략 144

2. [세부 정책과제-1] 대학도 도시도 활력을 갖게 되는 상생 프로젝트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148

3. [세부 정책과제-2] 인재·인구 유인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 조성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개발 155

4. [세부 정책과제-3] 지역의 숨은 장소를 찾아 새로운 활력 거점 조성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거점화 163

5. [세부 정책과제-4] 공공건축과 지역주민 삶을 연결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168

6. [세부 정책과제-5] 세대 간 친화도시 리본 시티(RE-BORN CITY) 구현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 173

5

[5분과 : 정책조정-제도혁신소위]

건축 관련 제도, 법령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한 제도혁신소위

1. **제도혁신소위 구성과 과제 선정** 180
2.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187
3.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 191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효율화 및 발주제도 개선** 194
5. **건축저작권 활성화** 199

6

정책공감과 확산 노력 208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한 사람들 333

0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비전과 전략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1.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비전과 전략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본 이념
녹지 민주주의

3. 정책과제 제안 및 선정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

4. 정책과제의 전문적 조사·연구를 위한 운영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총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권영걸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비전과 전략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권 영 걸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짧은 기간에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제일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후과가 심각했다. 우리는 사회 경제적 격차, 갈등과 분열, 양극화 같은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고,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도시건축이 관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도 결국은 도시와 건축 환경이다. 신 문명시대의 행복한 삶의 조건은 국민 정주 공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찾아야 하며, 도시건축의 정책 패러다임은 치유와 소통, 화해와 통합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녹지, 그린(Green)으로 풀어내고자 하며,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원 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이는 자연 친화적인 국토환경, 건강한 생태도시를 구현해서 국민의 삶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 공간의 쾌적성과 매력도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가 구현된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인 인구감소, 지방 소멸의 문제, 경제적 문화적 격차의 문제,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현안들이 서서히 풀릴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도시건축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간과했다.
첫 번째는 미학적 수준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의 '경축, 정밀 안전진단 통과' 현수막을 보면 복잡한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살아온 공간을 허무는 것을 축하하는 세태가 과연 바람직할까? 이와 대조적으로 로마의 판테온과 경주의 불국사는 아무도 헐어버리자고 하지 않는다. 이 건축물들이 담고 있는 장소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가 시간을 초월한 소중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 관점을 매우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세기는 조그만 땅이라도 건축하고 건설하며, 이익이 기대되면 낡지 않은 건물도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식의 과잉 확장주의적 개발 논리가 지배했던 시기이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의 해를 끼치든 상관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큰 이익을 남기려 했으며, 그 결과 자연환경은 혹사당하고 생태적 관점이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이러한 반문명적 풍토를 성찰하고 미학적 가치와 생태적 관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녹지 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일상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녹지 향유권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점진적으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의 도시 마을과 공동체가 생태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녹지 민주주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녹지 환경에서 직(職)주(住)락(樂)을 할 수 있는 국민 행복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대도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녹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방이 중심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나라를 공원같이, 도시를 정원같이 바꿔 나가며 오늘의 건축문화를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회색 인프라를 생태적 그린 인프라로 재구축하는 일에 온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나라를 공원같이, 도시를 정원같이 바꿔 나가는 오늘의 건축문화를 편성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물이 동물을 부른다, 녹지가 사람을 모은다

식물은 동물 없이도 살 수 있다. 뿌리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며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명순환을 통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물은 식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성경의 창조 질서에서도 식물이 동물보다 먼저 창조된 것과 같이 식물은 모든 생명을 위한 기반이다.
아울러 식물은 동물을 유인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꽃으로 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고요한 숲이 조류와 야생동물을 끌어들이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이다. 이와 같이 '식물이 동물을 부른다'라는 생태적 원리는 인간 사회에서 '녹지가 사람을 모은다'는 명제로 적용된다.

인간은 왜 녹색에 끌리는가? : 회복과 치유의 생존 본능

인간이 본능적으로 녹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생태계 내에서 녹색이 생명과 생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녹색의 환경은 수자원의 존재와 생명의 성장, 그리고 식량의 생산과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류는 녹색을 띤 곳이 있으면 그곳에는 물이 있고 생명이 돋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바나 이론'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은 초원과 숲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생존의 조건을 찾았고 이러한 경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유전자에 누적되면서 본능적으로 자연과 연결되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것이 녹색 선호로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에서 지적·감각적으로 과부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91%에 달하며, 도시인의 삶은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자연과 접촉 없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피로감과 불안정성을 축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휴가 기간 중 다수의 시민이 녹색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찾아 녹색을 찾아가는 내면적 회귀 과정이다. 또한, 기계적인 회색도시의 삶에서 겪은 심적,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고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다.

그린의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사회적·생리적 균형 훼손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곳은 본래 녹지였다. 자연생태계를 걷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현대 도시이며,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는 자연에 대한 침입적 존재이다. 자본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는 끊임없이 자가 증식하는 거대 공룡과 같으며, 본질적으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녹지를 지속적으로 잠식해 나간다. 그 결과 인간의 정주 환경은 콘크리트로 구성된 회색 환경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는 인간의 정서적, 사회적 소외와 갈등, 정신건강 문제, 범죄율 증가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하면서 급기야 도시는 만악의 씨앗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도시의 녹지의 결핍이 각종 사회문제와 관계된다는 점을 인식한 지각있는 시민들이 도지 내 녹지의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다. 그러나 소수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의 제한된 담론으로는 녹지 기반 국가라는 이상을 실현하기에 불충분하다. 이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녹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함께 지금 왜 녹지인가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

녹지의 회복과 확대 :자연성과 인간성의 회복

녹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현재 중대한 변화 국면에 있다. 수 세기에 걸쳐 인류는 도시설계에서 세련된 도시적 생활양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제는 Urban Re-wilding, 즉 도시의 '자연화', '야생화'가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거지를 선정할 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최근 '공세권', '공원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공원과 산림에 근접하여 녹지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해서 녹지를 찾던 생활 가운데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지역 평가 지표에서 녹지율이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와 근린공원, 특히 '포켓 파크'와 같은 생활주변의 작은 녹지가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적 표현이다. 회색 콘크리트 도시에서 녹색 도시로의 전환은 단순한 미적 변화를 넘어, 인간 존재 방식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은 녹지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중대한 철학적·사회 이론적 배경이며 사회 모든 계층의 녹지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이다.

녹지 불평등: 환경적 정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모든 사회계층이 녹지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목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지역 간 경제 격차는 공원, 숲, 녹지대 등 녹지공간의 양과 접근성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부유한 도시와 지역사회는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녹지 확충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거주지역은 고밀 개발 지역인 경우가 많아 녹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은 넓은 공간에 저밀도로 개발되어 녹지 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녹지 조성의 여건의 차이는 주거지 선호도와 부동산 가치와도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녹지공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녹지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녹지의 양적인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지표, 평균 수명,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역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는 표면적 도시계획의 문제를 넘어서 환경적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과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확보라는 근본적 과제와 연결된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녹지 향유권의 실현

녹지가 풍부한 국가는 희망적 미래가 보장된다. 녹지 민주주의는 생태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정의가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구축하는 정치사상이자,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을 포괄하는 보편적 이념이다.
물과 공기, 햇빛이 독점 대상이 될 수 없듯이, 녹지 환경 역시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 이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공공적 자산이라는 의미다.
녹지를 확대하고 보호하는 정책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 하는 차원을 초월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인간성 회복과 사회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녹지가 사람을 모은다'라는 핵심 명제가 시사하듯, 녹지라는 공공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사회적 갈등·폭력·공격성 감소, 공동체 연대 의식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녹지를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은 녹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헌법 차원에서 규정해야 하며, 지자체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관련 기본법을 개정하고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공고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녹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소득, 지역, 계층적 장벽을 초월하여 녹지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도농(都農)간, 경향(京鄕)간, 빈부간 녹지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녹지가 풍부한 나라가 희망의 나라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녹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녹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희망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본 이념

녹지 민주주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녹지의 가치

현대 도시는 빌딩과 아스팔트로 가득 차면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자연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개발이 진행될수록 공원과 녹지는 감소하고, 도시 온도는 상승하며 공기질은 악화되고 생물 다양성은 감소하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녹지는 우리 삶에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수목과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여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공원에서의 신체활동은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은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도 기여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녹지 인접 부동산의 가치 상승, 에너지 비용 절감, 의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이는 반대로 녹지 부족은 시민들의 건강 악화와 지역 간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녹지 결핍 현황 및 불균형 심화

한국의 도시 녹지 현황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의 녹지 지수는 39.65점으로, 독일 뮌헨(69.94점)이나 이탈리아 제노바(68.40점)와 같은 녹지가 풍부한 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의 녹지 비율은 31%, 수목 피복률은 18%에 불과해,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시민들이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 녹지는 더욱 제한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녹지가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는 공원과 가로수가 조성되지만, 저소득층 거주지역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녹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녹지 불균형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은 여름철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며, 홍수 피해 역시 더 크게 발생한다.

도시 녹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녹지는 더 이상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녹지가 풍부한 도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하며,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녹지 확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서울시 내 극과 극의 생활권도시숲 보유 지역 전경]

출처 : 신혜정. (2022, 6월 9일). 도시숲조차 부유한 지역에 몰려... 공원 하나 찾을 수 없는 서민 동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현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지 결핍과 불균형 문제의 해법으로써 '녹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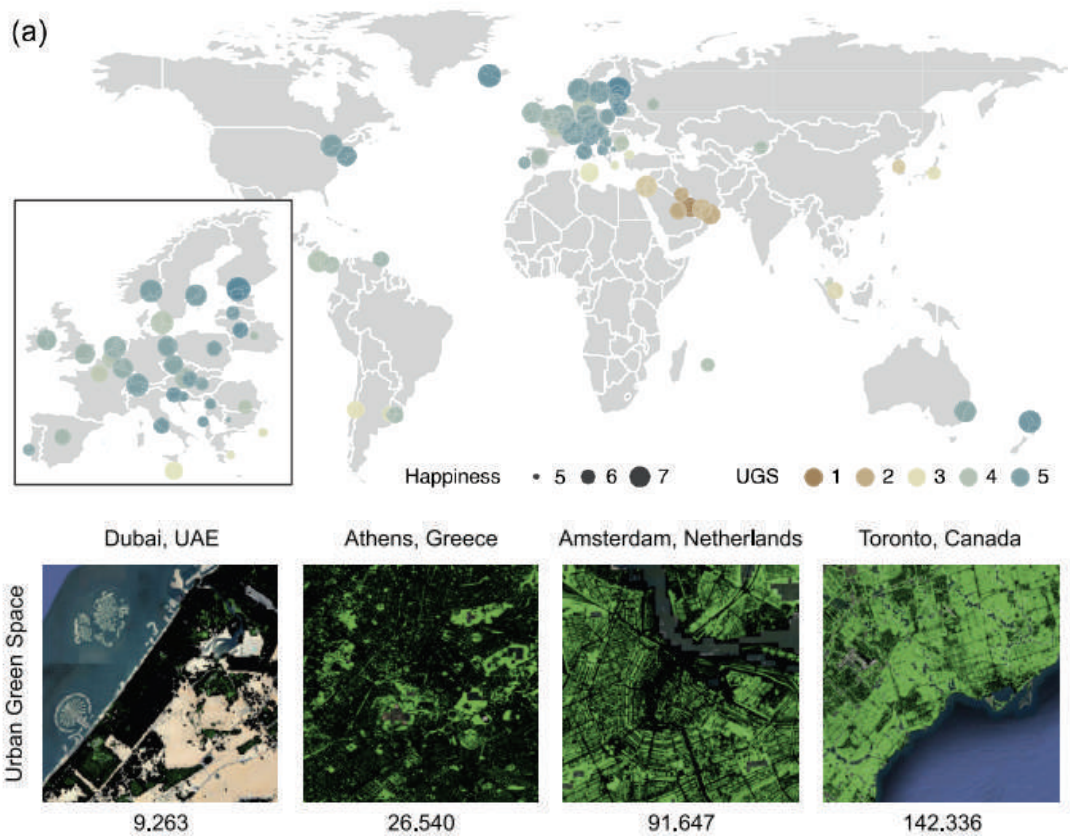
단순히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질적으로 우수한 녹지를 모든 지역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모든 시민이 양질의 공원과 녹지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시민들이 녹지 계획과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 발전할수록, 도심 녹지가 시민 행복에 직결

10m 공간해상도 위성 이미지로 세계 60개국 도시환경 분석

빅데이터로 분석한 행복의 원천 …"녹색 도시에 살수록 더 행복"

전 세계 60개국에 대해 도심의 녹지 비율(원 색)과 행복도 조사 결과(원 크기)를 비교한 결과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



[국가별 행복도와 도심 녹지 비율 상관관계]

출처 : 기초과학연구원 2021년 6월 8일 보도자료, https://www.ibs.re.kr/; Kwon OH, Hong I, Yang J, Wohn DY, Jung WS, Cha M. Urban green space and happiness in developed countries. EPJ Data Sci. 2021;10(1):28.

녹지 민주주의 정의와 개념

녹지 민주주의 : 국민이 녹지를 평등하게 누리고, 직접 조성하고, 자유롭게 향유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는 녹지공간이 증가할수록 인간의 행복, 건강, 자유가 확보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녹지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자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녹지를 조성하고 자유롭게 향유하도록 하는 이념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지 결핍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녹지 민주주의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자유권(제12조)의 가치를 계승한 개념으로,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인 국민주권, 평등, 자유를 녹지공간과 결합하여 녹지 민주주의 3대 철학을 정립한다.

[녹지주권] 녹지를 직접 조성하고 가꾸어나갈 원칙

녹지를 국민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민이 녹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다.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녹지 정책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지평등] 녹지를 평등하게 누릴 원칙

녹지가 특정 계층의 특권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는 관점을 확립한다. 사회적 지위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수준의 녹지를 누릴 권리와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권리를 보장하며. 도시 내 모든 지역에서 질 높은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여 환경적 형평성을 지향한다.

[녹지자유] 녹지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원칙

시민들이 녹지를 이용하는 데 선택과 참여가 자유로워야 하며,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로써 녹지를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 문화적, 교육적, 생태적 활동의 장(場)으로 활용하여 도시민의 창조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

[녹지 민주주의 개념의 설정]



정책과제 제안 및 선정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7기의 출범과 함께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도시건축의 문제점과 사회적 과제를 녹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도시화로 인한 환경 악화와 불평등한 녹지 분포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녹색 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상징공간 구축, 한국형 매력도시 모델 개발, 한국형 첨단도시 모델 개발, 도시재생·균형발전이라는 4대 중핵과제 수립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각 전략은 녹지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축으로 삼아 도시 공간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세부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총 14회의 합동연석회의와 82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4대 전략과 17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정책연구,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녹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학적 가치와 생태적 관점을 도시건축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간 녹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취약지역의 녹지 우선 조성, 시민 참여형 녹지 관리 체계 구축,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도시설계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건축에서 국토공간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확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며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으며, 최근 세 시기의 국건위는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과 도전 과제에 직면하며 정책적 관점을 발전시켰다.

제5기(2018-2020)는 "더 나은 건축, 행복한 공간"이라는 비전으로 건축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제6기(2020-2022)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을 통해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을 시작했다.

[제5기~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비전 변화]

제5기(2018-2020)	제6기(2020-2022)	제7기(2023-2025)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대응 건축도시**	**국토도시-인간의 공생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 문제 해결**
"더 나은 건축, 행복한 공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 건축물과 건축산업 • 건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건축문화 확산	•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도시환경 지속가능성 • 코로나19 대응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접근 시작	• **국토공간으로 정책 대상의 공간적 범위 확장** •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의 통합적 접근** • **인구감소, 지방소멸, 기후위기를 대응** - 건축도시 정책을 통한 적극적 문제 해결 • **ESG 가치와 기술 융합** - 환경 사회 메커니즘을 고려한 기술 통합적 접근 • **단계별 실행전략** - 4대 중핵과제, 17개 정책과제의 체계적 실행을 통한 목표 달성

제7기(2023-2025) 위원회는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비전으로 이전과 차별화된 패러다임 확장을 보여준다. 정책 대상의 공간적 범위가 건축물에서 도시공간을 넘어 국토공간으로 확장되었으며, 인구감소,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건축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ESG 가치와 기술 융합을 강조하며 환경·사회적 메커니즘을 고려한 기술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4대 중핵과제와 17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단계별 실행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국가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대규모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한 점은 건축을 통한 국가 정체성 형성과 미래 비전 구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7기 위원회는 건축물 중심의 산업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거쳐,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문제 해결 도구로서 건축정책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E)·사회(S)·거버넌스(G)에 예술(A)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

이전 위원회도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가치였으나, 제7기 위원회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ESG 가치에 예술(Art)을 결합한 통합적이고 차별화된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환경·사회적 측면과 미학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체계로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술의 접목을 통해 도시 공간의 문화적 정체성과 심미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거리 그린벨트 조성, 기후변화 대응 도시환경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능력 증대, 생물의 다양성 보전 등 구체적인 환경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시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복합적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단기적 대응이 아닌 도시의 장기적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건축의 정체성과 첨단기술의 결합 모델 제시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산업 혁신 측면에서의 디지털 전환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증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ICT 기술과 건축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 프로세스의 혁신과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스마트 한옥 대중화, K-건축 플랫폼 구축 등 한국 건축의 전통적 정체성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는 한국 건축의 고유한 가치와 미학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화하는 시도로, 국내 건축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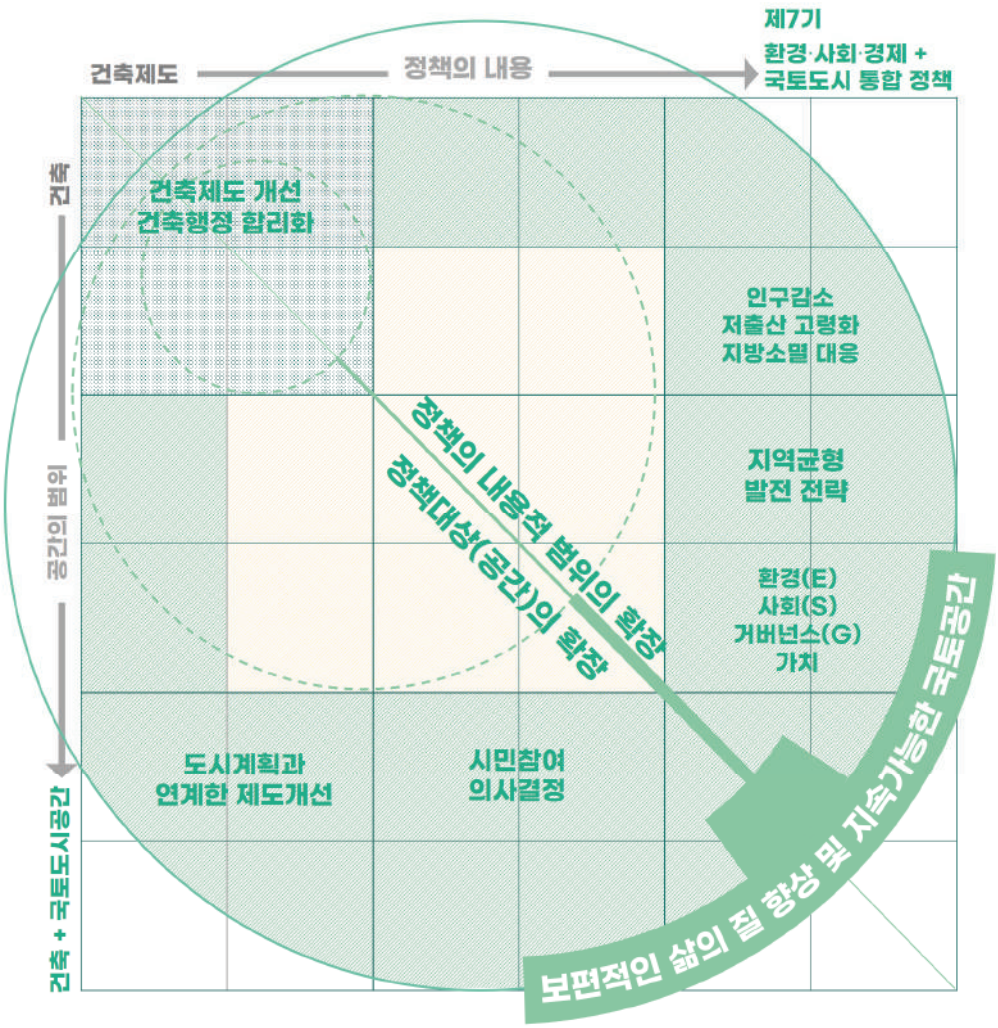
또한 건축 관련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핵심 해결 과제로 설정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핵심 전략으로 격상하고,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거점화, 대학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결합해 건축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녹지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와도 연결된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를 구축하는 통합적 정책 비전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건축도시정책을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하여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다루고, 정책 대상과 내용적 범위를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 더욱 확장하여 사회·문화·환경·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적 국토공간 정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의 내용적·공간적 범위의 확장]

정책과제의 설정 체계 :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향한 구조적 접근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중핵 전략으로 "국가상징공간 구축 및 지역별 국가도시공원 계획", "한국형 매력도시 모델개발", "한국형 첨단도시 모델개발", "도시재생·균형발전"을 수립했다. 이후 각 중핵과제는 여러 세부 정책과제로 구체화되어, 각 세부 과제는 중핵과제로 설정된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 체계는 모든 요소가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적 역학관계를 갖는다. 세부 정책과제의 수행은 중핵과제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며, 각 과제는 최종적으로 비전 달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녹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전략이며, 세부 과제부터 중핵과제, 최종 비전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초기 : 정책과제 설정 및 구체화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위원회의 운영체계 확립과 정책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4대 중핵과제에 따라 3개의 분과위원회 아래 세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는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비전 아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위원회는 분과별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17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녹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학적·생태적 가치를 복원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였다.

중기 : 실행 기반 마련 및 연구 착수

중기에는 확정된 17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각 과제의 특성에 맞게 연구용역 발주, 심포지엄 개최, 전담 조직(TF) 구성,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책과제를 뒷받침할 8개의 핵심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정하여 본격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용역은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비전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 성과보고' 등 외부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국가 전체의 건축·도시 정책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후기 : 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후기에는 선정된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수행 성과를 점검하고 확산하는 단계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착수-중간-최종단계별 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방향성을 조정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연구 성과와 정책 방향을 널리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였다. 국제 심포지엄, 컨퍼런스, 콜로키움,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책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에 힘썼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법률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과제 발굴은 초기 아이디어 제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 과정에서는 선행 연구와의 중복성, 과제 간 융합 가능성,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선정 과정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사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과제들을 융합하고 통합하여 더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둘째, 각 정책과제가 4대 전략과 명확하게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전략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실행 가능성과 파급효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넷째, 성과관리를 위해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소요 예산 추정 및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등 현실적 접근을 취하였다.

[중핵과제 1] 국가상징공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가 위상 변화 속에서, 전국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자산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체성을 표출하는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일상의 공간에 소통과 치유, 위로와 보훈의 가치를 담아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상징공간 구축'을 중핵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상징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민간·공공부문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기 13개 과제를 5개 정책과제로 통합·조정하는 체계적 접근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핵과제 2] ESG+A 기반 기후변화 대응 도시건축 선도 전략

환경·사회·거버넌스(ESG)와 Art(예술)를 결합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13개 초기 과제가 4개 핵심 과제(거리 그린벨트 조성, 기후변화 대응 도시 변화, 새 교육 새 학교, 목조건축 대중화)로 집약되었다.

[중핵과제 3] ICT 융·복합형 K-도시 사업모델 개발·수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23개의 과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이 중 10개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 최종적으로 4개 과제(스마트 한옥 대중화, 모듈러 건축 활성화, K-건축 플랫폼 개발, 스마트건설 기술 환경 구축)가 선정되었다.

[중핵과제 4] 도시재생·균형발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도시 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3개 초기 과제 중 12개가 논의되어 최종적으로 4개 과제(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폐·유휴공간 재생,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로 확정되었다.

국가상징 공간구축

국가상징공간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 국가상징공간의 인지와 표상 : 국격 상징화 이론 기반 구축
- 용산국가공원 조성 관련 계획 : 역사·문화 자산 활용, 공공공간 확보 등
- 국가상징 거점공간 및 거리 조성 : 용산공원 주변부 개발 포함
-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 지역 균형 발전
- 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개발 등 관련 개발 모델의 전국적 확산

한국형 매력도시 모델개발

ESG + A (건축문화진흥 분과)

- 거리 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조성 : 녹지·문화 향유 공간
-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 : 탄소중립, 생태도시
- (가칭) 새 교육 새 학교 (舊 (가칭)다모아(DA-more) 누리센터 : 교육환경 변화 대응 공간 혁신
-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 : 탄소중립 기여, 산업 육성

K-도시·건축 (정책조정 분과)

- 스마트 한옥(K-HOUSE)의 대중화 : ICT 융합, 문화·예술·디자인 결합
- 모듈러 건축 활성화 : 주택 공급, 재난 대응, 산업 생태계 구축
- K-건축 플랫폼 개발 : ICT 기반 스마트 그린 건축, 수출 전략
- 스마트건설 기술 환경 구축 : BIM 활용, 디지털 전환

한국형 첨단도시 모델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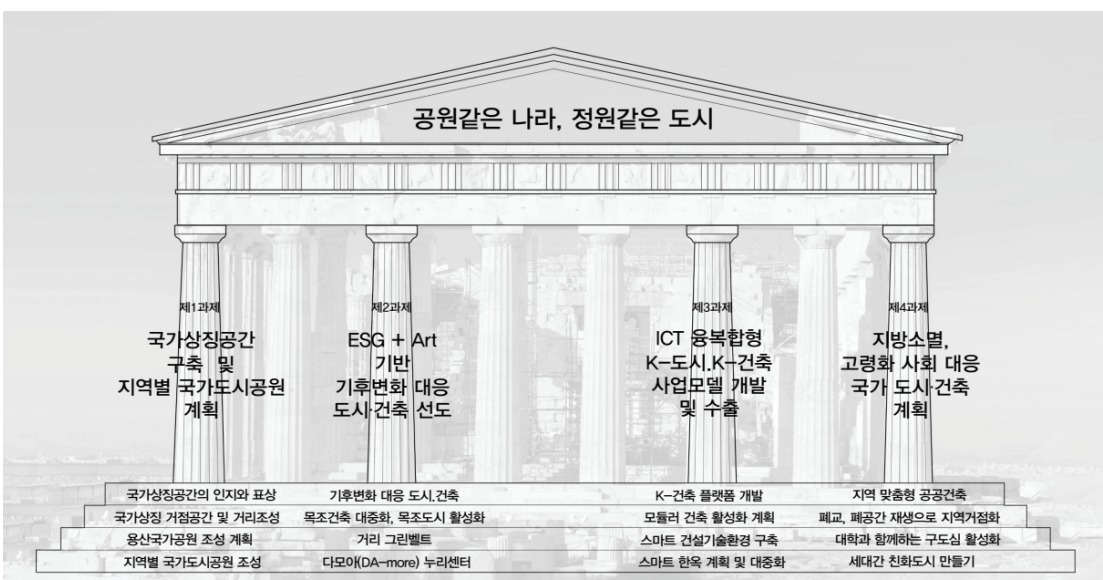
지방소멸과 고령화시대 대응 (건축문화진흥 분과)

-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 유휴시설 활용, 지역 거점화
- 폐·유휴공간 재생으로 지역 거점화 : 빈집, 폐교, 산업시설 활용
-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 공공건축의 기능(질적) 향상, 민간 전문가 활용
- (가칭)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 (舊 세대 간 친화 도시 만들기) : 고령화 대응, 순환 구조

도시재생 균형발전

제도혁신소위원회 (정책조정 분과)

-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설계공모 제도개선, BIM 기반 전환, 건축사 자격제도, 하도급 관리, 디자인 저작권, 건축물 성능관리, 발주 방식 개선, 폐교 활용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 논의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비전과 4대 중핵-정책-실행과제 체계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자료

전문적 조사·연구를 위한 운영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 구성의 배경과 원칙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 목표에 기반한 분과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설정한 주요 정책과제인 국가상징공간 조성, ESG 가치 내재화, K-건축의 발전과 세계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중핵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조정 분과,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건축문화진흥 분과 3개의 대분과를 구성하고 그 아래 4개의 소분과위원회(K-도시·건축, 국가상징공간, ESG+A, 지방소멸 대응)와 1개의 소위원회(제도혁신소위)를 신설하여, 건축 및 도시 공간 관련 핵심 현안을 논의하였다.

세분화된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 전문성 및 심층성 강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개의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정 정책 분야에 집중하여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극대화하였다. 각 소분과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합동연석회의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전문적 내용을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였다. 합동연석회의는 분과 간 벽을 허물고 정책과제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전 위원회 대비 합동연석회의를 통한 소통과 조정을 대폭 강화한 것은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과로 평가된다.

제도혁신소위 운영을 통한 정책 실행력 제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위원회 논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전담 논의하고 합동연석회의를 통해 정책화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혁신소위'를 정책조정분과 내에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4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위원 17인과 11개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국가 건축정책의 통합적 추진력을 확보했다. 특히 3개 대분과 아래 4개 소분과위원회와 1개 제도혁신소위를 운영함으로써 건축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크게 강화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성은 분과위원회 중심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이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82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정책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건축행정과 제도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월 1회 진행된 합동연석회의(총 14회)는 분과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 2개 이상 분과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분과별 논의 사항을 위원회 전체가 공유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제도혁신소위를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건축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해 정책자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 검토와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다층적 운영체계는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소분과, 소위) 구성현황]

정책조정 분과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건축문화진흥 분과
• 건축정책기본계획 • 중앙행정기관간 건축정책의 조정 • 공간환경 기획, 건축제도 개선 등 • 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건축디자인 향상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 민간전문가 추천 • 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	• 건축문화진흥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건축교육정책 및 기초·전문 건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3분과)	제도혁신소위	국가상징공간 (1분과)	ESG + A (2분과)	지방소멸 대응 (4분과)
김현선*	김현선*	조세환*	김개천*	한광야*
강정훈, 권경현, 안용한, 이인화 조승구	김규린, 김소라 박성신, 손진락 안용한, 이인화 조승구	김개천, 김세훈 김종헌, 유이화 정진국	유이화, 조세환	김규린, 박성신 손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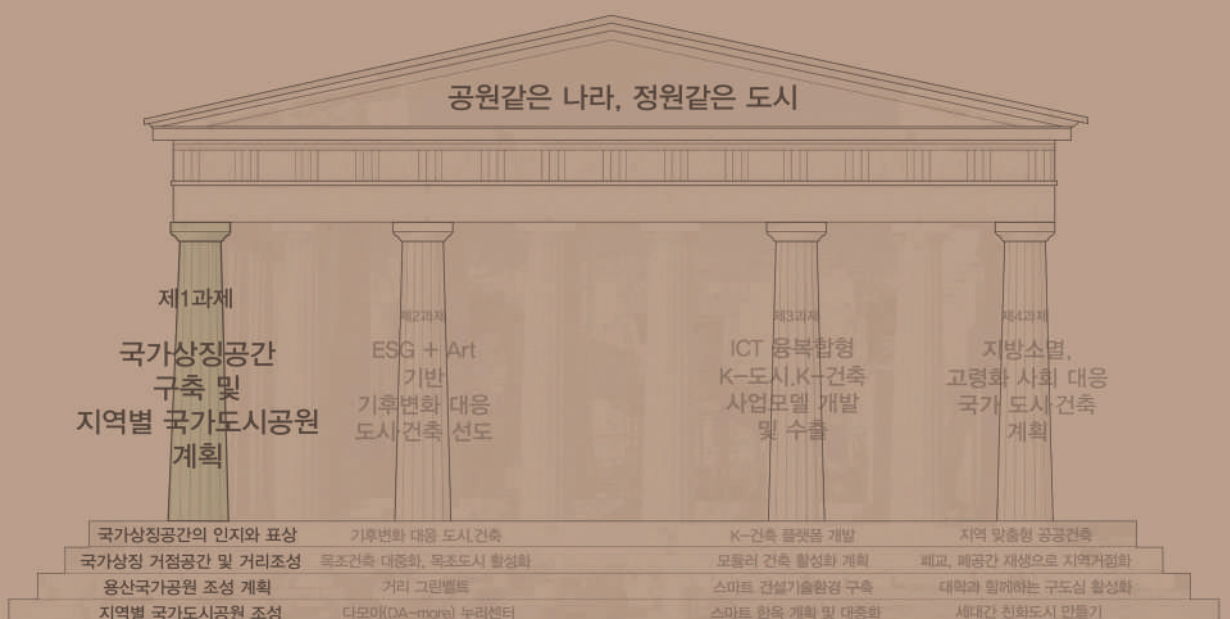
건축·도시·조경분야 민간 자문위원단

*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은 가나다순

PART

1

국가상징공간 구축 및 지역별 국가도시공원 계획



국가상징공간 조성 필요성 발의

새로운 시대의 국가상징공간

추진 배경

국가적 위상과 국민 공감을 담는 새로운 국가상징공간 조성 필요성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관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의식 발전에 부합하는 상징공간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OECD와 G20 참여로 외교적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문화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구현한 대표적 국가상징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도시 공간적 차원에서 구현하여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핵심 과제로 정의했다. 특히 경복궁과 같은 과거 역사 건축물을 넘어서 '신(新)인류의 새로운 관념과 경험까지 담아낼' 미래지향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가상징공간의 미래 비전과 방향 제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상징공간의 핵심 개념을 우리나라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 그리고 미래 비전을 실제 공간으로 구현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국토환경디자인 분과에 국가상징공간 분과위원회(이하 국가상징공간 분과)를 구성하고 국가상징공간을 기존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시설에서 시민들의 일상적 이용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상징공간 분과는 먼저 국가상징공간의 개념 정립을 위해 해외 국가상징공간 사례부터 국내 도시 공공공간 혁신 사례까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인문학·사회학 분야 문헌 검토를 통해 공공공간의 의미와 장소성, 상징 기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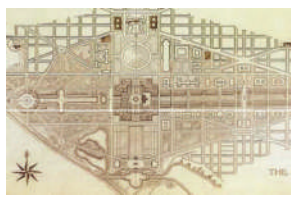
국가상징공간의 핵심 요소

국가상징공간 분과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상징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는 공간 구성 요소로 광장과 축을 제시했다. 광장은 시민들이 모이는 중심 공간 기능을, 축은 공간에 질서와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국가상징공간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공간, 역사적 건축물, 오벨리스크. 모뉴먼트 등의 4가지 조형 요소를 배치하도록 하고, 각 요소는 친수 환경 제공, 문화적 정체성 표현, 시각적 랜드마크, 역사적 의미 전달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안하였다.

국가상징공간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주변으로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 시각적 인지성을 높이고, 대표 건축물은 도시 전체에서 조망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하도록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국가상징공간의 핵심요소]

광장(Square) + 축(Axis)






수공간 (Water) + 오벨리스크(Obelisk) + 모뉴먼트(Monument) + 역사적 건축물(Historical Building)



[국가상징공간의 핵심 요소 적용 사례 – Washington, D.C. National Mall]

세부 정책과제 선정

정책과제의 세부 실행과제 선정 과정

국가상징공간 분과위원들은 8개의 초기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제3차 회의(2023.07.21.)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그 결과, '국가상징공간'이라는 중핵과제 아래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이론적 기반 구축부터 실질적 공간 조성까지의 영역을 다루는 5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제4차 회의(2023.08.18.)에서 5대 과제를 12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구체화하고, 제5차 회의(2023.09.15.)에서 최종적으로 9개의 과제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과제별 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1차 분과위원회 (2023.05.19.)

초기 정책과제 논의

- 범위 확장: '용산공원'에서 '국가상징공간'으로 공간·내용적 확장
- 개념 정립: 국가상징 이론 정립 및 국민 공감대를 위한 브랜딩 필요
- 지향점: 국가상징공간의 전국 확산과 과거·현재·미래 가치 통합 구심점 역할

초기 제안 내용 (위원별)

- 용산공원 기본구상 수립, 단계별(Phase 별) 개방 전략 마련,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 모색
- 용산공원 주변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 청와대-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 가로(축) 조성
- '국가 상징'의 의미와 철학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정립
- 지역 거점으로서 상징성을 가지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지정 기준 마련

1차 합동연석회의 (2023.06.02.)

정책과제 제안

-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공식 출범
- '국가상징공간' 정책과제 제안 논의

3차 분과위원회 (2023.07.21.)

5대 과제 책임위원 선정

- 용산국가공원 조성 관련 계획 수립 및 이행
- 용산공원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 국가상징 거점공간 및 국가상징가로 조성 추진
-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축 설정 및 상징성 의미 규명
-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제4차 분과위원회 (2023.08.18.)

세부과제 선정·논의

- 세부 실행 과제 방향 구체화
- 과제명의 조정
  - '의미 규명' → '인지와 표상'
  - '주변부 개발' → '개발모델 전국 확산'

정책과제 방향 구체화

- (용산공원 계획) 역사적 길 복원과 단계별 개방 시나리오 마련, 주변 사설과 지하 연계,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용산 주변부 개발) '스마트 네오 가든 시티' 모델 개발 연구 제안
- (거점/거리 조성) 국가상징 거점공간 개념 정립과 시범사업 추진
- (인지/표상)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국민 인식과 표현방식 연구, 공간의 철학 및 가치체계 정립
- (지역별 공원) 국가도시공원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모델 설계, Park-PFI 도입 검토 및 시범 대상지 탐색

3차 합동연석회의 (2023.09.01.)

제7기 위원회 정책과제 선정

- '국가상징공간' 분야 5개 세부 과제 최종 명칭 확정

4차 합동연석회의 (2023.10.13.)

- 주요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 이행 방안 논의

5차 분과위원회 (2023.09.15.)

정책과제명 확정

- 용산국가공원 조성 관련 계획
- 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개발 등 관련 개발 모델의 전국적 확산
- 국가상징 거점공간 및 거리 조성
- 국가상징공간의 인지와 표상
-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1분과 :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구축 및 지역별 국가도시공원 계획

국가상징공간 5대 정책과제 최종 선정

※ 2023.09.01. 3차 합동연석회의, 2023.10.13. 제4차 합동연석회의 자료 기준

[정책과제 1] **국가상징공간의 인지와 표상**	위원	정진국 위원
	주요내용	국격 상징화의 이론적 기반 구축
	실행방안	• 건축 · 도시 · 경관의 통합적 측면에서 공간에 대한 인지와 표상 조건 검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는 국가상징공간의 개념을 정립 •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로 수렴되는 국가의 상징화에 요구되는 공간적 구성의 이론적 기반 구축
[정책과제 2] **국가상징 거점공간 및 거리 조성**	위원	김세훈 위원
	주요내용	국가상징공간 개념을 구조화·구체화하고 12개 선도사업 후보지 검토
	실행방안	• 국격을 드러내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 거점공간으로 국토 전반으로 확장을 위한 전략과 거점 공간에 대한 정의 • 4가지 유형으로 △ 광역 인프라용 거점, △ 문화 거점형 공간, △ 공원 녹지형 거점, △ 미래 클러스터형 거점 공간으로 검토
[정책과제 3] **용산 국가공원 조성 관련 계획**	위원	김종헌 위원
	주요내용	용산국가공원의 비전과 추진 전략 : 옛길 회복을 통한 용산국가공원의 단계별 개방 전략, 지하공간의 활용을 통한 용산국가공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
	실행방안	• 지속적인 삶의 일상 공간으로 회복과 역사적 · 문화적 자산을 실용적 가치로 전환 • 녹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 구현 및 부족한 공공공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파편화되어 있는 국가(서울)의 공간 구조 재조직화를 위해 국가상징공간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조성
[정책과제 4] **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개발 및 관련 개발모델의 전국적 확산**	위원	조세환 위원
	주요내용	용산공원 주변부에 공원과 도시가 결합한 융복합 개발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 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확산 전략을 제시
	실행방안	• 용산공원 주변부 공원 · 도시 결합형 융복합 개발 • 용산 '스마트 네오 가든 시티' 개발모델의 전국 도시 적용 등을 위한 건축 · 도시 · 조경 분야 등 관련 분야와 학술 세미나 등 추진
[정책과제 5]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위원	조경진 위원
	주요내용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 연구 국가상징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민간 참여 유도 제도개선 추진
	실행방안	• 관계 부서의 선행 연구(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제도 개선안 연구)를 뒷받침,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원 •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1분과(국토환경디자인)	
세부 정책과제-1	
담당	정진국 위원

국가상징공간의 이론적 기반 구축과 기본구상

국가상징공간의 인지와 표상

추진 배경

본 과제는 국가상징의 개념과 이론을 먼저 정립하여 국가상징공간에 필요한 핵심 요소와 조건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롭게 조성될 국가상징공간이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인지)되며 어떤 의미를 전달할 것인지(표상)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국토환경디자인 분과는 국가상징공간의 기본 방향과 실행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구상 기획연구'를 추진하였다.

제1차 분과회의 (2023.05.19.)	'국가 상징' 개념 및 이론 정립 필요성 논의 • '국가 상징'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합의 • 과제 제안 : 국가공원으로서의 상징성 부여를 위한 방법과 절차 → '무슨 성격의 국가공원이 돼야 하는가?' (정진국 위원)
제2차 분과회의 (2023.06.16.) 제3차 분과회의 (2023.07.21.)	기획연구를 통한 이론 기반 구축 추진 → 국가상징공간 기본구상 기획연구 용역 추진 논의 • '상징'의 개념, '국가적 상징 활동'과 '일상적인 삶의 공간'의 상징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추진 논의 •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축 및 상징성 의미 규명 정책과제 결정
제4차 분과회의 (2023.08.18.)	국가상징공간 기본구상 기획연구 실행계획 보고 • 국가상징 조성을 위한 인문·사회 분야 이론적 근거 정립 필요성 논의 • 4개 관계기관(국건위,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의 유기적 협력과 명확한 비전 설정 필요성, 국가상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중요성 제시
제6차 분과회의 (2023.10.25.)	국가상징공간 기본구상 기획연구 진행 중간보고 / 컨퍼런스 개최 논의 • (기획연구) 국가상징공간을 국가 정체성 구현 및 국격 향상 공간으로 정의하고, 해외 사례 분석과 인문학적 검토를 통한 포용적 계획 수립 추진 • (컨퍼런스) 녹지 민주주의와 도시건축 컨퍼런스(가칭) 개최 논의 (주제·프로그램 구성, 발제자 선정 및 발표 주제 등)
국가상징공간 컨퍼런스 (2023.12.12.)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향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 개최 • 국건위-국토교통부-서울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 및 조성 방향 의견 수렴과 국가상징공간 핵심 가치 발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국건위-국토교통부-서울시 3자 간 MOU 체결 ('23.9.11)

정책연구 추진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적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광역적인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기존 국가상징공간이 개별 시설 중심의 점적(點的) 개발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로 및 지구 단위로 확장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면적(面積) 개발의 전환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상징공간과 관련한 현행 법정계획 및 비법정 계획을 제도적·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가 지닌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상징공간의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담론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국가상징공간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방식과 수단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의 개념 정의, 공간 유형 분류, 핵심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 서울 현충원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여 기본구상안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연구 목적

- 새로운 미래 국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정책적 목적, 수단 및 범위의 종합적 검토와 실제 추진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국가상징공간의 개념 검토 및 담론 분석
- 국내외 국가상징공간 관련 계획 및 사례 조사·분석
- 국가상징공간의 개념 정립 및 조성 방향
- 국가상징공간 선도프로젝트 기본구상안 제시

국가상징공간 개념 검토 및 담론 종합

국가공간의 상징성 이론 검토
개념적 + 실질적 요건 제시
정부 정책방향과 현안 포괄

국내외 관련 계획 및 사례조사 분석

국내외 국가 차원의 공공공간
+ 상징성 부여 사례 검토
기존 서울시 계획(광화문-용산 축 등),
용산공원과 주변 개발계획 검토

국가상징공간의 물리적 요소 제시

국가상징공간의 6가지 핵심 요소
- (필수) 광장(Square), 축(Axis)
- (선택) 수공간(Water), 오벨리스크(Obelisk),
모뉴먼트(Monument),
역사적 건축물(Historical Building)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기본구상안 제시

서울 현충원 일대를 대상으로 선도프로젝트
기본구상(안) 추진
- 국가상징공간 실현 가능성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검토

국가상징공간의 개념 정립 및 유형별 공간구성 원리 제시

본 연구에서는 국가상징공간의 장소성, 상징성, 공공성에 대한 종합적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문화적·시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개념화하였다. 특히 국가적 가치를 상징함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와 획일주의를 탈피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의 유형을 공간이 담아내는 가치에 따라 역사거점형, 공원·광장형, 문화자산형으로, 물리적 공간 특성에 따라서는 면적(面積) 공간과 선형가로로 유형화하고 각 공간의 목적과 이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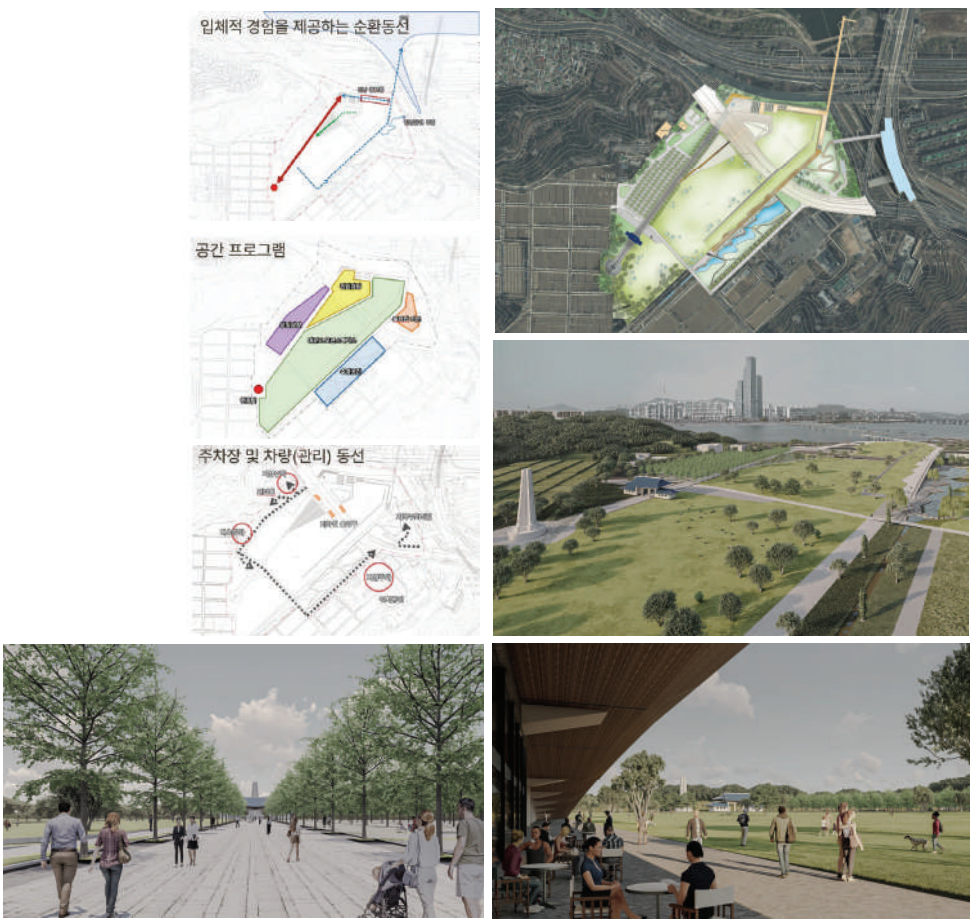
나아가 이러한 공간 유형이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물리적 요소와의 결합 방식을 제시하고, 각 도시의 고유한 맥락에 적합한 공간구성 원리를 마련하였다.

[국가상징공간의 개념과 공간구성 원리]



국가상징공간 자원 발굴 및 선도사업 추진 방안 제시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프로젝트는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2023년 9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서울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를 실증 무대로 선정하고 서울시의 기존 공간자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대상지를 검토하였다. 이는 근현대사와 함께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중심지이자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전국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체계적인 후보지 발굴을 위해 각 구청별 수요 조사와 전문기관 연구를 병행하여 78곳의 공간 자산을 검토하였다. 이를 역사문화거점형, 공원·광장형, 미래클러스터형으로 유형화하고 12곳의 1차 후보지를 선별한 후, 최종 5개 후보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지 선정에서는 단순한 입지 조건을 넘어 국가적 상징성과 역사문화적 가치, 그리고 관계기관의 추진 의지를 종합 평가하여 국립 서울 현충원을 선도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실증계획을 제시하였다.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상징공간 실증계획(안)]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국가상징공간조성 기본 구상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2024.06.)' 참고

정책 현장의 회고

국가상징공간의 인지와 표상

정진국 위원



정책과제 필요성 : 국가상징공간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도출

본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국가적 차원의 공간적 상징화를 위한 인지 조건과 표상 조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이 국가적 상징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고, 공간적 상징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정책과제의 성과 : 건축·도시·조경 통합 관점에서 국가상징공간 개념 정립 및 이론적 기반 구축

정책과제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은 건축, 도시, 조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인지 조건과 표상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는 국가상징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비전으로 수렴되는 국격의 상징화에 필요한 공간적 구성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국가상징공간에 관한 주요 논의 방향 : 공공성과 통합성

국가상징공간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기념비적 공공영역의 역할이고, 둘째는 건축, 도시, 조경을 통합하는 공간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국가상징공간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 부여가 아닌, 제도적·문화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이론 기반 필요

제도적, 문화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이론적 기반 없이 기존에 잘 알려진 대규모 시설에 단순히 작위적으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상징공간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진정한 국가상징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바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국민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과(국토환경디자인)	
세부 정책과제-2	
담당	김종헌 위원

국가상징공간의 가치와 장소

국가상징공간의 장소적 가치 발굴과 회복

추진 배경

국가상징공간의 역사성과 장소성 가치 발굴 및 회복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일반인의 접근이 제안되는 비(非) 일상적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가치와 미래 도시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상징공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용산공원 일대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용산공원 일대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 한국의 도시화 과정, 일제강점기, 그리고 미군 주둔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역사의 흔적들이 복합적으로 남아있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도시공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 가치를 아우르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용산공원의 원지형과 시기별 지형 변화 분석 등 기초자료를 연구하여 역사적 맥락과 장소성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용산공원 권역의 역사적 기원
- " 둔지미 마을" : 둔지산 서측과 남측 일대 둔지리, 대촌리, 남서리(와서) 지역

[용산공원 부지의 군 주둔 역사]

고려말(13C)	몽고군 병참기지
임진왜란(16C)	왜군 병참기지
임오군란(1882)	청나라 주둔
러일전쟁(1904)	일본군 주둔
일제강점기(1920)	380만㎡ 군사시설 구축
해방 후(1945~)	UN군 및 주한미군사령부

▼

침략의 근거지, 외국 군대 대규모 주둔 지역으로 지속적인 지형 및 식생의 훼손과 시민과의 단절



[용산공원 권역 고지도 - 1860년대 「경조오부도」에 보이는 둔지방]

용산공원의 원지형 복원 필요성 대두

본 정책과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용산기지 및 주변 지역의 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용산공원의 바람직한 조성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훼손된 원지형을 복원하고 역사적 층위를 드러냄으로써 용산공원 일대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국가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가상징공간 분과는 국토연구원, LH 등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용산공원 일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방대한 사료(史料) 분석을 거쳐, 용산공원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기 위해 인문학적 관점의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2차 분과회의 (2023.06.21.)	LH 용산공원 사업 현황 보고 청취 (캠프킴, 임시 개방, 기존 시설 등)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조세환·정진국·김개천·김종헌·김세훈 위원, 기획단장, (LH) 오주헌 본부장, 송영환 단장, 임수정 부장,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채훈 사무관
	내용	캠프킴 부지의 근현대사적 가치, 용산공원과 연계, 원형 지형 복원 방향 논의 지속적·통합적인 3차 용산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 기본 방향 공유 국건위-국토교통부(용산공원추진단), 국토연구원, LH 등 유관기관 협력 필요성 공유
제3차 분과회의 (2023.07.21.) 제6차 분과회의 (2023.10.25.) 제8차 분과회의 (2023.12.15.) 제9차 분과회의 (2024.01.18.)	국토연구원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 보고 청취 및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조세환·정진국·김개천·조경진·김종헌·김세훈 위원, 기획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조관우 사무관, (국토연구원) 이승욱 센터장·배유진 박사,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내용	용산공원정비구역 마스터플랜과 주변 지역 계획 시 미래형 관점의 계획 수정, 용산공원의 차별성·상징성 필요성 논의
제5차 분과회의 (2023.09.15.)	'용산의 회복' 발표 및 논의 (김종헌 위원)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조세환 분과위원장·정진국·김종헌·조경진·김세훈 위원, 기획단,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조관우 사무관, 녹색도시과 이영주 사무관
	내용	용산의 역사와 시대별 변화, 중앙 보행축 회복 및 구성, 옛길 회복, 지하공간 활성화 필요성 논의
제13차 분과회의 (2024.05.17.)	용산 지형 변화 분석 연구용역 추진 결정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조세환 분과위원장·정진국·김개천·조경진·김세훈 위원, 기획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원호 팀장, 담당 사무관
	내용	용산공원의 원지형 회복과 인문·역사 고찰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논의 → 정책연구 추진

정책연구의 추진

시기별 지형변화 분석을 통한 용산공원조성 정책방향 검토 연구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2007)에 따라 총 5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계획 및 설계는 기지 내 현장 조사의 어려움과 기초자료가 부족한 여건에서 진행되어 부지의 원지형(原地形)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역사성·장소성에 대한 고찰이 미흡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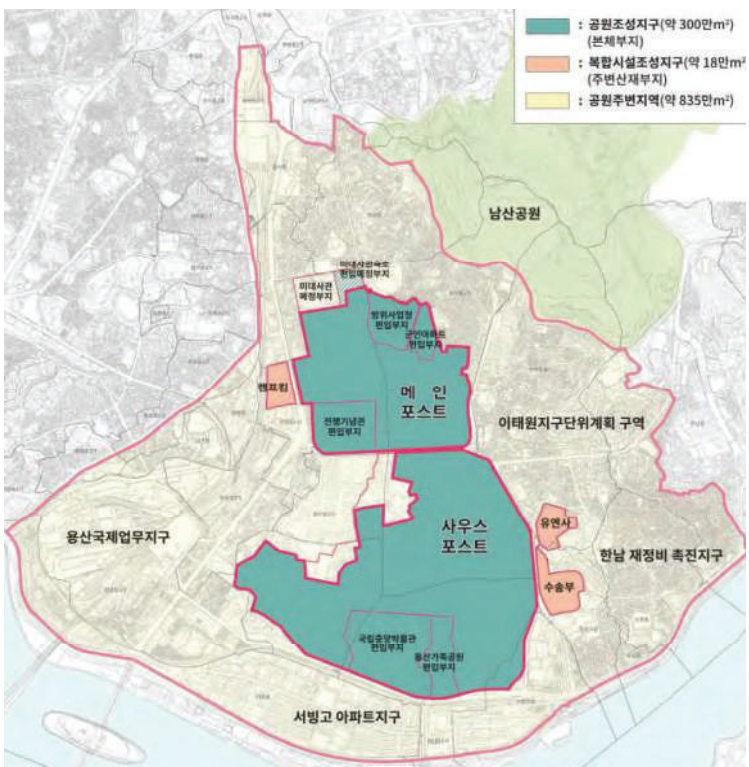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용산공원 조성 부지의 시기별 지형을 복원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용산공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국가공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연구 목적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고 한국적 경관 구현을 위해, 용산공원 부지의 시기별 지형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역사성·장소성을 고찰하여 용산공원 조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주요 연구내용

- 선행 용산공원 계획 검토, 국내외 문헌, 고지도·자료 분석을 통한 역사·장소성 고찰
- 시기별 지형 요소(등고선, 물길, 옛길, 마을 등) 추출 및 분석, 보존·활용 방향 제안



[용산공원 정비구역 현황도]

용산공원 계획·설계 검토

-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1차 2011년, 2차 2014년, 3차 2021년)
-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1~5차 / 2013~2018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관련 기초자료 조사

용산공원 역사·장소성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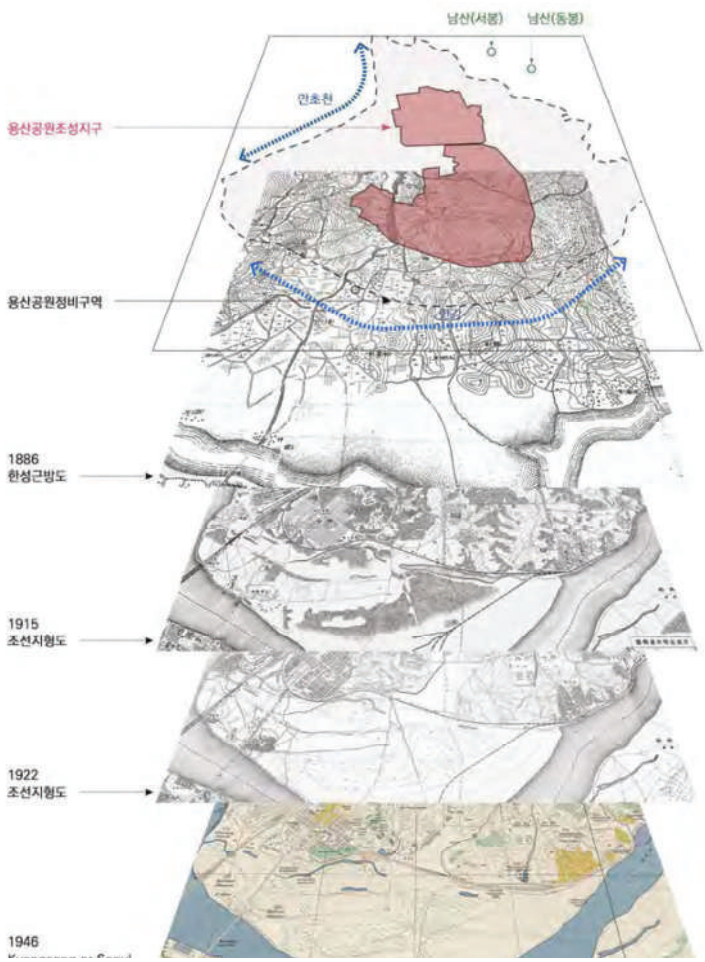
- 시기 : 조선시대~6.25 전쟁 직전
- 매체 : 고문헌, 지도, 사진. 항공사진

용산공원 원지형의 3차원 복원과 변화 분석

- 4차 시기별 지형 복원 및 변화 분석

용산공원 관련 정책방향 검토

- 계획·설계의 기초자료 및 방향 제시 + 아카이브 구축 + 계획방향 재검토 필요성 도출



[시기별 용산공원 일대 지도자료 정합]

용산공원 시기별 지형 복원 및 분석

용산공원은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 복합적 역사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본래의 자연 지형과 물길을 보존하면서 시대별 변화를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용산공원의 옛 지역인 둔지락 자락의 원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용산병영 조성 이전부터 해방 직후까지 국내 문헌, 고지도, 회화, 항공사진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자료는 4개 시기(1886년 이전, 1906년, 1915~1921년, 1946년)로 구분하여 시기별 주요 지형 요소를 3차원 지형 모델을 복원하고 현재 지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과거 이 지역에 존재했던 둔지리 마을과 삼남길 등, 남산과 한강을 잇는 물길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흔적을 찾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용산공원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장소로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용산공원의 중심, 둔지산 자락

조선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둔지산 지락과 마을 일대가 군 사령관저로 인해 손실



도로와 연결망

서울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삼남길이 용산병영 조성 과정에서 직선화 · 확장되어 전통적 생활 동선과 교통망의 단절 야기



물길의 흐름과 유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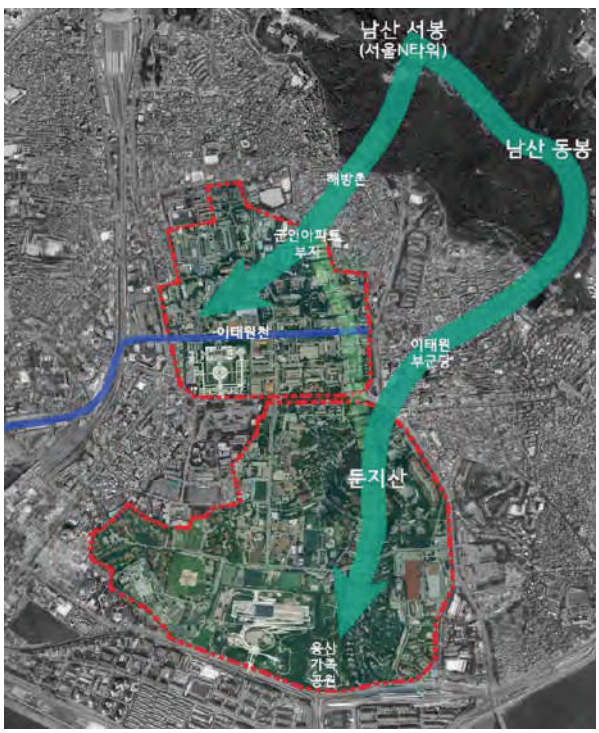
이태원천의 발원지와 저습지 유역이 용산병원 등 조성 과정에서 변형



[용산공원의 시기별 지형 3D 복원 및 분석 결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정책 제안

본 연구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남산에서 둔지산, 만초천으로 연결되는 원지형 체계를 기초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남산 서봉과 동봉에서 용산 미군기지로 이어지는 지형을 공원의 근본 골격으로 재조성하고, 북한산–종묘–남산–용산공원–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광역녹지축을 형성하고 한국적 산수 경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두 개의 상징 축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북축은 남산에서 한강을 거쳐 동작까지 이어지는 시간 축으로,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관문 역할을 했던 남산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충원으로 연결되는 역사적 의미를 담도록 했다. 동서축은 효창공원에서 삼각지, 이태원, 대사관로로 이어지는 문화축으로, 백범김구기념관부터 다문화 거리까지 종교적·인종적 다양성을 포괄하도록 계획했다. 이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시설을 배치하여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원지형 분석에 따른 녹지 축]



[옛길 회복을 통한 보행축 제시]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시기별 지형변화 분석을 통한 용산공원조성 정책방향 검토 연구(2025.01.)' 참고

정책 현장의 회고

용산국가공원 조성계획

김종헌 위원



용산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원지형 조사의 필요성 제안

2011년 11월 국가유산청의 의뢰로 용산 미군부대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군주둔지 내 근대건축·시설 일제조사 용역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본인은 지속적으로 용산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국가상징공간을 논하는 분과에 배당되면서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용산공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한편, 2012년 용산공원에 대한 현상설계 당선안이 발표된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서는 6차례에 걸쳐 용산기지에 대하여 현황 및 정밀 조사를 수행하여 보존할 건물들의 등급을 세분화시키고 건축물 구조와 공간구성 등 건축에 관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주로 건축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옛길과 하천 그리고 지형에 대한 조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용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되기 전인 1866년도에 작성된 『한성근방도』에 용산기지에 대한 지형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먼저 지형을 3차원적으로 만들어 현 지형과 비교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지형 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국건위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내 조선시대 원지형 및 역사적 도로망 보존 상태 확인

일반적으로 용산이 1906년 이후부터 일본군에 의해 기지가 건설되었고, 6.25 한국 전쟁 이후 미군에 의해 기지가 이양된 이후 군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지형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생각과는 달리 원지형이 큰 변화 없이 조선시대에서부터 굳건하게 잘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이 이루어진 4차례의 시기는 용산기지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시기의 기준으로 『한성근방도(1886)』와 『한국용산군용수용지 명세도(1906)』 2차 시기는 『조선지형도(1915)』 3차 시기는 『조선지형도(1921)』, 4차 시기는 『KYONGSONG or SEOUL(1946)』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용산기지에 남아있는 옛길과 하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19세기 김정호가 분류한 수원을 향하는 제7대로와 해남을 향했던 제8대로, 동래를 향하면서 조선통신사길로 이용되었던 제4대로를 용산기지에서 그 흔적들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 경복궁에서부터 용산공원을 거쳐 한강까지 직선화된 보행로길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용산기지 안에 있었던 하천의 물줄기도 찾아내어 용산의 원모습을 3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민과 노력 : 기존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방향 재논의

이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에 대한 정책 과제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한편, 제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해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은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일들에 대한 충실한 실행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성격이 다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용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전문가 협력 필요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를 다른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번 정책과제의 연구 결과에 대해 향후 활발한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 지형, 옛길과 하천 등이 반영이 되어 우리의 역사와 자연환경,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한국적 공원으로서의 용산공원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용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문학적 고찰과 논의를 통해 향후 용산국가공원의 방향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5 한국 전쟁 이후 변화 양상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6.25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이 점유한 이후의 변화 양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의 자료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통해 용산에 대한 이해가 훨씬 폭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밀조사 이전에는 용산 내 일본군 기지가 그대로 잔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밀조사 이후 미군기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건축물 터는 그대로 이용되었지만, 미군의 방식으로 건물이 개축되고 신축되었던 것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분과(국토환경디자인)	
세부 정책과제-3	
담당	김세훈 위원

선도사업을 통한 국가상징 거점공간 확산 기반 구축

국가상징 거점공간 조성

추진 배경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3년 4월 국가상징공간 선도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기획연구를 통한 개념 정립과 서울시 87개소 공간자원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4년 4월부터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안 연구를 본격 추진하여 12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본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국건위·국토부·서울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7개 우선 후보지 검토와 국가상징축 중심의 지역 분산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과 경희궁·돈의문 복원-역사공원 사업을, 보훈부는 현충원 재창조 계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본 정책과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국가상징공간 개념을 내용-역할-형태로 체계화하고, 상징성·잠재성·실현성·균형성 등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선도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실행 주체별 구체적인 역할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적용 가능한 유형별 상징공간 조성 기준과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차 분과회의 (2023.05.19.) 제2차 분과회의 (2023.06.16.)	과제 기획 및 필요성 제기
	• 국가상징공간 조성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추진계획 논의 시작. • 국가상징공간의 개념 정립과 전국 확산 모델 개발을 위해 용산공원 중심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지역 특혜 논란 방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브랜딩 필요성 제시 • 전국적 확산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선도사업(Pilot Project) 개념 논의: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 고려
제3차 분과회의 (2023.07.21.) 제4차 분과회의 (2023.08.18.) 제5차 분과회의 (2023.09.15.)	국가상징 거점공간 및 거리 조성 정책과제 결정 및 세부과제 논의
	• '국가상징 거점공간 및 거리조성' 정책과제 결정(제3차 분과회의) • 서울역, 국립서울현충원, 청와대 권역에 대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국가상징공간의 규준 필요성 제기 • 세부과제 설정 논의(대상별, 내용별 세부과제 분류 방안, 거점공간의 권역 상정 및 연결 방안의 과제 내용 반영 등)
제13차 분과회의 (2024.05.17.)	국가상징공간 기본구상 기획연구 용역' 후속 조치 계획 추진 논의
	• 주요 후보지 기본구상을 통해 상징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시, 시범사업 대상 선정 후 후속 연구추진
제14차 분과회의 (2024.07.08.)	정책연구 발주
	•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 발주 논의 : '국가상징공간의 기본구상 연구용역'('23.9.~'24.4.)의 성과를 제고하고, 전문가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상징공간 정책 개념을 심화 • 과업 내용: 국가상징공간 개념 심화, 선도사업 우선순위 검토, 유형별 조성방안 도출 등
제15차 분과회의 (2024.08.16.)	선도사업 추진 논의
	• 국가상징공간 추진계획 보고(국토교통부) : 남북축(광화문, 서울역+남대문, 용산, 현충원)과 동서축(한강, 상암DMC, 올림픽공원)의 사업 대상지를 제시하고 선도·일반사업 구분 추진 제안
제16차 분과회의 (2024.10.17.)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
	• 국가상징공간의 선정 기준·방법을 정립하고 후보지에 대한 다차원적 검토 추진 논의
제17차 분과회의 (2024.11.07.)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 국가상징공간 선정을 위한 다양한 평가툴(tool)과 단계별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우선 선정된 상징공간으로 선도사업 추진 필요성 논의

정책연구 추진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실행하기 위한 선도사업(Pilot Project)을 우선 추진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적 확산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개념을 '내용(정체성 전달)', '역할(미래 도시공간 창출)', '형식(도시 공간 유형)'으로 구조화하고 지향점과 가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렇게 수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상징공간을 상징성, 잠재성, 실현성, 균 형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시 12개 후보지의 잠재성, 현황 여건, 관련 계획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 및 적합성을 검토했다.

실행전략으로는 「건축기본법」 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제도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는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공공의 이익 증진"과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제도를 통해 국가상징공간 사업의 법적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현실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의 체계적 기준과 법적 근거와 지원 등 사업 추진체계 마련

주요 연구내용

- 국가상징공간의 개념을 내용, 역할, 형태 측면에서 구조화하고 심화
- 서울 내 12곳의 선도사업 후보지 대상으로 국가상징공간 잠재성 분석
- 국가상징공간 지정 심의 기준, 추진 절차, 재정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제안



국가상징공간이 전달하는 **내용**



국가상징공간의 도시 · 사회에서 기능하는 **역할**



국가상징공간이 취하는 도시공간적 **형식**

[국가상징공간의 내용-역할-형식 측면의 개념 구조화]

국가상징공간 개념의 심화 + 구조화

국가상징공간의 개념적 논의를 실질적인 조성방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용-역할-형식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구성요소로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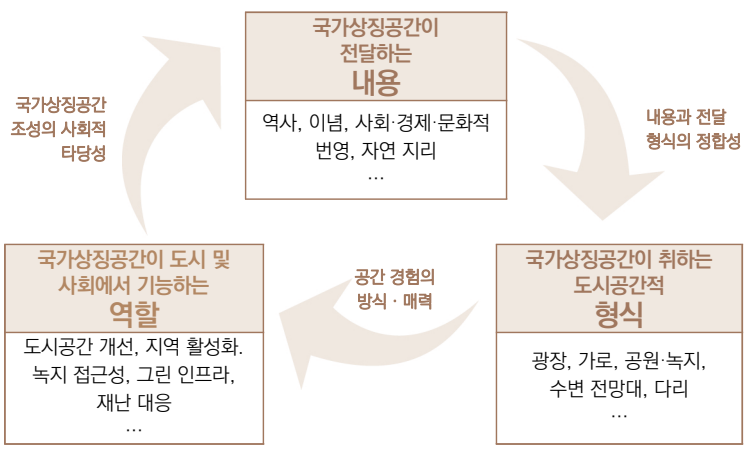
먼저 '내용' 차원에서는 역사, 이념, 사회·경제·문화적 발전과 자연환경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가치가 해당된다.

'역할' 차원에서는 국가상징공간이 도시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환경의 개선, 지역 활성화, 녹지 접근성, 그린 인프라, 재난 대응 등의 실용적 역할을 포함한다.

'형식'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공간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으로, 광장, 가로, 공원·녹지, 수변, 전망대, 다리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공간적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 역할, 형식의 세 구성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내용과 형식의 정합성을 통해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국가상징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국가상징공간의 내용-역할-형식 측면개념의 구성요소와 순환 구조]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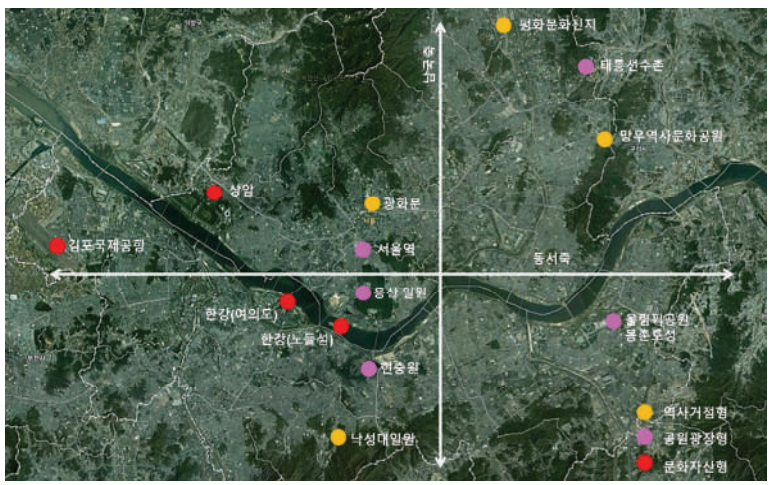
선행 연구에서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구청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 가용면적, 상위계획 정합성, 지자체 추진 의지, 접근성, 토지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2개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논의를 거쳐 선도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를 추가로 결정하였으며, 남북축을 따라 광화문, 서울역 일대, 용산 일대, 현충원 등 4곳과 동서축을 따라 한강-노들섬, 여의도, 상암DMC 등 3곳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네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상징성 측면에서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목적과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파급성 측면에

서 네트워크 거점 가능성과 국민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현 가능성에서는 관련 사업 현황, 지자체 의지, 예산·일정, 법·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잠재성에서는 사업 방향성과 공간적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가상징공간의 유형]

역사거점형	공원광장형	문화자산형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며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 광화문 광장, 낙성대 일원, 평화문화진지, 망우역사문화공원	국민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는 장소 서울역, 현충원, 태강릉 · 선수촌, 올림픽공원 · 몽촌토성, 한강(자연생태, 수변공간 초점), 용산 일원(용산공원 초점)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기술, 문화, 인프라가 집약되어 혁신을 주도하는 장소 용산 일원(한강대로 초점), 상암DMC, 김포국제공항, 한강(여의도 등 도시 경관 및 문화시설 초점)



[국가상징공간 유형별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국가상징공간 사업 추진체계 제안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기존「건축기본법」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은 지정과 조성 두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지정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 공고 후 지자체나 중앙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완성된 계획보다는 사업의 방향성과 해당 공간이 지닌 잠재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조성 단계에서는 추진협의회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 최종 승인 후 사업을 발주한다.

더불어 선도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함께 제안했다. 기본계획 수립비와 설계비를 정액 지원하고, 통합심의 제도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 실현을 뒷받침한다.

국가상징공간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제시

국가상징공간 지정을 위해 4개의 대항목과 14개의 하위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심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4개의 대항목은 국가상징공간의 정의와 보편적 지향점인 '국가 정체성 전달', '미래 세대 도시 공간 창출', '사업의 타당성', '사업 주체의 의지'로 구성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하위 세부 평가 항목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국가상징공간의 유형과 후보지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을 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 · 건축 · 조경 분야의 전문가 설문을 통한 각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항목별 차등 배점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심의 기준을 활용하여 선도사업 후보지에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상징공간 유형별 필수 평가 문항을 지정하되 후보지 특성에 따라 선택적 평가를 병행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국가상징공간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안)]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중요도 평가
(7점 척도)</th><th>배점</th><th>역사
거점형</th><th>공원
광장형</th><th>문화
자산형</th></tr>
<tr><td rowspan="4">1. 국가의 정체성
전달</td><td>역사·문화·사회 가치</td><td>6.6</td><td rowspan="4">유형별 2개
문항 필수
평가 100점</td><td>필수평가</td><td></td><td>필수평가</td></tr>
<tr><td>공동체 의식·연대감</td><td>5.9</td><td>필수평가</td><td>필수평가</td><td></td></tr>
<tr><td>국민의 보편적 동감</td><td>6.2</td><td></td><td>필수평가</td><td></td></tr>
<tr><td>미래 사회 비전</td><td>5.5</td><td></td><td></td><td>필수평가</td></tr>
<tr><td rowspan="8">2.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공공공간
창출</td><td>〈환경적 지속가능성〉</td><td></td><td rowspan="8">3개 문항
선택 100점</td><td colspan="3" rowspan="8">6개 문항 중 3개 문항 선택 평가</td></tr>
<tr><td>기후 변화 대응</td><td>4.7</td></tr>
<tr><td>도시-자연 공존</td><td>4.7</td></tr>
<tr><td>공간 문제·질적 수준</td><td>5.6</td></tr>
<tr><td>〈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td><td></td></tr>
<tr><td>시민사회 공간자원</td><td>6.3</td></tr>
<tr><td>사회 변화·난제 대응</td><td>4.4</td></tr>
<tr><td>보편적 공간 복지</td><td>5.7</td></tr>
<tr><td rowspan="3">3. 사업의
타당성·충실성</td><td>사업의 시급성</td><td>4.1</td><td rowspan="3">50점</td><td colspan="3" rowspan="3">필수평가</td></tr>
<tr><td>사업실행의 현실성</td><td>5.5</td></tr>
<tr><td>사업계획의 구체성</td><td>5.3</td></tr>
<tr><td>4. 사업 주체의 의지</td><td></td><td>5.8</td><td>50점</td></tr>
<tr><td>합계</td><td></td><td></td><td>350점</td><td colspan="3"></td></tr>
</table>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2025.03.)' 참고

정책 현장의 회고

국가상징공간 거점공간 조성

김세훈 위원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상징공간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국가적 위상과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대표 공간의 부재를 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이 될 만큼 성장하고,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 강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정작 이를 국내외에 알릴 국가적 상징공간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 행복과 자부심에 기여할 공간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공간빈국' 상태였고, 이에 걸맞은 상징공간을 만들어 '공간부국'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 과제를 제안하게 된 가장 큰 배경입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공간복지의 중요성도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국민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공공공간을 요구하지만, 새 시대의 희망과 가치를 담아내는 품격 있는 공간은 드물었습니다. 높은 자살률·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겪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공영역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철학 아래, 국가가 앞장서 국민이 일상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해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부지의 국민 개방,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등 국토 공간 구조의 큰 전환 계기들이 나타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역사적 공간들이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 지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상징공간으로 기획할 최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거점들을 개별 개발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아우르는 공간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와 기회를 포착하여 국가 상징성에 부합하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 정책과제를 추진한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대규모 공공공간 사업들이 중앙부처나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중복 투자나 수준 편차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국가 전체의 일관된 철학이나 품격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비전과 기준을 제시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이끌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상징공간이라는 개념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조성 노력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결집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정책과제가 처음 제안되고 추진되었습니다.

정책과제의 주요 성과 : 국가상징공간 정의 확립 및 청와대·용산공원 등 5개 선도사업 구상안 도출

가장 큰 성과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개념과 비전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막연하게 논의되던 국가상징공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적으로 추구할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 과제에서는 국가상징공간을 "대한민국의 품격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시민 중심·개방성·미래 지향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목표로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본 과제를 통해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이념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성과입니다. 위원회가 내세운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의 가치를 국가상징공간 구상에 녹여냈습니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 강조된 원칙들을 보면, 국가상징공간은 권위적인 기념비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절된 도시 조직과 자연을 연결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조성되어야 한다는 방향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제7기 국건위가 지향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이념과 맥을 같이하며, 본 과제가 그 이념을 실천 가능한 정책 언어로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적·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는, 본 과제가 국가 차원의 공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도시 공간 개발이 경제성장이나 개별 도시 미관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국가상징공간 개념 도입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브랜딩을 위한 공간 조성이라는 새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조성 사업을 넘어 국가 비전 구현의 수단으로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국책 사업들의 기획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물로서 정책 제안과 전략들도 도출되었습니다. 국가상징공간의 유형 분류와 조건을 정립하고, 서울 도심의 청와대 주변·서울역 일대·용산공원·현충원 등 후보지들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구상안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이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실행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과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본 정책과제는 국가상징공간의 개념·원칙·계획을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7기 위원회의 지향을 현실 정책으로 옮기고 미래 사업의 초석을 놓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국가상징공간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광범위한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협의까지 체계적 접근

무엇보다 국가상징공간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 자체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상징공간'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었기에, 어떻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개념화할 것인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기념 장소부터 현대적 미래 공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구상을 하려 했는데, 자칫 방향 없이 넓어지면 실행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체성을 담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문화·미래 가치를 공간으로 구현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개념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기둥을 세우기까지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개념 수정을 거듭하며, 추상적 아이디어를 정책 언어로 다듬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과제 수행 중 광범위한 조사 연구와 분석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튼튼해야 한다고 보았기에, 국내외 사례와 학술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민간·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해외의 국가단위 상징공간 사례부터 도시 차원의 공공공간 혁신 사례까지 방대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공원, 광장, 기념지 조성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어떤 요소들이 공간에 상징성을 부여하는지 배웠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선도사업을 찾아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학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적 문헌을 검토하여 도시 공공성, 장소성, 상징의 기능 등에 대한 이론적 통찰도 정책 구상에 반영하려 애썼습니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현실에 착근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기존 계획들과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을 중요하게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과제에서는 정부의 녹색도시 구상, 디지털 기술 확산, 안전하고 개방적인 도시환경 조성 등 국정 어젠다를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를 공간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용산공원 기본계획 등 기존의 관련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구상과 충돌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합성 검토 과정에서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하며 현실적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했던 것도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얻는 일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국가상징공간이라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제 추진 초기에 관련 부처 공무원,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아이디어를 청취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도시설계·문화·경관·조경 분야 전문지식을 적극 경청하며 보완점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조율의 과정이 때로는 시간이 걸렸지만,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행 주체들의 공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화 및 예산 확보 과제 잔존

먼저 초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설정했던 목표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실행 단계로 이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개념 제안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 조직 구성 등 실천을 담보하는 체계까지 구축해 보고자 한 것이 초기 포부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후보 지역들에 대해 단계별 구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돌아보니, 그런 초기 목표와 비교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제도화와 실행 단계 진입의 미흡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위원회 권고와 보고서 형태로는 채택되었지만, 이를 공식 정책으로까지 승화시키는 데에는 제한된 시간과 권한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국가상징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 반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점은 초기 목표 대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해 실제 공간 조성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 부지 여건이나 지자체의 의지, 예산상 제약으로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 점도 아쉽습니다.

제도 정비와 추진 조직 구성, 시민참여를 통한 실행 체계 완성 필요

우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권한 부여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중요 공간 조성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주관할 전담 조직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법적 근거로 〈건축기본법〉 제22조 등이 이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성 목적 부합 여부와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성, 계획안의 잠재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담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원회 단위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정부 내 상설 추진 기구나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상징공간 추진위원회 같은 형태로 컨트롤 타워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를 높이는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공간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조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참여단 운영, AR/VR을 통한 가상체험 제공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참여 기회를 늘려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가상징공간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법과 제도, 조직, 재원, 참여 시스템의 네 박자가 고루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의 구상이 현실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분과(국토환경디자인)	
세부 정책과제-4	
담당	조세환 위원

국가상징공간의 확산 전략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전국적 확산

추진 배경

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개발 및 관련 개발모델의 전국적 확산 전략

'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개발 및 관련 모델의 전국적 확산 전략' 과제는 2023년 5월 19일 제1차 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24년 1월 제9차 분과위원회에서 용산국가공원 주변부와 용산기지 내 인프라 활용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공원·도시 결합형 융복합 개발 네오가든 시티 연구'가 제안되었다.

이 과제는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용산국가공원이라는 국가상징공간을 중심으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된 모델은 전국 도시로 확산시켜 국토 전반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적 비전을 담고 있다.

핵심 구상은 용산국가공원과 주변 도시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스마트 네오가든 시티(Smart Neo Garden City: SNGC)' 모델로, 공원의 녹지 가치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고,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갖춘 미래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스마트 네오가든 시티는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면서 용산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다. 용산국가공원과 한강, 주변 주거 · 상업 · 업무 · 문화 등 도시용도가 융합되어 사람-자연-도시가 조화롭게 공생하는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초기에 '스마트 네오가든 시티' 모델 개발과 전국 적용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안되었다.

첫 번째는 용산국가공원 주변부에서 공원과 도시가 결합한 융복합 개발을 통해 스마트 네오가든 시티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영국의 전통적인 '가든시티'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적인 '15분 도시' 개념과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이다.

두 번째는 용산 스마트 네오가든 시티 모델을 전국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주변부에 공원·도시 결합형 복합용도지역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현장의 회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전국적 확산

조세환 위원



용산국가공원과 주변 지역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 필요

용산국가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90만 평 규모의 대형 도시공원입니다. 대형 공원은 공원 규모의 광대함, 또 그로 인해 주변 도시 지역과의 경계 및 경계 지역이 길고 넓음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차원에서 주변부 도시에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용산지역의 지리적, 자연 환경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용산국가공원과 공원 주변부 도시 간 관계성 관점에서 용산지역을 바라보고, 목하 개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지역의 총체적 도시개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큰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산국가공원이 국가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공원인 만큼, 이 대형 공원 주변부 모델이 우리나라 도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고, 그만큼 도시개발 관련 국가 정책의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국가 정책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용산지역 총체적 도시개발 관점을 제시한 성과

이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설계, 조경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연구진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연구비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 과제로 채택되지 못해 구체적인 성과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국가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원 조성에만 주요 포인트를 두고, 주변부 지역을 시각적 경관 조성이나 관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 대형 공원이 주변 지역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혁신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용산지역의 총체적 도시개발 관점에서 용산국가공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남겼다는 점 그 자체가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제안하면서 기존 도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도시민의 건강·보건·복지·휴양·놀이 등과 관련한 도시 녹지 확대의 필요성 및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공원과 도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도시의 주거성, 경제적 활력, 편의성, 커뮤니티성 등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복합적 차원에서 21세기 도시를 향한 도시 재구조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관점의 정책 구상에 대한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 과제 책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분과(국토환경디자인)	
세부 정책과제-5	
담당	조경진 위원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재정립과 활성화 전략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추진 배경

국가 상징성을 담은 도시공원의 필요성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 팬데믹 등을 통해 공원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되었다. 공원녹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시설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주목받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품질의 공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재정립과 활성화 필요성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2013년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지정 요건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미비 등으로 실제 지정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정책 및 모델 연구'를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개념부터 지정, 지원, 운영에 이르는 핵심 사항을 논의하였다.

국가도시공원의 개념과 기준 정립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니며 해당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 활성화, 생태적 건강성 증진, 국민 여가 및 복지 향상 등 다양한 국가적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녹색 인프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국가도시공원의 중요성에서 착안하여 국가도시공원의 개념을 국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표상하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향유하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그 입지적 중요성, 규모, 상징성, 생태·문화적 가치 등에서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성 강조하였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신규 공원을 조성할 여력이 감소하고 기존 공원의 유지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

할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원 조성 및 관리의 주체를 지방사무로 한정하던 기존의 틀을 넘어,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양질의 공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국가도시공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협력

국가상징공간 분과는 LH, 산림청 등 관련 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도시공원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정책 연계 및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분야와 협력을 통한 논의 확장은 국가도시공원 정책을 보다 넓은 국토환경디자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이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정 기준, 유형 분류, 국비 지원과 운영 방식 등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추진 관련 논의	
일자	2023.09.15.
발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내용	• 면적 기준 현실화, Park PFI 제도 도입 연구 필요성 등 논의 - 지방균형발전 및 전국 확산을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과도한 면적 기준 조정 및 하한 기준 개선 필요(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구용역 진행사항 공유) - 민간공모형 공원 운영관리 제도(한국형 PFI :Park Finance Initiative) 도입으로 공공공원에 대한 민간 참여 유도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논의
국가도시공원 정책 추진 논의	
일자	2024.02.16.(금)
발표	제은혜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내용	• 국가도시공원 지정·운영 및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방안 논의 • 정원도시 정책 간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모색
사회적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기반 공원녹지제도 개선방향 논의	
일자	2024.03.20.(수)
발표	윤은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내용	-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린인프라 관점에서의 질적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정책연구 추진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에 관한 연구추진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합리적인 지정 기준과 다양한 공원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유형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심도 있는 기초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정책연구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면적 300만㎡ 이상, 국유지 비율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지정 사례가 전무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행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엄격한 공원 지정 조건으로 인해 실제 지정된 곳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지정 기준과 유형별 계획,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기준을 마련

주요 연구내용

- 국가도시공원 개념 및 유형 정립 : 추진 배경, 정책 비전 및 목표·개념, 공원 유형 구분 및 지정 기준
- 지속가능한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위한 제언 : 사업 유형 제시, 장단기 로드맵 구축

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국가도시공원 유형 분류 체계 구축

국가도시공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능이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공원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분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① 기후대응형, ② 역사문화 보존 활용형, ③ 국가상징형, ④ 재자연화형, ⑤ 이전적지 특성화형 등 5가지 유형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런 유형 분류를 통해 각 유형별 공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새로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서는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분과 :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구축 및 지역별 국가도시공원 계획

[국가도시공원 유형 분류 제시(안)]

구분	기후대응형	역사문화 보존 활용형	국가상징형	재자연화형	0이전적지 특성화형
개념	국가적 차별화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원,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공원 대형 재난에 대비 가능한 공원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원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성, 기념성을 가진 공원	노후화된 유휴부지의 자연 복원 개념의 공원 유휴부지의 활용을 통해 소멸도시의 재자연화에 기여하는 공원	미군부대, 국군부대, 산업, 교육 시설의 이전적지 특성이 강조된 공원 지역의 녹색복지 실현의 보조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
규모	도시 간 연계 가능, 100ha 이상	10ha 이상	30ha 이상	군·면, 도시 단위로 신청, 규모 기준 없음	시, 광역시, 10ha 이상
지정 기준	조성 및 운영에서 탄소흡수 및 저감의 실증, 기존 녹지체계와 네트워크, 국가적으로 차별화된 생태적 가치, 재난 시 거점 역할이 가능한 공원	문화재, 국가유산, 혹은 인정할 만한 역사문화 가치를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로 도시와 인접하거나 중심지에 있는 곳	역사적 고유성, 대표성, 국제 행사기념성, 국위 선양과 연계 등	기존 녹지체계 및 유휴부지 간 네트워크, 재자연화 필요성 및 가치, 관광 연계 등	부대 이전적지-도시와 연계성, 공원녹지의 형평성 여부 등 학교 혹은 산업시설 이전적지 활용성과 가치 평가 필요

국가도시공원의 현실적인 지정 기준과 종합적 평가 체계 마련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실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소면적 기준인 300㎡ 이상 요건을 100~200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유지 비율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국유지도 면적 산정 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대상지를 현실적으로 확대하고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정량적 기준 외에도 국가적 상징성, 지역 대표성, 자연·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접근성, 관리 운영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는 질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종합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도시공원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 제시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장단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단계별 이행 방안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이다.

[국가도시공원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안)]

단기(1~3년)	중기(4~5년)	장기(6~10년)
• 시범사업 2년 추진 및 피드백(1년) • 국가도시공원 심의위원회 구성 •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개념/유형)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전수조사 및 여건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 법률 개정 준비 및 실행 • 시범사업 지속 • 국가도시공원 운영 전담 부서 설치 • 부처 간 통섭을 위한 광역 네트워크 구축 • 지정 및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구축 • 국가도시공원 신청 접수(5년 차)	• 법률 개정 완료 • 5개 유형 지정 및 실행 • 운영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의 국가도시공원 관리청 설치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국가도시공원 지정기준 및 유형에 관한 연구(2024.12.)' 참고

정책화 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연구 및 논의 과정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현실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최소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담았다.(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5조의2 제1항 관련 제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국가–지방 협력 체계 구축의 발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제시는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1분과 :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구축 및 지역별 국가도시공원 계획

맹성규 의원 안 (2024.10.4. 대표 발의)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 최소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 • 공원관리청의 해당 부지 소유권 확보 의무화 • 국무회의 심의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	제25조의2
국가공원녹지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의무화 •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계획 확정 절차 마련	제4조의2
국가도시공원 위원회	•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로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등 중요사항,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제49조의2
재정지원 확대	•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고 보조 •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25조의2
품질관리 체계	• 도시공원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실시 •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	제4조, 제10조의2
정보체계 구축	•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	제10조의2
조사 및 평가	•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항목에 도시공원 대장 정보를 추가 • 도시공원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실시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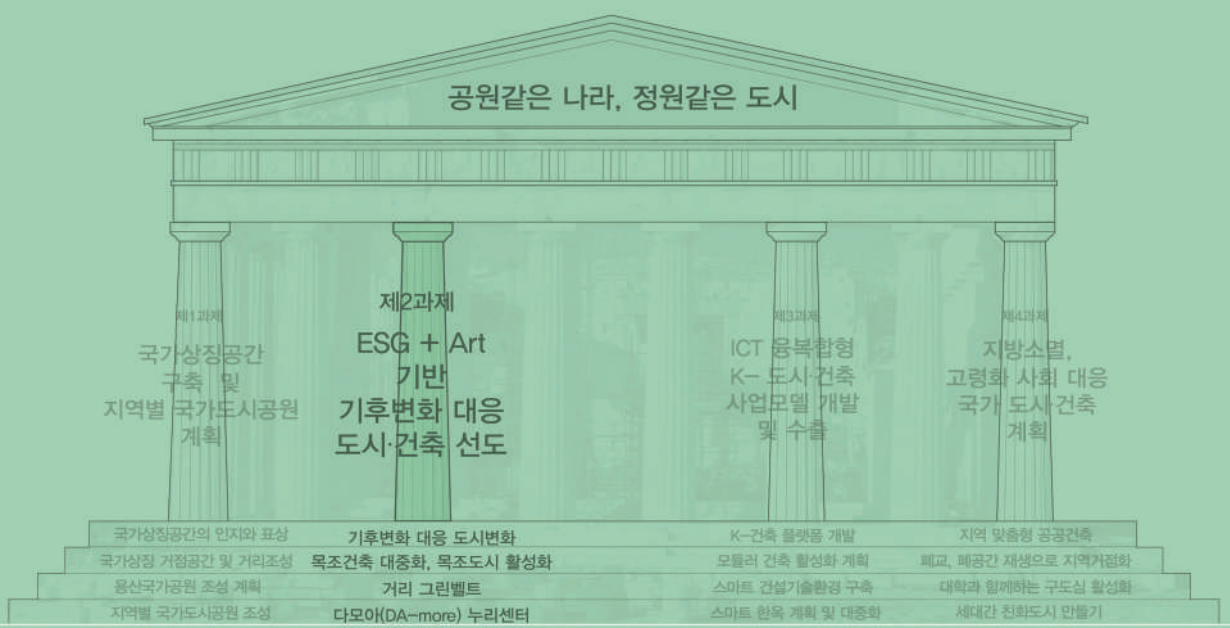
이성권 의원 안(2024.10.21. 대표 발의)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 최소면적 2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 국무회의 심의 절차 삭제 • 부지 면적 산정 시 국유지(사용허가, 점용허가, 지정 동의 받은) 포함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전체 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	제15조 제1항제1호 제25조의2 제1항
지정 절차 간소화	•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 절차 삭제 • 관계 부처 협의만으로 지정 가능	제25조의2 제1항
국유지 범위 확대	•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국유지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받은 국유지 •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	제25조의2 제1항

PART

2

ESG+Art 기반 기후변화 대응 도시·건축 선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ESG+A 도시공간 혁신 전략

추진 배경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가치에 예술·건축(A) 전략

전 세계적으로 폭염, 게릴라성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도시 열섬 효과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및 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건설 지침 마련과 친환경 건축 방식의 확산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문화진흥 분과위원회 아래 ESG+A 분과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건축과 도시 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도시생태계 복원, 목조건축 대중화, 포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실현

ESG+A 분과는 건축과 도시 공간 조성에 있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가치에 예술·건축(Art/Architecture)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축과 도시 공간정책 전반에 걸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환경 개선과 거리 녹지대 조성을 통해 도시 생태계 건강을 회복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 저장고로서 목재의 가치에 주목해 목조건축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단순한 기능 통합을 넘어 경험, 관계, 공유를 촉진하는 포용적 공간 모델 개발 방안을 탐구한다.
이와 같이 모든 정책과제에 건축·예술적 가치(+A)를 접목하여 기능성과 효율성은 물론 심미적 우수성을 갖추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 있는 도시·건축 환경 조성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세부 정책과제 선정

5개 정책과제의 세부 실행과제 선정

2분과는 총 4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 및 그에 따른 세부 실행 과제를 선정하였다. 2분과에서 도출한 정책과제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거리 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조성, 둘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 셋째, '다모아(Damoa) 누리센터', 넷째, '목조건축 대중화 및 목조도시 활성화'가 그것이다.
이들 정책과제에 대응하는 세부 실행과제로는 각각 '생태문화보도로 걷고 싶은 도시 조성',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문화 환경 및 도로구조 개선', '환경을 생각하는 원스톱 서비스 공간', '탄소 배출에서 탄소저장으로의 도시건축 혁신'이 선정되었다.
한편, 정책과제 중 하나였던 '다모아(Damoa) 누리센터'는 논의 과정을 거쳐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로 과제명이 변경되었다.

제1차 분과회의 (2023.05.19.)	제2차 분과회의 (2023.06.09.)	제5차 분과회의 (2023.07.10.)	제7차 분과회의 (2023.08.22.)
'23 건축문화진흥 위원회 정책과제 논의	분과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	분과 추진과제 구체화를 위한 논의	분과 추진과제 및 하위(실행)과제 선정
			2-1.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 스마트 녹지문화도시 조성 - 도시생태보도 조성 등	• 생태문화 가로(Green Way) 조성	• 생태문화길 조성을 통해 Street Green Belt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명칭 변경	**2-2. 거리 그린벨트 (Street Green Belt)**
• 한국형 친화형 생태도시 조성 - 기후변화 적응형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환경	• 도시건축통합관리지침 설계기준을 정비할 수 있는 절차 필요	**2-3. 기후변화대응 도시변화**
• 하이라이프 센터 조성 - 복합공간의 미래 커뮤니티 콤플렉스 보급 등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문화 환경 및 도로구조 개선
• 목조건축 활성화	• 목조건축 활성화	• 목조건축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세부과제 결정	**2-5.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
• 미래 문화도서관 콤플렉스 조성	• Grand Life Center 조성	• 동 단위까지 설치하여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사항임을 고려한 명칭 변경 필요	**2-4.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 사회적 약자 정책개발 - 노인 R&D 센터 조성	(4분과에서 추진)		(다모아(Damoa) 누리센터) (※ 과제명 변경)
• 법제도 정비	• 건축법 제도 정비	(제도분과에서 추진)	

기후변화 대응 5대 정책과제 최종 선정

[정책과제 1]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위원	권영걸 위원장
	주요내용	녹지 공간과 민주주의 가치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환경적 정의, 사회적 형평성, 안전한 경제의 세 축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이고 평등한 환경',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제' 가치를 원칙으로 한 녹지 민주주의 이념 체계 정립
	실행방안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연구 추진
[정책과제 2] **거리 그린벨트 (Street Green Belt)**	위원	김개천 위원
	주요내용	기후변화 적응 및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을 포함한 도시 거리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조성 정책의 실질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거리그린벨트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실행방안	생태문화보도(Green Way) 조성으로 걷고 싶은 도시조성
[정책과제 3]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	위원	조세환 위원
	주요내용	기후변화적응형 도시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개편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성 제시
	실행방안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문화 환경 및 도로 구조 개선
[정책과제 4]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위원	김소라 위원
	주요내용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과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교육 방향에 맞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학교 공간 모델 정립 및 구체적인 공간 조성 전략과 실행 가이드라인 제시
	실행방안	학교공간 혁신전략 및 미래학교 공간(학습공간, 지원공간, 옥외공간, 커뮤니티 공간), 학교건축 추진사업 개선방안 제안
[정책과제 5]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	위원	유이화 위원
	주요내용	국내외 목조건축 동향 및 현행 법·제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설계, 시공, 관리 시스템, 탄소배출 정량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실행방안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중대규모 목조건축 재료 및 시스템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목조건축 탄소배출 저장량 정량화를 위한 공인 전과정평가(LCA) 시스템 구축

2분과(ESG + A)	
세부 정책과제-1	
담당	권영걸 위원장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 영위를 위한 기본 이념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추진배경

녹지공간의 필요성과 녹지 민주주의 확립의 중요성

급격한 경제성장과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현대도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 사회적 갈등 심화, 도시민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증가 등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내 녹지공간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가 공공자산이자 모든 시민이 향유해야 할 기본적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내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도시별 녹지공간의 비율과 접근성이 도시민의 행복지수 및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주거지, 산업시설,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면서, 도시 내 녹지공간의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심각한 편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과 지역여건에 따른 이러한 녹지공간의 불평등 문제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가적 차원의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녹지 민주주의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 인식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새롭게 제시한 기본 이념이다. 즉,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녹지공간을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인식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간 정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질의 녹지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함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녹지공간을 인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는 녹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외 다양한 철학적·이론적 논의와 선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녹지 민주주의의 명확한 개념과 정책적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둘째,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도시 등 도시 규모와 특성과, 지역별 시민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녹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현행 관련 법령과 정책의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객관적 평가체계(인증·인센티브 체계) 기준을 정비하며 녹지 확충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

을 단계적으로 제안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논의와 심층적 연구를 통해 녹지 민주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도시 유형별 맞춤형 녹지 확보 모델을 제시하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제23차 정책조정 분과 위원회 회의 (2024.08.29.)	녹지 민주주의 이념 정립 및 가이드북 발간 관련 연구용역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안용한·손진락 위원
	내용	- 신규 용역 발주 논의: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 이념 정립 및 가이드북 발간' 연구 제안
제32차 정책조정 분과 위원회 회의 (2025.01.20.)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연구' 용역 착수보고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김규란·손진락·이인화·조승구·강정훈·권경현 위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윤두원 교수, 김유리 팀장
	내용	- 녹지 민주주의 이념 정립 및 당위성 검토 필요 - 녹지 부족의 사회적 문제 및 녹지와 민주주의 요소 간 관계 분석 필요 - 생태적, 심리적, 미학적, 사회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녹지의 효능에 대해 접근할 필요 - 녹지공간 확보 전략의 대상 및 공간적 범위 설정 필요 - 도시·비도시 및 고밀도 용지 등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 수직적·입체적 녹지 조성 방안 검토 필요 -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 인센티브 방안(규모별·지역별 차별화), 공공기여를 통한 녹지 확보 방안 등 논의 필요 - 해당 연구용역의 소관 분과를 5분과에서 3분과(정책조정 분과)로 변경하기로 결정
제33차 정책조정 분과 위원회 회의 (2025.02.17.)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연구' 용역 중간보고 1차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강정훈·권경현 위원 (자문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황재훈 위원장 (연구용역 수행업체)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윤두원 교수, 김유리 팀장
	내용	- 녹지의 결핍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점 제시할 필요 - 설문조사를 통한 녹지 민주주의 키워드 도출 권고 - 녹지를 평준화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검토 필요 - 단절된 녹지공간의 극복방안(국내외 사례 검토)과 녹지 공유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 각 주체의 역할 제시 -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대안으로 녹지 민주주의 개념 적용 필요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협력) - 우선 중점과제와 장기과제를 단계별로 제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안으로서 녹지 민주주의 개념 적용방안 등)
제35차 정책조정 분과 위원회 회의 (2025.03.17.)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연구' 용역 중간보고 2차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강정훈·권경현 위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윤두원 교수
	내용	- 녹지 민주주의 철학 관련 내용 보완 필요 - 행복추구권 입장에서 녹지보편권을 검토하고 녹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교과서 등재 필요 - 민관협력을 통한 녹지 확보 방안 및 빈집·폐교 활용 등 제시할 필요 - 시대적 흐름에 맞춘 현실적 법령 제도화 및 녹지 확보 필요예산 검토 필요

정책연구 추진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연구 추진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의 핵심 비전인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와 '녹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ESG+A 분과는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연구' 정책연구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는 녹지 문제를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 접근성, 참여와 연결하여 다루려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과도 연결된다.

연구는 2023년 10월 착수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건위와 ESG+A 분과는 연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단계마다 그 내용을 공유했다. 2024년 3월에는 합동연석회의에서 '녹지 민주주의 개념 정립 및 확산 전략 제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간보고를 진행하여, 위원들이 연구 방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24년 11월 최종 연구보고가 완료되었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무분별한 성장 중심 도시개발에 따른 녹지 불평등
- 단순 자연공간이 아닌 공공자산으로써 녹지 인식 필요
- 녹지공간 결핍에 따른 삶의 질 저하, 환경적 재해 악화, 사회적 문제 유발, 신체적·정신적 문제 발현 등 문제 발생
- 현대사회 문제, 도시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녹지 민주주의 이념 확산 필요

주요 연구내용

- 녹지 민주주의 이념 정의 및 고찰
- 민주주의 가치 유형 분석
- 녹지공간과 민주주의 가치 간 연관성 분석
- 녹지공간 변천 과정 이해
-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전략 제시
- 유형별 녹지공간 모델 제시
- 현행 인증체계 및 인센티브 체계 분석
- 도시설계 및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 개발
- 녹지공간 확보 및 인센티브 적용 방안 구체화 전략 제안

녹지공간과 민주주의 가치의 실증적 연계성 분석

본 연구는 도시 내 녹지공간이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시 녹지공간은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해 예방과 같은 환경적 측면은 물론, 시민의 행복 증진과 건강 향상, 범죄율 감소 등 사회적 측면, 나아가 부동산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녹지공간 접근성 강화와 기능적 다양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 필요

아울러 전체 국토의 녹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생활권 내 공원 이용률이 급증한 현상을 바탕으로, 녹지공간 조성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녹지 면적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과제임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공간의 기능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접근성 및 수요 대응 기반 녹지공간 확보 전략 모델 제시

본 연구는 접근성과 수요 대응성을 기반으로 한 녹지공간 확보 전략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로변 공원이나 공공보행통로 등 '선형 녹지'와 쌈지공원, 옥상정원, 벽면녹화 등 '점형 녹지'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공원녹지 유형을 넘어선 입체공원, 지하공원, 유휴부지 활용 공원, 맞춤형 주제공원 등 '면형 녹지' 모델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도시 내 녹지공간이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녹지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위한 4단계 'TREE 전략' 제안 Theory → Ready → Encourage → Extend

본 연구는 녹지 민주주의 이념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녹지 민주주의의 확산과 정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TREE 전략'을 제안하였다. TREE 전략은 네 단계로 구성된 정책 실행 프레임워크로서, 녹지 민주주의 이념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의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이념 확산(Theory)’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녹지 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다.
둘째, ‘제도화(Ready)’ 단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기반으로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가칭) 도시녹지 전담부서 신설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정착화(Encourage)’ 단계에서는 민간 참여의 활성화와 점·선형 녹지 사업의 확대를 통해 녹지 민주주의 실현 기반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속화(Extend)’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녹지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TREE 전략은 이념적 확산에서부터 제도적 뒷받침, 실천적 참여, 장기적 지속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녹지 민주주의를 실질적 정책 체계로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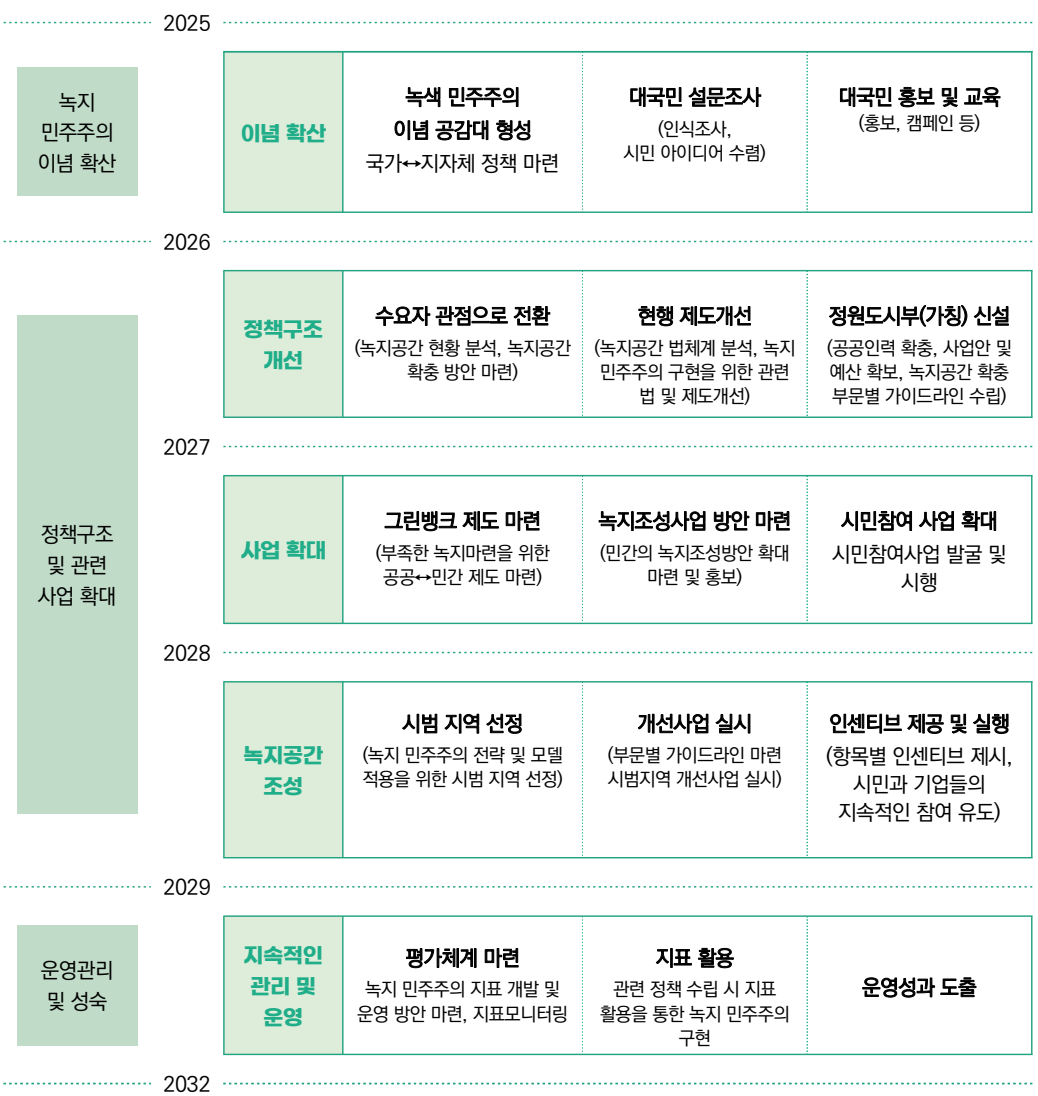
[녹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TREE’ 전략]

단계	전략	세부전략	실행방식	목표
Theory 이념 확산	녹지 민주주의 이념 확산	지속적인 홍보	• 대국민 설문조사, 아이디어 수렴	시민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녹지 민주주의 교육	• 대한민국 기초교육 교과과정 등재, 환경교육 발굴 및 인재 양성	
Ready 제도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구조 개선	수요자 관점 전환	• 유형별 녹지공간 확충	수요자 중심 전환 통합 관리 전담조직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
		현행 제도 검토	• 공원녹지법 개선,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공원녹지국 신설	• 공원인력 확충, • 사업안 및 예산 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총괄관리체계 마련	
Encourage 정착화	녹지공간 관련 사업 확대	녹지조성제도 개편	• 직접 실천 방안 마련	민간 참여 확대와 생활 밀착 녹지 조성
		시민참여 유도	• 시민참여 사업 발굴 및 시행	
Extend 지속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평가체계 구체화	• 인센티브 평가체계 구축	다차원 평가와 차등적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제공 및 실행	• 항목별 인센티브 전략 제시	

지속가능한 녹지 정책을 위한 로드맵 제시

녹지 민주주의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관련 지표 개발 및 운영, 정책 확산 및 성숙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진 계획(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녹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녹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지표 개발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지속적 운영관리

1단계: 녹지 민주주의 이념 확산

녹지 민주주의 이념의 사회적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둔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인식을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며,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전개한다.

2단계: 정책 구조 개선 및 관련 사업 확대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녹지공간 현황을 분석하고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여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원도시부(가칭) 신설을 통해 공공인력 확충과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3단계: 그린뱅크를 통한 민간-공공의 협력과 사업 확대

그린뱅크 제도 도입으로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녹지 조성 참여를 확대한다. 시민참여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시행에 착수한다.

4단계: 시범사업을 통한 녹지공간 조성

녹지 민주주의 전략 및 모델 적용을 위한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항목별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시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단계: 운영관리 및 성숙

녹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발된 지표를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여 녹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최종 운영성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녹지 민주주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구현되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거리그린벨트 과제와 연계한 정책 시너지 확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지 민주주의의 이론적 연구 성과가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녹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써 '거리 그린벨트 조성'을 신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별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적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론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계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려는 국건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연구(2025.05.)' 참고

2분과(ESG + A)	
세부 정책과제-2	
담당	김개천 위원

일상 영역에서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녹지 향유권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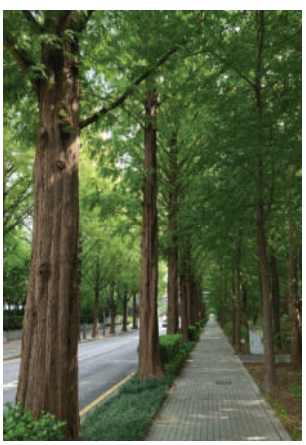
거리그린벨트 조성방안 모색

추진 배경

'거리그린벨트'는 도시 내 녹지공간 부족, 자동차 중심의 삭막한 거리 환경, 열섬현상과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도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도시 생태계를 회복시키며, 동시에 문화적 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도로 공간 전체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녹색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정책과제 발굴 단계에서는 '도시 생태보도(Green Way) 조성'으로 제안되었으나 여러 논의를 거쳐 '거리 그린벨트(Street Green Belt)'라는 명칭으로 조정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거리그린벨트 컨셉]

첫째, 자동차 중심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여 보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 녹색 가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도시 내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며, 빗물 관리(LID 기법 등) 및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생태 중심'의 회복력 있는 가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가로 공간에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경관의 매력을 높이며,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문화 중심'의 매력적인 가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토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녹지 향유권을 증진하여,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비전과 녹지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정책목표 1]

걷기 좋고 머물기 좋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보행친화 녹색가로



[정책목표 2]

도시 생물이 공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명다양성 녹색가로



[정책목표 3]

문화예술과
활력이 가득한

매력있는 녹색가로



정책과제 실현 과정

정책과제 선정 후, 해외 사례 검토, 지자체 선도 적용과 이를 위한 실천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ESG+A 분과는 정책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거리그린벨트' 개념의 정의와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을 포함한 도시 거리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조성 정책의 실질적인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의 추진이 공식 결정되었다.

연구를 바탕으로 거리 그린벨트를 도시 그린 기반시설의 네트워크 차원으로 확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틀과 법령 정비, 도로 상부 공원화 등 입체적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제11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10.27.)	거리그린벨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1차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전문가) LHI 최종수 박사, AURI 오성훈 박사
	내용	거리그린벨트는 세계의 대표사례를 수집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례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서울시 차원에서 거리그린벨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추진 가능
제13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11.22.)	거리그린벨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2차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전문가) AURI 염철호 박사, 스토리메이커 홍기영 대표
	내용	거리그린벨트는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되었으므로 향후 실천적 방안으로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지역별 선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제14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12.08.)	전문가 의견 청취 후 하위(실행)과제별 추진방향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거리그린벨트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이후 해외사례들을 연구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국비 지원 등의 방안 마련 필요) 중앙부처의 정책으로 선정되어야 국고 보조금 지원 가능 국가상징공간 등과 내용이 일부 유사하므로 1분과(국가상징공간 분과)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제17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4.01.26.)	2024년 연구용역 과제 선정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2024년 연구용역 과제로 '(가칭) 도시 거리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조성을 위한 방법과 실행계획 연구(LID 접목)' 추진

정책연구 추진

거리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조성방안 연구

'거리 그린벨트'라는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주요 정책 연구과제 중 하나로 '거리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조성방안 연구'가 선정·추진되었다.

특히 앞서 언급된 녹지 민주주의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리환경을 활용하여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시대를 맞이하였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녹지 향유권을 일상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를 적극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필요
- 보행 친화적인 거리와 녹색공간 조성은 전 세계적 추세로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물리적 환경인 거리환경을 바꿈으로써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탄소 감소에 기여함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주요 연구내용

- 거리그린벨트 정의 및 유형
- 국내외 유사 조성 사례 조사
- 거리그린벨트 조성방안 제시
-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등 환경성 검토
- 선도프로젝트 사업 제시 및 예시 작성
- 국내 적용 및 실현 방안 검토



일상에서 녹색자원 (공원녹지, 수공간 등)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길을 통해 연결

도시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녹지의 자연성(생태성과 친환경성, 생물다양성)을 강화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공공공간의 문화 예술을 통한 활력을 향상

[거리그린벨트 정책 목표]

출처 : 거리그린벨트 조성방안 연구 최종보고자료 p.15.

이 연구는 거리그린벨트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 유사사례와 국내 도시환경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가이드북(안)을 제안하였다.
가이드북은 거리그린벨트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사업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별 조성 방안과 함께, 각 전략에 부합하는 실천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러한 구성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것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거리그린벨트 조성방안은 도로공간의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공간을 더하는 전략, △기존 기능을 바꾸는 전략, △요소를 더하는 전략의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각 전략은 도시 내 가용공간의 확보 가능성과 도로의 구조적 조건, 정책적 실행 여건에 따라 세분화된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첫째, '공간 더하기' 전략은 도로의 폭원을 물리적으로 확장하여 보행환경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차로 수를 줄이거나 속도를 낮추는 방식(유형1), 차로를 일방통행이나 공유차로로 전환하거나 정차 공간으로 전환하는 구조변경(유형2), 그리고 민간대지 내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연계하는 방안(유형3)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기능 바꾸기' 전략은 기존 도로 폭원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 구조와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전략은 보도의 일부를 완충녹지로 구성하거나(유형4), 보행공간 자체를 재구성하는 방안(유형5), 조명 및 기타 시설 요소를 축소하거나 친환경적 시설(LID: Low Impact Development 등)을 도입하는 방식(유형6)을 포함한다.
셋째, '요소 더하기' 전략은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경관 요소나 친환경 설비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로 시설물의 배치 최적화, 디자인 개선, 민간건축물과의 연계 계획 등을 포함하며(유형7), 건축물 입면 디자인이나 필지 계획과 연동된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별 유형은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로구역 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등의 제도적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각 전략은 공공 또는 민간 등 설치 주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며, 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법령(도로법,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기준 등)에 따른 행정절차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거리그린벨트 조성은 도심 내 가용공간의 물리적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제도적 유연성, 민간과의 협력 가능성, 기존 도로 기능과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거리그린벨트(Street Green Belt)조성방안 연구(2025.02.)' 참고

정책 현장의 회고

거리 그린벨트

김개천 위원



도시 녹지 부족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리그린벨트 정책 제안

서울의 사대문 안 녹지율은 3.4%로, 유럽의 20% 싱가포르의 30% 내외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험적으로도 서울 등 우리나라 대도시를 보면 길옆의 가로수들만 있고 빌딩 숲에 갇혀있다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도시환경이 상하수도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인프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개인의 삶과 자유복지, 건강한 생활환경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많은 도시민이 도시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권리의 회복 중의 하나로서 도시 전체를 다양한 숲길로 연결하는 것이 거리그린벨트의 제안이며 걷고 싶은 녹지민주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도시 중앙도로 기반 전면적 녹지 연결망 구상 제안

거리그린벨트는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신도시, 가락시장 주변 등에 부분적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추진한 거리그린벨트는 일정한 부분 지역의 녹화가 아닌 도시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녹화하고 걸을 수 있는 친환경 도로를 만들어 도시 전체는 물론 구석구석을 숲길과 물길을 이용하여 하나로 연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도시환경을 일거에 녹지로 탈바꿈하게 하여 숲길을 걷고 숲 사이로 운전하고 살고 있는 듯한 풍요로운 환경의 녹지민주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녹지 조성을 넘어 문화·경제가 어우러진 역동적 도시 생태계 구현 고민

도로 중앙에 조성하는 생태문화숲길은 시각적인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홍수에 대비한 빗물 배출 시스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조각이나 기타 조형물 등의 전시 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 행위 발생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지띠로 둘러싸인 도시적 삶의 환경과 역할에 대한 변화는 거리그린벨트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지만, 공원과 같은 녹지환경만 만들어준다고 해서 삶의 인프라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삶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고, 도시의 풍요로운 문화와 다양한 경제활동 등을 장려하여 걷고 싶고,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안에 그린 인프라 구조를 만들고 문화적인 부분까지 곁들임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에서 시민 개개인은 문화를 향유하며, 이에 걸맞은 많은 상업 시설이 형성되는 등 도시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데, 이를 통해 또 다른 시너지 효과의 기대는 물론 도시 전체가 핏줄처럼 서로 얽혀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매력적인 선진도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실행 사례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산 전략 필요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강릉, 청주 등의 대도시에 우선하여 실행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구체적 사례와 방법의 설계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과 별도 예산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국토교통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의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녹지 조성과 도로 환경 개선과 관련한 유사 프로젝트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도로 주변보다는 도로 중앙 숲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더 큰 가시적 효과와 함께 시민의 호응도 역시 높이고 도시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도시에 시범사업 구간을 설정하고 우선 현행법 아래에서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분과(ESG + A)	
세부 정책과제-3	
담당	조세환 위원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문화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

추진 배경

ESG+A 분과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2023년 5월 초기 회의에서는 '한국형 친화형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시설 관련 지침 개편이 제안되었다. 이는 빗물 순환, 열섬현상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와 저장, 갑작스러운 홍수 예방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와 건축 측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걸음이었다.

6월 회의에서는 제7기 국건위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건축공간통합지침'을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의 정비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강남역 일대와 같은 상습 침수 지역에 시범 적용하여 가시적 효과를 확인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환경'이 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식 선정되었다.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시건축통합관리지침 설계기준'이 공원녹지계획 외에는 세부 계획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기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서 진행한 관련 연구가 주로 방재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뭄 대책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과제명은 '기후변화대응 도시변화'로 조정되었고, 세부 과제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문화 환경 및 도로구조 개선'이 결정되었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이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지침 자료 확보와 LH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도시환경 설계 개선을 위한 지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의 대응이 주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등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편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표방하는 LID(저영향개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보편적인 적용을 위한 객관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문화 환경 및 도로구조 개선' 정책과제는 '도시 거리그린벨트 조성을 위한 방법과 실행계획 연구'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거리 그린벨트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도시 공간뿐 아니라 건축물 차원에서도 저영향개발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제9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09.08.)	건축문화진흥 분과 하위(실행)과제 실천 방향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 관련 도시건축통합관리지침 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선 필요성 논의 - LH 최종수 박사 강의 추진 논의
제11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10.27.)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1차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전문가) LHI 최종수 박사,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박사
	내용	- 도시 그린벨트와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환경 설계와 개선에 대한 지침 개선 필요성 논의 - 서울시 지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지침과 연계 가능성 논의
제13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11.22.)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2차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전문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박사, 스토리메이커 홍기영 대표
	내용	- 서울시 지침 확인 결과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등 토목시설물에 집중됨을 확인 - 기후변화대응 적응형 도시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필요성 논의 - 삶의 질 향상과 노약자 재해 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논의
제14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12.08.)	전문가 의견 청취 후 하위(실행)과제별 추진방향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기후변화(폭염, 폭우 등)와 관련하여 공용어인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사용 합의 - 3기 신도시 LID 관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협약 내용을 참고하여, 다른 지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지침) 마련 필요성 논의
제17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4.01.26.)	2024년 연구용역 과제 선정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2024년 연구용역 과제로 '(가칭) 도시 거리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조성을 위한 방법과 실행계획 연구(LID 접목)' 추진을 논의 → 기 진행 중인 거리그린벨트 관련 연구와 통합 추진 결정

정책 현장의 회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

조세환 위원



지구단위계획 단위에서의 기후변화 적응형 방안 모색 필요

기후변화는 동시대 최고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다양한 인공 소재로 이루어진 도시환경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도시개발 초기 단계, 특히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단위 차원에서 적응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 관련 법정 계획의 하나로서 계획 지구에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생활 등 도시 관련 각종 기능의 배분과 차량 및 보행자 도로 등의 구획과 패턴의 부여, 건축 한계선의 부여, 공원·녹지 공간의 획정, 기타 공개공지를 포함한 공공공지 등을 부지에 배분하는 도시계획의 실시 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입니다.

건축 한계선, 공원·녹지, 공개공지의 크기와 위치, 지표 처리의 재료 등은 우수의 유출과 토양 흡수 등 수순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이런 토지의 연결 및 네트워크는 지구의 전체 수순환의 효용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획지 및 도로의 방향과 패턴, 획지 구획의 양상 등은 각각 도시 바람의 채널링(channaling)과 차단(blocking) 등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은 게릴라성 홍수 흡수, 열섬화 방지, 지구 내 태양에너지 보전 등 지구 내의 미기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적응 또는 대응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필요성 제시

이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설계, 조경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연구진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연구비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 과제로 채택되지 못해 구체적인 성과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2차원 평면적인 계획에 머물고 있어 3차원적 공간계획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듯이, 동시대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을 위해 도시개발계획, 특히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체크리스트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이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제안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였던 문제는 과밀한 인공적 도시환경 요소로 인해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시화 지구, 즉 시가화지구의 우수(雨水) 흡수율은 우수 강하율의 거의 3~5% 미만에 머물고 있고, 햇빛 반사율(Albedo)은 70% 이상을 점하고 있어 도시 기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공간 내에서는 바람이 차단되어 열이 도시 외부로 유출되거나 도시 외부의 시원한 바람이 도시공간 내로 유입되지 못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복합적으로 도시 열섬화 현상, 수순환 저해,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한 열저장 등으로 발생하는 게릴라성 홍수 등의 기후 재난의 피해를 발생토록 한다는 점에 유의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내의 도시개발지역 또는 신도시 지역 등에서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수립, 기준 설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분과(ESG + A)	
세부 정책과제-4	
담당	김소라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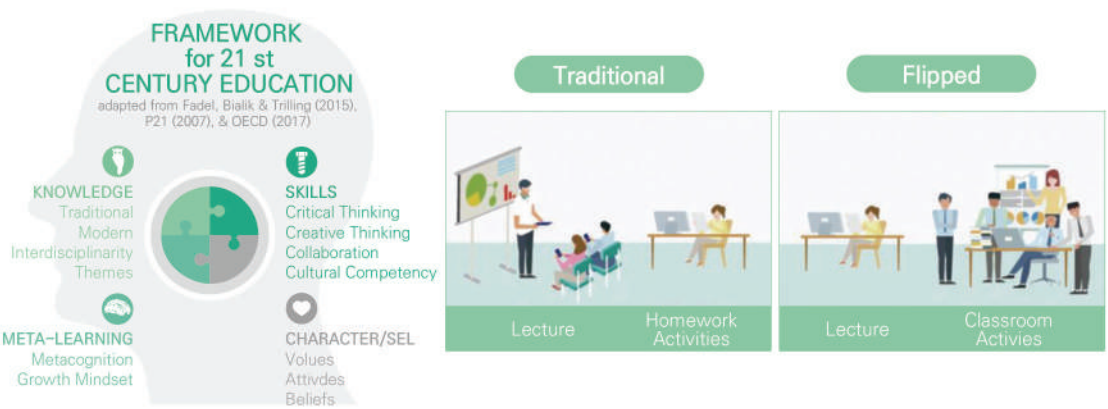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 혁신 전략 제안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전략 제안

추진배경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정책과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와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한다. 정책과제 추진 배경에는 표준설계도에 기반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존의 학교 공간이 창의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 역량을 중시하는 현대 교육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학교 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학교 공간 자체가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는 공간 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연계하여, ESG+A 분과는 기존 '다모아 누리센터' 정책과제를 '미래교육플랫폼 학교'(새 교육 새 학교)로 조정하고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 추진을 통해 학교 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의 변화 양상]

출처 : (좌) Clark, P. V. (2019.09.16.). Reframing 21st-century education [Adapted from Fadel, Bialik & Trilling (2015), P21(2007), & OECD(2017)]. The Clark Report.
(우) 이상준(2021), 기술과 배움의 진화 플립러닝, '배움의 순간'을 뒤집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는, 초기에는 지역별 문화복지 복합 서비스 공간인 '다모아 누리센터' 조성에 집중했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공주도 사업의 한계와 민간 참여 활성화 필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지역 복합 시설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인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과제의 초점을 '다모아 누리센터'에서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미래교육플랫폼 학교'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미래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의 장·단기 변화 전략과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 모델 구상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수적이었으며, 향후 학교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가 추진되었다.

논의는 10년 주기 공간 변화 전략 수립, 교육부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의 연계, 초·중학교 중심 모델 개발, '학습 피난처' 개념 도입 등으로 심화되었으며, 학교가 평생학습 허브이자 지역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졌다.

제9차 분과회의 (2023.09.08.)	건축문화진흥 분과 하위(실행)과제 실천방향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접근 방법론과 프로그래밍이 중요하며, 통합 사업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관한 연구 필요 Damore 표기는 DA+more 또는 DA-more로 변경하고, 로컬브랜딩 관련 업체 초청 강의 진행
제11차 분과회의 (2023.10.27.)	다모아(DA-more) 누리센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1차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전문가) LHI 최종수 박사, AURI 오성훈 박사
	내용	DA-more 누리센터는 기능 통합보다 ICT와 스마트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안 제안 개념 정립이 아직 미비하므로 전문가 섭외 필요
제13차 분과회의 (2023.11.22.)	다모아(DA-more) 누리센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2차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전문가) AURI 염철호 박사, 스토리메이커 홍기영 대표
	내용	생활SOC복합화사업과 지역공간의 브랜드스토리 청취가 필요하며, 공공주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화한 민간 주도형 정책 추진이 요구됨 고착화된 프로그램 대신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 필요
제14차 분과회의 (2023.12.08.)	전문가 의견 청취 후 하위(실행)과제별 추진 방향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다모아 누리센터는 체험, 관계, 공유가 가능한 문화복지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정의하고 중점기능별, 특성별, 입지별로 분류 체험·관계·공유는 운영의 문제로 민간 팝업스토어 등 운영체제 마련, 생활SOC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정책 공감대 조성 필요성 논의

제17차 분과회의 (2024.01.26.)	2024년 연구용역 과제 선정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다모아 누리센터 조성방향 연구는 연구용역 대신 시범사업으로 추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중 및 추진 예정인 지자체별 생활SOC사업 현황 파악 필요
제19차 분과회의 (2024.02.29.)	정책과제별 내용 검토 및 논의 1차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다모아 누리센터는 단순한 기능 통합을 넘어 경험, 관계, 공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변화 필요 → 다모아 누리센터 대신 학교로 과제 변경
제20차 분과회의 (2024.03.22.)	정책과제별 내용 검토 및 논의 2차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정책과제를 학교(새 교육 새 학교)로 변경 검토하고 연구용역명은 추후 결정 미래교육방식 변화에 따른 장·단기 공간변화 전략과 향후 10년 교육과정 변화에 맞춘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부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변경 제안
제25차 분과회의 (2024.07.31.)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 착수보고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유이화·조세환 위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서울시립대 이선영 교수
	내용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부처 의견 청취 및 조율,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모형 개발과 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 필요 입시제도와 연관된 고등학교 대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초점을 맞춰 모형을 개발
제29차 분과회의 (2024.10.08.)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의 진행사항 공유 및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1차 워크숍에서 학습 피난처라는 개념을 사전기획 제도개선 필요 사항 논의 정책 개선 시사점 도출을 위해 관련 자료 취합 및 관련 부처·전문가 면담 추진
제35차 분과회의 (2025.01.02.)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 최종보고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유이화·조세환 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서울시립대 이선영 교수
	내용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명칭 논의 교육공간 복지 차원에서 학습공간과 옥외공간 등 고려할 필요 학교가 평생학습의 허브가 되어 세대교류 공간이 만들어지고 결국 학교가 지역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 교육공간에 대한 기획발주 방식 변경 필요 교육공간 모델에 대한 실효성 검증 필요

정책연구 추진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는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과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교육 방향에 맞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학교 공간 모델 정립 및 구체적인 공간 조성 전략과 실행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표로 했다. 더불어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돌봄 허브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현행 학교 건축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병리적 사교육 과잉 현상에 따른 공교육 현장의 사회적 과제
- 정부 차원의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뉴딜정책의 미래교육을 위한 방향성 부재 문제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그린스마트학교-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전환

주요 연구내용

- 미래교육과 학교공간의 변화 예측
- 학교공간 혁신 전략 제안
- 미래학교 공간(학습공간, 지원공간, 옥외공간, 커뮤니티 공간) 제안
- 학교건축 추진사업 개선 방안 제안

본 연구는 미래교육플랫폼 학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 공간 혁신 전략으로는 △미래 교육 콘텐츠의 변화 수용,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평생학습과 돌봄 기능의 포용, △획일적인 공간구성을 해체한 유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학교의 공간구성 방향으로는 △유연한 학습 커뮤니티와 융합교육을 위한 특화 공간 조성,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지원 공간 확보, △다양한 교육과 연계된 옥외 공간구성, △돌봄과 평생학습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학교 간 시설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현행 학교건축 추진체계의 한계 개선을 위해 △미래학교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기획 단계에서 교육기획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사전기획과 설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연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공사비 단가의 현실화 및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미래교육공간 모델이 실제 계획 및 설계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성과 공간의 편의성,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문화 예술적 활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교건축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래학교 공간(안)]

학습공간

1. 학습 커뮤니티
2. 융합교육공간
3. 온라인 커뮤니티

❶ 가변형 파티션 가구
❷ 다양한 개인공간(cave)
❸ 다양한 협업공간(닫힌/ 열린)
❹ 다양한 휴식공간(watering hole)
❺ 전기 공간, 무대공간(mountain top)
❻ 외부공간과의 연결



지원공간

1. 도서관
2. 카페테리아
3. 체육관
4. 다목적홀
5. 관리공간

❶ 학교와 커뮤니티의 완충지대 역할
❷ 커뮤니티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공간 로비
❸ 시간대에 따른 커뮤니티의 사용
❹ 별도의 커뮤니티 출입구
❺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활용
❻ 연장된 사회적 돌봄의 공간
❼ CEPTD (자연감시)



커뮤니티 공간

❶ 돌봄공간 : 어린이집
❷ 돌봄공간 : 데이케어
❸ 치유정원, 학습농장
❹ 도서관, 식당 등 연계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건축 조성방안 연구(2025.01.)' 참고

2분과(ESG + A)	
세부 정책과제-5	
담당	유이화 위원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산업계 경쟁력 확보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

추진 배경

최근 도시 건축공간에서 '환경'과 '건강'이 핵심 주제로 부상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협으로 지적했다. 건축 부문은 유럽 에너지 수요의 40%를 차지하며 상당한 탄소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아울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요구됨에 따라, 탈탄소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목재가 주목받고 있다. 목재는 성장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약 1톤/㎥)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또한 목조건축은 재료 생산부터 탄소 배출량이 적고, 건물 자체가 탄소를 저장하는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효과로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목조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가 진행 중이며,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법제화도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의 목재 산업은 규모가 작고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내화·구조·시공 등의 기술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표준 품셈이나 공공조달 시스템이 미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건축물 조성 과정의 각종 규제가 목조건축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ESG+A 분과는 목조건축의 대중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했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 기술 개발, 전문가 양성,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목조건축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를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국내외 목조건축 동향 분석, 현행 법·제도 검토, 기술적 문제점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과 정책 제언을 도출한다.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체계]

SUB/1	SUB/2	SUB/3	SUB/4	SUB/5
국내 목조건축 최근 동향 3층 이상 도시형	해외 도시형 목조건축 최근 동향 고층 도시형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현행 법령 및 제도 내화·층간소음 등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 법·시행령·지침	목조건축 활성화 시 기대효과 분석 탄소 절감 정량화

정책과제 실현 과정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한 후 초기에는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엄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목조건축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지자체를 대상 선도사업과 공무원 대상 교육·세미나, 인력 양성을 위한 TF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목조건축 활성화 관련 법률 제정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목조건축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 초에는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를 확정하고 전문인력양성과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4년 7월 연구 착수 후, 인센티브 부여와 관계 부처 TF팀 구성을 논의했고, 목조건축물 정의와 기술적 쟁점을 심화 검토한 후, 목조 부재 표준화, 인증제도 연계, 교육 강화 등 구체적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제9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09.08.)	건축문화진흥 분과 하위(실행)과제 실천 방향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10월 12일 개최 예정인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관련 부처 등에 대해 도출 예정 - 목조건축 구조 전문가인 이주나 교수의 초청 강의 필요
제13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11.22.)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건축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1차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전문가) AURI 염철호 박사, 스토리메이커 홍기영 대표
	내용	- 지자체 대상 공공건축 대상의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 - 지자체장 및 공무원 대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필요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녹색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TF 구성 필요 - 목조건축 사례에 대한 일본 답사 추진
제14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3.12.08.)	전문가 의견 청취 후 하위(실행)과제별 추진 방향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개최 논의 - 생태도시와 목조건축 활성화를 표방하는 원주시와의 협력 세미나 개최 추진 - 허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공공건축에 목조건축 시범 적용 추진 방안 논의
제17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4.01.26.)	2024년 연구용역 과제 선정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2024년 연구용역 과제로 '(가칭) 목구조 탄소 배출량 정량화 평가기준 설정 및 목구조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 '도시형 목구조 활성화 방안연구'와 '목구조 탄소 배출량 정량화를 위한 평가기준 설정' 과제 통합 추진 결정

제19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4.02.29.)	정책과제별 내용 검토 및 논의 1차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연구용역 과제와 동시에 산림청 추천 목재협회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필요성 논의 - 목조건축 인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 대상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행사 병행 필요
제20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4.03.22.)	정책과제별 내용 검토 및 논의 2차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과업명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연구'로 확정 -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목조건축의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 필요
제25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4.07.31.)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연구 착수보고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유이화·조세환 위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서울시립대 이주나 교수
	내용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 등과 같이 인센티브 필요성 논의 -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 TF팀 구성 필요성 논의
제29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4.10.08.)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연구의 진행 상황 공유 및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김소라·유이화·조세환 위원
	내용	-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제안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관련부처 검토회의 실시
제31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4.11.08.)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연구 중간보고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유이화·조세환 위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서울시립대 이주나 교수
	내용	- 목조건축물에 대한 정의, 목조건축의 활성화·대중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 정책 효과성(투입 비용 대비 고(高) 효과)이 높은 과제 우선순위 설정 필요 - 목조건축에서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목구조 표준 성능 지침 필요성 논의
제34차 건축문화진흥 분과회의 (2025.01.02.)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연구 최종보고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개천 분과위원장, 유이화·조세환 위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서울시립대 이주나 교수
	내용	- 목조건축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목조 구조부재의 규격표준화 및 KDS 기준 구조설계기준 고도화, 구조의 표준 시방서 정비 필요성 논의 -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 목조건축에 맞는 평가 시스템 도입 제안 -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전문가 양성(교육)필요성 논의

정책연구 추진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연구

본 연구는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 산업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목조건축 동향 및 현행 법·제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설계, 시공, 관리 시스템, 탄소배출 정량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 산업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주요 연구내용

- 국내 목조건축 최근 동향
- 해외 도시형 목조건축 최근 동향
-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현행 법령 및 제도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
- 목조건축 활성화 시 기대효과 분석

본 연구는 국내 목조건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와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목조건축 설계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내화 성능에 대한 표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표준구조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산 구조용 목재 부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규격 및 성능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존 목구조 건축구조기준(KDS)을 보완하였으며,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목조건축 단열 지침도 함께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목조건축 시공 기술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 목조건축 시방서(KCS)의 내용을 보완하고, 공공건축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품셈 및 표준가격 체계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목조건축의 발주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발주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제안하였다.

아울러, 목조건축에 대한 심의 및 감리 시스템의 보완 방안도 제안하였다. 목조건축 관리자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심의 및 감리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목구조 건축물의 탄소배출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목구조 사용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인 정책 시행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설계, 시공, 제도, 환경성 평가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통합적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목조건축 산업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방향]

1. 목조건축 설계기술 (표준화/제도화)	(건축계획) 설계기술 표준화 (건축구조) 구조기술 표준화 (환경설비) 친환경건축 제도 안으로 진입
2. 목조건축 시공기술 (시공관리 시스템)	시공 표준기술 보완
3. 목조건축 관리 시스템 (심의/감리)	전문위원회 인력 양성
4. 탄소배출 정량화 (환경평가 지표)	정량화 기준 확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 방안 – 1]

구분	개선방향	내용	시급도	시행여건
1. 목조건축 설계기술 표준화	내화성능 표준인정 확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 • 다양한 목조구법의 표준인정 추가 공고	시급	양호
	목구조 층간소음 표준구조 지침 마련	• 기존 연구결과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목조 표준바닥구조로 제정	시급	양호
	국내산 구조부재 표준화	• 통일된 구조부재 표준규격 지정 • 표준규격을 반영한 KDS 표준 경간표 및 KDS 기준 개정	매우 시급	즉시 가능
	도시형 목구조를 위한 미비한 구조기준 보완	• 수평하중 저항시스템과 접합부 설계 등 KDS 목구조 설계기준의 고도화 • 국가연구 R&D 결과와 학계 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 장기 계획 수립	시급	장기 계획 필요
	목구조 단열지침 마련	• 내화·방수·방습·기밀 성능을 포함한 표준 목조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지침을 제정	시급	즉시 가능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 방안 – 2]

구분	개선방향	내용	시급도	시행여건
2. 목조건축 시공 표준기술 보완 및 개선	KS 충실화 및 선진화	• 목구조 시공관련 KS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산림청 연합의 기술심의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목조를 가능하게 하는 신규 제품과 공법에 대응하는 KS 마련	시급	장기계획 필요
	목조건축 시방서 보완	• 국토교통부+산림청 연합의 기술심의회를 구성하고 기존 표준시방서 KCS를 도시형 목조를 가능하게 하는 목구조 시공기술로 보완	시급	양호
	공공건축 표준품셈 표준가격 개발	•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관리주체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관으로 표준품셈과 표준가격 개발	매우 시급	즉시 가능
3. 목조건축 심의/감리 시스템 보완	목조건축 관리자 체크리스트 개발	• 목구조 설계심의 및 구조심의, 감리, 허가권자 표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	시급	즉시 가능
	심의·관리자 자격 검증제도 도입	• 목조전문가를 활용하는 심의/감리제도 마련	시급	장기계획 필요
4. 탄소배출 정량화 지표 개발	목조건축 LCA/HWP 정량화 기준 정립	• 녹색건축인증제도에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정립 • 국산목재제품(HWP) 산정값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시급	장기계획 필요
	목조건축의 가치창출을 통한 인센티브 운영기준 마련	• 구축된 탄소배출량 정량화 기법과 연관하여 목조건축의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마련 •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참고기준으로 배포	시급	장기계획 필요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2025.02.)' 참고

정책화 성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안) 제안

탄소중립과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 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4년 9월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제안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검토회의를 진행했으며, 정책연구에서도 목조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특례, 보조금·융자 지원, 특례지구 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4년 11월 28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위성곤·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되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구체화되었다.

[위성곤·권영진 의원 안 (2024.11.28. 대표 발의)]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추진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이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 공동 수립 • 전문가로 구성된 목조건축 정책협의체 운영 • 정책연구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목조건축지원센터 설립·지정	제5조 제6조 제7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설계·시공 표준화 추진 및 기술개발·품질 기준 개선 촉진 •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 교육기관 지정 • 목조건축물 공사감리자 및 설계자의 전문 교육 수료 의무화	제9조 제10조 제11조
공공부문 활성화	• 문화, 교육,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 적용 장려 • 국가기관 등 시행 공동주택(특히 저층형)에 목조건축 적용 노력 • 공공건축물 건축 시 국산 목제 제품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	제15조
민간부문 활성화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을 지정과 기반시설 등 지원 •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시 목조주택 건축 장려 • 목조주택 보급 촉진을 위한 표준설계도 고시	제16조 제19조 제20조
품질관리 및 지원	• 목재이용 현황조사 실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 건축용 목재제품의 규격 표준화 및 공장 생산 장려를 통한 품질관리 •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및 재정지원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18조
재정 및 세제 지원	• 목조건축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활용도 제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계상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제공	제17조 제2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목조구조에 특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제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목조건축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표준바닥구조 지침을 제안하면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와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7.9. 개정)되었으며, 기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210mm)에서 목구조 공동주택 층간바닥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책 현장의 회고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

유이화 위원



목조건축 글로벌 트렌드 대비 국내 제도·기술·산업 인프라 격차 해소 시급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조건축은 이미 국제적으로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 기술 인프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있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조건축의 공공성과 기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임기 중 개최된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선입견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목조건축의 공공성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들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목조건축법 제정 추진과 업계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활동 전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목조건축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부처와의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품셈의 정립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국민과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목조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와 인식 전환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목조건축 활성화의 복합성으로 인한 단기 성과 달성의 현실적 한계

본 과제의 초기 목표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대중화'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목표는 단일 정책이나 단기간의 추진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지닌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도 정비, 기술 표준화, 인식 개선,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와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 협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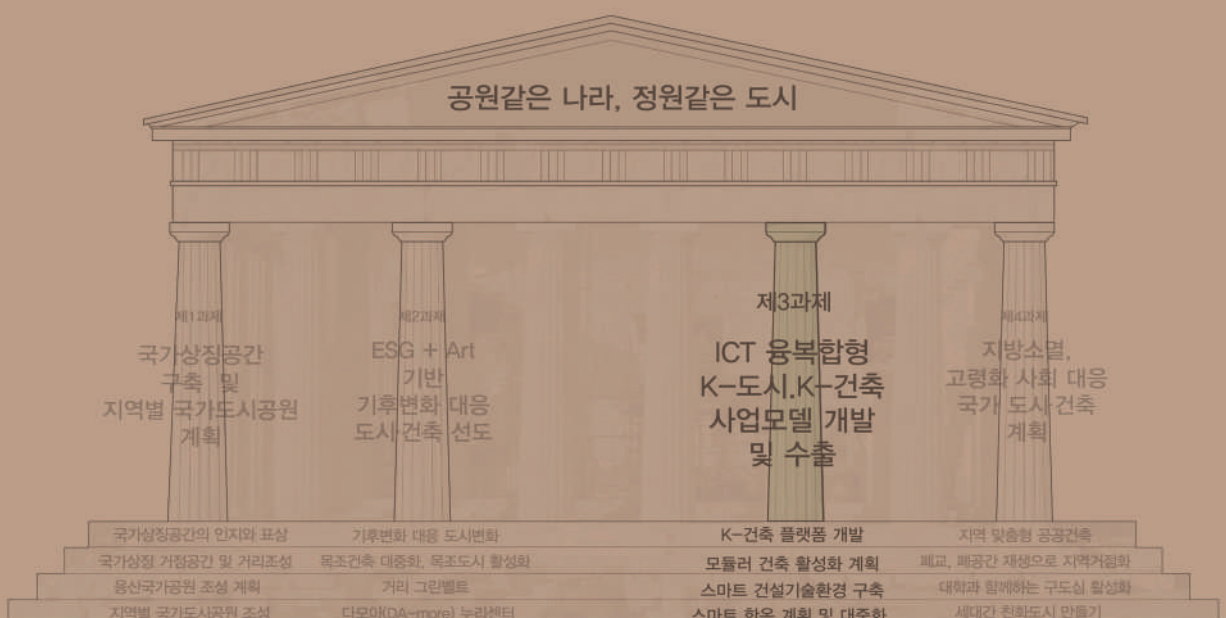
목조건축법 제정과 부처 간 협업 기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산업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조건축법' 제정(현재 발의 중)을 포함한 법·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기술 기준과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의 정립, 교육 및 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 협업 구조를 정례화하고, 공공건축 분야에서 목조건축이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시범사업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PART

3

ICT 융복합형 K-도시, K-건축 사업모델 개발 및 수출



스마트와 전통의 융합

K-도시건축의 비전

추진 배경

한국적 정체성을 담아내는 미래형 건축·도시모델 필요

21세기 대한민국은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다층적인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축은 시대적 가치와 기술, 문화가 교차하는 플랫폼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가 도시와 건축 환경 전반에 확산되면서, 건축의 기능성과 지능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한층 높아졌다. 동시에, K-컬처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으며 한국의 전통 건축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 중심의 스마트도시' 또는 '유산 중심의 보존형 도시'로 양분된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전통성과 기술성, 문화성과 지능성이 융합된 미래형 건축과 도시모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적 정체성과 장소성을 담아내는 새로운 도시건축 전략으로서 'K-도시건축' 개념이 대두되었다.

ICT 기술의 발전과 K-컬처 확산 속 건축의 미래상

오늘날 도시와 건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첨단 ICT 기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건축물은 에너지와 안전, 사용자 경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개선까지 지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 고유의 공간문화(예: 한옥, 마당, 온돌, 담장 등)는 세계적 문화 콘텐츠의 일부로 재조명되며 전통 공간의 현대적 재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 한옥스테이, 한국형 미디어 콘텐츠(드라마, 웹툰 등)에 등장하는 건축 이미지들은 건축을 통한 국가 브랜드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K-도시건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마트기술과 K-문화의 결합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한다. 기술이 주도하는 공간 혁신에, 정체성과 문화적 서사가 입혀진 건축환경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시민의 공감과 세계적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K-도시건축의 이론적 기반과 정책 담론 탐구

'K-도시건축'은 대한민국의 건축이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미래기술의 혁신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새로운 도시건축 정책 패러다임이다.
기존의 '스마트도시'나 '그린건축'이 기능적·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던 반면, K-도시건축은 이에 문화적 가치와 장소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시스템 설계, 산업화·수출 가능성까지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절감 차원을 넘어, 사람·문화·기술이 어우러진 미래 도시건축의 철학적 방향을 제시한다.

"K-도시건축은 한국의 삶, 기술, 문화가 응축된 도시와 건축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K-도시건축은 다음의 네 가지 정책 철학을 근간으로 하며, 이러한 가치들은 각각의 정책과제(스마트 한옥, 플랫폼, 모듈러 건축)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기술-문화-산업이 결합한 통합형 건축정책으로서 K-도시건축을 구성한다.

전통성과 정체성	한국 고유의 건축언어(한옥, 마당, 온돌, 처마 등)를 현대건축과 결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세계 속의 'K-브랜드 건축'으로 확장
기술융합과 스마트성	BIM, AI, IoT, 모듈러 등 첨단 건축기술을 융합하여 효율성과 지능성을 확보. 데이터 기반 설계와 실시간 운영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 실현
장소성과 공공성	특정 장소의 역사·지형·문화에 기반한 공간구성. 보편적 설계와 공동체 중심 공간을 통해 포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건축 지향
산업화와 세계화	플랫폼 기반의 건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출형 K-건축 모델 개발 및 ODA·재외공관 연계 등으로 국제화 가능성을 확보

정책과제 실현 과정

K-도시건축 정책,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책이 이론이나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건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K-도시건축과 관련한 건설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핵심 동력으로 모듈러 건축에 주목하였으며, 선도적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 입안자와 현장 전문가, 그리고 미래 건축의 수요자가 머리를 맞대고 당면 과제를 발굴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의 지혜와 공론의 결과, 정책의 나침반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모듈러 건축 현장 방문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 지혜, 그리고 공론의 결과를 정책성과 확산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언은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반영되었다. 현장 방문 내용과 심포지엄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장점과 국건위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모듈러 건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계의 기술 개발과 시장 참여를 독려하며, K-모듈러 건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모듈러 건축 현장 방문]

세부 실행과제 선정

건축정책의 새로운 프레임 K-도시건축

K-도시건축의 정책 구현은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다.

스마트 K-HOUSE 활성화

전통 한옥의 조형성과 공간미를 계승하면서도, AIoT 기반의 에너지관리, 보안, 편의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한옥'은 정체성과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 주거 모델로 주목되었다. 특히 생애주기별 한옥 교육, 표준 설계 및 인증체계 도입, 민간기술 연계(스마트 코티지, Pre-Cut 시스템) 등을 통해 대중화 가능성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ICT 기반 K-건축 플랫폼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BIM,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건축 운영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건축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설계 시뮬레이션, 자재관리, 에너지 분석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건축환경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듈러 건축 혁신

기존의 현장 중심 방식에서 탈피한 공장 제작-현장 조립 기반의 모듈러 건축은 시공 효율성, 품질 안정성, 탄소 저감 효과 등에서 새로운 건축 생산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간소화, 성능 기준 정비, 장수명 인증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수출형 K-모듈러 모델로서의 발전 가능성까지 검토하였다.

스마트건설 기술환경 구축

기존의 분절된 설계 · 시공 · 운영 체계를 넘어, 디지털 기반으로 건축 전(全) 과정을 통합·관리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BIM(빌딩정보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설계평가, 시공단계의 품질·안전 관리, 유지관리 단계의 하자 및 에너지 분석까지 연계하는 건축 생애이력 관리 체계가 주요 정책의제로 제시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공공건축 설계단계의 스마트 설계평가 기준 마련, 유지관리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AI·BIM 기반 자동화 설계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한 실증 적용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K-도시건축은 한국건축의 정체성, 산업화, 공공성, 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전략적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노력과 추진 과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는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조정 분과위원회의 핵심과제로 'ICT 융복합형 K-도시건축'을 선정하고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를 구성하였다. 이후 약 20차례의 분과회의와 산학연 전문가 협의를 통해 다음의 4대 전략과제를 구체화하였다.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 주요 정책과제-1]

스마트 K-HOUSE 활성화 (김현선 위원)	제1차	2023.05.15.	스마트 한옥을 ICT 융복합형 과제로 선정
	제3차	2023.07.04.	재외공관 한옥 활용 및 세계화 논의
	제6차	2023.09.12.	스마트 냉난방, 보안, 미디어아트 등 기술 접목 방안 논의
	제9차	2023.10.18.	K-Street 개념 도입, 공간 유형화 논의
	제10차	2023.11.23.	스마트 한옥 전시 콘텐츠화 및 교육 활용 논의
	제12차	2024.01.25.	AIoT 기반 앰비언트 한옥 개념 도입
	제13차	2024.02.15.	스마트 코티지 사례 검토 및 연계성 논의
	제14차	2024.03.11.	스마트 한옥 정의 구체화, K-House 심포지엄 기획
	제18차	2024.05.28.	Pre-Cut System 기반 모듈화 방안 검토
	제31차	2025.01.09.	스마트 K-HOUSE 연구 최종보고, 정책 가이드라인 확정
ICT 기반 K-건축 플랫폼 구축 (이인화 위원)	제1차	2023.05.15.	ICT 기반 플랫폼 과제 발굴
	제5차	2023.08.28.	K-건축 플랫폼 개념 정립, 테스트베드 필요성 논의
	제6차	2023.09.12.	기능요소 정의 및 제도 연계 논의
	제9차	2023.10.18.	플랫폼 유형 분류, 수출전략 구성
	제13차	2024.02.15.	플랫폼 연구과제 기획
	제16차	2024.04.12.	수출형 플랫폼 및 ODA 연계 구상
	제19차	2024.06.24.	통합 포털형 플랫폼 구성 논의
	제26차	2024.10.14.	중간보고 및 법제도 기반 강화 제언
	제31차	2025.01.09.	최종보고: 실현모델, 운영체계, 활용 방안 제시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 주요 정책과제-2]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안용한 위원)	제2차	2023.06.12.	이동형 모듈러 모델 및 수출 전략 검토
	제6차	2023.09.12.	모듈러 주택의 법제 정비, 공공 시범사업 필요성 강조
	제9차	2023.10.18.	성능기준, 수출 대상국, 산업 생태계 구축 논의
	제11차	2023.12.26.	모듈러 건축의 해외 진출 방향 논의
	제12차	2024.01.25.	모듈러 건축 5대 추진과제 발표 및 스마트코티지 모델 검토
	제13차	2024.02.15.	스마트코티지 연계 및 민간 협업 모델 논의
	제14차	2024.03.11.	스마트모듈러 포럼 설립 추진
	제18차	2024.05.28.	모듈러 생산 효율화 방안 및 심포지엄 기획 논의
	제19차	2024.06.24.	디지털&모듈러 심포지엄 추진 확정
	제21차	2024.07.22.	고층화 기술, 층간소음 기준 등 기술규제 논의
	제35차	2025.03.17.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 개선 연구 최종보고
스마트건설 기술 환경 구축 (조승구 위원)	제1차	2023.05.15.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 필요성 논의
	제5차	2023.08.28.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논의
	제6차	2023.09.12.	BIM 기반 공공건축 품질관리 강화 방안 제안
	제9차	2023.10.18.	유지관리 시스템, 시공 모니터링 논의
	제14차	2024.03.11.	스마트건설 컨퍼런스 추진 관련 논의
	제16차	2024.04.12.	AIBIM 설계방향 제안
	제19차	2024.06.24.	'디지털&모듈러 건축' 심포지엄 계획 확정



[아원고택 중심으로 한옥문화 확산 사례 논의]



[외교부 재외공관에 적용할 한옥문화 모델 논의]



[모듈러주택 사업현황 보고]



[해외 스마트도시 사례 논의]



[스마트시티 사업현황 보고]

K-도시건축 4대 정책과제 최종 선정

[정책과제 1] **스마트 K-HOUSE 활성화**	위원	김현선 위원
	정책방향	전통 공간문화에 스마트 기술(AIoT, Pre-cut 시스템 등)을 융합한 미래형 한옥 유형 개발 및 산업화
	세부과제	ICT융합 K-건축, K-정원 모델개발 및 세계화 로드맵
	추진내용	• 한옥과 ICT가 융합된 문화예술공간 플랫폼 조성 • IoT 활용 지능형 난방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화 •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K-정원 사업모델 개발
[정책과제 2] **ICT 기반 K-건축 플랫폼 구축**	위원	이인화 위원
	정책방향	BIM·AI·클라우드 기반 생애주기 건축관리 플랫폼 설계 및 공공건축 설계기준 반영·수출 전략 수립
	세부과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K-건축 해외 진출 방안
	추진내용	• 건축물 용도별 스마트 기술 플랫폼과 DB 구축(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활용) 및 법·제도 개선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IT 아이디어 제안 공모, 테스트 베드 선정, 지속 가능한 성능·유지 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 기술 활용 K-건축 세계화를 위한 전략·제도적 홍보방안 제시
[정책과제 3]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위원	안용한 위원
	정책방향	공업화·조립화된 모듈러 주택·시설을 위한 품질기준 마련, 산업기반 확대, 수출형 구조 제시
	세부과제	모듈러 건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및 해외 진출 방안
	추진내용	• 지방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이동형 모듈러 시스템 개발 • 모듈러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개발 • 모듈러 해외수출 생태계 구축 • 공업화주택 인증제도 및 발주방식 개선
[정책과제 4] **스마트건설 기술환경 구축**	위원	조승구 위원
	정책방향	디지털 설계평가, 시공 모니터링, 유지관리 기술을 연계한 공공건축의 품질·안전관리 시스템화
	세부과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내용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 스마트(BIM 설계) 기술을 활용한 설계 평가 및 선정 방안 제시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공공건축(임대주택)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품질, 안전, 하자 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3분과(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세부 정책과제-1	
담당	김현선 위원

전통의 아름다움과 기술의 연합

스마트 K-HOUSE 활성화

추진 배경

한옥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고즈넉한 풍경과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우리의 소중한 건축 유산이다. 처마의 곡선과 나무 기둥의 온기, 마당의 여유로움은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를 오롯이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쓰는 동안에도, K-HOUSE, 즉 한옥의 위상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왜 한옥은 우리 곁에서 멀어졌는가?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전통 방식 그대로 한옥을 짓는 것은 큰 비용이 필요했고, 한번 지은 후에도 나무와 흙이라는 자연 재료의 특성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대 주택에 비해 단열과 방음에 취약하다는 인식과 화장실, 주방 등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의 불편함 등은 한옥을 '살기 좋은 집'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위한 공간'이나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인식하게 했다.
물론, 정부는 한옥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2007년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10년 '新한옥 플랜', 2014년「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한옥 기술 개발(R&D), 전문인력양성, 세제 감면 및 마을 조성 지원 등 여러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옥 수요는 정체되었고, 여전히 많은 한옥 건축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등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상상력, 스마트 K-HOUSE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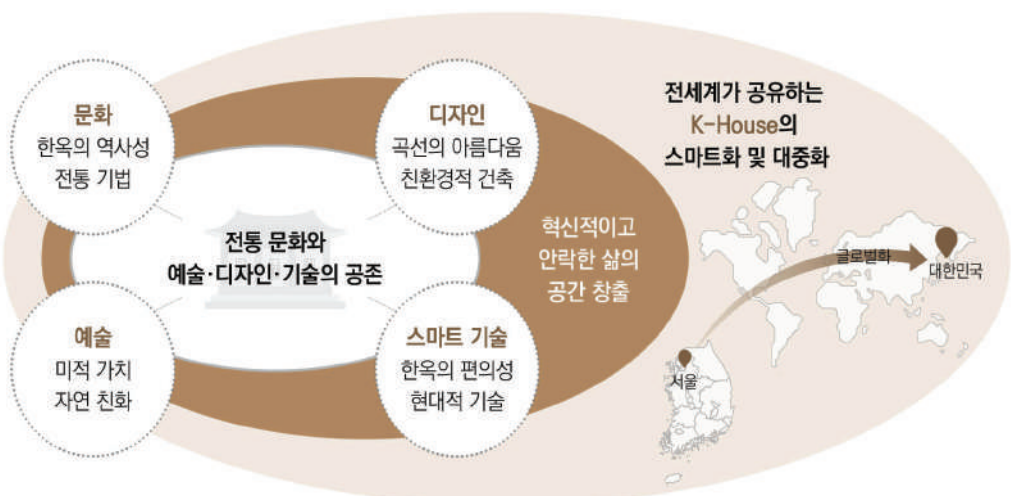
이러한 위기의식과 고민 속에서 스마트 K-HOUSE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한옥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철학은 지키면서, 현대 기술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더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스마트 K-HOUSE'였다.
스마트 K-HOUSE는 단순히 한옥에 스마트 기기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역사·문화·건축·디자인)을 현대적 요구(편리성·유용성 등)와 혁신 기술에 맞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구축한 곳"이라는 새로운 정의에서 출발한다. 즉, 한옥의 '형태'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사람 중심의 공간이라는 '철학'을 계승하되, 이를 현대 기술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통합'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건축물에 우리 문화와 예술·디자인·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원형적·은유적 해석을 구현함으로써
매력적이며 혁신적인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



[스마트 + K + House 개념 도출]

한옥은 주거 공간이라는 틀을 넘어, 때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업무 공간으로, 때로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전시 공간으로, 또 때로는 이웃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변신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진화한다. 또한,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스마트 K-House의 개념도]

스마트 K-HOUSE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스마트 K-HOUSE의 비전은 구체적인 기술과 방안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첫째, 첨단 ICT 기술이 한옥의 전통적 미학과 가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는 집 안의 온도, 습도,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은 가족의 생활 방식을 학습하여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 난방을 켜고 조명을 조절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옥 지붕에는 전통 기와의 멋을 살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마트 그리드와 연동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목조건축의 약점인 화재 위험은 첨단 감지 시스템으로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한다. 이 모든 기술은 전통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옥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스마트 K-HOUSE의 디자인 기본구상(안)]

둘째, 모듈화 건축 방식으로 경제성과 시공성을 높여야 한다. 기둥, 보, 벽체, 지붕 등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표준화된 규격으로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 공법을 도입한다. 이는 숙련된 장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대량 생산을 통해 건축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손상된 부분이 생기면 해당 모듈만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유지 보수도 훨씬 용이해진다. 이를 통해 도시의 협소한 공간, 넓은 농촌 지역,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곳에 스마트 K-HOUSE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디자인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한다. 외부 디자인은 한옥 고유의 처마선과 기와 형태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패널과 환기 시스템을 통합하고, 내부는 슬라이딩 벽체와 접이식 가구를 활용하여 주거, 업무,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변화하는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구현한다. 한지 창문 뒤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풍경을 바꾸는 등 혁신적인 시도도 이루어진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스마트 K-HOUSE의 방향 필요성

스마트 K-HOUSE는 우리의 전통을 미래 세대에게 이어주고, K-문화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아이콘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인 스마트 K-HOUSE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념과 디자인, 기술 융합 방안을 바탕으로 실제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이 직접 스마트 K-HOUSE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설계자와 시공자들이 쉽게 스마트 K-HOUSE를 지을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보급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건위는 스마트 K-House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스마트 K-HOUSE의 디자인 기본구상(안)]

정책과제 실현 과정

전통의 미래를 짓는 스마트 K-House 정책과제 추진

스마트 한옥 정책과제는 제1차 분과회의(2023.05.15.)에서 '스마트 한옥'을 ICT 융복합 중심의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한옥의 전통성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제3차 회의(2023.07.04.)에서는 재외공관에 한옥을 활용하고 K-House의 세계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제6차 회의((2023.09.12.)에서는 AIoT 기반 냉난방, 보안, 미디어아트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어 제9차 회의(2023.10.18.)에서는 'K-House + K-Garden'을 결합한 'K-Street' 개념이 제안되었고, 스마트 한옥의 공간구성 요소와 콘텐츠화 방향도 논의되었다.

제10차 회의(2023.11.23.)에서는 전시 콘텐츠 및 교육 활용 방안이 다뤄졌으며, 제12차 회의(2024.01.25.)에서는 '앰비언트 AIoT 한옥' 개념 제안, 글로벌 확산을 위한 R&D 및 정책 프레임이 논의되었다. 제13차 회의(2024.02.15.)에서는 LG 스마트코티지 사례를 공유하며 스마트 한옥과의 기술적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14차 회의(2024.03.11.)에서는 스마트 한옥의 정의를 '전통성 + AI·IoT 융합'으로 구체화하고, 이후 8월에 개최된 K-House 심포지엄과 스마트모듈러 정책과의 연계도 논의되었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Pre-Cut System을 기반으로 한 한옥의 모듈화 방안이 별도 분과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제31차 회의(2025.01.09.)에서는 '스마트 K-HOUSE 시장 확대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유형별 가이드라인, 기술 적용 항목, 문화적 요소 등이 포함된 정책모델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

제1차 분과회의 (2023.05.15)	핵심정책과제 '스마트 한옥' 선정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LH) 이준호 부장, 이병재 부장
	내용	• '스마트 한옥' 과제를 핵심 ICT 융복합 정책과제로 선정 • 스마트시티, BIM, K-건축 등과 연계 논의 시작
제3차 분과회의 (2023.07.04.)	재외공관 한옥 활용 및 세계화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외교부) 문중제 재외공관담당관 사무관, (아원고택) 전해갑 대표
	내용	• 재외공관 한옥 활용 확대 방안 논의 • K-House의 세계화 및 유형화 필요성 제기
제6차 분과회의 (2023.09.12.)	스마트 냉난방, 보안, 미디어아트 등 기술 접목 방안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안용한·조승구·이인화 위원
	내용	• 스마트 한옥에 AIoT 기반 냉난방, 미디어아트, 보안 시스템 도입 검토 • K-House 브랜드화 및 시범 유형 모델 논의

제9차 분과회의 (2023.10.18.)	K-Street 개념 도입, 공간 유형화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안용한·조승구·이인화 위원
	내용	• 'K-House + K-Garden' 결합을 통한 'K-Street' 개념 제시 • 스마트 한옥 공간계획 요소 분류 및 콘텐츠화 방향 논의
제10차 분과회의 (2023.11.23.)	스마트 한옥 전시 콘텐츠화 및 교육 활용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외부) 김용수 국토교통부 도시건축박물관 팀장,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
	내용	• 스마트 한옥 전시 콘텐츠 연계 논의 • ICT 융합전시, 교육용 스마트한옥 콘텐츠화 방안 검토
제12차 분과회의 (2024.01.25.)	AIoT 기반 앰비언트 한옥 개념 도입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안용한·조승구 위원, 기획단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손경종 부회장
	내용	• '앰비언트 AIoT 한옥' 개념 도입 제안 • 스마트 한옥 글로벌 진출을 위한 R&D 및 정책 프레임 논의
제13차 분과회의 (2024.02.15.)	스마트 코티지 사례 검토 및 연계성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안용한·조승구 위원, 기획단 (스마트 코티지 컴퍼니) 조연우 대표
	내용	• LG 스마트코티지 사례 공유, 한옥과의 융합 가능성 논의 • 스마트 한옥 기술 적용 실증 과제 구상 및 연계 가능성 검토
제14차 분과회의 (2024.03.11.)	스마트 한옥 정의 구체화, K-House 심포지엄 기획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안용한·조승구 위원, 기획단
	내용	• 스마트 한옥 정의 구체화('전통성 + AI·IoT 융합') • K-House 심포지엄(8월) 개최 계획 논의 • 스마트모듈러 포럼과 정책 연계 논의
제18차 분과회의 (2024.05.28.)	Pre-Cut System 기반 모듈화 방안 검토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안용한·조승구 위원, 기획단 (금진팀버이앤씨) 민승홍 대표 : Pre-Cut 시스템 설명
	내용	• Pre-Cut System 기반 한옥의 모듈화 논의 • 전통성+현대기술 조합 통한 대중형 한옥 시공 모델 검토
제31차 분과회의 (2025.01.09.)	스마트 K-HOUSE 연구 최종보고, 정책 가이드라인 확정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안용한·조승구 위원, 기획단 (디자인에이치앤) 정책연구용역 담당자
	내용	• 「스마트 K-HOUSE 시장 확대 방안 연구」 최종보고 • 스마트 한옥의 유형별 가이드라인, 기술 적용 항목, 문화성 반영 항목 확정 • 가격/기술/문화요소를 종합한 정책 적용 가능 모델 제시

정책연구 추진

스마트 K-HOUSE 활성화 및 시장 확대 방안 연구

본 연구는 기존 스마트건축이 지닌 기술 중심의 한계를 넘어, 한국적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스마트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를 통해 주요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

AI, IoT, BIM, 모듈러 건축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주거의 스마트화는 물론, 공공성, 산업성, 문화성을 포괄하는 통합형 건축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단독형, 케어하우스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공공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 참여를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K-HOUSE 관련 법제 정비, 정책 통합, 시민참여 기반 강화 등 제반여건의 과제를 도출한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한옥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기술·감성 등과의 연계가 다소 미흡하여 사용성 개선 측면에서 개선 필요
- 한옥을 주축으로 한 K-HOUSE를 '문화와 예술, 스마트'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세계적인 위상 강화
- 한옥의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현대 기술과 디자인, 문화적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건축적 패러다임 재창조 필요

주요 연구내용

- 한옥의 우수성 분석 및 스마트 K-HOUSE 개념 정립
- 한옥과 스마트기술 융합 방안 및 세계화 모델 제시
- 스마트 K- HOUSE의 디자인 기본구상(안) 및 시범사업 제시
- K-HOUSE 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로드맵 및 제도개선 방안

스마트건축의 한계를 넘어서는 K-HOUSE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스마트건축은 오랜 시간 건축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온 주요 정책의제였다. 스마트건축의 센서를 활용한 환경 제어, 자동화된 에너지관리 시스템, 그리고 BIM을 활용한 시공 최적화 등은 첨단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여전히 한국적 삶의 방식과 공간문화, 정체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K-HOUSE'는 이와 같은 기존 스마트건축의 한계를 넘어, 기술과 전통, 공간과 문화, 공공성과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스마트건축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K-HOUSE는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기술 융합 전략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K-House 스마트기술 융합 전략]

AI (인공지능)	건물 운영 자동화, 사용자 패턴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IoT (사물인터넷)	실시간 에너지관리, 안전 모니터링, 건강관리 연동
BIM (건축정보모델링)	생애주기 기반 계획 및 시공, 유지관리 데이터 통합
모듈러 건축기술	신속 시공, 재조립 가능성, 비용 효율성과 공장제 생산 기반

K-HOUSE의 정책 실현 및 확산 전략

정책 실현 전략 ① : 유형 다변화와 공간 적용 전략

K-HOUSE는 용도와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 가능한 건축 유형을 갖는다. 단독형, 복층형, 복합형 등 다양한 평면과 규모를 수용할 수 있다.

[K-House 유형 다변화 전략]

지역 거점형 K-HOUSE	농촌 고령자 마을의 공공임대형 주거로 도입
캠퍼스형 K-HOUSE	지역 대학교와 연계된 창업·기숙·문화 복합공간
케어하우스형 K-HOUSE	보건소 및 응급이송 체계와 연동된 의료 연계형 주거
한옥 스마트문화체험형	관광지 내 K-건축 콘텐츠 중심의 체험관광 주택

예를 들어, '한옥형 K-HOUSE' 시범 모델은 전통 한옥의 처마와 마루 구조를 디지털 설계로 구현하고, 실내외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능이 통합된 모듈러 주거형 K-HOUSE는 지역 보건소, 요양시설, 커뮤니티센터와 연계된 플랫폼형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정책 실현 전략 ② : 공공주도 시범사업 및 민간 확산 전략

스마트 K-HOUSE는 초기에는 공공주도로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화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공공건축 시범단지 조성이나, 재외공관, 문화홍보시설, 관광거점 내 모듈형 한옥 체험시설 등은 공공주도의 선도 적용모델로 계획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의 디지털 건축자재 기술개발 사업과도 연계하여 디지털 기반 건축 자재의 표준화·수출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후 민간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기술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설정한다.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의 K-HOUSE의 효과

K-House의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건축이 사람과 기술,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K-HOUSE는 '스마트함'이라는 기술의 외피를 넘어, 한국의 정체성으로 채워진 건축의 품격을 실현하는 장(場)이면서, 사회문화적, 산업경제적, 정책제도적 혁신 효과를 이끌어낸다.

[K-House 사회혁신 효과]

사회문화적	한국적 정체성의 현대화 구현, 건축문화 콘텐츠 확산, 시민 체험 기반 건축교육 강화
산업경제적	모듈러·스마트건축 산업 성장, 건설+IT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해외 진출 기반 확대
정책제도적	도시·건축 통합정책의 실현, K-건축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융합 기반 형성

K-HOUSE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K-House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법제 기반 정비	'도시건축통합계획법(가칭)', 'K-HOUSE 인증제', '모듈러 건축 표준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추진	세종, 전주, 순천 등 지역특화도시 중심의 K-HOUSE 시범지구 지정
정책 간 연계 강화	건축정책, 스마트도시, K-콘텐츠, 공공건축지원 정책 간 통합 운영
시민수용성 제고	시민 체험형 모델하우스, 건축문화 교육과 연계된 공공 캠페인 추진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스마트 K-HOUSE 활성화 및 시장확대 방안 연구(2025.01.)' 참고

정책 현장의 회고

스마트 K-HOUSE 활성화 및 시장 확대

김현선 위원



한옥의 전통적 가치 보존과 현대 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 K-House 개념 필요성 제시

스마트 K-House 과제를 제안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한옥이라는 우리의 전통 건축이 역사적 가치와 미학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주거 생활방식이나 기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실생활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전통한옥은 자연친화적이고 공간 활용에 뛰어나지만, 관리의 어려움, 단열 문제, 높은 시공비용 등으로 인해 일반 대중의 주거 선택지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스마트홈, 탄소중립, 고령친화주택 같은 새로운 건축 트렌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통 건축이 현실과 단절되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옥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현대 기술과 삶의 방식에 맞게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스마트 K-House'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책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주거 건축의 차원이 아니라, 전통의 현대화, 기술의 문화화, 그리고 한국적 정체성의 글로벌화를 함께 고민하는 통합적 과제였다고 봅니다.

한옥을 보존 대상에서 현대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주거모델로 관점 전환

스마트 K-House 정책과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옥을 정적인 보존 대상에서 벗어나, 기술과 문화가 결합한 미래형 국가건축자산으로 재정의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옥 관련 정책이 '보존', '복원', '지정' 중심이었다면, 이번 과제는 한옥이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옥은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닌, 현대 도시 속에서 재생 가능한 스마트 건축이자, 글로벌 수출이 가능한 K-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기술, 제도, 시범사업, 국제 확산 등 정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행전략과 예시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성과입니다.

특히 외부·내부 디자인 방향 및 예시 가이드,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 공간 유형별 디자인 시나리오 등은 향후 민간과 지자체에서도 기초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사관·문화원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 국내외 시장을 염두에 둔 확산 경로를 정책적 상상력이 아닌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제시한 것도 실질적인 정책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옥의 전통성을 해치지 않는 스마트 기술 적용 방법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단연, '전통'과 '기술'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실제 건축 설계와 정책기획 차원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옥은 전통적인 건축 문법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적인 감수성이 강한 반면, 스마트 기술은 효율성과 기능성 중심의 현대적 요소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지 않고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득력 있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개념 설계단계부터 정체성, 사용성, 확산성, 시공성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옥 및 스마트 기술 분야 전문가, 디자이너,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와 회의를 반복하며 균형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억지로 입히지 않고, 전통 건축의 흐름과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을 도출하려 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지점이었습니다.

기획연구 완료 후 실제 적용 사례와 구체적 시뮬레이션 부족 아쉬움

이번 스마트 K-House 과제는 정책 차원의 기획연구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건축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기획하는 데 초점을 둔 과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은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K-House라는 개념도 구체적으로 정립했고, 디자인 방향과 기술 요소, 법제적 과제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기획이 더 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장소, 어떤 용도에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식의 상황 가정과 시뮬레이션이 앞으로는 더욱 실감 나게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술과 디자인이 만나는 지점, 공간구성과 사용자 삶이 만나는 지점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나 사례로 설명되었다면, 개념에 대한 이해도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시범 적용과 현장 중심 실행 환경 조성 필요

스마트 K-House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좋은 개념과 방향은 마련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제도의 개선이나 실행을 위한 대규모 예산 확보보다는, 작고 단순한 실행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 K-House의 대표적인 모델 하나를 만들어서 도심 속 공공시설 안에 소규모로 먼저 설치해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꼭 큰 규모일 필요는 없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쉼터나 정자 같은 공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공감도 더 생깁니다.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 설계공모나 생활 SOC 사업 같은 데에 스마트 K-House 디자인 요소를 옵션으로 넣는 방식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기존 사업의 틀을 활용하되, 새로운 시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설계자나 시공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가이드북이나 디자인 매뉴얼을 별도로 기획하고 만들어 배포하고 설명회나 워크숍을 함께 열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도 실제로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서관, 학교, 작은 복지관 같은 작은 공공시설부터 스마트 K-House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규모 건축보다 훨씬 유연하고 부담도 적어서 시도해 보기 좋고, 실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K-House가 어떤 모습인지 시민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3D 이미지나 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만들어서 전시하거나 SNS에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이나 글보다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훨씬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복잡한 제도부터 고치기보다, 작고 쉬운 실행부터 시작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책도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3분과(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세부 정책과제-2	
담당	이인화 위원

디지털 전환 시대, 차별화된 융복합 건축 전략

스마트 그린 K-건축 플랫폼 구축

추진 배경

시대적 요구와 K-건축의 현주소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건축 분야에도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화, 그리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빌딩정보모델링(BIM)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한 각종 산업의 디지털 가속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융복합적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건축물에 적용할 첨단 ICT 기술을 정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K-건축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한국 건축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는 ICT 기술과 녹색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그린 K- 건축 플랫폼 구축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K-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환경 여건 및 변화]

구분	내용
유럽	- 에너지 효율과 자원 절약에 초점을 맞춘 '패시브 건축' - 전통 건축 방식에 현대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예: 스위스 알프스 '저에너지 건축물')
중국	- 현대화와 대규모 산업: 전통 건축 자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 기술로 표현, 현대건축에 맞춰 대규모 적용
일본	- 소규모 친환경 건축: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 가능 자원 기술을 개발하고, 전통 건축을 현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예: '유키미즈 칸')
미국	- 재활용 자재 활용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건축산업을 선도 -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자연 채광, 태양광 패널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예: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
한국	- 전통 한옥과 목조의 특성을 활용하여 단열, 에너지 절약 등 효율적인 건축물을 현대건축에 접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 마련 필요

K-건축 플랫폼, 그 논의의 시작

K-건축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K-건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탐색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회의에서는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ICT 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이동형 모듈러 주택 설계, 그리고 ICT를 융합한 K-건축(한옥) 모델 개발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외 진출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우디 네옴시티 등 국제정세에 발맞춰 모듈러 건축의 해외 진출 가능성과 한옥 등 K-건축의 고유한 강점(온돌, 디자인, ICT 기술 등)을 수출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다.

또한,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재외공관을 한옥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을 융합하여 K-건축이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술과 문화, 외교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도 드러났다. 기존 스마트시티나 스마트건축의 시도들은 관(官) 주도의 사업 추진과 발주 방식의 경직성, 사업의 차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 산업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K-건축 플랫폼의 필요성: 통합과 혁신을 향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치며,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는 '스마트 그린 K-건축 플랫폼' 구축이라는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축 全(전) 과정에 ICT와 친환경 기술을 체계적으로 접목하고, 이를 K-건축 모델과 융합하여 국내 건축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며,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기술 융합의 허브

ICT, 친환경 기술, BIM, 모듈러, 한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엮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심축이 필요하다.

표준화 및 체계화

한국형 스마트건축 모델을 정립하고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품질을 높이고 확산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도개선의 동력

발주 방식, 인허가, 인증, 법령 등 스마트 건축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인 목소리와 추진력이 요구된다.

K-건축의 정체성 확립

세계 시장에 K-건축을 알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 기술이 결합한 K-건축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전략적 창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스마트 그린 K-건축 플랫폼은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K-문화의 흐름 속에서 K-건축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건축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세계 무대에서 K-건축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

K-건축 플랫폼 개념

K-건축 플랫폼은 한국형 스마트건축 통합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이 플랫폼의 개발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혁신성 – 스마트폰, AI 등 첨단 ICT 기술과 녹색건축기술을 건축물에 융합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지능형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하는 것, 둘째, 조형적 상징성 – 전통건축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공간구성의 우수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한국적 디자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 셋째, 이용 패턴 수용성 – 건축물 종류별로 이용자의 행동 패턴과 선호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설계함으로써, 한국의 미래형 스마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탄생시키고 확산시키려 노력하였다.

플랫폼 주요 기능과 구성 제안

ICT 기반 K-건축 플랫폼의 구성은 모듈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요약된다. 플랫폼을 여러 기능 모듈로 나누어 설계하면, 향후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협업, 시뮬레이션 등 개별 모듈을 쉽게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어 유연

성을 높인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플랫폼을 운영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여러 지역에서 실시간 접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축 정보의 공유와 원격 협업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보안기술과 블록체인을 도입해 설계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투명한 관리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으로 건축설계 변경 이력을 남기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면, 참여자가 많은 프로젝트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플랫폼에는 AI 및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내재되어, 축적된 건축 데이터를 학습시켜 최적화된 설계안을 추천하거나 예상 공사비를 산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친환경 건축물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특정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녹색 자재 조합이나 에너지 절감 전략을 제안해 줄 수 있다. 요컨대 이 플랫폼은 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고, 데이터와 지식을 공유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디지털 건축 전환을 위한 K-플랫폼 정책과제 추진

제1차 분과회의에서 'ICT 기반의 K-플랫폼 구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스마트 건축기술과 BIM 기반의 생애주기 관리 플랫폼 구상이 처음 논의되었다.

제5차 분과회의(2023.08.28.)에서는 K-플랫폼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KAIST,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 스마트건축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기술혁신성·조형 상징성·이용자 수용성을 축으로 하는 K-건축의 핵심 요소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제6차 회의(2023.09.12.)에서는 BIM, AI,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의 기술 요소를 구체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어 제9차 회의(2023.10.18.)에서는 K-플랫폼의 적용 유형을 공공건축, 주거복합, 상업문화 등으로 분류하고, 향후 글로벌 수출과 브랜드화 전략을 논의하였다. 제13차 회의(2024.02.15.)에서는 '스마트그린 플랫폼' 연구용역 과제가 기획되었으며, 제16차 회의(2024.04.12.)에서는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유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제19차 회의(2024.06.24.)에서는 디지털·모듈러 건축 심포지엄 추진을 논의하였으며, 제26차 회의(2024.10.14.) 정책연구 중간보고를 거쳐 K-플랫폼의 '테스트베드 – 법제 연계 – 해외 확산'의 3단계 실행전략을 논의하였다.

제31차 회의(2025.01.09.)에서는 '스마트그린 K-건축 플랫폼'의 최종 모델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플랫폼 UI와 AI/BIM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지원 기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내 공공건축에 먼저 도입하는 방안과 향후 국제 수출을 염두에 둔 플랫폼 포맷을 정립하는 것으로 과제가 마무리되었다.

제1차 분과회의 (2023.05.15)	ICT 기반 플랫폼 과제 발굴	
	참석	김현선, 이인화, 조승구, 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내용	• 'ICT 기반의 K-플랫폼 구축'을 3분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 • 스마트 건축기술과 BIM 기반 생애주기 플랫폼 개념 구상 착수
제5차 분과회의 (2023.08.28.)	K-건축 플랫폼 개념 정립, 테스트베드 필요성 논의	
	참석	이인화, 장성주(KAIST),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내용	• 'K-건축 플랫폼' 개념 정립 및 스마트건축 해외 사례 공유 • K-건축의 핵심요소(기술 혁신성, 조형 상징성, 이용자 수용성) 3축 제시 •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필요성 강조
제6차 분과회의 (2023.09.12.)	기능요소 정의 및 제도 연계 논의	
	참석	김현선, 안용한, 조승구, 이인화
	내용	• K-건축 플랫폼 적용 기술요소 구체화: BIM, AI,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등 • 건축산업 디지털 전환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
제9차 분과회의 (2023.10.18.)	플랫폼 유형 분류, 수출 전략 구성	
	참석	김현선 외 위원 전원
	내용	• K-건축 플랫폼의 유형 분류(공공건축/주거복합/상업문화 등) • 플랫폼의 수출 가능성 타진 및 글로벌 브랜드화 필요성 강조
제13차 분과회의 (2024.02.15.)	플랫폼 연구과제 기획	
	참석	김현선, 이인화, 안용한, 조승구 외
	내용	• 스마트그린 플랫폼 연구용역 과제 기획 완료 • 민간 솔루션 및 '스마트 코티지'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제16차 분과회의 (2024.04.12.)	수출형 플랫폼 및 ODA 연계 구상	
	참석	이인화, 추승연(경북대), KIND, 김현선 외
	내용	• 플랫폼 설계 시 행동경제학 기반 유형화 논의 • 글로벌 수출 연계를 위한 포맷(모듈형 아키텍처, UI 다중화 등) 검토
제19차 분과회의 (2024.06.24.)	통합 포털형 플랫폼 구성 논의	
	참석	김현선, 이인화, 안용한, 조승구
	내용	• 디지털 & 모듈러 건축 심포지엄 기획과 연계해 플랫폼 콘셉트 발표 예정 • 플랫폼 기술 로드맵 및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정리

제26차 분과회의 (2024.10.14.)	중간보고 및 법제도 기반 강화 제언	
	참석	장성주(KAIST), 디자인에이치앤 연구진
	내용	• 중간보고 발표: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연계된 기능 설계 강조 • '플랫폼 테스트베드 → 법제 연계 → 해외 확산' 3단계 실행전략 공유
제31차 분과회의 (2025.01.09.)	최종보고: 실현모델, 운영체계, 활용방안 제시	
	참석	김현선, 이인화, 안용한, 조승구, KAIST 연구진, 디자인에이치앤 외
	내용	• 최종보고 발표: '스마트그린 K-건축 플랫폼' 모델 제시 • 플랫폼 UI 설계, AI/BIM 기반 의사결정지원기능 포함 • 공공건축 우선 도입 및 국제 수출형 포맷 정립

ICT 기반 스마트 그린 'K-건축 플랫폼' 개발 및 수출전략 기획연구

IoT와 AI 등 일상적 삶과 직결된 ICT 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도시와 건축 영역에도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건축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문화적 정체성, 지속가능성, 산업 경쟁력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ICT 기반 스마트기술, 녹색건축, 전통건축의 현대화를 융합한 'K-도시건축 플랫폼' 개발과 수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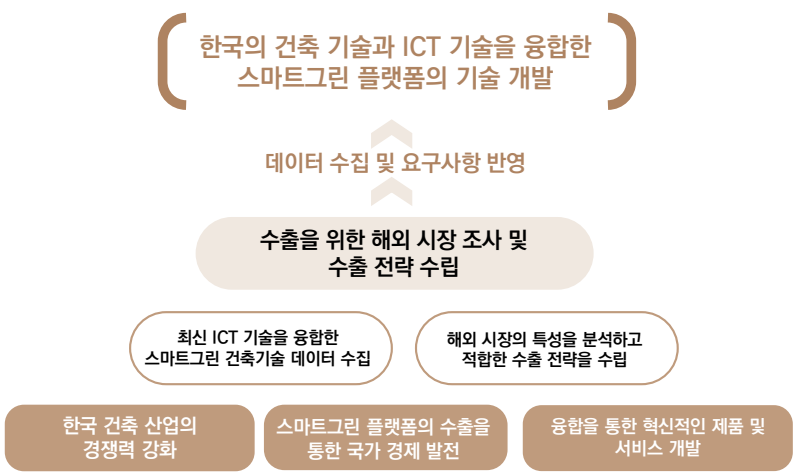
- 전 세계적 탄소중립 지속가능형 녹색 건축물 개발·확산에 따라 탄소중립형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축 및 기술·정책적 해결책 도출 필요
- 한류 확산과 더불어, ICT, AI 및 녹색기술과 전통 건축의 현대화 등을 통한 한국 건축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K-건축 플랫폼 개발과 글로벌 활성화 전략의 수립 필요

주요 연구내용

-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들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 제시
- '탄소중립형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축 및 기술·정책적 방향 제시
-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K-건축 플랫폼' 구성 방향 및 잠재적 'K-건축' 수출 전략 제시

K-건축 플랫폼의 개념 및 구성

'K-건축 플랫폼'은 기술-문화-산업-정책을 통합하는 도시건축 설계·운영의 통합 의사결정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전통건축의 미학과 공간구성을 현대 기술로 구현하고, ICT 기반 스마트 건축 기술과 그린빌딩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한국형 도시건축모델이다.



[K-건축 플랫폼 기획 및 개발의 목표와 개괄적 로드맵]

[K-건축 플랫폼 기획 및 개발의 세부 목표]

목표	내용
한국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한국 건축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 한국 건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재 양성
스마트그린 플랫폼의 수출을 통한 국제 경제 발전	•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기술, 스마트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 에너지 정책과 환경 규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플랫폼 개발과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력 채용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혁신적 제품 개발 가능 •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로 산업 간 협업 • 친환경 기술의 융합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 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융합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K-건축 적용형 녹색기술, ICT 기술 및 전통건축 현대화 솔루션

본 연구에서는 K-건축을 전통건축의 현대화를 통한 상징성을 확보하고 조형 및 공간 구성의 수월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그린 건축물로 정의하고, K-건축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스마트 그린 건축기술과 자연 친화적인 한국전통건축 해결책들을 K-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며 각 요소들은 다양한 패턴과 조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K-건축에 적용가능한 기술 및 시스템, 건축 요소]

구분	K-건축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시스템, 건축 요소
스마트 기술과 관련 디바이스/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센서, 스마트 HVAC 시스템, 스마트 조명 시스템, 안전 및 보안 시스템,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스마트 그리드 통합, 스마트홈 통합,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 건물 관리 시스템(BMS)
지속가능형 녹색기술	고효율 HVAC 시스템, 고효율 조명 시스템, 단열 및 창호 기술, 태양광 발전 시스템, 풍력 발전 시스템, 지열 시스템, 저수량 수전 및 샤워기, 빗물 재활용 시스템, 회수 및 재사용 시스템, 재활용 및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공기 청정 시스템, 저 방출 자재 사용, 녹색 지붕, 녹색 벽면, 분리수거 시스템, 퇴비화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 반응 관리, 건물 인증 시스템
전통건축의 현대화 솔루션	(K-건축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 한국전통건축 모티브) 지형과 환경 고려, 마당과 정원, 기단과 초석, 목재 구조, 지붕과 처마, 온돌 난방, 문과 창호, 색채와 장식, 유동적인 공간구성, 자연 친화형 외부공간, 친환경 재료 사용, 사상과 철학 반영

STEEP 분석과 패턴 랭귀지 기반 K-건축 플랫폼 구성 프레임워크

K-건축 플랫폼의 프레임워크는 STEEP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ic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nvironmental), 정치적(Political)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기반-핵심-부가의 3단계 레이어로 세분화하여 구성한다. K-건축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요소들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ristopher Alexander)의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 이론을 바탕으로 발굴한다. 패턴 랭귀지는 사람 중심의 건축·도시설계를 통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설계 방법론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각각의 패턴을 앞서 설정한 5개 코드의 특정 레이어에 맞춰 분류한다. 또한 실제 이용자 또는 이용 그룹을 대상으로 각 패턴의 중요도와 선호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K-건축 플랫폼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K-건축 플랫폼의 구성 체계인 STEEP 기반 코드-레이어 프레임워크 상세 구조]

레이어/코드	사회문화적 코드 (Social)	기술적 코드 (Technical)	경제적 코드 (Economical)	환경적 코드 (Environmental)	정책적 코드 (Political)
K-건축 적용 가능성	사용자 요구 및 행동 패턴 문화적 맥락	신기술 도입 재료와 건설기술	비용 효율성 시장조사	친환경 건축 기후 적응성	규제 준수 정부 정책 반영
부가레이어	상징	서비스	편익	탄소저감	인센티브
	전통공간구성 전통형태미학 전통조경/외부공간 한국적 상징	맞춤형 실내환경 서비스 건물관리 최적화 서비스 에너지관리 최적화 서비스 환경부하 저감 서비스 다기능 수용 서비스	비용편익 환경적 편익 사회적 편익 토지이용 편익 부동산 편익	탄소거래 신재생에너지 도입 유틸리티 저감 배출폐기물 저감 교통부하유발 저감	홍보/마케팅 지원 시설관리 대출 지원 투자비/운영비 지원 세금 감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핵심레이어	기여	시스템	비용	생태적균형	인증
	보건/복지 교육/학습 레저/여가 헬스케어 생산/케어	시설관리시스템 보안/안전시스템 실내환경시스템 외피/공간시스템 구조시스템	리모델링 비용 자원순환 비용 유틸리티 비용 유지관리 비용 시공 비용	실내외생태계 연계 환경오염원 배출 저감 배출폐기물 선순환 배출하수 선순환 폐 건설자재 재활용	지능형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반레이어	접근	인프라	투자	자연친화	법령
	온라인 포탈접근 다목적성 대중 개방성 주차장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스마트관제인프라 통신인프라 자원순환인프라 상하수인프라 에너지인프라	개인/법인투자 임대형 민간투자 수익형 민간투자 공공/민간 병행투자 공공투자	자연요소 활용 건물 운영 화석연료 제한 자연친화형 마감재료 자연친화형 구조재료 자연보존형 부지조성	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K-건축물 유형별 적용 가능한 K-건축 플랫폼 패턴 중요도 분석(일부 발췌)]

사회적코드	패턴명칭	주거	의료/복지	업무	교육연구	생산	판매외식	위락	문화	집회	기피
기반	대중교통접근성	●	■	●	▲		●	■	▲	●	
	주차장접근성	■	■	●	▲	■	●	●	■	●	
	대중개방성		▲				■	●	●	●	
	다목적성						▲		■	●	
	온라인포탈접근		●		▲		●	■	●	●	

연관성 : 상 ● 중 ■ 하 ▲

K-건축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및 홍보 전략

한류(K-Culture)의 글로벌 확산 추세에 발맞춰 K-건축을 개발하고 국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며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K-건축의 개발 전략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K-건축 활성화/글로벌 진출을 위한 개발 전략 및 지원책 제안]

전략	지원책
1. K-건축의 브랜드화	• 한류(K-팝, K-드라마)와 연계하여 K-건축을 문화적 상징으로 확산 •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 기술과 융합하여 독창적인 K-건축 정체성 확립
2. 해외 시장을 겨냥한 K-건축 개발 전략	• 국가별 기후·문화·환경에 맞는 지역 맞춤형 K-건축 모델 개발 • IoT, AI, 에너지 절감 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 구현
3. 정책적 지원 방법	• 문체부·국토교통부 공동 글로벌 캠페인 등 정부 차원의 브랜드화 및 홍보 지원 •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시 금융 지원 및 법률 자문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전통성과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K-건축 인증제도 도입하여 글로벌 품질 보증 수단으로 활용
4. K-건축의 문화적 가치 확산	• 한국의 독창적인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K-건축 투어리즘 활성화 • K-건축을 홍보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K-건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산
5. 국제 협력 및 표준화	• K-건축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설계 및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제 공동 프로젝트 참여

K-건축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문화 확산의 하나로 국제 사회에서 건축의 정체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어필한다. K-건축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기 확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홍보 전략을 제안한다.

[K-건축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 홍보 전략 제안]

구분	내용
1. 문화적 정체성 반영	•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요소(기와, 한옥, 온돌 등)와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 • 한국 전통 건축의 자연과의 조화 철학을 현대건축에 반영
2. 지속 가능한 디자인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친환경 자재,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 선도 • 스마트 기술(IoT, AI, 스마트홈)을 건축물에 통합하여 기술적 우수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 구축
3. 글로벌 시장 적응	• 각국의 기후, 법규,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현지화된 설계로 해외 시장에서 수용성 높임 • 다양한 지역 요구에 맞춰 조정 가능한 모듈화 건축물 설계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
4. 글로벌 브랜드화	• 한국의 기술력, 디자인 철학,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마케팅으로 K-건축 브랜드화 • 한국의 전통과 현대성을 결합한 스토리텔링으로 K-건축의 독창성과 가치를 강조
5. 협력과 네트워킹	•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이해도 향상 및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기술·디자인 적용 • 국제 박람회와 콘퍼런스에 적극 참여하여 K-건축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 향상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ICT 기반 스마트그린 K-건축플랫폼 개발 및 수출전략 기획연구(2025.01.)' 참고

정책 현장의 회고

ICT 기반 K-건축 플랫폼 구축

이인화 위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K-컬처 확산·건설업 위기 등 건축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 필요성

최근 건축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인공지능(AI), IoT,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이 도시와 건축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발맞춘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이 필요해졌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건축 부문에서도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기술 접목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제로에너지 건축(ZEB) 및 그린빌딩 중심의 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적 정체성과 미학을 반영한 건축문화 역시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K-건축은 '문화+기술+환경'을 융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세계 건축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최근 공급 축소와 경기 침체, 해외 프로젝트 위축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베드 조성, 스마트그린 기술 개발, 전통건축 현대화 등의 다층적 대응을 통해 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산업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에 연구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기획과제로 하여 주제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K-건축 플랫폼 개념 정립과 실행 기반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설계 성과 도출

이번 과제는 정책적·기술적·문화적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새로운 국가 도시건축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획과제였습니다. 실증보다는 개념 정립과 전략 구성이 중심이 된 만큼, 과제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K-건축'이라는 한국형 도시건축 플랫폼의 정책적 개념과 구조를 정립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K-건축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기술 모델이 아니라, 전통건축의 현대적 재해석, ICT 기반 스마트 기술의 융합,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 전략, 행동경제학적 사용자 중심 설계 개념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 플랫폼입니다. 이처럼 복합적 개념을 정책 언어로 구조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 가능한 전략 모델로 제시한 것은 기획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별 유형화와 STEEP 분석, 패턴 랭귀지 기반 설계 접근법을 통해 스마트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업무시설 등 각기 다른 요구에 맞는 정책적 대응 설계 방향을 제시한 점은 실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개념 제시를 넘어서 K-건축 테스트베드 구축 로드맵, 공공건축 공모전 연계, 수출 전략 및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상 등 실행 기반을 포함한 정책 확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제 사업화와 제도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과제는 복잡한 정책·산업·문화 요소를 통합하여 향후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한 기획형 정책과제로서, 후속 연구와 실증적 적용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출발점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K-건축 개념의 실행 가능한 정책적 설계 플랫폼으로의 구체화 과정에 집중

이번 과제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단연 'K-건축'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 정책적 설계 플랫폼으로 구체화고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K-건축은 한국의 전통문화, 스마트기술, 친환경 가치,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공간 설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다층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복합적 요소들을 단순한 이론이나 상징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설계 실무, 산업 전략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주제의 틀을 정제하는 작업은 절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서로 다른 분야, 예컨대 정책 입안자, 기술 개발자, 건축 설계자, 사용자들이 동일한 언어와 목적하에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일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STEEP 분석과 패턴 랭귀지 개념을 차용해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건축 설계에 녹여내는 틀을 제시했으며, 각 건축물 유형별로 현실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전통건축의 상징성과 ICT 기술의 성능, 사용자 행동분석이라는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지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실험을 거쳤습니다. K-건축은 '감성과 기술', '문화와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를 지향했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적 건축을 넘어 '어떻게 설계가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접근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과제는 개념 개발보다 개념을 실행 가능한 전략과 시스템으로 치환하는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가장 많은 고민과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학제 협력, 실현 가능성, 정책 전환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향성이 도출되었다고 자평합니다.

광범위한 연구 범위로 인한 실질적 실행 계획 및 제도화 방안 연결의 한계

이번 과제는 건축, 기술, 문화, 정책이 융합된 매우 복합적이고 선도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초기 기획 단계에서도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개념을 정립하는 데 무게를 두었으며, 그 결과 K-건축이라는 정책 플랫폼의 기본 골격을 성공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초기 기대와 비교해 보다 실질적인 실행계획까지 다다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과제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정된 광범위한 연구 범위입니다. K-건축은 전통문화와 ICT 기술, 환경성, 행동경제학적 사용자 분석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부 영역을 일괄적으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과제로서의 시간과 자원, 깊이의 제약이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K-건축 테스트베드 구축이나 공공건축 설계 공모전 연계는 실행 방안을 구상하는 수준에서 설계되었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통건축의 현대화나 행동경제학 기반 설계 요소 역시 이론적 구상은 도출했지만, 이를 법제화하거나 인증제도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성능지표까지 개발하기에는 범위가 넓고 연구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스마트기술과 그린빌딩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이므로, 고정된 모형보다 유연한 적용 원칙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K-건축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과제는 K-건축의 정책적·개념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획과제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증적 확장이나 제도화 방안까지의 연결에서는 시간적·범위적 한계로 인해 일부 과제가 다음 단계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후속 연구와 정책 사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K-건축 실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제도화 및 법령 연동 등 후속 과제 제안

앞서 언급한 실증 부족과 제도 연계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K-건축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공공주도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K-건축 개념을 실제 적용하는 시범 건축물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K-건축 설계 기준을 현실의 인허가 및 평가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법령 개정 또는 시범적 운영지침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기준법, 녹색건축법, 스마트건축 활성화법 등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K-건축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체계나 설계평가 항목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 참여와 산업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K-건축 설계를 채택한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간소화, 기술개발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중심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정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출 전략과 연계하기 위해 국제 인증과 연동되는 'K-건축 글로벌 표준' 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도 병행돼야 합니다. K-컬처 수출과 연계한 건축디자인 전시, 해외 시범사업, ODA 연계 등도 K-건축의 파급력을 넓히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제는 기획과제로서 연구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책·기술·문화가 연결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키려면, 후속 연구와 시범 사업, 정책 연계 실행체계의 삼각편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제가 정권이나 사업 단위의 일회성 기획에 그치지 않고, K-건축이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 브랜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건축 인증체계 정립 및 실증 기반 후속 심화 연구의 필요성

K-건축의 정책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이를 실제로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후속 심화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K-건축 인증체계'의 정립입니다. 현재 제안된 설계 가이드라인과 요소들은 정성적 지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량화된 성능 기준과 평가 항목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적 상징성'을 어떻게 점수화할 것인가, '행동경제학적 공간 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가 등의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사용자 관점의 실증 기반 연구입니다. 특히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실제로 반영한 공간에서 거주자와 이용자의 반응, 만족도, 효율성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설계평가에 반영하는 실험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K-건축의 전통건축 요소가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디자인 언어로 해석되기 위한 문화적 디자인 연구도 중요합니다. 전통을 현대화하는 과정은 국내 건축사적 관점뿐 아니라 글로벌 보편성과 감수성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개념이 단순한 프레임에 머무르지 않도록, 온라인 기반의 설계지원 시스템, BIM 연동 플랫폼,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등 기술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K-건축이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3분과(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세부 정책과제-3	
담당	안용한 위원

건설혁신의 출발점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추진 배경

새로운 건축의 지평, 모듈러 공법

모듈러 건축은 건축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工期) 단축과 품질 확보에 유리한 신공법을 말한다. '모듈러(Modular) 건축'은 단순히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며, 폐기물을 줄여 친환경에도 기여하는 혁신적인 건축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은 물론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건물에 모듈러 건축 공법이 활발히 적용되며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모듈러 건축을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했다.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 및 전후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모듈러 건축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모듈러 건축이 직면한 과제

하지만 모듈러 건축의 뛰어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그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에서는 모듈러 건축의 저변 확대와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제도개선, 시범사업, 해외 진출 등 다각적인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특히 실제 현장 방문과 관계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국내 모듈러 건축이 넘어야 할 요인들을 진단하였으며, 5분과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은 법·제도의 미비였다. 대부분의 건축 관련 법규와 기준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장 제작 방식인 모듈러 공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공업화 주택 인정제도,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분리발주 관행, 감리 기준, 성능관리 기준 등 모듈러의 통합 생산 시스템과 맞지 않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일부 내화 기준 등은 공장 제작 모듈에 불합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기술력과 경제성의 한계도 명확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고층 모듈러 건축 경험이 부족했고, 절대적인 물량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높은 공사비가 부담

으로 작용했다. 이는 대량 자동화 생산 시스템 구축을 더디게 만들었고,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나 전문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낮은 사회적 인식 또한 모듈러 건축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모듈러 주택은 컨테이너처럼 저렴하고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팽배했고, 공기단축이나 안전성 향상과 같은 모듈러 공법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했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모듈러 생태계 구축을 향한 정책과제 추진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는 모듈러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부터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인식 개선, 해외 진출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건설산업의 생산방식을 혁신하고, K-건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위원회는 모듈러 건축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산업과 제도 전반에 산재한 문제들을 모아,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했다.
모듈러 건축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 등 구체적인 수출 대상국을 논의하고, 온돌, 디자인 등 K-건축의 강점을 모듈러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LH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듈러 건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현장 제작에 의존하던 건축 방식을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안전, 환경 측면에서도 이익이 크며, 스마트 건설·친환경 건축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을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들은 모듈러 건축 관련 심포지엄 등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등 제도 인식 개선과 정책과제 필요성을 공론화하였다.

제2차 분과회의 (2023.06.12.)	이동형 모듈러 모델 및 수출 전략 검토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Foster & Partners Partner) 박일삼 소장, (LH 공사) 김남훈 부장, 노준오 차장
	내용	•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 주택인증제도, 감리제도, 시장 규모 등 정책과제 추진의 타당성 확보 • 모듈러 주택의 장점(성능 수준, 품질 균일성, 친환경, 재난 활용 등)을 차별화한 수출 방안 마련 ※ 수출대상 국가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우디 네옴시티
제6차 분과회의 (2023.09.12.)	모듈러 주택의 법제 정비, 공공 시범사업 필요성 강조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내용	• 모듈러 주택의 설계-제작-시공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인증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률(주택법, 건축법 등) 등 제도 정비 필요 • 모듈러 주택의 고급화 전략 추진 및 해외수출은 민간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추진 중이며, 국가정책으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고층화, 공동주택 공급, 비축과 순환, 안전 등의 쟁점 반영 필요 • 모듈러 주택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해 엑스포, 세미나 등의 홍보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
제9차 분과회의 (2023.10.18.)	성능기준, 수출 대상국, 산업 생태계 구축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내용	• 안정적인 신시장의 개발과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관리 기준의 개발 필요 • 지방 인구감소 및 주택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축적, 순환 등이 가능한 이동형 모듈러 주택 추진 • 모듈러 건축물 수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 조사, 현장 확인, 국가별 기준 등의 연구를 통한 수출 플랫폼 마련
제11차 분과회의 (2023.12.26.)	모듈러 건축의 해외 진출 방향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포스코건설) 고광호 팀장, (현대엔지니어링) 김양범 팀장 등
	내용	• 모듈러 건축의 해외 진출 방향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활용 방향 제안
제12차 분과회의 (2024.01.25.)	모듈러 건축 5대 추진 과제 발표 및 스마트코티지 모델 검토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안용한·조승구 위원, 기획단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손경종 부회장
	내용	• 안용한 위원이 제안한 모듈러 건축 5대 추진과제(신도시, 재정비, 수출, 저출산 대응 등) 발표 • 스마트코티지 모델 및 고급화 전략, 수출 대상국(이스라엘, 네옴시티 등) 검토
제13차 분과회의 (2024.02.15.)	스마트코티지 연계 및 민간 협업 모델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외 (스마트 코티지 컴퍼니) 조연우 대표
	내용	• 스마트 코티지 사업 소개 및 스마트 코티지를 통해 지역 콘텐츠와 상생 기대 • 공업화 주택 인정과 연계 검토 및 스마트 코티지 사업 성공을 위해 다양한 모델 개발 필요

제14차 분과회의 (2024.03.11.)	스마트모듈러 포럼 설립 추진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외 (서울시) 강성필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내용	• 세종 5-1 스마트시티 블록에 3월 중으로 스마트턴키 방식의 모듈러 발주(LH공사) 예정 • 세종 6-3블록 모듈 제작 완성 단계로, 공장에서 지어졌을 때 발주처 확인 프로세스 정리 • 스마트모듈러 포럼 사단법인 설립
제18차 분과회의 (2024.05.28.)	모듈러 생산 효율화 방안 및 심포지엄 기획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안용한·조승구 위원, 기획단 (금진팀버이앤씨) 민승홍 대표 : 프리 컷(Pre-Cut) 시스템 설명
	내용	• Pre-Cut System 기술 개요 청취 및 모듈러 생산 효율화 방안 논의 • 디지털 & 모듈러 건축 심포지엄 기획 논의 병행
제19차 분과회의 (2024.06.24.)	디지털 & 모듈러 심포지엄 추진 확정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외
	내용	• 디지털 & 모듈러 건축 관련 심포지엄 개최(24.07.05.) 계획 논의 (주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건축의 혁신-디지털과 모듈러)
스마트모듈러포럼 연계 행사 (2024.07.05.)	건축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건축산업의 미래 “디지털과 모듈러” 논의	
	참석	안용한(좌장), 김영록, 임태호, 김현선 위원, 현대ENG 외 300여 명
	내용	• 모듈러 산업 확산을 위한 협력 모델 제시(의료·가전·조선 등과 협업) • GH·현대엔지니어링 현장 투어 연계, 포럼을 통한 정책 인식 확산
제21차 분과회의 (제3소분과) (2024.07.22.)	고층화 기술, 층간소음 기준 등 기술규제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LH) 김병문, 노태극 팀장 외 2인
	내용	• LH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개선 건의 및 제도 경직성 문제 논의 •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 전략 발표: 고층화 기술 확보, 표준 설계 도입, 내화 성능 반영 등 • 세종 L15 스마트턴키 사례 공유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량 생산 기반 필요 강조
제35차 분과회의 (2025.03.17.)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 개선 연구 최종보고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 위원 외 기획단 외
	내용	• 『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장수명 인증기준 개선안 연구』 최종보고 • 철골조 모듈러 공동주택 도입 시 법적 이슈(인동거리 등) 확인 필요 • 후속 연구로 목조 모듈러 확장 필요 제기

정책연구 추진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

건설산업의 공업화(OSC, 모듈러, PC)가 가속화되면서 생산성 향상 및 건축물의 장수명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RC)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철골구조(Steel)를 기반으로 하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철골구조의 모듈러 주택에 적합하도록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산업의 첨단화·제조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모듈러, PC주택 등 OSC공법을 활용한 공업주택화의 활성화 필요
- 現 장수명 주택인증기준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설방식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내에 건설된 대부분의 철골구조방식의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인증 평가 곤란하므로 인증기준 및 평가 항목 개선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철골구조 등 다양한 구조에 대한 장수명 주택 정의 검토
- 표준시방서 등에 기반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개선방안 도출
- 내구성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 및 배점표 신설방안 구체화

철근콘크리트 건설방식기준의 현행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장수명주택이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을 말한다. 현행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는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을 평가하여 우수 등급 이상을 득하면 조례상 용적률과 건폐율의 115%까지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행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념 및 평가항목]

구분	개념	등급	항목별 평가
내구성	열화 저항성	1~4급 (30년 단위)	RC기준의 철근 피복두께, 콘크리트 품질 중심
가변성	공간구성과 구성 요소 변화 유연성	1~4급 (점수 기준)	내력벽 비율, 건식벽체, 이중바닥, 욕실/주방 가변성 등
수리 용이성	점검 및 개보수 용이성	1~4급 (점수 기준)	배관 독립성, 건식화, 분리계획 등

그러나 현행 장수명주택 인증의 '내구성' 항목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설방식 기준에 따른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 건설된 대부분의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인증 평가는 곤란한 실정이다.
철골구조는 내구성 측면에서 콘크리트 구조와는 다른 고유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 내구성 평가기준을 철골구조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철골구조의 주요 내구성 저해 요인인 부식에 따른 단면 손실,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손상, 그리고 응력부식균열 등 장기적인 안전성과 성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과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철골구조 기반 주택에 적용 가능한 장수명주택 인증기준 개선

본 연구는 관련 사례로 일본의 장기 우량주택 제도를 참고하였다. 일본은 목구조, 철근콘크리트(RC), 철골구조 등 구조 유형별로 열화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방청 대책과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재의 두께에 따라 도장이나 도금 기준을 세분화하고,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하며, 허용 변형 기준을 1/100 등으로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모듈러 주택의 내구성 평가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인증기준 개선안(철골구조 중심)]

구분	인증기준 개선안
내구성	• 방청 도장 및 도금 사양(도막두께, 도료 종류) 기준화 • 접합부 내구성 향상: 용접 후 열처리(PWHT), 틈새 방수, 부식억제제 등 • 유지관리 기반 평가 항목 신설: 점검구 설치, AI 기반 예측 유지 보수
가변성	• 기존 기준 적용 가능: 철골 모듈화 주택도 내력벽 비율, 이중바닥, 주방·욕실 가변성 등 반영 가능 • 시뮬레이션 결과: 가변성은 1~2급 획득 가능
수리 용이성	• 철골 모듈화도 전용부·공용부의 독립 배관 설계 및 유지보수 계획을 통해 평가 가능 • 2~3급 수준 확보 가능

본 연구는 장수명 주택 내구성 평가 기준에 철골 구조물의 내구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철골 건축물의 구조체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평가항목 중 하나로 내부식 도장 성능 평가 기준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철골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장 방식과 도막두께의 선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구조물의 수명 확보와 직결된다.
이에 강구조 설계기준, 내부식 도장에 대한 강구조 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국내 건설기준과

해외 건설기준(ISO)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철골구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장 시스템 기준을 반영하였다.

[국내 철골구조 적용 내부식 도장 시스템(6종) 제안]

시스템 번호	도장시스템			도막두께(㎛)			내구성 등급	부식성 범주	적용환경	
	하도	중도	상도	하도	중도	상도			외부	내부
P01	무기징크	에폭시	우레탄	60~80	100	50	아주높음(1급)	C5	염해 위험지역	-
P02	에폭시	에폭시	우레탄	50~100	100	50	높음(2급)	C4	일반지역	고습지하, 수분노출 예상부
P03	에폭시	-	에폭시	50~100	-		중간(3급)	C3	-	지하주차장, 지하시설부
P04	에폭시	에폭시	-	100~200		-				
P05	알키드	-	알키드	40~80	-	40~80	낮음(4급)	C2	-	공동주택 내부
P06	알키드	-	아크릴							

상기와 같이 제안된 6종의 도장시스템을 활용하여 내구성 평가기준의 철골구조 도장 방식의 내부식 성능을 평가하는 등급(1급~4급)을 구성하고 강재의 내진성·내식성 평가 등급 배점에 맞는 수치화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내구성 평가기준 중 철골구조 평가항목 및 배점표(신설)]

항목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철골 구조	도장 방식	일반지역	기둥·보	실내	지상	P01, P02	P03, P04	P05, P06	P05, P06
					지하	P01	P02	P03, P04	P03, P04
				실외		P01		P02	
		염해 위험지역	기둥·보	실내	지상	P01	P02	P03, P04	P05, P06
					지하	-	P01	P02	P03, P04
				실외		-		P01	P02
	강종	내진성 및 내식성				KS D 3861, KS D 3866 KS D 3529, KS D 3542		KS D 3515	KS D 3503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 참고

정책 현장의 회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안용한 위원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건설산업은 국가 인프라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산업이지만, 여러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중심의 건설은 기술 혁신이 더디고,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타 산업에 비교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생산성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건설산업에서 현장 인력의 고령화 심화가 문제 되고 있으며, 3D 업종의 인식으로 청년층 유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외에서 비숙련공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면서 품질, 안전,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대표 산업군으로 추락, 낙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기 지연 및 예산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품질의 문제로 민원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대규모 토목, 건축 공사에서 환경 훼손, 자원 낭비, 탄소 배출이 증가하며, 디지털 전환 및 AI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이를 건설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 공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방, 화장실, 주방 등 하나의 완성된 공간 단위를 '모듈' 형태로 제작하며, 이러한 모듈들을 조합해 최종 건축물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건축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젝트의 공기 단축입니다. 모듈 제작이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 등 다른 공정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일정하고 품질관리가 용이하며, 날씨와 같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완성도와 시공 안정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자재 낭비가 줄고, 현장 내 소음 및 먼지 발생이 적어 환경친화적인 건축 방식으로도 평가받습니다. 모듈러 건축은 숙련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듈러 건축은 설계 초기부터 모든 요소를 세밀하게 계획해야 하며, 현장에서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된 모듈의 운반과 현장 설치를 위한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도로나 장비 접근성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의 낮은 인식과 법·제도적 지원의 미비 등도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설과 연관된 법 제도가 현장 중심 습식을 중심으로 되어있어서 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및 주택법 기준과의 부조화, 인허가 절차의 비표준화, 공장 제작물에 대한 법적 정의 미비, 공공발주 제도 미비 등이 주요 제약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비효율성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래형 건축 방식입니다. 향후 기술 발전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듈러 건축 현장 방문 및 국제 심포지엄을 통한 정책 공론화 노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국가 건축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스마트모듈러포럼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국내 첫 13층 중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영덕경기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모듈러 포럼에 참석하여 모듈러 건축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2024년 7월 5일에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건축의 혁신 – 디지털과 모듈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소멸과 탄소중립 시대에 디지털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세계적 설계·디자인 회사인 미국 NBBJ의 웨이후(Wei Hu) 대표, 영국의 유명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립한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Partners) 박일삼 파트너 등을 초청하여 주제 발표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과 모듈러 건축 분야의 글로벌 동향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듈러 건축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 노력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법·제도 개선이었습니다. 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모듈러의 장수명 주택과 녹색건축 인증 부분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제도부터 하나하나 개정해서 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기존 습식공법에서 벗어나 건식, 즉 공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듈러 건축의 생태계 구축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설계, 제작, 시공, 발주, 사업관리와 감리 등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이와 함께 스마트컨스트럭션 및 디지털건축과 연관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모듈러에 특화된 적합한 발주방식, 특히 설계 및 시공 일괄발주 방식을 도입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건축의 생태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모듈러 건축이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과 발주방식 개선의 필요성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모듈러 건축이 건설산업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책과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법 제도의 변경이었습니다. 다부처가 연관되어 있어서 협의와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기존의 현장 중심, RC 중심의 제도를 공장 중심으로 변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설계 및 시공 분리발주에서 설계시공 통합발주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법 및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발주 공공기관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연속성 부재도 큰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방법으로 형성된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모듈러, 즉 공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모듈러를 이해하고 설계, 제작, 설치, 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했습니다. 기존 제도 및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듈러 건축에 적합한 발주방식, 즉 설계 및 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도입입니다. 또한 모듈러 제작사 및 참여자들이 공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발주처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필요합니다.

법 및 제도개선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화 기준, 발주방식, 공장 품질관리 프로세스, 공업화 인증제도, 지급자재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죠.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고층화에 필요한 구조 및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와 인센티브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분과(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세부 정책과제-4	
담당	조승구 위원

건축품질 및 안전관리의 디지털 통합

스마트건설 기술 환경 구축

추진 배경

건설산업의 역설, 그리고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

한국의 건설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생산성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첨단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건설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딩정보모델링(BIM)과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BIM은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를 받았다.

BIM 도입, 그러나 남겨진 과제들

그러나 BIM 도입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다.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된 관리체계의 부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 지침은 있었지만, LH공사 등 주요 공공 발주처들이 각기 다른 기준과 지침을 운용하고 있어 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호환성과 활용성이 저하되고,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수행 기준과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BIM 도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다.

또한 객관적인 기술 평가 기준의 부재도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어떤 BIM 기술이 우수한지, 어떤 수행 계획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BIM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발주 방식별로 BIM 수행계획서를 표준화하고 객관적인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BIM 도입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 양성 문제 등도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건설 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삶

이러한 기술적, 제도적 문제 외에도 3분과는 건설산업이 직면한 또 다른 현실에 주목했다.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복지의 문제였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LH 공공임대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 품질, 하자 관리 역시 여전히 개별 사업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과 건축물의 장기적인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는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까지 검토하며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환경구축, 그 시급성과 당위성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는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 BIM 도입의 한계, 주거복지 문제, 그리고 안전·품질 관리의 어려움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기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IM을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드론, IoT, AI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표준화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공공 발주 개선 및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나아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마트 건설기술 환경구축' 정책과제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응 방안이다. 이는 한국 건축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분과회의 (2023.05.15.)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 필요성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 위원 외 LH공사 관계자 등
	내용	• K-도시·건축 사업모델 개발 및 수출을 위한 5개 과제 중 'BIM & 디지털 기반 전환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도출
제5차 분과회의 (2023.08.28.)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 위원 (KAIST) 장성주 교수, (국토교통부) 조관우 사무관
	내용	• 스마트 건축기술 세부화 및 ICT 융합 첨단화 방안 필요성 논의 • 기존 스마트시티/건축 사업의 한계(발주방식, 관 주도 등) 지적 및 기업 주도 테스트베드 추진 필요성 제기 • K-플랫폼은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첨단기술 결합 필요성 논의
제6차 분과회의 (2023.09.12.)	BIM 기반 공공건축 품질관리 강화 방안 제안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 위원 외
	내용	• 공공발주 시 스마트 건설기술 반영 및 발주 방식 개선 추진 • BIM의 국가 경쟁력 확보 및 법/계약 제도 반영 추진 • BIM 도입 지원(비용, 교육) 및 제도개선 추진 • Chat GPT를 활용한 품질/안전/하자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제9차 분과회의 (2023.10.18.)	유지관리 시스템, 시공 모니터링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 위원 외
	내용	• BIM 사업수행 기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표준화된 관리체계(정책, 지침, 거버넌스) 구축 필요 • BIM 수행계획서 표준화 및 객관적 선정평가 기준 마련 필요 • 스마트 기술 기반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체계 개발 필요 • 건축물 생애주기 통합관리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제14차 분과회의 (2024.03.11.)	컨퍼런스 추진 관련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 위원 외
	내용	• 스마트건설, 스마트모듈러, BIM 설계 등에 관한 컨퍼런스 논의
제16차 분과회의 (2024.04.12.)	AIBIM 설계방향 제안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조승구, 안용한, 이인화 위원, (KIND,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박노준 차장, (경북대) 추승연 교수
	내용	• "스마트건축" 개념 정의(계획~유지관리 ICT 접목, BIM 통한 탄소중립) 발표 • 공공 1천억 이상 BIM 설계 현황 공유 및 AIBIM 발전 방향 제시 • '위기의 건설산업, 구원투수 스마트&모듈러 건축' 세미나 추진 확인
제19차 분과회의 (2024.06.24.)	'디지털&모듈러 건축' 심포지엄 계획 확정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 위원 외
	내용	•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건축의 혁신-디지털과 모듈러' 심포지엄('24.7.5) 개최 계획 논의

정책 현장의 회고

스마트건설기술 환경 구축

조승구 위원



건설산업 생산성 저하, BIM 기술 표준화 부재, 공공주거복지 품질 저하 문제의 종합적 개선 필요성 인식

초기에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첫째,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설산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및 시행지침에 따라 주요 발주처는 개별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서, 정량적·객관적 사업수행 기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표준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BIM 기술평가 기준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BIM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발주방식별 BIM 수행계획서 표준화 및 객관적 선정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고령자 및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LH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및 품질하락이 가속화되어 주거복지의 일차적 실천을 위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섯째, 개별 사업 중심의 건설안전, 품질, 하자 관리체계의 한계로 보편적 주거복지 및 시설물 품질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사회적 가치 제시와 해외사례 기반 국내 적용 가능성 제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의 목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및 낭비 요소 제거, 공기 최적화, 안전성 확보 및 하자 최소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건축적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건축의 혁신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스마트기술의 도입과 빅데이터 활용, AI 기술 발전 등 기술 환경의 변화로 도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국에서는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NBBJ Wei Hu 대표, 영국 Norman Foster의 박일삼 파트너, Innovative Design의 Brian Koh를 초청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새로운 기술과 방식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500명의 청중에게 제시한 것이 큰 성과라고 봅니다. 한국의 도시가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 적용과 업계 협력 부족으로 정책 실행의 한계

스마트 기술 활성화와 연계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중요성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나, 관련 부처에서 시범 사업을 통한 BIM 설계기준 대가 완성이 단기간에 완성되지 못했고, 건축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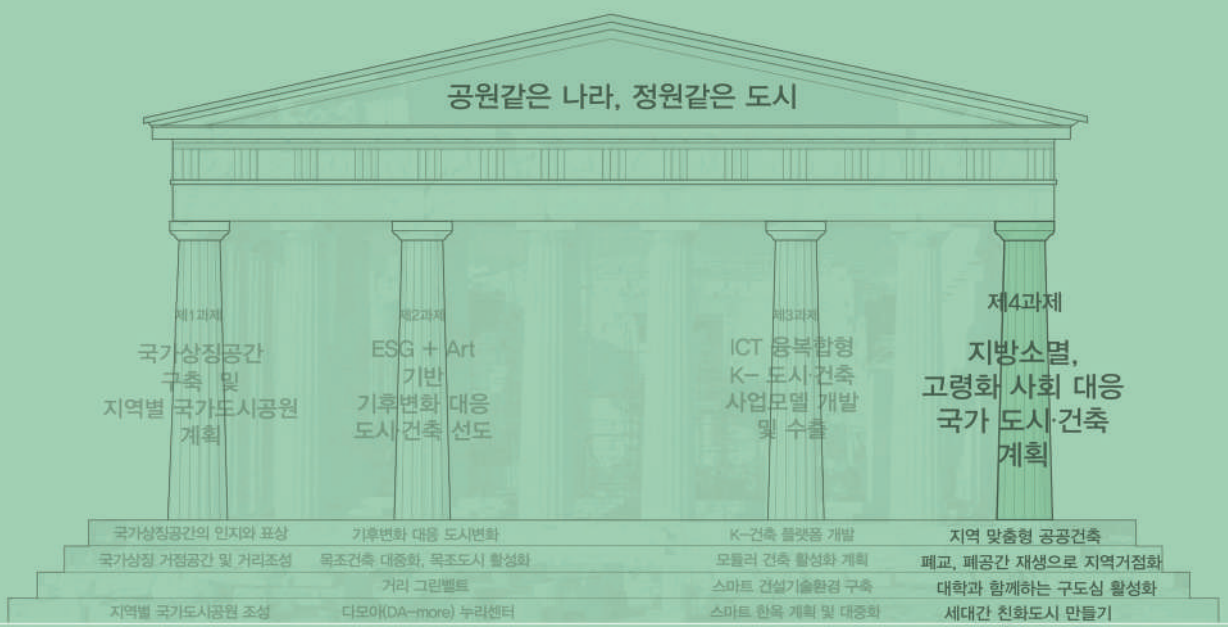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위한 S-Construction 2030"을 발표했고,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추진과제로 하여 BIM을 통한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LH와 SH 공사 등을 중심으로 시도하려 했으나, 건설사와의 통합적 논의가 긴밀히 추진되지 못해 건설산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 적용 사업의 발주 정책 및 관련 지침,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BIM 기술 선정 및 평가기준 개편에 대한 방향 설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 건설의 품질, 안전, 하자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PART

4

지방소멸, 고령화 사회 대응 국가도시·건축 계획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건축·도시적 대응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 전략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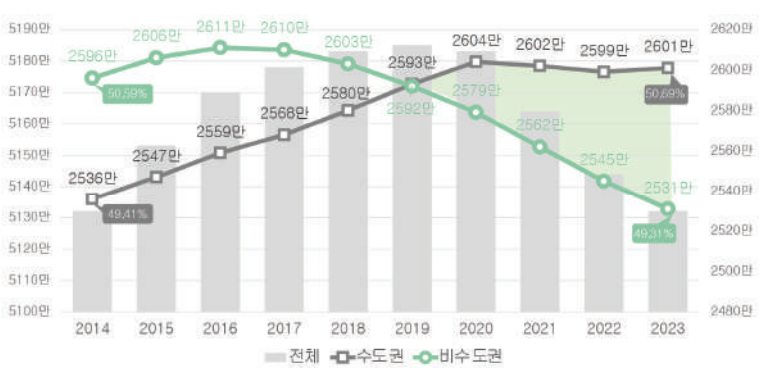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인구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유지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방소멸 대응'을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확대

인구 감소와 함께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사회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출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 침체와 생활 서비스 기반 약화라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변화]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p.25.

지방 인구 감소로 유휴·방치 공간 증대 및 정주 환경 악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에는 빈집, 폐교 등 활용되지 못한 유휴공간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유휴공간은 지역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며, 지방의 생활 기반 시설 유지와 각종 생활 서비스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 정주 환경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인구 유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유휴공간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건축·도시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축과 도시 디자인을 활용한 지방소멸 실효적 해법 필요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방소멸 대응' 과제를 추진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수도권 과밀 및 지방 공동화, 유휴공간 증대 및 정주 환경 악화라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건축과 도시 디자인을 통해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었다.

세부 정책과제 선정

정책과제의 세부 실행과제 선정 과정

제7기 건축정책위원회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건축문화진흥 분과' 아래 '지방소멸 대응 소분과(이하 지방소멸대응 분과)'를 구성하였다.
제1차 합동연석회의(2023.06.02.)에서 위원회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13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방 국립대 유휴부지 활용, 농어촌 폐교와 공·폐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도시재생 등이었다.
이후 지방소멸대응 분과는 '지방 국립대학 기능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폐교된 교육시설 및 공·폐가 활용', '지속 가능한 통합적 도시재생'이라는 세 가지 잠정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 방안과 현장 적용 가능성,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도심 이전, 지역별 유휴공간 활용 전략,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정체성 강화, 고령화 사회 대응 세대 간 교류 공간 조성이 주요 의제로 도출되었다.
제3차 합동연석회의(2023.09.01.)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폐·유휴공간 재생으로 지역 거점화',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세대 간 친화 도시 만들기'가 그것이다.
정책과제 구체화 과정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제8차 합동연석회의(2024.03.29.)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실을 고려하여 '세대 간 친화 도시 만들기' 과제명을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지방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지역대학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생활환경의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도시 모델 개발'을 별도의 연구 및 정책개발 과제로 구체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제1차 함동연석회의 ('23.06.02.)	제4차 분과회의 ('23.06.23.)	제3차 합동연석회의 ('23.09.01.)	제28차 분과회의 ('24.09.11.)
지방소멸 정책과제 제안, 잠정 3개 과제 선정	과제 보완 및 중점과제 선정	최종 4개 과제 확정 및 실행방안 논의	정책과제 추가
• 지방 국립대학 기능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 유휴캠퍼스 활용 방안 정책제안 필요성 제기	• 지역대학의 일부 기능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 (일부기능)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대학원기숙사, 의료보건 재활시설 등	**4-1.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 세미나·연구를 통한 방향 모색, 국건위 비전 선포 및 시범사업 검토	• 지역대학의 역할을 기능 이전이나 도심 연계를 넘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생활환경의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 ▼ **4-2.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개발** ※ '대학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이상적인 대학도시 모델의 유형화 방향 및 '대학도시' 구축 시 주안점 도출
• 폐교된 교육시설 및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휴식 공간 사업 추진 ※ 공·폐가 및 폐교 관련 과제 추진 시 건축 공간계획의 필요성과 경제활동을 연계한 지방 활성화 도모 강조	• 유휴공간의 지역 거점화 ※ 빈집 및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문화시설, 휴식공간 제공	**4-3. 폐·유휴공간 재생으로 지역 거점화** ※ 폐교 등 법적 규제로 인한 낮은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 지속 가능한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 논의 진행	• 지역맞춤형 공공건축 ※ 도시재생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 인 공공사업의 중복성 지양	**4-4. 지역맞춤형 공공건축** ※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점유 필요, 사용자 수요 반영, 소규모 공공건축(5천만 원 미만) 전문가 참여 방안, 지역자산 활용 세대통합 공간 조성	
	• 세대(청년과 고령층) 간 친화도시 구현	**세대 간 친화 도시 만들기** ※ 의료 친화형 도시 구축, 지역 산업 연계 강소기업 발굴, 대학-산업 연계 통한 청년-장년 협업, 퇴직자 기술 전수 캠퍼스 타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제8차 합동연석회의 ('24.03.29.)
과제명 변경
4-5.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 ※ (과제명 변경) 지방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현실을 반영

지방소멸 대응 5대 정책과제 최종 선정

[정책과제 1]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위원	한광야 위원
	주요내용	지방대학과 주변 도심이 함께 활력을 잃어가는 문제의식 하에, 대학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침체된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대학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모델을 모색
	실행방안	세미나·연구를 통한 방향 모색, 국건위 비전 선포 및 시범사업 검토
[정책과제 2]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개발**	위원	권영걸 위원장
	주요내용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거점 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 특성과 대학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학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회생의 기반을 마련
	실행방안	'대학도시' 모델의 유형화 및 정책 모델 추출
[정책과제 3] **폐·유휴공간 재생으로 지역 거점화**	위원	박성신 위원
	주요내용	지방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공·폐가, 폐교 등 유휴공간이 지역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치된 공간을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
	실행방안	폐교 등 법적 규제로 인한 낮은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정책과제 4]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위원	김규린 위원
	주요내용	획일적인 공공건축이 지역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 만족도도 낮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공공건축의 디자인 방향과 실행 방안 제시
	실행방안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점유 필요, 사용자 수요 반영, 소규모 공공건축(5천만 원 미만) 전문가 참여 방안, 지역자산 활용 세대 통합 공간 조성
[정책과제 5]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	위원	손진락 위원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마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들 마을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유지·발전시키는 모델을 구축
	실행방안	의료 친화형 도시 구축, 지역 산업 연계 강소기업 발굴, 대학-산업 연계 통한 청년-장년 협업, 퇴직자 기술 전수 캠퍼스 타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4분과(지방소멸 대응)	
세부 정책과제-1	
담당	한광야 위원

대학도 도시도 활력을 갖게 되는 상생 프로젝트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추진 배경

지역 재생과 구도심 활력 창출의 핵심 '지역대학'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구도심이 쇠퇴하면서, 지역 거점 대학들 역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캠퍼스 고립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소멸대응 분과는 지역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지식 역량을 활용하여 침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과 도시가 상호 시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학 기능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

2023년 5월, 초기 위원회 논의에서는 '지방 국립대학 기능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라는 아이디어가 주요 잠정 과제로 부상하였다.
초기 구상은 대학의 도서관, 박물관, 평생교육시설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일부 기능을 쇠퇴한 구도심으로 이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구도심으로의 유동 인구, 즉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방대학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구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대학과 도시의 경계를 허무는 상생 협력 체계 필요성 제기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며 단순히 대학 시설을 구도심으로 옮기는 것에서, 대학과 도시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며, 대학을 지역 재생의 중심 거점으로 삼아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후 제3차 합동연석회의(2023. 9. 1.)에서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과제의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대학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정책연구 발굴

지방소멸대응 분과는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과제의 추진을 확정한 이후, 보다 체계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표준사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인 실행전략,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표준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연구 외에도 대구·순천·원주 일대 대학 연계 지역 활성화 현장을 답사하고 지자체장 면담과 심포지엄 개최 등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과제 구체화 과정	제1차 분과회의 (2023.05.12.)	'지방 국립대학의 기능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 최초 제안 및 선정 * 대학의 일부 기능(평생교육, 도서관, 박물관, 기숙사, 의료 등)을 구도심으로 이전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 활성화 유도
	제2차 분과회의 (2023.06.23.)	위원별 중점과제 선정 이후 '지역 대학의 일부 기능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로 구체화
	제6차 분과회의 (2023.07.14.)	실행과제 등 실질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과제 확정	제8차 분과회의 (2023.08.25.)	과제명 확정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 문화·예술·의료 기능 이전, 대학-기업 ICT 개발 거점/로컬리티 스튜디오 조성, 기숙사 이전 방안 연구 등이 포함
실행방안 모색	제12차 분과회의 (2023.10.19.)	대학 시설의 캠퍼스 외부 확장/이전 관련 규정 검토 및 교육부/대학의 적극성 촉구 논의
	제16차 분과회의 (2024.01.23.)	'24년 연구용역 '(가칭)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표준사업방안 연구' 추진
정책연구 추진	제21차 분과회의 (2024.03.26.)	연구용역 내용(B/C 분석, 역할 분담 등) 논의
	착수보고회 (2024.08.08.)	연구용역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표준 사업방안 연구' 착수 (수행기관: 단국대학교)
	최종보고서 (2024.11.14.)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원도심/대학 현황 분석, 대학 지원사업 분석, 일본 사례 분석, 사업 주체별 역할 및 시나리오, 표준화 사업전략 및 실행 방식, 법/제도개선 제안 등 포함
	최종보고회 (2025.02.11.)	최종 연구 내용 논의 * 국립대 역할, 의료시설 연계, 과거 혁신도시 등 시행착오 분석, 대중교통 연계 등 추가 고려사항 제기

현장 교류와 심포지엄 개최 논의

2023년 하반기에는 정책과제의 실제 추진 사례인 일본 교토 니시진 지역을 답사하고 대구광역시 '도심 캠퍼스타운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성공 사례를 학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주력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영주, 순천 일대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며, 폐·유휴공간을 지역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간 전략과 건축 정책을 모색하였다.
2024년 10월에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지방 중소도시 현안과 과제,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12차 분과회의 (2023.10.19.)	내용	일본 교토 니시진 재생사례(서울대학교 김효진 교수 발표) 청취 및 대구 심포지엄(2023.11.03.) 추진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손진락 위원, 기획단, (서울대) 김효진 교수
대구심포지엄 (2023.11.03.)	내용	대구 '도심캠퍼스 타운 심포지엄 및 원도심 답사' 행사 후원 및 참석
제15차 분과회의 (2023.12.21.)	내용	'23년 활동성과(대구 심포지엄 개최, 영주 심포지엄 기획) 보고 및 '24년 실행계획(영주·순천 원구도심 활성화 사업 및 중소도시 국제 심포지엄 추진계획)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손진락·박성신·김규린 위원, 기획단
제16차 분과회의 (2024.01.23.)	내용	정책연구용역 보고, 순천시, 순천대 협력(MOU), 국제심포지엄(일본·독일·네덜란드) 추진 제안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손진락·김규린 위원, 기획단
제18차 분과회의 (2024.02.21.)	내용	정책연구용역 보고, 11월 중소도시 국제 심포지엄 추진(가나자와·기푸·델프트 등) 제안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손진락·김규린 위원, 기획단
제21차 분과회의 (2024.03.26.)	내용	국내 심포지엄(순천·전남 등 지역대학, 교육부 참여), 국제 심포지엄(네덜란드, 일본 가나자와 등 참여) 개최 및 협력체계 구축 목표 수립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손진락·김규린 위원, 기획단
제22차 분과회의 (2024.04.24.)	내용	대학과 함께 하는 도심 활성화 관련 국내 심포지엄 6월 14일 순천 개최 확정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손진락·김규린 위원, 이승택 자문위원, 기획단
제24차 분과회의 (2024.05.24.)	내용	정책사례 청취(동명대 전호환 총장 발제), 순천 심포지엄 프로그램 논의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손진락·김규린 위원, 기획단. (동명대) 전호환 총장
국내 심포지엄 (2024.06.14.)	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국제 심포지엄 (2024.10.24.)	내용	'지방도시 활성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건위-국토교통부-원주시 공동주최)

정책연구 추진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표준사업 방안 연구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 또한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 대학을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실제로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 및 표준 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표준사업 방안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정책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상업 기능 약화로 활력을 잃은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대학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협력적 활성화 모델 필요

주요 연구내용

- 대학-지자체 협력 사업 구상을 위한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분석
- 대학 주도 원구도심 활성화 사업의 방향 설정과 표준사업 성격 규명
- 지역과 대학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제안

대학·지자체 협력 사업 구상을 위한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분석

국내 지자체와 대학 협력 사례 모델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자체-대학 협력 사업이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협력 과정에서 예산 중복, 불분명한 책임 소재, 지자체 자율성 제한, 여러 이해관계자 조율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 지속성 및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의 지역대학-산업 간 협력 사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케이오 대학 첨단 생명과학 연구소(IAB)-츠쿠바시 협력 사례에서는 연구기관이 지역의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임대형 연구실과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수행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마에바시시의 메부쿠 플랫폼 사례에서도 산관학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츠쿠오카시 첨단연구산업지원센터 숙박(좌) 및 아동교육시설(우)]

출처 : (좌) Government of Japan. (2020). https://www.japan.go.jp/tomodachi/2020/autumn2020/tsuruoka_changing_the_world.html, (우) Kids Dome Sorai. (n.d.). https://www.sorai.shonai.inc/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의 표준사업 제안

본 연구는 지방 도시들의 쇠퇴하는 원 구도심의 활성화는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지자체, 대학, 구도심 상인·토지소유자, 민간기업, 철도청, 중앙정부, 도정부 등 이해관계자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이와 함께 참여 주체별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모델을 체계화하고, 지자체-대학-지역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대학의 지식 자원 활용, 혁신 거점 지구 조성, 연합 캠퍼스 운영, 공유자산 활용, 거주성 강화 등 5가지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 구도심 재생을 도모한다.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대학 거점 지역 활성화 사업 주체별 역할과 시나리오, 사업전략 제안]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과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지자체가 주도하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과 운영	(역할 주도성) **지자체** 〉 대학 〉 민간
[시나리오2] 대학이 주도하는 국제 연합 기숙사 및 호텔의 조성과 운영	(역할 주도성) **대학** 〉 지자체 〉 민간
[시나리오3] 민간기업 주도 노인복지타운의 조성과 운영	(역할 주도성) **민간** 〉 대학 〉 지자체
[추가조건] 철도청 주도 대중교통 개선과 철도타운 조성과 운영	(역할 주도성) **민간** 〉 대학 〉 지자체

+

원 구도심 활성화 표준화 사업의 전략	
대학의 적극적 기여 유도	대학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주민 평생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
도심캠퍼스 클러스터 지정	원 구도심 내 대학 중심의 혁신 거점 지구를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교육·연구시설 권장 용도를 지정하여 클러스터화 추진
대학 연합 도심캠퍼스 운영	지역 내 대학 공동 운영 캠퍼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공간이자, 대학-지역사회 간 소통 기능 수행
공유자산 활용과 거점화	지역 내 유휴공간·공유자산 활용 원구도심 거점 조성, 비영리단체 지위 부여로 공유재산 활용의 제도적 절차 간소화
원 구도심 거주성 강화	연합기숙사, 노인복지타운 등 주거·복지시설 도입으로 도심 거주성 향상 및 정주 유도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대학과 구도심의 연계 활성화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구도심 기여도를 반영하고, 대학 내 '지역혁신처' 등 전담 부서 설치를 지원하며, 기부채납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대학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국비 우선 지원과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내 기존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완화와 특례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였다. 특히, 공유재산 활용 촉진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공공·대학부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여 용도 변경이나 민간 위탁 등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대학-구도심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환경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대학과 연계한 주거 개선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 구성원과 청년들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구도심 활성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 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하고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표준사업 방안 연구(2024.11.)' 참고

정책 현장의 회고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한광야 위원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 정책 방향 제시 필요성

평소 지방 중소도시들의 원도심 쇠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외 신도심과 국립대학·병원 연계 활용한 원도심 쇠퇴 대응 방향 도출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교외 지역에 조성한 신도심과 그곳에 위치한 국립대학, 그리고 부속병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원도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각각 따로 운영되던 이러한 자원들을 연계 활용하면 원도심 재생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지방정부와 대학 간 협력 방식과 실행 과정의 장애요인 해결 방안 고민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지방 중소도시 정부와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협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심포지엄 확대, 부처 간 협력 강화, 지방정부 중심 협력체계 법제화를 위한 종합적 후속 조치 필요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해서는, 국건위를 통해 대구, 순천, 원주에서 총 3회의 심포지엄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전라권, 부산권, 충청권에서는 개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에서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 개최 이후에 실제 실행사업으로 연결하는 기획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큰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총 2년의 임기 중에서 임기 초반에 정책사업 선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정책 실행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사업의 성격상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국건위 행정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분과(지방소멸 대응)	
세부 정책과제-2	
담당	권영걸 위원장

인재·인구 유인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 조성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개발

추진 배경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학도시 모델의 필요성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 문화,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청년 인구 유치 및 정착을 통해 지역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학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대학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소멸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RISE,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 제고 및 실질적인 지역 변화 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간 모델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의 여건이 매우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지역 특성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모델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위원회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과제로서 '대학도시 모델 개발'을 별도의 연구 및 정책개발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역 맞춤형 대학도시 모델 개발 및 실행전략 모색

본 정책과제는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대학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회생력(Resilience)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첫째,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역대학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다양한 대학도시 사례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모델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캠퍼스 중심형, 분리형 캠퍼스, 산업 연계형, 복합형, 대학촌 모델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한 맞춤형 대학도시 모델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둘째, 개발된 대학도시 모델들이 실제 지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간계획 및 디자인 전략, 실행 주체별 역할 분담 방안, 관련 제도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원시와 전북대 남원글로벌 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전략 모델 등은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연구 및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관련된 정책(지역 균형발전, 고등교육 정책 등)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자체 발전 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였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전문가 자문 기반 연구 심화

2025년 초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진은 국내외 대학도시 사례 분석, 지역별 특성 진단,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해 한국 현실에 맞는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건축,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정부 정책(RISE, 글로컬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등)과의 연계, 대학 유형(국립/사립) 및 지역 특성(소멸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여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과제 구체화	제28차 분과회의 (2024.09.11.)	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학도시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추진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과제 확정	정책연구과제 심의·선정 (2024.11~12.)	내용	연구과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학도시 모델 개발 연구' 추진 필요성: 수도권 집중 및 대학 폐교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모델 제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해외 대학도시 특성 분석, 국내 지방대학 현황/문제점 분석, 전문가/이용자 설문조사, 모델 제시 등 포함
정책연구 추진	착수보고회 (2025.01.16.)	내용	연구용역 착수 보고 *모델의 실효성, 공실률 문제, 기존 정책 검토, 공공기관 유치 중요성, 국립대/병원 역할, 외국 사례(특히 일본) 벤치마킹, 캠퍼스 혁신파크 연계 관련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조승구 위원), 기획단, ((주)포럼디앤피) 이인기 대표
	추진사항 보고 (2025.02.11.)	내용	착수보고회 자문 의견 반영 사항 보고 및 '캠퍼스혁신파크 및 산학융합지구 제도' 연구사례 발표(국토연구원 조성철 센터장) *실천적 방향, 지역 특성 반영, 대학의 구체적 기여 방안,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국가 역할, 논리적 액션플랜, 해외 사례 분석 기반 한국형 모델 개발 필요성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조승구 위원), 기획단, ((주)포럼디앤피) 이인기 대표, (국토연구원) 조성철 센터장
	중간보고회 2025.03.06. 2025.03.20.	내용	연구용역 중간보고 : 국내 75개 시 소멸위험도 분석, 대학 분포 분석, 정부 정책 진단, 국내외 사례 기반 모델 유형화(지방소멸 대응 모델 3유형, 대학도시 모델 5유형) 결과, 남원시-전북대 모델(지자체 중심 활성화 모델) 제시 *대학도시 모델의 실천성, 대학 기능/역할 구체화(국립/사립 구분), 도시 연계성 강화, 의료 시설 중요성, 구체적 사례 연구 심화, 국가 역할/정책 연계, 논리적 액션플랜 필요성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주)포럼디앤피) 이인기 대표
	최종보고회 (2025.04.18.)	내용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외, 기획단, ((주)포럼디앤피) 이인기 대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학도시 모델 개발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과 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학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대학-도시 사례 분석과 국내 대학도시 유형별 진단체계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지역인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학-도시 연계 모델 개발

주요 연구내용

- 기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도시별 특성에 맞는 대학-도시 협력 모델과 발전 로드맵을 제시

해외 대학-도시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핵심 요소 도출

대학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해외사례(스웨덴 말뫼, 프랑스 툴루즈, 일본 츠쿠바, 미국 볼티모어, 시라큐스 등)를 분석하여 한국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해 적용 가능한 핵심 요소를 도출했다.
공간적 특성으로는 대학 입지, 교통 인프라, 도시계획 연계, 캠퍼스 개방성이 도시재생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고, 기능적 특성으로는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 공공 기능 제공, 국가 및 지자체의 전략적 개입이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허브 역할을 강화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청년·대학생 인구 비중, 이주민의 유입과 고령화 수준이 도시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내 대학도시 유형 도출 사업모델 적용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학-도시 모델은 도시의 공간 조건, 행정 역량, 고등교육기관 수, 지자체와의 관계 형성에 따라 전략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6개 대상 도시를 바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대학-도시 모델의 구조와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지역(도시)의 변화에 대학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대학주도형, △지자체주도형, △지자체-대학협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기획 주체, 재정 투입 방식, 정책 수단 등 차별화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유형별 대응 전략에 따라 △지역인재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 △외국인 유입, △캠퍼스 이전·신설 등 4가지 대학-도시 실천 모델을 도출하며 각 도시의 특성과 전략과제를 반영한 정책 실행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국내 대학도시 유형 도출 사업모델 적용(안)]

대학의 역할에 따른 적용 유형	지자체주도형	지자체+대학 협력형	대학주도형
	고등교육 기능이 약한 지역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 등을 유치·지원하여 대학 중심 개발 유도	지자체와 대학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공동 기획·운영하여 지역 현안 대응과 전환 추진	※본 연구의 목적인 대학-도시 모델 도출을 고려하여 대학주도형은 지역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구분	지역산업 인재양성 모델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	외국인 유입 기반 모델	캠퍼스 이전·신설 기반 모델
적용 유형	지자체주도형 지자체+대학 협력형	지자체+대학 협력형	지자체+대학 협력형	지자체주도형
적용 조건	• 산업기반은 존재하나 산업-교육 연계 미약	• 대학의 기술·창업·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고용·창업 지원 • 산업기반과 교통 여건 양호 • 대학의 앵커 역할 가능	• 외국 유학생, 연구자, 창업자 등의 유치로 청년 정주인구 확보 •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 다문화 정착 기반 필요	• 고등교육 기반 부재 지역의 선제적 캠퍼스 유치 • 고등교육기관 부재·취약 • 지자체 주도 의지 필요
국내 도시 대학도시 추진 현황	**[기능별 특화 캠퍼스 추진]** • 계룡시 : 국방정보보안 • 광양시 : 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 태백시 : 녹색전환(탄소중립) 분야	**[지역 특화산업 연계 대학-산업 협력 모델 구축]** • 아산시: 대학-지자체-산업 연계 도심 일자리 창출 • 원주시: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산학연 플랫폼 추진 • 태백시: 청정에너지·스마트 마이닝 분야 창업거점 도시 추진	**[국제교육 및 외국인 유치 모델 구상]** • 원주시: 의료 연계형 국제교육 모델 • 아산시: 글로벌 캠퍼스 및 외국인 교육·산업 유치 • 남원시: 문화 기반 국제교류 커리큘럼 구상	**[지역 자원 활용 특화 캠퍼스 및 클러스터 도시 전환 모델]** • 계룡시: 방산·정보 특화 캠퍼스 및 국방교육 클러스터 조성 • 태백시: 유휴 광산지역 활용 스마트 마이닝·탄소중립 캠퍼스 추진 • 남원시: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기반 전통문화 커뮤니티 구상
발전방향 및 모델구조 적용				
공간 전략	**[클러스터 집적형 모델]** • 계룡 : 방산클러스터 캠퍼스 • 광양 : MINC 복합혁신지구 • 태백 스마트마이닝 캠퍼스	**[도시재생 앵커 + 중심축]** • 아산형 Connective Corridor (순환버스 + 보행녹도 + 청년마을거점) • 원주 지식산업벨트+그린 축 • 앵커기관 기반 도시재생	**[테마형 정주공간과 도심 회복 통합 설계]** • 글로벌 테마형 정주 커뮤니티 • 문화캠퍼스-글로벌 커뮤니티 통합 • 생태보행축+도심 연결	**[유휴자원 활용 복합기능 통합캠퍼스 구축]** • 유휴공간 활용 복합기능형 캠퍼스 • 다핵형 앵커시설군 구성으로 R&D·창업·주거·커뮤니티 통합
기능 전략	**[산학연 연계 및 청년 창업 활성화]** • 지·군·학 삼각 거버넌스 • 산·학·연 연계 교육체계 • 녹색전환 특화 교육과정	**[창업기반 및 전략산업 연계 대학-산업 협력체계 강화]** • 산업연계형 창업생태계 • 기술기반 R&D 클러스터 • 창업보육·기술사업화	**[외국인 유치 기반 융합 교육·산업 플랫폼]** • K-문화 융복합 산업 플랫폼 • 영어-한국어 병행 커리큘럼 •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방정부 주도 산학협력 특화 교육 모델 운영]** • 지역 전략산업 연계 특화학과 운영, 외부대학연계분교형모델검토 • 지방정부 주도 산·학 협력 교육법인 설립
인구 전략	**[청년 유입 및 정주 기반 구축]** • 청년 기술전문 인재 유입 • 복합문화공간·정주인프라 • 다세대 커뮤니티 재생	**[캠퍼스-도심 연계 청년·외국인 정주지원 체계]** • 도심 정주 기반 개선으로 청년 인제 유입·정착 유도 • 외국인 연구자 정착을 위한 다문화 포용형 정주 인프라 제공	**[유학생, 이주 청년, 가족 유입 기반]** •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유치 • 다세대·다문화 맞춤형 커뮤니티 • 국제기숙사·생활지원센터	**[캠퍼스 연계 청년·이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 신설 캠퍼스 중심 청년·이주민 유도형 주거·창업·문화 프로그램 패키지 제공 •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로 유입 구조 강화

출처 : 국건위 발행 보고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학도시 모델 개발(2024.04.)'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학도시 모델 개발(2024.04.)' 참고

대학도시 모델 적용 전략 사례

유휴캠퍼스 재생을 통해 교육거점대학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 모델

남원시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사업을 바탕으로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를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폐쇄적인 캠퍼스 공간은 지역에 개방되며,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 산업 및 인재 양성과 연계함으로써 교육거점대학으로서 지역과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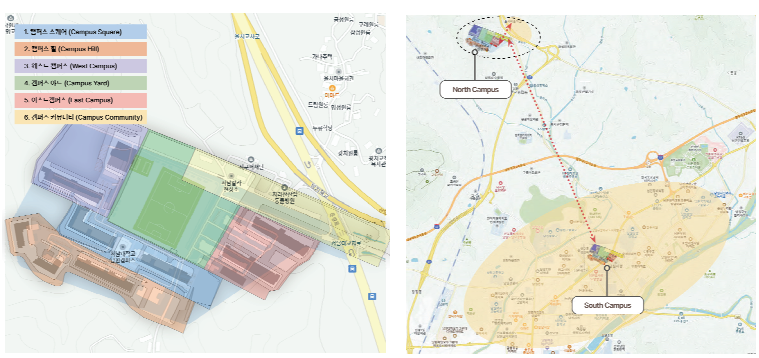
기능별 특화와 연계를 통한 '이웃캠퍼스' 조성

캠퍼스를 기능과 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강화하되, 영역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학습, 교류, 혁신, 휴식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웃캠퍼스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웃캠퍼스

이웃캠퍼스 개념은 1990, 2000년대에 대학들이 교육 및 연구 중심의 공간에서 지역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탠퍼드 대학교는 기존 교육 연구 중심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소와 시설들을 추가하여 캠퍼스 타운으로 확장되었다.

기존의 분리형 캠퍼스 모델을 주변 율치 마을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통합한 작은 캠퍼스타운으로 발전시키고, 대학과 지역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지원함으로써 남원 글로컬캠퍼스 대학도시만의 다문화적 특화 마을을 조성한다.



[남원 글로컬 이웃캠퍼스 조성(안)]

아울러 구(舊) 서남대학교 캠퍼스 공간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캠퍼스 타운은 남원시와 연결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와 남원시는 신산업, 관광 산업, 문화, 역사를 매개로 하여 상호 연계되며, 학생들의 유입이 증가하여 새로운 대학도시로 발전되도록 한다.

※ 상기 내용은 국건위 발행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학도시 모델 개발' 연구의 중간보고(2025.05.)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정책 현장의 회고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개발

권영걸 위원장



지방소멸 시대,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 회복 모델 개발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개발이라는 정책과제가 처음 제안되고 추진되게 된 배경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급속한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 정주 여건의 악화 등 다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쇠퇴를 넘어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고, 그 중심에 '대학'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인구의 핵심 기반이자 산업·기술·문화의 매개체로서 지역 활력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주요 거점입니다. 특히 지역에 대학이 존재할 경우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이 가능하며, 산학협력 및 지식기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은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지방대학에 대한 개별적 지원 정책은 존재했지만, 이는 파편화된 접근에 머물렀고, 대학과 도시, 산업, 행정 간 유기적인 구조를 설계하거나 정책화하는 데에는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과제는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대학을 매개로 한 '지방 도시의 종합적 회복 모델'을 구상하고자 하였고, 그것을 구조화된 '유형별 모델'로 정립하고 실천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에서 대학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지역 활력 회복을 이끈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본 과제를 제안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을 통해 지방 인구와 자원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연구로 기획된 것입니다.

이론을 넘어 실행으로: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의 정책 기반 마련

이번 정책과제가 달성한 가장 주요한 성과는, 단순한 이론적 연구를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지방대학 육성이나 개별 도시 재생사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본 과제는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 산업, 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유형화하고, 이를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향하는 이념 중 하나는 공간을 통한 사회적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입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단순한 물리적 공간 계획이 아닌 인구·산업·자원의 재배치라는 구조적 문제를 건축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비전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본 과제가 제시한 5가지 대학도시 모델 유형(A~E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해외 사례와 국내 지자체를 연계해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이는 향후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부 등 여러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 종합 정책 프레임워크로 확장·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파급력 측면에서도,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였고, 특히 지방에 대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도시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정책 차원에서 정립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기적 정책을 넘어 중장기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통합될 수 있는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 성과입니다.

무엇보다도, 본 과제는 '대학을 살리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지방을 살리고, 대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상생적 역할'을 탐색한 과제로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책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학도시 모델화의 실천적 고민과 전략

이번 정책과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가장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 매개체로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대학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는 담대한 명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설득력 있는 구조와 모델이 필요한가였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지방대학 지원에 머물렀던 반면, 이번 과제는 대학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도시의 구조, 인구의 흐름, 산업의 재편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구조화하고 모델로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특히 제가 깊이 고민한 부분은 국내외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풀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 규모, 도시의 산업적 조건, 지자체의 역량 등을 비교 분석하며, 유형별로 실질적인 매칭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대학 하나로는 부족하다: 대학도시 모델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층적 대응 방안

초기 목표와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 특히 대학 하나만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가지 방향에서의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범부처적 연계와 이행체계의 구축입니다. 이번 과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구성 모델을 제안했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학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범정부 지원체계 구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대학을 지역 정책의 일부로 포섭하는 종합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정책 실험의 장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델 유형을 제시했지만, 이를 실제 지자체에서 실현해보고 성과와 한계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파일럿 도시 선정 및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유형별로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정적·제도적 지원 기반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대학의 이전이나 확장, 산학협력 공간 조성, 지역 내 혁신거점 구축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투입이 요구되며,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는 구조적 재정 모델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방대학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단기 예산지원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 투자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수용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학이 지역에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 지자체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공동 비전 수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거버넌스 운영,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방식, 지속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 활동이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초기 목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기반 강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시범도시 운영, 재정 및 인식 전환 지원 등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후속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정책의 실행력과 사회적 파급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을 넘어, 사회 혁신으로: 건축정책의 통합적 실행 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정책과제는 '건축'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 창출의 도구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확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건축정책을 보다 사회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과제는 '지방소멸'이라는 인구·산업·교육·문화 등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대학도시'라는 건축적·도시적 수단을 통해 접근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타 부처와의 연계 구조를 내재화한 과제 기획 및 예산 편성 방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등과의 공동 기획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면, 건축정책의 전략성과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정책-연구-실행'의 연계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대학도시 모델은 구조화와 이론적 분석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실행 파트너십과 같은 후속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실험실(Living Lab)' 성격의 기구 또는 플랫폼을 제안·조정·관리하는 기능을 구축한다면, 단발성 연구가 아닌 정책 실행력 중심의 정책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건축정책의 지속성과 축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과제를 포함해 그간 위원회가 수행해온 다양한 정책연구들은 매우 가치 있는 성과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적과 공유, 확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회가 추진한 정책과제들을 주제별, 시기별, 정책유형별로 분류하고 누적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또는 정책지식 플랫폼을 마련하여, 향후 과제 기획이나 정책결정 시 실질적으로 참조 가능한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책 담론을 주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번 과제처럼 지방소멸, 인구 재편, 교육혁신 등 복합적 이슈를 다루는 경우, 단지 정책결정자나 연구진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대학, 산업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설계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구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향후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향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사회 구조 전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연구에서 실행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공간정책이 단지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이 아닌, 사회 혁신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4분과(지방소멸 대응)	
세부 정책과제-3	
담당	박성신 위원

지역의 숨은 장소를 찾아 새로운 활력거점 조성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거점화

추진 배경

폐교, 빈집 등 유휴공간의 잠재력 발굴과 재탄생 모색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초기부터 지방소멸대응 분과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폐교, 빈집 등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휴식 공간이자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초기 논의에서는 지방의 폐교된 초·중·고·대학 등의 교육시설과 공·폐가를 활용하여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사업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경관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폐·유휴공간을 둘러싼 소유권 및 관리주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빈집 재생과 폐산업시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을 망라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를 포괄하는 폐·유휴공간의 재생으로 지역 거점화하는 방향으로 과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장답사 및 심포지엄 통한 공감대 형성

2023년 하반기에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전라북도 전주·완주 지역의 폐교 및 폐공장 등을 활용한 성공 사례지를 직접 답사하는 동시에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그룹과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 기반 정책 제안 구체화

2024년에는 '폐·유휴공간 지역 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연구를 별도로 추진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진행하여, 폐·유휴공간 재생의 장애요인과 성공 전략,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폐·유휴공간 활용 지역거점화 정책과제 발굴

폐·유휴공간 활용 지역 거점화 정책과제는 폐교된 교육시설 및 공폐가를 활용한 문화휴식공간 조성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 2차 분과회의(2023.6.23.)에서 유휴공간의 지역거점화로 구체화되었으며, 8차 분과회의(2023.8.25.)에서 '폐·유휴공간 재생으로 지역 거점화'로 과제명이 확정되었다.
실행방안 모색 단계에서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하였다. 2024년에는 8개 부처 통합 공모사업과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추진 과제와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과제 구체화 과정	제1차 분과회의 (2023.05.12.)	• (최초 과제 제안) '지방의 폐교된 교육시설 및 공·폐가의 지역사회 문화휴식'을 잠정 과제로 선정, 폐교 소유권(교육부-교육청 소관) 현황 파악 필요성 제기
	제2차 분과회의 (2023.06.23.)	• 유휴공간의 지역 거점화로 구체화하여 중점과제로 선정
과제 확정	제8차 분과회의 (2023.08.25.)	• 과제명 확정 폐·유휴공간 재생으로 지역거점화' *빈집, 폐교(초중고/대학), 폐산업시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및 정보 통합 DB 구축 포함
실행방안 모색	제10차 분과회의 (2023.09.14.)	• 연구기관 및 학계 연구추진 사례 청취 및 협력 논의: 국토연구원(지방 체류인구 증진), 건축공간연구원(유휴공간 전략적 활용체계 구축), 제주대(제주 폐교 활용) 사례 발표 • 폐교 등 지방소멸 관련 실행과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등)
	제15차 분과회의 (2023.12.21.)	• '23년 활동 성과 보고 : 폐·유휴공간 유형을 빈집, 폐교, 기타로 구분하고 유휴공간 활용사례 관련 전주 심포지엄 개최 추진('23.12.7. 개최) • '24년 실행계획 :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부처·위원회 통합적 문제 해결 추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 제안 역할에 따른 제도개선, 지역 필요 파악과 모형개발 등 추진 필요성 논의
	제18차 분과회의 (2024.02.21.)	• '24년 연구용역 '(가칭) 폐·유휴공간 재생으로 지역 거점화 방안 연구' 추진 논의 • '24년 정부부처별(8개 부처 통합, 국토교통부, 교육부) 공모사업 현황 보고 및 연계 방안 논의
정책연구 추진	제22차 분과회의 (2024.04.24.)	•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분석을 위한 별도 연구용역 필요성 제안
	제24차 분과회의 (2024.05.24.)	• 연구용역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추진 확정 : 폐·유휴공간 유형화, 전국 폐·유휴공간 현황 파악, 전문가 설문(20명 규모)을 통한 인식조사(법/제도개선 제안 포함) • 생존 위기 지방대학의 공공기여 활성화 정책(URBC) 발표(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 미국 애리조나 대학, 부경대 사례와 성공 조건 등 시사점 파악
	착수보고회 (2024.08.08.)	• 연구용역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착수보고회 (수행기관: 전북연구원)
	최종보고회 (2024.10.11.)	• 연구용역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최종보고회

정책연구 추진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폐·유휴공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폐·유휴공간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 폐·유휴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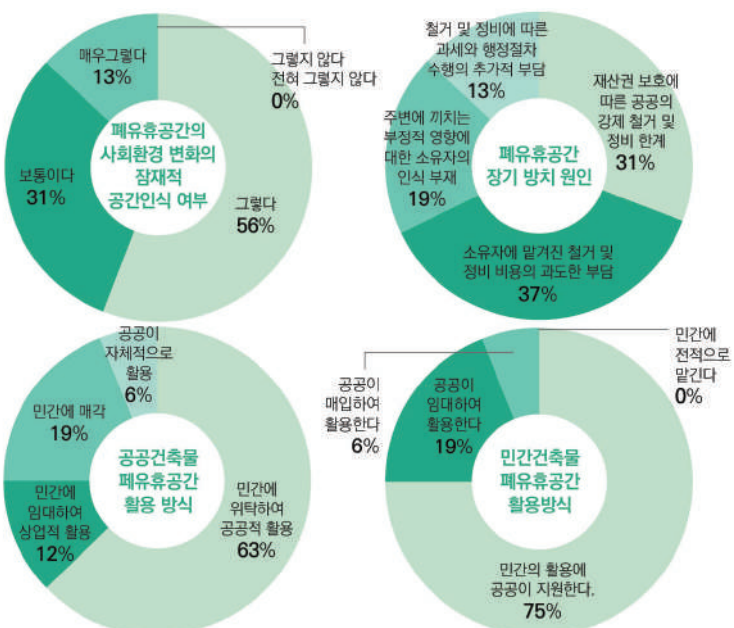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폐·유휴공간을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폐·유휴공간 인식, 유형 및 특징, 지역거점화 방안,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분석

폐·유휴공간의 활용과 지역거점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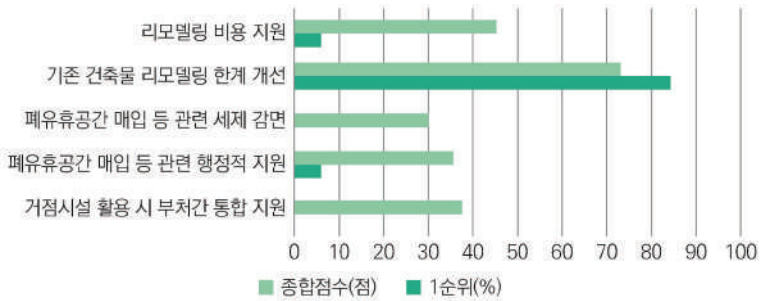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폐·유휴공간을 심각한 사회문제이면서도 도시 활력 증대의 잠재적 공간으로 평가하였다. 활용 방식으로는 공공건축물은 '민간 위탁을 통한 공공적 활용', 민간건축물은 '민간 활용에 공공 지원' 방식을 우선순위로 응답하였으며, 장기간 방치의 주된 원인을 철거·정비 비용의 과도한 소유자 부담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따른 공공 개입 한계로 지적하면서 민간 창의성과 공공성 확보의 조화 및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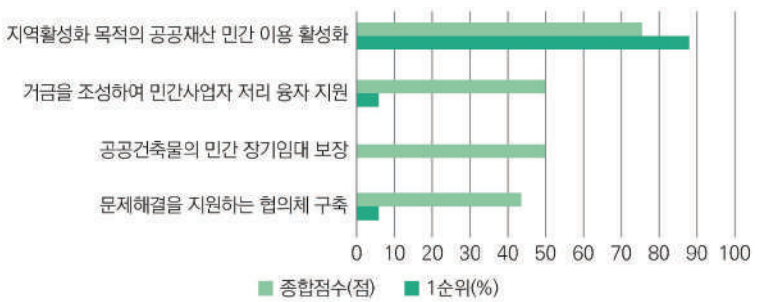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발췌)]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전문가가 생각하는 폐·유휴공간의 지역거점화를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한계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 용량, 용도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폐·유휴공간을 재생하여 활용하는 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공재산의 민간 이용 활성화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민간의 참여 범위는 '공공과 민간의 공동 활용' 및 '민간 임차 활용'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해결 과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폐·유휴공간 재생에 민간 참여 유도 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아울러 폐·유휴공간 활용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의 물리적 변경으로 인한 법적 기준 저촉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건축물 용도, 규모,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소방·환경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빈발하므로,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특례조항 신설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주요 개선 대상으로는 관광진흥법의 빈집의 숙박시설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 공유재산법의 공공재산 대부 절차 규정, 주차장법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방치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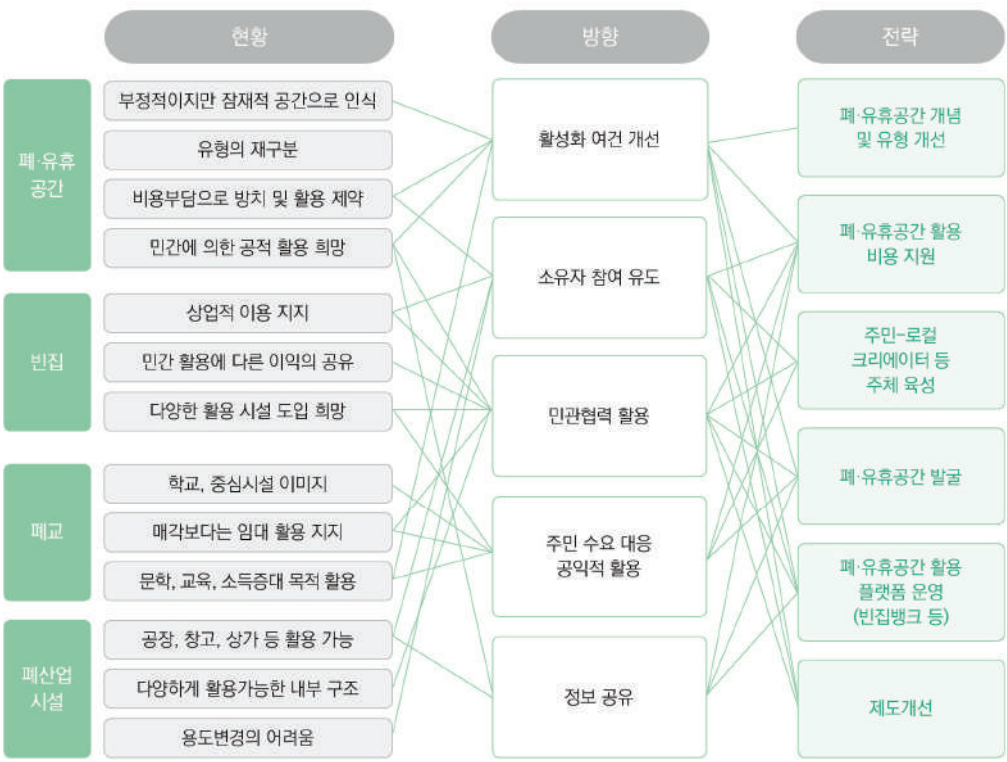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유휴공간 활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공 이익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용과 공공성 확보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한 지역거점화 전략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 유휴공간의 지역 거점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공간 활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등 활성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 민간 소유인 점을 고려하여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비 및 활용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을 통해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폐 유휴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상업적 활력을 창출하도록 민간을 핵심 주체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 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과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익적 활용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와 소유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폐 유휴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 방향 및 전략]

※ 자세한 내용은 국건위 발행 보고서 '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2024.10.)' 참고

4분과(지방소멸 대응)	
세부 정책과제-4	
담당	김규린 위원

공공건축과 지역주민 삶을 연결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추진 배경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건축으로 생활공간 개선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환경적 특성과 주민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정책과제로 확정되었다.
이후 과제 추진을 위해 기존 공공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지역 특성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사업 유형 분석, 이용 현황 파악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기획 내실화, 전문가 참여 확대, 유지관리 효율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 제도혁신소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 건축사와 함께하는 세미나 개최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건축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조성 추진 : 지역 유형에 대응하는 공공건축과 사업유형의 개발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과제는 도시재생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사업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공간 개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사회적 과제 속에서 공공건축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 노력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황 분석과 공공건축지원센터, 총괄·공공건축가 및 건축산업 실무 관계자 의견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였으며, 공공건축을 활용한 지방소멸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까지 모색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도혁신소위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 시도

본 정책과제는 제도혁신소위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자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공공건축 조성 및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지역활성화 타운 조성사업 등과 관련된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실제 공공건축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과제 구체화 과정	제2차 분과회의 (2023.06.23.)	• '지역맞춤형 공공건축'으로 중점과제 선정 • 목표설정 :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복성 지양,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공건축/도시공간 구현으로 균형발전 도모
	제6차 분과회의 (2023.07.14.)	• 실행과제 토론. 전국적 확대를 위해 표본 사례(지역 대표성) 필요성 및 시범사업 통한 검증 방안 제시
과제 확정	제8차 분과회의 (2023.08.25.)	• 과제명 최종 확정 '지역맞춤형 공공건축' * 지역 유형 대응 공공건축/사업유형 개발. 공공건축 실태조사, 사업 유형 분석(발주방식), 이용현황 파악(유지관리, 용도 적정성 – 제도혁신소위 연계), 지역별 가이드라인/모델 개발(인구 감소 고려 통합/분리 등) 포함
실행방안 모색	제15차 분과회의 (2023.12.21.)	• '23년 활동성과 보고 :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지역활성화타운 조성사업 등 현황 자료 수집/파악) • '24년 실행계획 : 데이터 분석(건축공간연구원 협업), 공공건축 프로세스 마련 등 • 제도혁신소위와 역할분담 및 연계 추진 필요성 제기
	제16차 분과회의 (2024.01.23.)	• 자체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미흡 문제 지적 • 공공건축가 가이드(도시 규모별 등) 마련 검토 필요성 제기
	제18차 분과회의 (2024.02.21.)	• '24년 행사계획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형 공공건축의 방향성 제시 세미나'(6월, 10월) 추진 논의 * 지자체/지역건축사회 연계-지역 건축가 참석 하에 지방 소멸 문제점과 사회적 시스템 구축, 민간건축과의 차별화 방안 논의

정책과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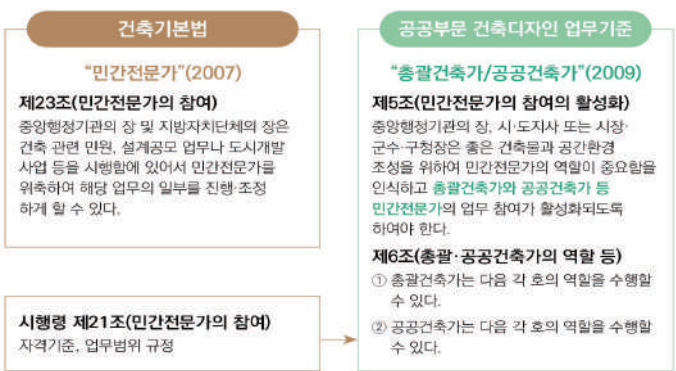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모델 개발

본 정책과제는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공건축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소멸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정책과제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건축 모델 개발 방안을 논의하였다. 도시 규모, 인구구조, 지역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여 획일적 건축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건축물 통합 및 분리 등 유연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건축가 제도의 효과적 활용 방안과 도시 규모별 공공건축가 가이드 마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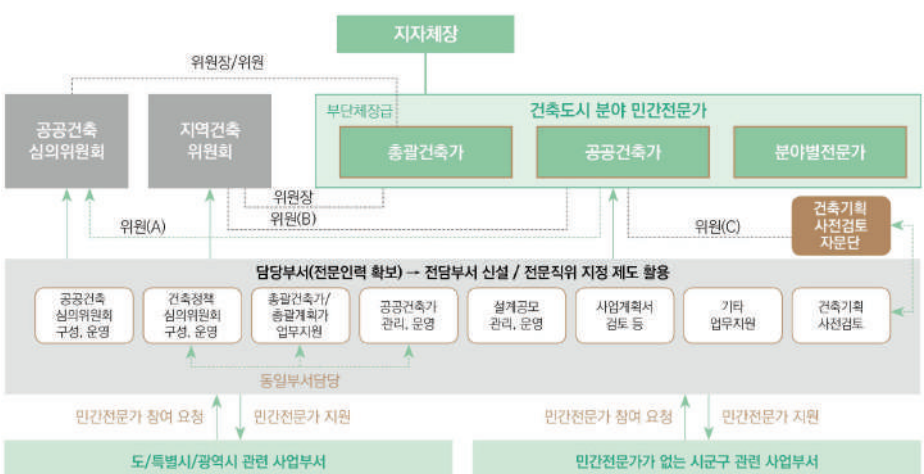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건축·도시 계획과 설계 과정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개선하는 데 있어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의 디자인과 건축·도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제안하였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도시 전공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 체계를 합리화하고 도시환경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민간전문가 제도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되며, 총괄건축가는 비전 수립과 건축·도시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자문, 공공건축가는 건축·도시 기획 및 업무,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업무 참여 등의 역할을 한다.



[민간전문가 제도 개념도]

정책과제 사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사례 탐방 (파주 광탄도서관)

광탄도서관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통해 추진된 공공건축 사례로, 이웃한 신산초등학교 부지 일부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교 및 인프라와 연계를 고려해야 하는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여건으로 초기 현상 설계안에서 부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설계자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열린 공간의 개념을 담아, 담장이 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최적의 설계안을 완성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파주 광탄도서관 '마당 품은 복합문화도서관'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23. 광탄면의 유일한 문화시설이자 마을공동체의 구심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남향의 열람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수목 등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비워진 공간이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마당을 먼저 배치했으며, 가지런한 마당을 품은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머물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023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출처]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24.04.30.) 이기옥 총괄건축가 발제자료 (31p)

공간의 공정함이 곧 공공건축

지방소멸대응 분과 김규린 위원은 앞으로의 공공건축은 과거 정형화된 건축물에서 벗어나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역할 변화가 필요하고, 실제로도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는 누구나 좋은 공간을 향유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공정함이 곧 공공건축의 본질이며 마을의 학교인 광탄도서관이 건축물 차원을 넘어 주변 공간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파주 광탄도서관 '마당 품은 복합문화도서관']

정책 현장의 회고

지역맞춤형 공공건축

김규린 위원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의 심의 사각지대와 지방도시 건축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

지역형 공공건축의 검토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서비스진흥법을 근거해 공공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기획 내용의 검토, 즉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설계비 5천만 원 적용 대상인데, 실제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사업의 80% 이상이 설계비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규모 공공 건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형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 도시의 경우, 사업 주관 부서 및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건축 전공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의 많은 수가 건축 비전공자여서 공공건축의 품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대한 민간 전문가 활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민간 전문가 활용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특성 반영 공공건축 역할 모델 방향성 제시와 소규모 공공건축 관리 필요성 확산성과

이번 과제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인구구조, 산업 구조, 역사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의 역할 모델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 소멸지역의 소규모 공공건축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심포지엄과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개최했고, '도시와 지역을 잇는 공공건축'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배포했습니다.

특히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모델 개발 방향성으로는 주요 기능의 공공성,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공유성, 일상 삶과 연속되는 공유의 공공성, 그리고 공간적 기능을 최적화한 지역형 공공건축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건축 기획·공모·설계 단계별 품질 확보 정책 과제 해결 필요성

초기 목표는 공공건축 품질 확보를 위한 통합 관리 정책의 제시였는데, 특히 사전 기획 내실화 지침 개선에 중점을 두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은 기획부터 제대로 출발해야 하는데 기획 업무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설계공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 공개 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나 사전접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자 권한이 요구됩니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지자체장 교체 시 사업이 전면 수정되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공건축 전반적 실태 파악 및 관리 체계 개선 후속 연구 필요

공공건축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발주된 공공건축 사업을 규모별로 분류해서 기획과 설계, 시공을 거쳐 완성된 사업별로 조사 분석하고, 사업비, 설계비, 공사비, 용도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 단계별로 기획, 설계, 시공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의 공공건축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획 내용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당초 기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공공건축 심의 후에도 대상지의 변경이나 공사비 문제 등에 따른 규모의 축소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공건축의 관리 통합체계 구성이 중요합니다. 기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공건축 심의 대상 외 사업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분과(지방소멸 대응)	
세부 정책과제-5	
담당	손진락 위원

세대 간 친화도시 리본 시티(RE-BORN CITY) 구현

지속 가능한 농 · 어촌마을 구축

추진 배경

활력 넘치는 농어촌: 세대 공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소멸대응 분과는 '세대 간 친화 도시 만들기' 과제를 선정·착수하였다. 초기에는 청년과 노년층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자체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고령층의 불만을 야기하고, 청년층에게는 의료 및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해 세대 교류 및 협업으로 농·어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과제 실현과정

지속 가능한 농·어촌 마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모색

정책과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책과제의 초점을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보다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과제명도 '세대 간 친화 도시 만들기'에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으로 변경되었다.

수정된 과제 방향에 따라, 저활용 지역자산(폐교, 빈집 등)을 활용한 정주 환경 개선,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 조성, 귀농·귀촌 인구와의 상생 전략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청년마을 만들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스마트팜 활성화 등 청년 유입 인구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정주공간과 농촌 일자리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이 제안되었다.

면 단위(인구 3~5천 명)의 소도시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를 위해서는 폐공간 등을 활용하여 원격진료와 필수 약국 기능을 갖춘 소규모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선 전문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상품홍보 플랫폼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과제 구체화 과정	제2차 분과회의 (2023.06.23.)	내용	• '세대(청년-고령층)간 친화 도시 구현'으로 중점과제 선정 • 목표설정 : 청년 감소/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세대 간 소통/협력/행복 공존 도시 구현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제6차 분과회의 (2023.07.14.)	내용	• 정책과제 및 실행과제 설명 및 토론 진행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손진락 위원, 기획단
과제 확정	제8차 분과회의 (2023.08.25.)	내용	• 과제명 확정 : '세대 간 친화 도시 만들기' • 부제로 '세대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리본 시티(RE-BORN CITY) 구현' 제시 - 지역특화(자산활용, 리모델링, 일자리), 상생환경(협업체계, 세대통합 공동체, 지역연계 교육/산업), 청년정착기반(유휴공간 활용, 로컬창업/크리에이터 육성) 포함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실행방안 모색	제15차 분과회의 (2023.12.21.)	내용	• '23년 활동성과 및 '24년 실행계획 보고 '세대 간 친화도시 만들기' 과제 논의 • 도시환경·건축공간 관점에서 세대 간 봉합 및 교류 위주로 과제 추진 의견 제시 • 24년 실행계획으로 폐가 처리/빈집 활용 방안과 연계한 정책 제안 예정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제16차 분과회의 (2024.01.23.)	내용	• 농어촌 마을 특화 전략 논의 - 저활용 부지 활용, 정주환경 개선, 의료지원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마을별 특색 시설 조성, 유입 인구와의 공동 생존 전략 필요성 논의. 소규모 도시(인구 5만 이하) 우선 특화사업 추진 필요 의견 제시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손진락 위원, 기획단
과제명 변경	제18차 분과회의 (2024.02.21.)	내용	• 과제명 변경 제안 및 논의 : '(가칭) 지속 가능한 농어촌 마을 구축' • 목표 : 고령, 장년, 청년의 조화를 이룬 세대 간 친화도시 만들기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손진락 위원, 기획단
	제21차 분과회의 (2024.03.26.)	내용	• 과제명 변경 확정 • 세부 내용으로 지역 폐공간 활용을 위한 면 단위(3~5천 명 기준) 소규모 거점공간 (원격진료 + 필수약국) 구성 방안 제시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한광야·김규린·손진락 위원, 기획단
	제8차 합동연석회의 (2024.03.29.)	내용	• 과제명 변경 확정 • 읍·면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 고령화된 노인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 생활인구 관점에서의 지역 활성화, 도시-지방 관계 재정립 필요성 등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및 위원 전원, 기획단
과제 추진	제10차 합동연석회의 (2024.06.21.)	내용	• 정책과제 추진 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 협업 필요성 제기 • 정영선 조경가 좌담회 내용 공유: 농촌에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 연구 시급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및 위원 전원, 기획단
	제12차 합동연석회의 (2024.09.06.)	내용	•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 과제 추진현황 점검 • 지역 소멸 방지 및 지방도시의 농촌 인구와 어르신 협업 관계 구축 등 순환구조 검토 내용 공유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및 위원 전원, 기획단
	제13차 합동연석회의 (2024.10.11.)	내용	• '지속 가능한 농·어촌마을 구축' 과제 추진 현황 점검 • 지역 소멸 방지, 지방도시의 농촌 인구와 어르신 협업 관계 구축 등 순환구조 검토,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젊은 층 참여 기반 조성 논의 공유
		참석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및 위원 전원, 기획단

정책과제 성과

세대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농 · 어촌마을 모델 제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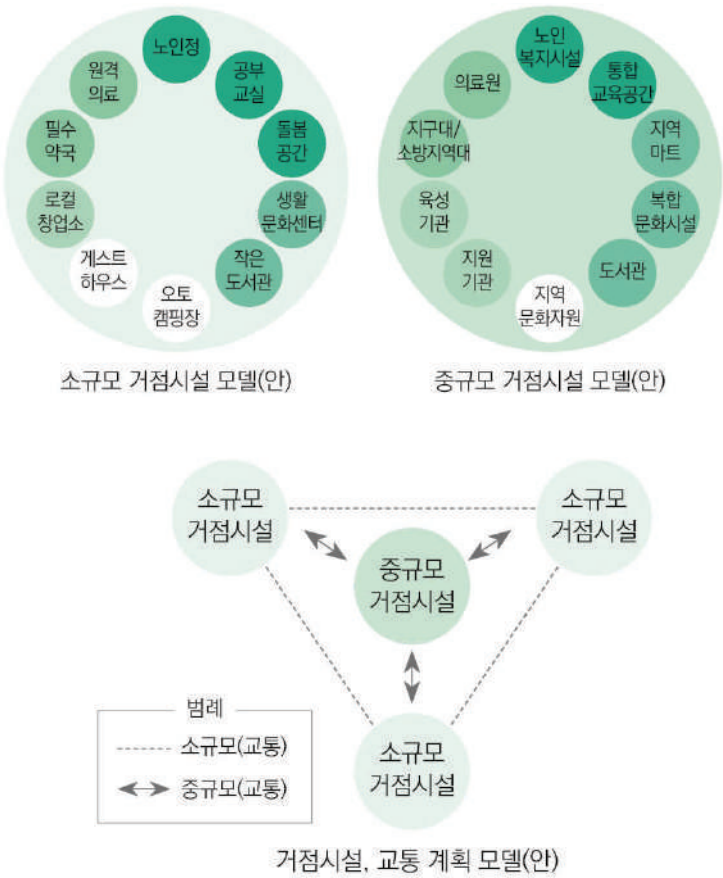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1단계 소멸 지연, 2단계 지역 회생의 정책을 제시한다. 1단계 지방 도시 수명연장 방법으로는 △노후주택 개량으로 고령층의 거주 환경 및 정주 인구의 삶의 질 향상 △고령층-청년 협업의 향토산업 브랜딩 △필수 의료체계 확보와 지원 △유소년 자녀, 부모에게 적합한 지역민 복지 강화 △방치·노후화된 마을 공간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도입 등이 있다.
2단계 소멸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독거노인과 함께 하는 상호 의존적 '셰어 하우스' 구축을 통한 세대 공동체 조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마을 브랜드 조성 △지역 특성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교육센터 조성, 운영체계 신설 △주민 참여를 통한 농어촌 마을 공간 재구성 5) 마을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커뮤니티 센터 조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세대 간 친화도시, 리본 시티 (RE-BORN CITY)

지방소멸 지연 및 회생을 위해선 작은 단위의 지자체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의 균형 잡힌 인구, 세대 간 균형·상생·조화, 적정 수준의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소규모 거점 기반 모델 디자인 '리본 시티'를 제안한다.
구체적인 핵심 과제로는 △세대 간 균형, 상생, 융화 △청년 유입과 정주 요소 마련 △소규모 거점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데이터 최신화 및 소멸지역 선정과 시범사업 운영이다.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지방 도시의 유휴자원 활용, 즉 공·폐가를 재구성해 마을별 여건에 맞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방문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마을 단지형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방문객에게 지역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정주 공간, 기존 주민들의 문화,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며 3~4개의 주변 마을 소규모 거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해 그 중심을 지역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소규모 거점 프로그램은 마을별로 다양하게 조성하되, 필수프로그램(교육, 돌봄 시설, 지역 역량 발굴시설, 필수 의료시설), 가변 프로그램(주민복지시설, 체험시설)으로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5, 3월 6일). 지방소멸 대응의 신모델, 리본 시티(RE_BORN CITY).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cap2019/223786025937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과제

지방소멸 관련 데이터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청년 순 이동률 등을 종합한 인구감소 지표나 소멸 위험지수, 결핍 지수 등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상시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지역 선정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데이터를 하나의 지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산업, 지자체 역량 등 다양한 지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원화된 지수를 개발하고 고위험 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일정 수준의 정주 인구를 확보한 이후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연 단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 현장의 회고

지속 가능한 농 · 어촌마을 구축

손진락 위원



초고령화·인구감소·인프라부족으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 대응 과제 추진

지방도시 소멸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 불균형,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부족, 인구 유입 요소 부족 등으로 가속화될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 소멸에 대응하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멸지역 대응을 위한 리본 시티 (소규모 거점 기반 모델) 계획안 제안

소멸지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가지 방안, 즉 수명연장과 생존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농어촌마을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세대들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리본 시티, 즉 '소규모 거점 기반 모델 디자인' 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도시의 복합적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다학제간 협력 연구 필요성

도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 도시, 도시 행정, 경제 등의 다학제간 협력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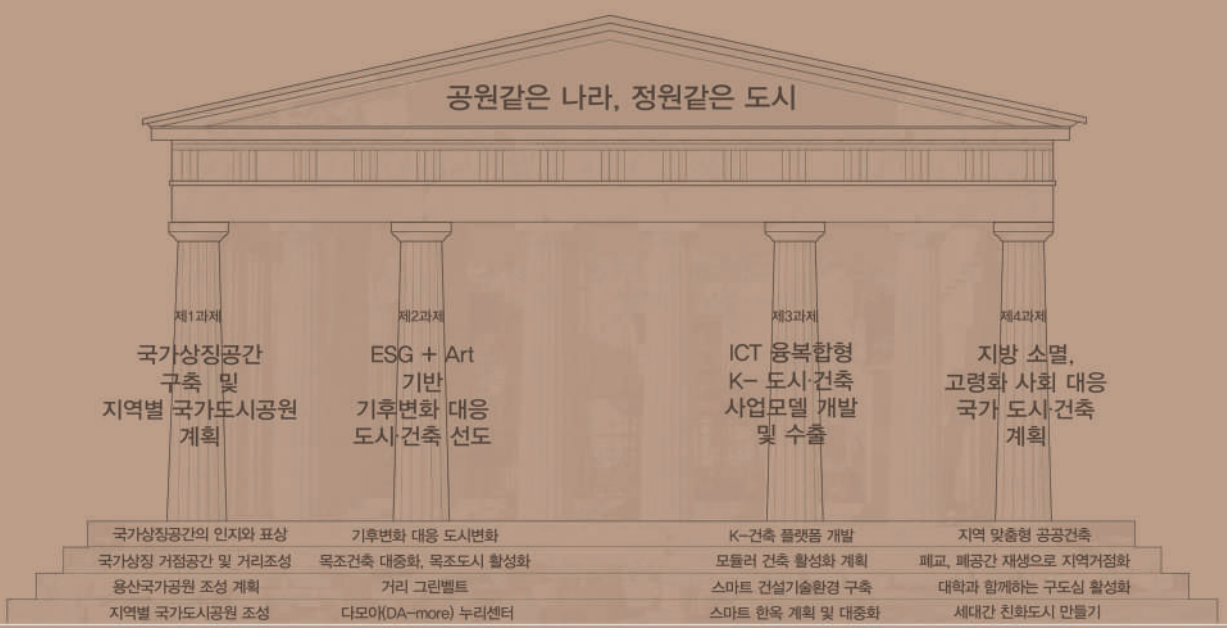
리본 시티 모델의 계획 요소·방향성·실험적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

향후 필요한 연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리본 시티 계획에 대한 계획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리본 시티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리본 시티, 즉 '소규모 거점 기반 모델 디자인' 계획안의 적용을 위한 도시소멸지역 디자인 실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PART

5

제도혁신소위



제도혁신소위 구성과 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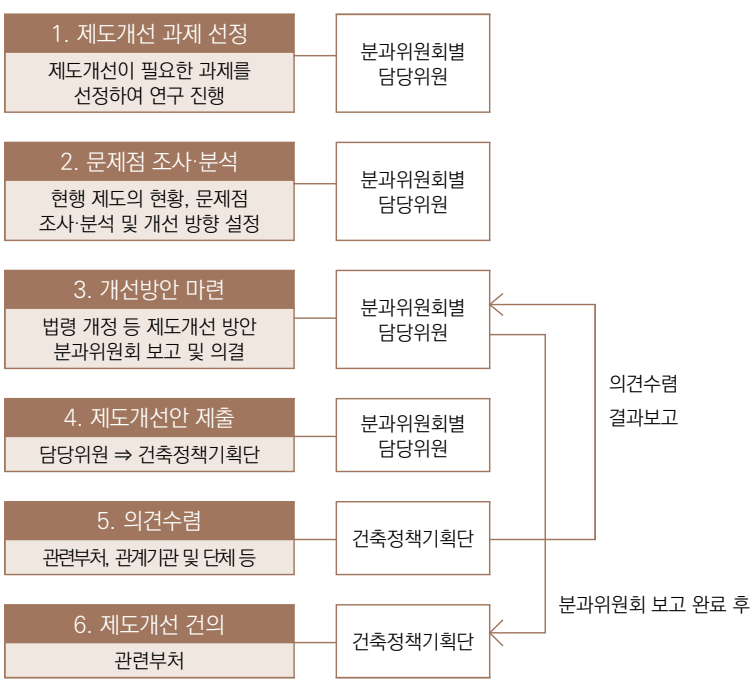
추진 배경

제도혁신소위의 목적 및 의의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정책 방향 설정과 더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특히, 3개의 분과위원회(정책조정, 국토환경디자인, 건축문화진흥)와 그 아래 4개의 소분과위원회(K-도시·건축, 국가상징공간, ESG+A, 지방소멸대응)가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과에 속하지 않거나 여러 분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심도 있게 다룰 별도의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7기 국건위는 정책조정 분과 내에 '제도혁신소위' 신설을 의결하여, 기존 분과위원회의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위원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제도혁신소위 제도개선 추진 절차]



[5분과 : 정책조정-제도혁신소위] 건축 관련 제도, 법령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한 제도혁신 소위

정책과제 선정

제도개선 과제 제안 및 초기 선정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초기, 민간위원들은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해 총 18개의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으며, 제1차 제도혁신소위에서는 이 제안 과제들을 바탕으로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과제 제안 취지, 기대효과 등의 발표를 거쳐, 과제의 시급성, 공공성, 객관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6개 과제를 우선추진과제로, 1개 과제를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되지 않은 과제들은 추진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과제는 이후 회의에서 추가 과제로 선정되었다.

[제도혁신소위 정책과제 선정 과정]

최초 제안		선정된 우선추진과제 (6건)
소규모 공공건축 품질 확보를 위한 통합 관리 (김규린)	▶	1. 공공건축 품질향상 (김소라, 김규린 위원 제안 통합) : 건축기획, 공공건축가 제도, 총괄건축가 제도 등 개선
건축사자격제도 개선 및 건축·도시분야 지역인재 양성 (박성신)		
공공건축기획 내실화 및 설계사후관리업무 현실화 (김소라)		2. 설계공모제도 개선 (조승구 위원 제안)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초기사업비 산출방식 현실화 (김소라)	▶	3. 소규모건축 통합관리 (김규린, 이인화 위원 제안 통합) : 소규모 건축의 품질, 안전, 성능 개선
건축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김소라)		
도시·건축 통합계획 성과 확산 (조승구)		
건축 설계공모 제도개선 (조승구)	▶	4. 건설산업 선진화 (안용한 위원 제안 3건 중 택1 추진 결정)
도심공공주택 특화 (조승구)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발주방식 제안 (안용한)		5. 건축업무 전문성 제고 (손진락, 이인화 위원 제안 통합) : 질의·회신 제도개선 및 설계, 감리 전문성 제고
공동주택 품질(층간소음) 확보 및 하자 저감방안 (안용한)		
BIM & 디지털 기반 전환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안용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효율화 방안 (안용한)		6. 인증제도 통합 추진 (안용한, 손진락 위원 제안 통합)
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가 형성 (이인화)		
공정한 디자인 저작권 관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이인화)		
공공기관의 독과점적 프로그램 사용 방지 (이인화)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이인화)		선정된 중·장기 검토과제 (1건)
안전한 국가를 위한 노후건축물 관리 (이인화)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및 건축·도시분야 지역인재 양성 (박성신 위원 제안)
빈집 개발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 공급 (이인화)		

지속적 점검을 통한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제도혁신소위는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받고, 심도 있는 논의와 외부 의견 수렴,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서 과제를 추진하였다. 선정된 과제들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제목, 목표, 내용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제명이 조정되었다.

'소규모건축 통합관리'는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로 과제명이 변경되었고, '공정한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가 형성'(이인화 위원 제안)이 추가적으로 과제로 선정되었다(제2차 회의, 2023.09.14.).
'설계공모제도 개선' 과제는 논의 범위를 넓혀 '건축 설계제도 개선'으로 과제명이 변경되었으며(제3차 회의, 2023.10.17.), '건축저작권 활성화' 과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제4차 회의, 2024.04.11.).
인증제도 통합 추진 과제는 「녹색건축법」 개정('24. 2. 공포, '25. 1. 시행)과 함께 추진되었으며(제4차 회의, 2024.04.11.), '질의·회신 제도개선' 과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제도혁신소위 과제에서 제외하였다.
모듈러 건축물과 공업화 주택 인증제도 개선 등 건축물 성능과 신기술과 관련된 제도개선과제가 다수 제안되었는데, 제안된 내용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모듈러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하나의 과제로 통합되었다(제4차 회의 (2024.04.11.).
'건축 설계제도 개선' 과제는 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청취·논의를 거쳐 설계변경 대가 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춰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으로 과제명이 변경(제5차 회의, 2024.05.09.)되었다.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과제는 건축물 성능 정보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구내용의 확장과 함께 '안전한 국가를 위한 공정한 건설사업 관리'로 과제명이 변경되었다.

제도혁신소위는 민간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바탕으로 현안 중심의 논의를 시작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통해 과제를 통합·조정·구체화함으로써 정책과제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왔다. 이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집중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도혁신소위 정책과제 조정]

선정된 우선추진과제 (6건)	과제 조정	과제 조정
1. 공공건축 품질향상 : 건축기획, 공공건축가 제도, 총괄건축가 제도 등 개선	1. 공공건축 품질향상 : 공공건축 실태조사, 관리체계 수립, 공공건축 관리(통합) 체계 구성 검토	제외 (제8회, '24.10.4.)
2. 설계공모제도 개선	2. (과제명 변경) 건축 설계제도 개선 : 설계변경의 합리적 관리, 공공건축 공사비 및 설계요율 합리화,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	2. (과제명 변경) 건축 설계변경제도 개선
3. 소규모건축 통합관리 : 소규모건축의 품질, 안전, 성능 개선	3.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성능기준 정보 체계화(기축 건축물 포함) 검토	3.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방안
4. 건설산업 선진화	4.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효율화 및 발주제도 개선 : 안전과 관련된 품목(레미콘 승강기) 직접 구매 제외 검토	4.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효율화 및 발주제도 개선
5. 건축업무 전문성 제고 : 질의·회신 제도개선 및 설계, 감리 전문성 제고	5. 질의·회신 제도개선 : 건축사협회 초안 작성 후 국토교통부 검토 후 회신 방식으로 개선 제안	제외 (제4회, '24.4.11. 국토교통부 의견 조회 후 별도 보고 추진)
6. 인증제도 통합 추진	6. 인증제도 통합 추진 : 현행 각종 인증제도 통합 검토(관련 인센티브 포함)	완료 (관련 법 개정)
	7. (추가) 공정한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안전한 국가 형성	제외 (제8회, '24.10.4.,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과제와 통합)
	– (추가) 건축저작권 활성화 : 건축저작권 활성화로 건축가 저작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확보	**최종 제외** (2025.3. 국토교통부 문체부 추진 정책과 중복성 고려, 지원 역할 전환)
	– (추가) 모듈러 장수명 인증제도	'모듈러 관련 제도개선' 과제로 통합 추진
	– (추가) 층간소음 측정기준	
	– (추가) 설계감리 특례	
	– (추가) 표준도서 인증	
	– (추가) 지급자재 예외	
	– (추가) 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	
	– (추가) 공업화 주택 인증제도 개선	
	– (추가 제안) 상주감리 제도개선	미선정
	– (추가 제안)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개선	
선정된 중·장기 검토과제 (1건)	– (추가 제안) 공공건축물 건설사업관리 대상 완화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및 건축·도시분야 지역인재 양성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및 건축·도시분야 지역인재 양성	

제4차 정책조정 분과 (제1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3.08.24)	초기 과제 제안 및 선정	
	과제 제안	18개 제도혁신과제 중 우선추진과제 선정
	논의	제안된 18개 과제의 추진내용 및 추진계획 발표를 바탕으로 시급성, 공공성, 객관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우선 추진과제 선정
	선정	우선추진과제 6건 선정 : ① 공공건축 품질향상, ② 설계공모제도 개선, ③ 소규모건축 통합관리, ④ 건설산업 선진화(택1), ⑤ 건축업무 전문성 제고, ⑥ 인증제도 통합 추진 * 미선정 과제는 추후 검토
	선정	중·장기 검토과제 1건 선정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
제7차 정책조정 분과 (제2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3.09.14.)	과제 구체화 및 조정	
	점검	제도개선 추진과제명 확정
	과제명 변경	'소규모건축 통합관리' →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사유: 논의를 통한 과제 범위 확장/구체화)
	과제 추가	'공정한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가 형성' 추가 (총 7개 과제)
	논의	일부 과제 관련 관계기관(건축공간연구원 등) 의견 청취 및 자료 제공 요청 결정
제8차 정책조정 분과 (제3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3.10.17.)	의견청취를 통한 조정 및 점검	
	의견 청취	(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건축기획 현황 의견 청취 및 논의
	과제명 변경	'설계공모제도 개선' → '건축 설계제도 개선' (사유: 논의 범위 확장)
	점검/논의	'건축 설계제도 개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효율화 및 발주제도 개선' 과제 발표 및 논의
	논의	향후 추진계획 논의 : 과제별 TF 구성 및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방안 - 공공건축 품질향상(교육청, 조달청)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관련 유관기관 의견 청취(LH, 지방공사(SH, GH, iH) 등), - 인증제도 통합 추진(인증 관련 업체 및 의뢰자 등)
제15차 정책조정 분과 (제4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4.04.11.)	의견청취를 통한 조정 및 점검	
	의견 청취	건축저작권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의견 청취 및 논의 : 저작권 기본 개념, 건축저작권의 현안과 산업적 의의
	기 선정 과제 추진 재논의	'인증제도 통합 추진' 과제는 관련 법 개정 완료가 됨에 따라 완료 처리 후 실적 연계
		'질의·회신 제도 개선' 과제는 단순 의견 청취 수준으로 판단되어 과제 제외
	추가 선정	'건축저작권 활성화' 관련 추가 안건 발표 및 선정
	통합 추진	모듈러 관련 7개 제안과제 → '모듈러 관련 제도개선'으로 통합 (사유: 내용 연관성 고려)
	점검/논의	'건축저작권 활성화' 관련 : 단기 공모 관행 개선, 중장기 NFT(Non-Fungible Token) 저작권 명시 방안 등) '공사용 자재'(레미콘/승강기 집중)
	추진여부 논의	'공공건축 품질향상', '건축 설계제도 개선' 과제는 추가 논의 필요

제17차 정책조정 분과 (제5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4.05.09.)	과제 추진 현황 점검	
	추진여부 논의	‘공공건축 품질향상’, ‘건축 설계제도 개선’ 추진 여부 논의 → 결정 유보
	점검/논의	‘모듈러 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논의 : 국토교통부·LH 협의 중, 타 부처와 협의 추진 난항 부분 공유(지급자재(중기부), 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산업부·과기부·소방청))
	계획	‘건축 설계제도 개선’ 관련 건축사협회 의견 청취 예정 (설계변경 대가기준 용역 관련).
제20차 정책조정 분과 (제6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4.07.11.)	의견청취를 통한 조정 및 점검	
	의견 청취	설계변경 기준대가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 관련 의견 청취(대한건축사협회)
	과제명 변경	‘건축 설계제도 개선’ →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사유: 설계변경 대가 산정 문제 초점)
	소통·홍보	‘설계변경 기준대가 산정기준’ 관련 포럼 개최 제안 ‘건축 설계제도 개선’ 관련 국회 국토위원회 초빙 포럼 진행, 유튜브·방송 홍보 제안 ‘건축저작권’ 관련 건축학회 정책분과위원회 공론화, 세미나 개최 논의
	논의	사용승인 후 내부 칸막이 변경 시 건축물대장 정정신고 의무화 건의
제23차 정책조정 분과 (제7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4.08.29.)	의견청취를 통한 조정 및 점검	
	의견 청취	토양오염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서경대 윤성원 교수)
	추진여부 논의	‘도심건축 활성화를 위한 토양정화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추진
	점검/논의	‘모듈러 관련 제도개선’ :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협의 상황 공유
제25차 정책조정 분과 (제8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4.10.04.)	추진 과제 관련 심포지엄 논의	
	논의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관련 국회 심포지엄 추진 논의 : 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의견 청취 후 구체적인 논의 결정
	논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관련 논의 (국토부 공고 제2024-1246호, ’24.9.20.~10.10.행정예고)
	기 선정 과제 추진 재논의	‘공공건축 품질향상’, ‘공정한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가 형성’ 과제 제외 (사유: 명시 안 됨)
	과제 변경 (확장)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과제에 거래시스템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사유: 거래시스템 연계 필요성 반영).
제27차 정책조정 분과 (제9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4.10.29.)	제도개선 방안 심층 논의	
	심층 논의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관련 논의 : 건축사협회 발표, 위원 간 토론, 국토교통부 의견 청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관련 논의 : 기준 개정으로 인한 영향 등 위원 토론, 국토부 의견 청취
제28차 정책조정 분과 (제10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4.12.02.)	과제 추진 현황 점검	
	점검/논의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발표 및 논의(공모 운영지침 제5조 개정 제안)
		‘건축저작권’ 관련 발표 및 논의(실제 공모 사례, 저작권 귀속 관련 관행 등)
	보고	‘모듈러 건축 관련 제도개선’ 추진 현황 논의(장수명 주택 인증 관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

제30차 정책조정 분과 (제11회 제도혁신소위회의) (2025.01.08.)	연구 착수보고	
	착수 보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 (대한건축학회) -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저해 요인 해결을 위한 기준 개선 방안, 국가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방향성의 설정 논의
제34차 정책조정 분과 (제13회 제도혁신소위회의) (2025.02.19.)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	
	논의	-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 : 세미나 개최, 추가 연구와 로드맵 수립 논의 - '건축저작권 활성화' : 국토부, 문체부 건축저작권 보호 정책과 연계한 정책 교육·홍보 추진
제36차 정책조정 분과 (제14회 제도혁신소위 회의) (2025.03.19.)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	
	의견 청취	'설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의견 청취 (전반적 제도개선 검토 예정)
	현황 논의	'성능관리'(사회적 합의 필요), '공사용자재'(연구 필요), '모듈러'(정부/국회 검토 중)
	제외 처리	'건축저작권 활성화' (사유: 관계 부처 정책 추진 중).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추진 배경

설계단계에서 설계변경의 빈번한 발생, 그러나 건축사 업무절차와 대가기준의 부재

우리나라 건축설계 제도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기준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합리적인 설계비 정산이 이루어지거나, 불명확한 대가 지급 기준으로 인해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설계공모 당선 이후 실제 설계단계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28%)나 공사비 조정(27%) 등 다양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72.9%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동일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적용받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대가 기준에 '추가업무'나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업무 범위 변경' 시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설계변경 대가 지급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은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어 분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설계공모 당선 이후 설계단계에서 설계변경 발생(72.9%)
설계변경 원인 : 발주기관 필요(28%), 공사비 조정(27%)

이러한 실정 속에서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과제가 착수되었다. 당초 제1차 제도혁신소위원 회의(2023.08.24.)에서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될 때는 과제명이 '건축 설계공모 제도개선'이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과제의 범위와 초점이 변화하며 과제명이 변경되었다.

초기 '설계공모'에 국한되었던 논의 범위가 건축 설계 제도 전반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대한건축사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설계 완료 후 시공 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 및 대가 산정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과제의 초점을 명확히 하여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제도개선'으로 과제명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본 제도개선 과제의 목표는 설계변경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공공건축 공사비 및 설계변경 요율(대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도혁신소위는 건축 설계 과정, 특히 공공건축 분야에서 만연한 불합리한 설계변경 관행과 대가 산정 문제를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하고 공론화하였다.
특히, 설계변경 절차 표준화, 대가기준 명확화,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 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건축설계변경 제도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 설계업무 변경 시 변경되는 업무량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으로 설계 품질 향상 및 설계시장 정상화
- 설계업무 변경에 대한 객관적 대가 산정 기준 마련으로 발주자와 설계자 간 갈등 완화 및 분쟁 방지

정책과제 실현 과정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현안 진단

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청취(제6차 회의, 2024.07.11.)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명확한 설계변경 대가 산정 기준 부재,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잦은 변경에도 대가 미지급 관행, △대가 없는 과업 변경 요구 만연, △‘경미한 변경’의 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한 잦은 분쟁, △불합리한 대가 기준으로 인한 설계 품질 저하와 건축사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었다.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방안 논의

대가 기준 명확화와 지침 개정안 검토

설계변경 요청 절차 표준화, 설계변경 유형(발주처 요구, 법령 개정, 설계 오류 등)에 따른 책임 소재 및 대가 지급 기준 명확화, 계약 시 설계변경 관련 조항 명시 의무화 등 제안하였다. 특히, ‘경미한 변경’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기본설계 기술제안 공모 시 설계변경 금지 조항) 등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 논의(제10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정책 추진 공감대 형성 및 구체화 방안 논의

제도혁신소위는 '건축 설계변경 제도개선' 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제9차(2024.10.29) 및 제14차(2025.03.19)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이 참석하여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은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 당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실제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예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인 설계변경 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제약, 관련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부족, 그리고 제도 변경 시 수반될 수 있는 예산 문제 등 실무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대가 기준이라는 특정 사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 계획과 연계하여 건축설계 및 서비스 전반의 개선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고 설계 절차 표준화 또는 표준 계약 조건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소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과제의 공론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등)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 심포지엄 개최가 논의되었다. 아울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쇼츠(Shorts)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준화된 과업지시서와 대가산정 기준 제안

전문 기술 분야 관련 정부 대가기준 중 설계변경이 규정된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변경의' 업무범위와 설계비 산정 내역,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부 대가기준 중 설계변경이 규정된 사례(총 8건)

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7조), 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5조), ③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8조), ④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제5조), ⑤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제5조), ⑥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제4조), ⑦ 측량대가의 기준(제5조), ⑧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제5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제안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9조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대가 조정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발주자의 의사에 의하여 각 단계별 제출된 설계도서 상의 계획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추가적인 계획이 발생한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 및 제41조 개정안을 통해 설계비 산출내역 공개 및 공사 중 설계변경 시 대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① (현행과 같음)
가. 총 공사비 및 설계비	가. ---------- 설계비(설계비 산출내역 포함)
나. ~ 하. (생 략)	나. ~ 하. (생 략)
제4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 ⑤ (생 략) 〈 신 설 〉	제4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사시행 중 설계기준의 변경, 합당한 민원 요청 또는 발주청등 의사에 따른 변경 등에 따른 재·변경 설계 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

추진 배경

제도혁신소위에서 추진된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 방안' 과제는 건축물의 안전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인 1~3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소규모 건축물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성능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성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정보 시스템의 부재, 용도별 유지관리 방안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1차 제도혁신소위(2023.08.24)에서는 '소규모건축 통합관리'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과제는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및 '안전한 국가를 위한 노후건축물 관리'로 발전되었다. 이후 논의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성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상호 간의 분쟁을 줄이고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거래시스템 연계'까지 과제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정책과제의 발전과 법제화 연계 논의

과제 구체화 및 방향 설정

초기 '소규모건축 통합관리'는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로 과제명을 변경함으로써 과제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과제 조정 단계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건축물 성능 확인 사업이나 건축공간연구원의 성능 확인 제도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과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후에도 과제는 지속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건축물 성능 기준 및 관련 법령(건축물관리법 등) 개정이 필요한 대상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과제 범위 확장

제8차 제도혁신소위 회의(2024.10.04.)에서 건축물의 성능 정보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와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제명이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방안'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한 성능관리를 넘어, 건축물의 성능 정보를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거래시스템과 연동하는 사회시스템 구축까지 고려한 것이다.

추진 방안 및 로드맵 논의

제13차 제도혁신소위 회의(2025.02.19.)에서는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성능관리 제도의 법제화, 거래시스템 연동 등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기본적인 로드맵을 우선 마련한 후 세미나 또는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제14차 제도혁신소위 회의(2025.03.19.)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성능관리 제도의 실질적 도입과 거래시스템과의 연계 의무화 등을 위해서는 법제화 방안과 이와 관련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핵심 사안으로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법제화 시 예상되는 효과 등에 대하여 관련 제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건축물 성능 확인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부동산 거래 비용 상승과 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격제도, 교육, 대가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과제 선정	제4차 정책조정 분과 (제1차 제도혁신소위) (2023.08.24.)	• 과제 초기 선정 - 과제명‘소규모건축 통합관리’ - 담당: 이인화·박성신 위원
과제 구체화 및 방향 설정	제7차 정책조정 분과 (제2차 제도혁신소위) (2023.09.14.)	•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의 과제 방향 설정을 위한 유사사례 검토 - 건축물 성능 확인 시범사업(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성능 확인제도(건축공간연구원) 연구 등 유사사례 검토 후 추진 방향 설정
	제15차 정책조정 분과 (제4차 제도혁신소위) (2024.04.11.)	• 법제화 제안 발전 - 구체적인 법제화 제안의 기초가 될 건축물 성능기준 관련 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 검토 및 제출 요청
과제 범위 확장	제25차 정책조정 분과 (제8차 제도혁신소위) (2024.10.04.)	• 과제명 변경 (‘안전한 국가를 위한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방안’) ※ 성능관리 제도를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의 범위와 목표 확장
추진 방안 및 로드맵 논의	제34차 정책조정 분과 (제13차 제도혁신소위) (2025.02.19.)	• 협력 교류 계획: 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법제화를 위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의 필요성 제기 - 세미나 또는 추가 연구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논의 - 심포지엄 계획서(안) 마련: 잠재적 협력 기관으로 (사)건축성능원, (사)한국부동산학술회의,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 법제화 추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 필요성 확인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제36차 정책조정 분과 (제14차 제도혁신소위) (2025.03.1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검토 의견(중장기 검토 필요) 청취 ※ 법제화의 현실적 어려움(소유자 인식 개선, 사회적 합의,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 후속 조치 필요 등)을 제기 -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 - 선행 연구사례, 해외 정책사례검토 후 심포지엄 추진 논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효율화 및 발주제도 개선

추진 배경

공공건설 품질 저해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필요성

본 과제는 현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 공공주택 건설 현장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종합공사 40억 원, 전문공사 등 3억 원 이상의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 자재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높였다.

공공건설 품질 및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제도적 문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과도한 품목 지정과 품질 및 만족도 저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632종) 중 57%인 356종이 직접구매 대상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서 발주기관의 자재 선택권이 제한되어 입주자 선호도가 낮은 자재 사용가 사용되고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상위 10대 하자 항목 중 55% 이상이 직접구매 자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달 및 납품 과정의 비효율성

조달 및 납품 과정의 비효율성은 공사 진행 차질과 입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후순위 납품 등)이나 부분 납품으로 인해 레미콘 타설 시 끊어치기가 발생하는 등 공정 및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괄 납품 후 현장 적치 공간 부족 문제, 기 입주 단지의 교체 공사 시 부분 철거·이주·설치 등 복잡한 공정에 맞춘 적시 생산·납품의 어려움 등은 공사 기간 연장과 입주민 불편의 원인이 되었다.

안전 및 하자 관리의 사각지대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안전 및 하도급 관리, 하자 책임의 불명확성 등 관리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다. 계약 주체가 조달청과 자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공사를 관리하는 수요기관(발주처)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물량·가격 담합, 고의 유찰, 직접생산 위반 등 자재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으며, 공사 전체의 하자보증 기간과 직접 구매한 자재의 하자보증 기간이 달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중간 납기를 미준수히야 재계약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조달청은 최종 납기만 고려(중간납기 미준수는 지체상금·입찰참가제한 미해당)

제도혁신소위가 도출한 문제점과 과제 목표의 설정

이러한 배경하에 제도혁신소위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저해하는 현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효율화 및 발주제도 개선' 과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이 과제는 초기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효율화 방안' 등 건설산업 선진화 관련 제안에서 출발했으며, 제1차 제도혁신소위 회의(2023.08.24.)에서 '건설산업 선진화'가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된 후, 제3차 제도혁신소위 회의(2023.10.17.)에서 과제명을 최종 확정되었다.

소위원회가 도출한 주요 문제점은 △과도한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으로 인한 자재 선택 폭 제한 및 입주자 선호도·품질 저하 문제, △조달 지연 및 일괄 납품에 따른 공기 연장, 입주민 불편 초래, △레미콘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의 어려움, △안전 및 하도급 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 △납품업체의 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에 대한 미흡한 제재, △과도한 행정력 소요 및 공사와 물품 간 하자보증기간 불일치 등이다.

본 과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택 품질과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초기 방향 설정 및 협력 계획 수립

제2차 제도혁신소위 회의(2023.09.14.)에서 과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추진을 논의했다.

과제 발표 및 의견 수렴 계획

제3차 소위 회의(2023.10.17.)에서는 과제의 배경,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 발주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SH, GH, iH 등)으로부터 직접구매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것을 논의하였다.

추진 과제 확정 및 구체화

제4차 회의(2024.04.11.)에서 소위원회는 다양한 직접구매 품목 중에서도 안전과 직결된 '레미콘'과 '승강기'를 우선적인 개선 검토 대상으로 특정하여 논의의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관계 부처(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절차를 논의하였다.

최종 점검 및 향후 방향 논의

제14차 회의(2025.03.19.) 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향상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두 가치가 상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정책과제 성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안 제안

조건부 간접구매제도 확대

시공사가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되, 적정 가격과 공정한 입찰을 보장하는 조건부 간접구매 방식을 확대하여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직접구매 상 품목 및 사업 범위 조정

안전과 직결되거나(예: 레미콘, 승강기), 품질·하자 문제가 빈번한 품목, 입주자 선호도가 낮은 품목 등을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재 분양주택에만 적용되는 일부 품목 예외를 임대주택 포함해 모든 공공주택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했다.

조건부 사급 전환 절차 마련

현장 여건(단지 특성, 인도 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직접구매가 비효율적일 경우, 발주기관이 사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상벌제도 실효성 제고

납품 지연 등 계약 미이행 시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공사(시공사→발주처)와 물품(납품업체→발주처) 간 상이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치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개선안 협의 및 반영 사항]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검토의견	LH 검토의견	중기부 고시 변경 반영 (제2024-109호. 2024.12.27.)
1. 간접구매제도 확대 - 시공사가 사급으로 집행하되 중소기업 대상 적정가격 보장을 유도하는 조건부 간접구매제도 확대 및 활성화	• 일부 추진 중 • '25~'27년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과정에서 의견 검토 • 관련 협·단체 의견 수렴 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 '23년 6개 블록 시범지구 지정 • 추가지구 발굴 및 지정품목 추가 등 조건부 간접구매제도 확대 필요 • 누리장터 활용 및 입찰조건 세부조건 마련 필요	부분 반영 - 직접구매 예외 확대 (공공분양주택에 "뉴홈" 명시적 추가)
2. 직접구매 적용대상 사업 범위 조정 - 직접생산 부합여부, 적시 납품 여부, 감독·안전·공정·하자관리 효율 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직접구매 부적정 자재(레미콘, 승강기, 플라스틱 창호, 싱크대 등) 검토	• 레미콘, 승강기, 싱크대 등 품목 유지 • 19개 경쟁제품 범위 조정 - 공공주택 공급 시 입주자 선호도 및 분양성 고려	• 임대주택 예외 필요 - 분양주택 예외품목(19개)은 뉴:홈에서 제외되었으나 임대주택은 의무적용 중 • 임대 차별 논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전체로 확대 필요 • 품질 우려 자재 예외 요청 - '25년 고시품목 축소 및 품질우려 자재(레미콘, 주방가구) 예외 필요	부분 반영 - 19개 품목의 적용 예외 범위 확대 - 레미콘, 싱크대는 유지 - 레미콘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 개정('24.3월)
3. 조건부 사급전환 절차 마련 - 단지별 특성 및 인도조건 미반영 등 현장과 맞지 않을 때 사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구체적 검토의견 없음)	• 현장 여건 불부합 시 사급전환절차 필요 - 단지별 특성, 인도조건 미반영 등 현장 여건 불부합 시 사급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준·절차 추가 마련 필요	미반영
4. 상벌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 중간납기 미준수 시 공정관리 등 공사효율 저하, 제재방안 부재에 따른 재계약 등 행정력 과다소요 문제 해결	• 레미콘 조달지연은 외부요인 - '22~'23년 원자재 파동, 물류업 파업에 기인 • 조달청 '24.3월부터 레미콘 수급안정 위한 규정 개정·시행	• 납기(중간·최종) 미준수 시 즉시 제재방안(계약해지) 필요 - 현재는 납품업체의 품질보장 의무 위반, 계약 미이행 시 사후제재만 가능	부분 반영 - 레미콘·아스콘 수급안정 규정 개정(관급자재 우선납품제, 분할납품기한제 도입)
5.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 공사와 물품의 하자보증(책임)기간 불일치로 책임 불명확 문제 해결	- (구체적 검토의견 없음)	• 공사/물품 하자보증기간 일치 필요 - 최장 7년의 하자보증기간 차이 발생함 - 적절한 하자 보증을 위해 '공사하자책임기간(LH→입주민)'과 '물품하자보수 보증기간(납품업체→LH)' 일치	미반영
6. 안전 관련 품목 우선 개선 - 레미콘, 승강기 등 안전과 관련된 품목 우선 개선	• 승강기 사고원인은 제조업체 과실이 아님 - 주로 이용자·작업자·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 과실 등으로 제조업체 과실은 아니므로 판로지원법 개정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	• 레미콘/승강기 품질 문제 지적 - 레미콘: 후순위 납품, 품질저하, 비용상승, 입찰담합 등 문제 -승객용EV: 하자처리지연, 교체민원 다수 발생	부분 반영 - 레미콘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 개정 - 승강기 직접 구매 유지

건축저작권 활성화

추진 배경

건축저작권의 현황 및 문제점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건축저작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법적 보호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건축저작권 인식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건축계 내부에서조차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발주처에 귀속시키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가의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설계자 변경 시 원저작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으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건축 이미지나 도면이 온라인상에서 무단 복제·배포되고 있으나, 적절한 대응책이 부족하여 건축가들의 지적 재산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건축저작물 관련 판례 – 침해건축물 철거인정 사례]



웨이브온 카페



A카페

출처 : 이하린. (2023, 9월 20일). '부산 카페' 건물 따라지은 '울산 카페'에…"싹 철거하라" 첫 판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833850

사실관계 '웨이브온' 카페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A 카페 건물에 대해 건축사사무소와 카페 운영자가 A 카페 건물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

법원의 판단 : A 카페 건물 철거 청구 인정

- (저작물성) 건축과정을 통해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건축물에 표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실질적 유사성) 웨이브온 건물과 A카페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 (저작권 귀속) 웨이브온 건물의 저작권은 위 건물을 설계한 원고가 보유한다고 판시
- (철거 청구) 'A카페 건물은 창작성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외부 건물의 전체적 조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중략)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라고 하며 철거 청구 인용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9.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과제의 목적 및 방향성 설정

본 과제는 건축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축가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① 건축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②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마련, ③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 ④ NFT 등 신기술 활용 방안 모색, ⑤ 건축저작물의 가치 인정 및 경제적 보상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도혁신소위원회는 초기에 '건축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로 제안된 내용을 제4차 회의(2024.04.11.)에서 '건축저작권 활성화'라는 더 포괄적인 명칭으로 확장하여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건축저작물의 창작, 보호, 유통, 활용 전 과정에서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과제 실현 과정

주요 논의과정 및 내용

전문기관 의견 청취 및 과제 착수

제4차 회의(2024.04.11.)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의 발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 특허와의 차이점과 건축저작권의 보호 범위,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황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초기 제안으로 △(단기) 공공기관 공모 시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발주처에 귀속하는 저작권 귀속 관행 개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식 개선(저작권 문구 추가), 대표적인 침해 사례 수집·정리 △(중장기) NFT(Non_Fungible Tokekn: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명시 방안 검토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과제 시급성 확인 및 실행 방안 구체화

과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저작인격권 등 공론화 및 인식 개선, △해외 사례처럼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시키고 건축주(발주처)는 배타적 사용권(디지털 사용권 포함)을 갖는 방식의 정착 유도, △관련 법령(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 간 관계 정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기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용역 가이드라인' 참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의 실효성 확보 방안(국건위 차원의 공문 발송 등 계도 활동),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저작권 문구 삽입) 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실제

공공 설계공모 사례들을 검토하며 여전히 저작권 귀속 관련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공유했다.

추진 방향 재정립

제13차 제도혁신소위 회의(2025.02.19.)에서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건축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표준계약서 개정, 관계자 교육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독자적인 정책연구와 제안하기보다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노력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원하여 정책의 현장 안착을 돕고 정책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제4차 회의 (2024.04.11)	의견 청취, 과제 선정 및 제안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김소라·이인화·안용한·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
	내용	• (의견 청취)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개념, 보호 범위, 침해 사례, 공모전 귀속 문제, 가상환경 저작권 등 현황 청취 ※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보호 개념이며,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귀속의 원칙은 창작자임. 계약에 의한 저작권 양도는 가능하나 불공정 약관의 문제 소지
		• (과제 선정) 과제 추진 필요성(법적 근거 대비 낮은 인식, 지적재산권 및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발주처에 귀속을 요구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 등) 발표, '건축저작권 활성화' 과제 신규 선정 (담당: 김소라, 유이화 위원)
		• (초기 제안) 단기적으로 ① 공공기관 공모 시 저작권 귀속 관행 개선(불공정 조항 시정 요구), ②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저작권 확인 문구 추가) 추진 제안. 중장기적으로 ③ NFT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명시 및 관리 방안 검토 제안
제6차 회의 (2024.07.11.)	실행 방안 구체화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분과위원장, 김소라·조승구·김규린·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대한건축사협회) 유준호 부회장, 강주석 처장, 정진선 팀장, (한국건축정책학회) 김의중 부회장
	내용	• 세미나/토론회 개최: 저작인격권 등 권리 내용과 중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인식 개선 추진 • 저작권 귀속 방식 개선: 국제 표준처럼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되고 건축주는 배타적 사용권(디지털 포함)만 갖는 방식 정착 노력 • 법령/가이드라인 정비: 관련 법령(저작권법, 지식재산기본법, 국/공유재산법 등) 간 저작권 소유/사용 관계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기존 국가지식재산위 '정부용역 가이드라인' 참고) • 설계공모 운영지침 실효성 확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저작권 원칙적 설계자 귀속)가 실제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국건위 차원의 공문 발송 등 계도/홍보 강화 필요성 논의.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 지적

제10차 회의 (2024.12.02.)	현실 문제 재확인 및 대응방안 논의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손진락·안용한·김규린·강정훈·권경현 위원 등, 기획단
	내용	• 실제 공공 설계공모 사례 발표를 통해 저작권 귀속 관련 불공정 관행 및 문제점 재확인 및 논의 • 논의된 문제 사례 및 개선 필요성을 담은 발표 자료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조치 요구
제13차 회의 (2025.02.19.)	추진 방향 재정립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김규린·권경현·강정훈 위원, 기획단
	내용	국토교통부·문체부에서 관련 정책(표준계약서, 교육 등)을 이미 추진 중임을 확인. 소위원회 역할은 독자적 정책개발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방향 논의
제14차 회의 (2025.03.19.)	과제 제외 결정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현선 분과위원장, 이인화·조승구·안용한·손진락·강정훈 위원, 기획단, (국토교통부)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
	내용	국토부, 문체부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중복을 고려하여 ‘건축저작권 활성화’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에서 제외

제도개선 요구사항	관련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
• 건축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교육 추진 • 저작권 소유·사용 등에 관한 법령 간 관계 정리 • 건축물 활용 상품 판매 저작권료 징수 방안 등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확립, 윤리의식 제고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등 추진 * 설계도 저작권은 '설계자' 귀속,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청구 등 규정 • 건축분야 교육에 저작권 내용 포함,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
공공 설계공모 시 저작권(재산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의 발주처 귀속 관행 개선 촉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저작권 확립 및 윤리의식의 제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및 건축분야 종사자의 권익 보호 추진 * 설계도의 저작권은 '설계자' 귀속,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규정 • 건축사 교육에 건축분야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저작권 관련 내용 추가, 업계·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 *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 반영('24.9), 건축업무 공무원 교육과정에 저작권 관련 내용 추가('25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식에 저작권 확인(합의) 관련 문구 추가 제안	
저작권 관련 법령 간의 관계 정립 및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제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도 및 홍보 강화 제안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업, 다양한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제공 및 '24.9월부터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 반영** ① 건축사 대상 저작권 교육 시행 ('24.6.28. 문체부-저작권위원회-서울시 건축사회) ② 건축사 실무교육(법정교육)에 저작권 강의 포함 ③ 신진 건축가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실시 ④ 건축관련 대학(원) 재학생 저작권 특강 시행 (온라인 교육 제공 병행) ⑤ 건축계 협회·단체 협업하여 저작권교육 및 홍보 추진 문체부 보도자료 ('24.6.27.) **"건축사 대상으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실시"** -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업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제공 - '24년 9월부터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 반영
(중장기)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방안 연구 제안	
건축사 및 공공 발주 담당자 대상 저작권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강화 제안	

정책 현장의 회고

제도혁신소위 정책과제 추진

강정훈 위원



건축설계변경 제도개선 - 현장에 답이 있다.

초창기 건축설계변경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신 조승구 위원님께서 건축 설계변경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로 “대가기준 명확화와 지침 개정”은 건축업계의 8년간의 숙원이어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자격사법등의 입법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해당 규정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른 법체계와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대가기준 지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메모하여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건축설계변경에 대한 대가기준은 한국의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로서 그 역할과 노고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한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통해 건축물에 활력을 넣는 건축종합예술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건축업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작은 대가기준 지침의 개정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얽혀있는 관계 공무원들, 건축가, 건축주, 시공업자등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하고, 이를 합리적인 규정으로 도출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소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 - 미완의 완성을 위하여

건축물 성능관리 및 거래시스템 연계는 건축물의 성능 정보를 부동산 거래 시 투명하게 제공하여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건축물의 성능에 대한 내용은 거래당사자들이 투명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국가정보의 수동적 제공 이외에 현재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없어 사기를 당하거나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거래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중고자동차 시장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법률에서는 제도화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향후 조세문제와 연결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로 연계될 것을 소유자들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보니 현재는 제도시행이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꼭 공시제도를 만들지 않더라고 건축물의 성능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 성능과 관리시스템이 거래시스템과 연계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향후 인수한 건축물이 잘 관리되고 운영된다면 국가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능확인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예상되는 거래비용 상승 및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 때문에 향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건축물 성능관리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미완의 완성을 해야 할 과제라는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건축저작권 활성화 - 어디까지 모방이고 어디까지 창조인가?

건축저작권 문제를 다루면서 고민한 부분은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까지가 창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축저작물이 명시되어 법적 보호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건축저작권의 인식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설계공모에서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발주처에 귀속시키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문제 되고 있어 건축가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고, 향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으로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건축시장 아픈 단면이기도 합니다. 논의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고, 이미 건축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이 관계부처에서 행해지고 있어서 시급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도개선소위에서 정책제안을 하기보다는 정부부처의 현재 진행하는 건축저작권 정책을 지원하고,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건축저작권 활성화 부분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한쪽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창조적 고통 속에 정말 훌륭한 창작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저작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잘 보호해 주고 제도적으로 정비해 준다면 건축가분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도혁신소위 - 아름다운 도전과 미래를 위한 혁신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분과 제도혁신소위 위원으로 함께한 지난 시간은 저에게 있어 깊은 의미와 배움을 안겨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인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통찰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해 주시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은, 향후 유관 제도 개선 논의에서도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협력의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도혁신소위가 단지 건축정책의 제도 체계를 정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국가건축정책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축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축혁신 기획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활동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이곳에서 다룬 과제들이 향후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국가건축정책의 제도 혁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저의 좌우명처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아름다운 도전과 미래를 위한 혁신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소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현장의 회고

제도혁신소위 정책과제 추진

권정현 위원



정책 과제 필요성 : 시대 과제를 짊어진 건축 분야에서 현실적 문제의 해결 필요조건 도출

공간이 지배해온 우리 인류 역사를 고려할 때 우리 시대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의 어려움이라는 시대 과제는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과제인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상징공간 구축 및 지역별 국가도시공원, 녹색과 ICT 방향의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구축했지만, 이를 전국과 지방 곳곳의 모세혈관이 흐르도록 집행하는 실용적 국가건축정책의 실행은 건축기본법상 공공건축가들의 역할이 크고, 이러한 건축가의 공공발주 및 건축 설계 변경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정책 과제는 이에 대한 필요조건 도출에 해당됩니다.

공공발주 및 건축 설계 변경 제도개선 사항 마련

국가건축정책을 실행하는 시작의 위치에 있는 건축가들의 시선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러한 해결이 건축에서 국가건축정책, 건축의 이용자, 국민 편익까지 연결되는 건축, 조경, 도시계획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 중 출발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에 대한 개선이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예규에 따라 가능하다고 정책 분야에서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물가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포섭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발주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각 단계별 제출된 설계도서상의 계획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계획이 발생한 경우 건축사들은 일선 현장에서 그에 대한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은 제대로 된 건축 업무의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축 설계공모에서도 빈번한데,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도 이에 대한 국가건축정책 차원 검토하고, 정부부서에서 반영해 준 기준이 있으면 감사 등의 일선 적극행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실제 일을 해 나가는 건축사들의 업무 여건에도 최소한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 관련 제언

우리 시대는 산업화 시대에서 AI, 로봇의 스마트 시티로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장과 포용의 실용적인 국가건축정책이 요구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종전에 없던 친환경 목조건축과 공원, 경관 조경의 인간 존엄을 위한 녹지 평등에 더해 AI, UAM, 자율주행의 ICT 접목 도시 공간 변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변화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놓여 있고, 그 일선에는 우리 건축가들이 그 시작의 짐과 무게를 견디게 됩니다. 종전에 없던 새로운 기준과 정책,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비전과 정책의 중심도 녹지 민주주의, 국가상징건축, 국가도시공원의 국가 중심에서 지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논의에 대한 장의 역할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건을 마련해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건축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및 가시를 뽑아 민생 해결의 접점에서 국가건축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향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PART

6

정책공감과 확산 노력

제7기 위원회 정책 발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비전 공유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위촉식 2023.04.14.

2023년 4월 14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재보험빌딩에서 제7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며 민간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민간전문가 위촉을 축하하고, 국가건축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일자/장소	2023.04.14.(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전문가 15명, 기획단
내용	제7기 위원회 정책아젠다, 운영 방안 및 민간위원 분과배정 등 논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에 근거한 민간전문가단 위촉

1부 행사에서는 기획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영걸 신임 위원장과 민간자문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과 각 위원별 인사가 이루어졌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큰 기대를 표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민간전문가) 위촉식]

권영걸 위원장은 “나라를 공원같이, 도시를 정원같이”라는 제7기 위원회의 슬로건을 소개하며,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선제적인 국가 건축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지 민주주의’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위원회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

2부 토론회에서는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회가 다뤄야 할 건축정책 의제와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제7기 위원회의 비전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활발히 공유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방문 2023.06.20.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과제인 '국가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선도사례와 21세기형 첨단 정원도시 및 한국형 생태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일자/장소	2023.06.20.(화) 09:00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규린·김종헌·김현선·박성신·안용한·이인화·정진국·한광야 위원, 기획단
내용	제7기 위원회의 정책비전('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 관련 정책 발굴 및 구체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명과 기획단 등 총 20명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하여 현장을 돌아보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해설사로 나서 장미정원과 도심 내 코스를 안내하였으며, 민간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건위 정책과제와 연계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였다.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황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원회는 박람회 조성 당시의 열악했던 환경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청취한 후, 총감독의 인솔 하에 본격적으로 박람회장을 관람하였다.



[국가도시공원 선진사례 답사를 위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방문]

정책조정분과 워크숍 및 정책현장 방문 2024.05.09.-05.10.

2024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스마트시티 정책현장 방문과 분과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일정에는 김현선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과 기획단 8명,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제도개선 과제 논의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및 벡스코에 대한 견학이 이뤄졌다.

일자/장소	2024.05.09.(목)~ 05.10.(금) / 부산광역시(현장방문, 분과회의)
참석자	김현선 분과위원장, 조승구·이인화·안용한·김규린·김소라·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내용	제도혁신소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논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및 벡스코 견학·현장방문

현장방문에서는 벡스코의 시설과 전시 현황을 살펴보고,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서의 모듈러하우스(공유오피스), 3D 프린팅 건축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본 후,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수질개선(3급수→1급수), 철새도래지를 보존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 지하수위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를 수공의 기술력으로 극복한 사례 등이 주목되었다. 세대 내부 견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각종 스마트기기 등이 실생활에 적용된 현장을 확인하고,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제도개선, 예산 및 행정지원 확대와 관련한 현장 의견도 청취하였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및 벡스코 현장방문]

제1차 전국 지자체 총괄 건축가 콜로키움 2024.04.30.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 개최로 '전국 지자체 총괄 건축가 콜로키움'이 열렸다.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6년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총괄 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일시/장소	2024.04.30.(화) 14:00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국건위 민간위원, 국토부 건축정책관, 지자체 총괄건축가 등 약 100여명
주최/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주제 1	민간전문가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
	민간전문가 제도와 발전방안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조준배 영주시 총괄건축가, 이석현 의정부시 총괄건축가)
주제 2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
	지역 현안과 공공건축의 역할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차주영 안성시 총괄계획가, 박종기 보령시 총괄건축가,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
자유토론	(좌장)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제1차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현장]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업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추진하면서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해 총 43개 지자체에 38억 원을 지원해왔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관련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24년 4월 기준 70여 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중이며,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 기초지자체 35명)과 1,400여 명의 분야별 공공 건축가들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협업하며 수준 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해왔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번 콜로키움의 개회사를 통해 제7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지역의 공공건축과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기반의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 행사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것을 기대하며, 본 행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국가건축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차 전국 지자체 총괄 건축가 콜로키움 권영걸 위원장 개회사]

1부.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

1부에서는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발표 이후 광역지자체-서울시, 기초지자체-영주시, 의정부시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건축공간연구원 백선경 부연구위원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념을 설명하며, 제도의 발전을 위해 자격기준 확대 및 지자체의 자율적인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의 운영·지원조직인 '미래공간기획관' 제도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방안과 관련한 조례 제정과 '창의혁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도시 공간정책의 핵심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석현 의정부시 총괄건축가는 의정부시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참여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걷고싶은 도시만들기과'라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 공간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전문가가 도시 · 건축 사업 전반에 걸쳐 기획, 설계, 조정 등의 자문을 수행하면서 도시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영주시 사례를 발표한 조준배 영주시 총괄건축가는 민간전문가 참여 이후 공공건축을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상설계공모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민간전문가 제도와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으며, 통합 마스터플랜 실행과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생활SOC 재배치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 발제 (상-좌측부터 시계방향, 백선경 AURI 부연구위원,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이석현 의정부시 총괄건축가, 조준배 영주시 총괄건축가)]

2부.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

2부에서는 지역 현안과 공공건축의 역할에 대해 광역지자체-부산시, 기초지자체-안성시, 보령시, 파주시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1부에 이어 민간전문가 제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주영 안성시 총괄계획가는 '지역 현안과 공공건축의 역할'을 주제로 2023년 9월 수립한 공간환경전략계획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고삼호수 화장실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 사업을 기획·설계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과제, 네트워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는 2023년 9월 발표된「2030 부산 도시 · 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통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한 성과를 설명하였다. 박종기 보령시 총괄건축가는 2023년 건축기본조례 제정(5월), 공공건축가 및 청년건축가 위촉(8월), 2024년 총괄건축가 위촉(2월) 등의 제도 기반 정비 이후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청소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등 다양한 공공건축 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공간환경 계획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임을 언급하였다.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는 공간전략계획 수립과 함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설계공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이후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이끈 성과를 소개하였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건축문화제를 운영하고, 공무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강연을 통해 공공건축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소 지자체일수록 공공건축이 도시공간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 발제 (상-좌측부터 시계방향, 차주영 안성시 총괄계획가,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 박종기 보령시 총괄건축가)]

주제발표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종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자유토론 시간에선 지역 현안 및 공공건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공공건축의 초기 기획과 공모 추진에 있어 예산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가 차원의 예산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논의되었고, 아울러 지자체별 성과를 공유하면서 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장과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총괄건축가의 위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자체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김종헌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건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 종합토론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김종헌 좌장 등
(하) 전국 지자체 총괄 건축가 콜로키움 참석자 단체 사진]

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30일 총괄건축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발전방향 논의

보도시점 : 2024.04.29.(월) 06:00 이후(04.29.(월) 석간) / 배포 : 2024.04.26.(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 '24.4월 현재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 기초지자체 35명)과 분야별 공공건축가들(1,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먼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주제발표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한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1부)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2부)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발표자) 강병근(서울, 건국대 명예교수), 조준배(영주, 유진도시건축연구소), 이석현(의정부, 중앙대 교수), 나건(부산, 홍익대 교수), 차주영(안성, 공간환경컨설팅 지음), 박종기(보령, 순천향대 교수), 이기옥(파주, 필립종합건축사사무소), 백선경(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유토론 좌장) 김종헌(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배재대 교수)

•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건축과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행사를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개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제시된 의견들이 국가건축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석간 내일신문
2024년 04월 29일 (월)
산업/무역 15면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국가건축정책위·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8년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기초지자체 35명), 분야별 공공건축가 1400여명이 활동 중이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등 9명의 총괄 건축가와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을 벌인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 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이 국가 건축정책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연합뉴스
2024년 04월 29일 06:00 (월)
경제

국가건축정책위.국토부,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이번 토론회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기초지자체 35명), 분야별 공공건축가 1천400여명이 활동 중이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등 9명의 총괄 건축가와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을 벌인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 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이 국가 건축정책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NEWSIS
2024년 04월 29일 06:00 (월)
경제

국건위 공동…민간전문가 제도 성과 진단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민간 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는 46명, 분야별 공공건축가는 1400여 명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한다.

권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본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은 국가건축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2024년 04월 29일 06:00 (월)
부동산

미래 공공건축 방향 모색...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발표는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1부)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2부)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2024.11.28.

2024년 11월 28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로 제2차 전국 지자체·총괄 공공건축가 콜로키움이 열렸다. 폭설과 강풍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25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1차에서 다뤄졌던 공공건축 제도의 성과 중심에서 더 나아가 제도의 개선점과 대안 등 공공건축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시/장소	2024.11.28.(목) 14:00 / 메종 글래드 제주
참석자	국건위, 국토부, 지자체 총괄 · 공공건축가 등 250여 명
주최/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세션 1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주제 1	공공건축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
발표	(발표)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김규린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토론자) 김용미 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광환 해안건축사사무소 소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교수, 유재득 일로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주제 2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	(발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신창훈 전(前)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
토론	(좌장) 김현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수원시 총괄계획가 (토론자)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 최삼영 경남 진주시 총괄건축가, 한영근 서울 은평구 총괄건축가
세션 2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
발표	제7기 국건위 주요연구결과 발표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국가도시공원 지정기준 및 유형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
토크콘서트	(토크진행자)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지자체 협력을 통한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적 확대 성과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확대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지자체의 25%만 운영 중이며, 역할과 위상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특히 노후 공공건축물이 증가하고, 신축 과정의 속도 역시 빨라지는 현 상황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래 건축정책은 지속가능성과 스마트기술 융합을 고려해야 하며, 건축은 인간의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공공건축의 더 나은 미래 설계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전국 지자체·총괄 공공건축가 콜로키움 권영걸 위원장 환영사]

Session 1.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승연 교수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물에 설계공모 방식을 의무화고 있지만, 동일한 심사위원의 반복적인 공모심사 참여와 심사의 공정성 부족 등 심사 과정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설계공모 이후 당선작을 과도하게 변경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해외 설계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모 운영으로 인해 국내 건축사 참여 기회의 제약과 경쟁력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심사위원 구성 시 충분한 실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과 기술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심사위원 Sub-Pool을 구성하도록 하며, 심사 전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명확한 평가 기준과 함께 국내외 건축사사무소 간 상생이 가능한 공모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규린 위원이 좌장으로, 금성건축사사무소 김용미 대표, 해안건축사사무소 이광한 소장, 전남대학교 오세규 교수, 일로건축사사무소 유재득 대표, 중앙대학교 윤승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용미 대표는 참여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고, 이광한 소장은 기획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설계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유재득 대표는 불법적 심사위원 접촉을 제한하면서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 자문까지 맡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제안했다. 한편 윤승현 교수는 설계공모 제도가 공정성에만 치우칠 경우 건축의 본질을 놓칠 수 있음을 우려했고, 오세규 교수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는 설계공모 제도 운영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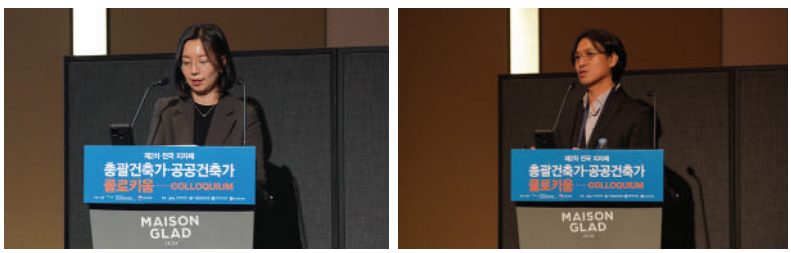


[제2차 전국 지자체·총괄 공공건축가 콜로키움 주제발표1 (상-좌)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 및 토론1 (상-우) 김규린 좌장, (하) 추승연 교수, 김용미 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광환 해안건축사사무소 소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교수, 유재득 일로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건축공간연구원 백선경 부연구위원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2024년 기준 공공건축가 수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321명에 달하지만, 자격 기준, 총괄-공공건축가 간의 역할 관계 정립, 보수체계 개선과 담당 부서의 역할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단순 자문가가 아닌,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업 주체로 정의하면서, 네덜란드의 Q-TEAM 사례와 같은 한국형 운영모델의 필요성과 자격

기준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창훈 전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는 수성구의 공간환경 전략계획 추진 사례를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다. 수성구는 녹지지역이 많고 개발 가능 면적이 적은 특성을 반영해 생활권별 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및 생태 기반의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생각을 담는 공간'을 개념으로 노후 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하여 예술창작촌 등을 조성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산책로와 치유 공간인 '생각을 담는 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예술가와의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결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등 성과를 도출했음을 설명했다.



[제2차 전국 지자체·총괄 공공건축가 콜로키움 주제발표2
(좌)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우) 신창훈 전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김현선 위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수원시 총괄계획가)이 좌장을 맡고, 파주시 이기옥, 인천광역시 이상림, 진주시 최삼영, 서울 은평구 한영근 총괄건축가가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총괄건축가 제도의 방향과 과제, 지자체별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의 이상림 총괄건축가는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신속한 시스템 정비와 내실 있는 협업 체계 운영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주시 최삼영 총괄건축가는 공공시설 추진 사업단을 구성해 행정과 건축가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삼영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부서 간 소통,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직적 조직문화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주제토론2 (좌) 김현선 좌장, (우)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
최삼영 경남 진주시 총괄건축가, 한영근 서울 은평구 총괄건축가]

Session 2.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

두 번째 세션은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 이주나 교수, 성균관대학교 최혜영 교수, 서울시립대 이선영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주나 교수는 도시에서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와 다수의 해외 고층 목조건축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도 공공건축의 45%를 감당할 수 있는 목재 생산력을 기반으로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시공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최혜영 교수는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원지정 면적 기준의 현실화와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조건이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도시공원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유형별 면적 기준 차등 적용과 국가 주도 조성, 국가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선영 교수는 지역사회 허브이자 미래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미래학교의 방향을 제안했다. 학교 공간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며, 자율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습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공간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돌봄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인구 변화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들이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김종헌 위원은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도시와 건축이 사회문제 해결 수단이 되어야 함을, 유이화 위원은 목조건축의 환경적 측면과 건설산업 측면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목조건축의 대중화와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경진 위원은 국가도시공원의 공공 프로젝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으며, 김소라 위원은 학교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션2 발제 (이주나 서울시립대 교수,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및 토론 (김종헌 위원(좌장))]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은 권영걸 국건위 위원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되었다.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현안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콜로키움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검토하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차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콜로키움 – 권영걸 폐회사 및 참석자 단체]

“공공건축의 혁신을 논하다 -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민간전문가 제도 발전방안 논의…공공건축 네트워크 형성

보도시점 : 2024.11.26.(화) 11:00 이후(11.27.(수) 조간) / 배포 : 2024.11.26.(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공공건축의 품격과 창의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 11월 2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Colloquium)*에서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발전방안과 미래 국가건축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미래를 설계할 예정이다.

* 발표자가 발표를 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 방식

** 「건축기본법」제23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건축, 도시 행정에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접목시키고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며 공공 디자인 향상을 위해 도입

■ 행사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두 개의 세션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건축 전문가 5인(김용미 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설계공모제도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 다음으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창훈 전(前)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가 두 번째 주제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지자체 총괄건축가 4인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주제로

-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에 대해 담당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가건축 정책의 지자체 적용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과 오늘, 두 차례의 콜로키움(Colloquium)을 통해 ‘전국적 건축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 “향후 민간전문가제도와 설계공모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더욱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고양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콜로키움(Colloquium)을 통해 공공건축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간전문가 제도와 설계공모제도는 공공건축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공공건축의 품격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두 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건축이 대한민국 건축문화진흥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년 11월 26일 11:00 (화)

뉴시스

종합

국토부.국가건축정책위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민간전문가 제도 발전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오는 28일 제주에서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Colloquium)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발전방안과 미래 국가건축 정책방향을 논의해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미래를 설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해,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건축 전문가 5인(김용미 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설계공모제도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간전문가 제도와 설계공모제도는 공공건축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공공건축의 품격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두 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건축이 대한민국 건축문화진흥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도 "향후 민간전문가제도와 설계공모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더욱 확산해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고양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콜로키움(Colloquium)을 통해 공공건축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11월 26일 11:00 (화)

뉴스핌

부동산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민간전문가 제도 발전방안 머리 맞댄다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오는 28일 개최…공공건축 네트워크 형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의 품격과 창의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을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발전방안과 미래 국가건축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미래를 설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창훈 전(前)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가 두 번째 주제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주제로▲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에 대해 담당 연구자들이 발표한다.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가건축 정책의 지자체 적용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간전문가 제도와 설계공모제도는 공공건축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공공건축의 품격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두 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건축이 대한민국 건축문화진흥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26일 11:00 (화)

뉴스1

경제

공공건축 혁신위해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모인다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민간전문가 제도 발전방안 논의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공건축의 품격과 창의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민간전문가 제도의 발전 방안과 미래 국가건축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미래를 설계한다.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건축 전문가 5인이 설계공모제도 평가기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신창훈 전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가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지자체 총괄건축가 4인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 등에 대해 담당 연구자들이 발표한다.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가건축 정책의 지자체 적용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간전문가 제도와 설계공모제도는 공공건축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공공건축의 품격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건축이 대한민국 건축문화진흥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신현우 기자 (hwshin@news1.kr)

2024년 11월 27일 (수)

대한경제

인물 22면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제주에서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Colloquium)'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발전방안과 미래 국가건축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행사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두 개의 세션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추승연 경북대 교수가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건축 전문가 5인(김용미 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설계공모제도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창훈 전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는 두 번째 주제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지자체 총괄건축가 4인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재현 기자 jh@

관련 학·협회장 면담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면담 2024.06.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사 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권영걸 위원장은 김재록 회장과의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의 현실화 문제와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의 전면적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양 기관은 현재 건축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 수준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가 체계 확립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현재 자격시험 제도가 현장 실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증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두 기관은 이러한 개선 과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건축사 업계의 전반적인 발전과 국가건축정책의 효율적의 추진을 합의하였다.

일자/장소	2024.06.10.(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내용	건축사 업계 주요 현안 논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논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면담]
출처 : 장영호. (2024.06.10.)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과 건축사 업계 현안 논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0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면담 2024.08.01.

권영걸 위원장은 건축분야 성평등 실현과 여성건축가 관련 협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회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건축가 지원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여성건축가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한 여성 건축인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확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자/장소	2024.08.01.(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인화 위원 신경선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서영주 수석부회장, 장미경 대외협력부회장, 김현주 연구부회장
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님과의 미팅을 통해 협회 발전방향성 자문 및 2025 여성건축가 기획전 홍보





[권영걸 위원장–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경선 회장 면담]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자료

한국건축가협회장 면담 2024.11.26.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문화, 유산, 이어가다'를 주제로 한 건축문화제의 성공적 개최 방안과 함께 K-건축의 세계화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건축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진하고 건축자산을 문화적 지평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양 기관은 국제건축가연맹(UIA) 및 유네스코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한국 건축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건축의 세계화와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일자/장소	2024.11.26.(화) / 수원컨벤션센터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
내용	건축문화계 현안 논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논의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면담]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자료

관련 학·협회 협력 및 교류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특별강연 2024.04.26.

대한건축학회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국가도시건축정책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선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녹지 민주주의를 통한 국가 공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용산국가공원 조성,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 대중화, ICT 융합 스마트한옥 개발, 지방소멸 대응 압축도시 모델 등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학계와 정책당국 간 소통을 통해 국가 건축정책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무진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일자/장소	2024.04.26.(화)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
내용	국가도시 건축정책의 비전 특별강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행사 참석 2024.10.08.

권영걸 위원장은 제20회 대한민국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면서, 전국 건축인들과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기념하고 건축인의 화합을 도모하며, 건축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권영걸 위원장은 "급속한 기술 발전이 국민의 삶의 공간에서 실질적인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건축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역설(力說)하였다.

또한 권영걸 위원장은 이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 수여식을 직접 진행하여 건축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일자/장소	2024.10.08.(화)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 경복궁
참석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김소희 대한건축학회 건축의날위원회 위원장, 차성민 한국건축가협회부회장, 안충환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외 300여 명
내용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 등 기념행사 추진
정부포상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 (훈장, 포창, 대통령·총리·장관 표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 포함)









[권영걸 위원장 건축의날 기념행사 축사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막식 기조강연 2024.11.26.

2024년 11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경기·수원 건축기획전' 개막식에서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했다. 이번 기조강연은 앞선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와의 면담과 협력에 따른 것으로, '문화, 유산, 이어가다'라는 행사 주제에 맞춰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권영걸 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수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며, 건축자산의 살아있는 가치와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발전방안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면서, 한국 건축문화의 국제적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조명하였다.

행사명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경기·수원 건축기획전
일자/장소	2024.11.26.(화) / 수원컨벤션센터
주최·주관	(주최) (사)한국건축가협회 (주관) (사)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수원컨벤션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수원특례시
주제	문화, 유산, 이어가다(부제: STILL but MOVE)
참석자	기조강연_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 Hustavo Ocampo(우루과이 건축가), Francis Sossah(코트디부아르 건축가), 김도년(스마트도시건축학회장)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막식 테이프커팅식(상) 및 기념촬영(하)]

출처 : (상) 수원시청·iTV NEWS. (2024, 11월 27일). 202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경기수원 건축기획전 개막 [비디오]. 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aIlVLPLbsNs, (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중앙부처 정책현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 간담회 2023.09.11.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연계한 면담을 진행했다. 세 기관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상징공간 사업 추진과 공동 계획수립 및 홍보·비전발표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과 정기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건위의 국가상징공간 비전 제시, 서울시의 도시계획 추진, 국토부 국가상징공간의 방향과 연계한 국토도시 미래비전 수립 역할을 분담하였다.

일자/장소	2023.09.11.(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1층 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내용	캠프 레드클라우드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 최종 자문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2024.10.08.

권영걸 위원장은 제20회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건축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건축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였다.

일자/장소	2024.10.18.(목)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용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





[(좌) 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국건위원장 면담, (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디자인코리아 2024 참석 2024.11.13.

권영걸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디자인코리아 2024' 개막식에 참석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이철규 국회의원,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한 디자인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관계자디자인 분야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AI는 우리 일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주제 하에 미래 건축디자인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가운데), 권영걸 위원장 등 주요 내외빈 전시장 관람 사진]

출처 : (상) 디자인코리아 2024 머플러 퍼포먼스. (2024, 11월 13일). 전자신문 etnews. https://www.etnews.com/20241113000213, (하) 디자인코리아 2024. (2024, 11월 13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41113163200013,

지자체장 정책현안 논의

아산시장 면담 2023.12.31.

박경귀 아산시장이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국립경찰병원 분원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박경귀 시장은 해당 의료기관이 시민의 생명권 보장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절차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아산시의 도시개발 현황과 도시개발 사무 관련 특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관 간의 정례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현안을 청취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국건위의 지원·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자/장소	2023.12.31.(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박경귀 아산시장
내용	지역 공공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 특례 지원 및 협력 논의

원주시장 면담 2024.04.04.

원강수 원주시장이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물의 중요성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목조건축물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영걸 위원장과 유이화 위원이 원주시 총괄계획가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어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이번 면담도 이러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원주시는 목조건축 선도도시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와 위원회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자/장소	2024.04.04.(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원강수 원주시장
내용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물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면담 2024.11.18.

권영걸 위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제2차 전국 지자체·총괄 공공건축가 콜로키움 성과를 평가하고 제주 지역 공공건축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과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건축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했으며, 제주도의 특색 있는 공공건축 정책 추진을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일자/장소	2024.11.18.(목) / 제주 메종 글래드 제주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내용	제주 지역 공공건축 발전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 및 설계공모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면담, (중) 박경귀 아산시장 면담, (하)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면담]

출처 : (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중) 이산학. (2023, 12월 20일). 박경귀 아산시장,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주요 현안 협조 요청.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0010012093,
(하) 최영우. (2024, 4월 4일). 원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뉴스로. https://www.newsro.kr/article243/430168/

세종시장 면담 2024.08.16./09.02./10.22./2025.04.11.

권영걸 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방안과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이후 국립세종수목원 등 박람회 예정지를 방문하여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종의 초기 계획부터 미래의 세종시까지'에 관해 담화를 하기도 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2024.08.16.(금)	국건위원장실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논의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최민호 세종시장
2024.09.02.(월)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시청 등 세종일대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현장 방문	
2024.10.22.(화)	국건위원장실	면담	
2025.04.11.(금)	세종시청	행정수도 세종 관련 논의	



[(상) 세종시 방문 및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현장 참석(2024.9.2.), (중) 세종시장 접견 사진(2024.10.22.), (하) 세종시장 접견 사진(2025.4.11.)]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의정부시장 면담 및 자문위원회 참석 2024.12.24.

권영걸 위원장은 의정부시와 함께 미국 반환공여지인 캠프레드클라우드(CRC)의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최종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권영걸 위원장은 캠프레드클라우드가 한국 안보와 관련한 미군 핵심전력의 전략기지로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고 의정부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의정부를 세계적인 디자인 혁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조성방안을 자문하였다.

일자/장소	2024.12.24.(화) / 의정부시청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내용	캠프 레드클라우드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 최종 자문위원회



[의정부시장 면담]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자문위원회 발제 내용>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전진기지 국가디자인클러스터
- 의정부CRC의 재탄생 -

○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창의력 기반의 디자인·콘텐츠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 21조원, 전문인력 35만 명의 디자인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벤치마킹: 밀라노 모델
- 20세기 세계 최고의 디자인클러스터인 밀라노는 지리적 이점, 전시컨벤션 인프라, 디자이너 집적, 혁신적 교육기관 등의 성공요소를 통해 이탈리아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이탈리아가 2차 대전 후 유럽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바로 디자인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의정부 CRC 선정 이유
- 미군 2사단이 주둔했던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는 서울 인접, 인천공항 40분 거리의 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25만 평 규모의 부지에 230여 동의 건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부지매입 절차 없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공간조성이 가능하다.

○ 비전과 기대효과
- 국가디자인클러스터는 디자인 교육, 연구개발, MICE 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연간 3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한미 군사동맹을 문화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한국과 미국의 디자인 전문인력 및 기업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한미 디자인동맹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 프로젝트는 과거 포항제철이 중화학공업 발전을 이끌었듯이, 21세기 창의산업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024.08.01.-10.31.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건축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후원해오고 있다. 이 공모전은 전 국민이 자유롭게 건축과 공간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미래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 함께 상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의 일종이다.

공모기간	2024.08.01.(목) ~ 2024.10.31.(목)
공모주제	건축과 도시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
공모자격 및 분야	(일반부문) 전 국민 누구나 ※ 1인·1팀 다작 출품 가능, 자격제한 없음(국내 거주 내·외국인) (특별부문) 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4~6학년) ※ 1인 1작품만 출품 가능

2024년 개최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어린이 특별 부문'이 새롭게 신설되어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공간과 미래도시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 초등학생의 손그림이 특별 부문 대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공모전은 건축이 단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 세대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꿈꿔야 할 주제임을 상기시키고 국민의 시각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정책과제 추진 성과 확산

[1분과] 국가상징공간의 비전과 가치 공유

국립서울현충원 방문, 국가보훈부 장관 면담 2024.10.24.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 국가보훈부 장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충원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충원의 공간 구성과 상징성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새로운 국가상징공간 방향성을 모색하며, 국건위와 국가보훈부와의 협력을 통해 부처 간 통합적 접근 방안을 합의하였다.







[(상)국립서울현충원 내 귀빈실에서 환담 중인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왼쪽)과 국건위 권영걸 위원장
(하) 현충원 묘역 순례 및 충혼당과 애국지사 위패를 참배하는 권영걸 위원장]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자료

국가상징공간 업무협약 체결 2023.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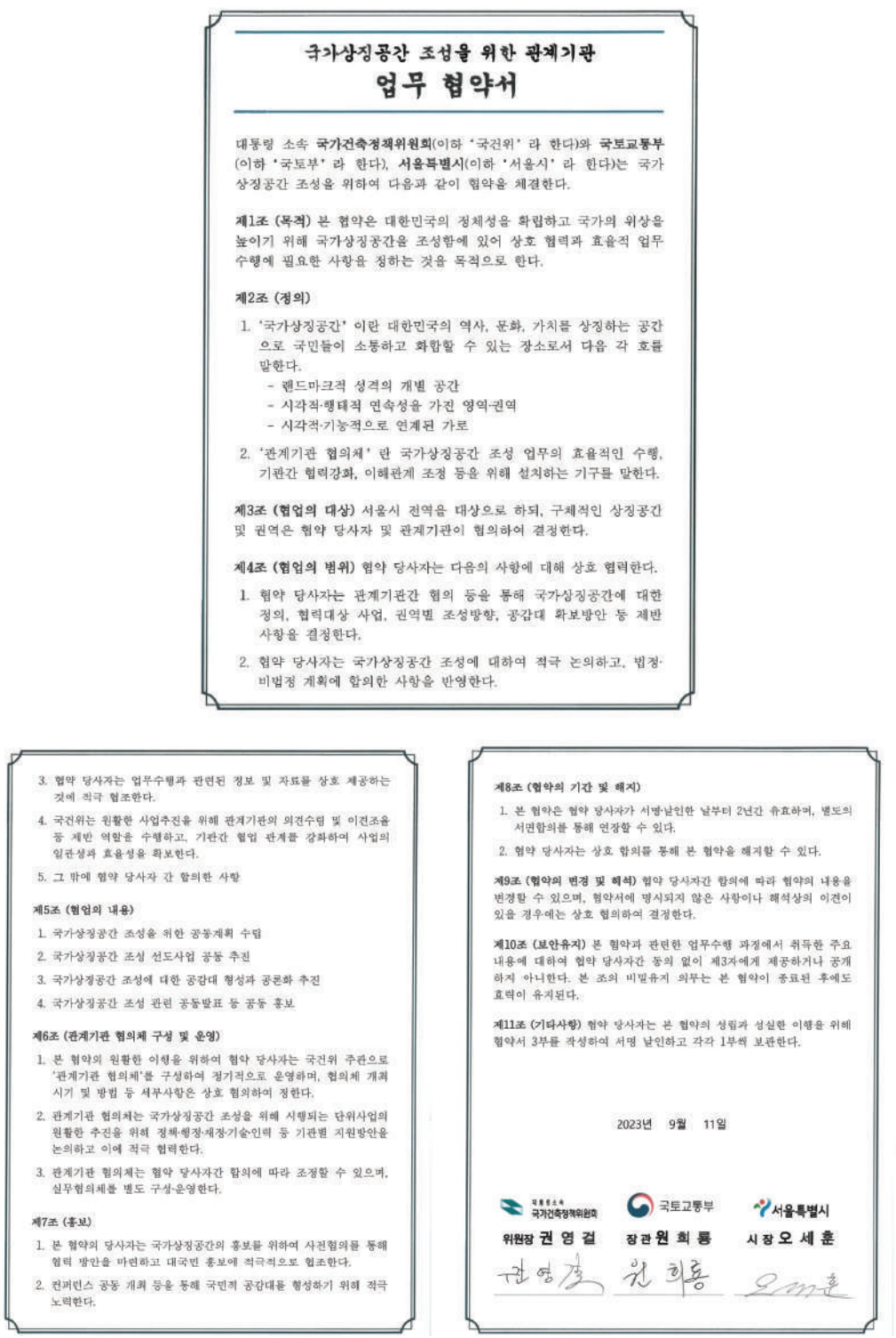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국가상징공간' 건축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자/장소	2023.09.11.(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1층 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외
내용	국가상징공간 및 협의체 운영(안) 발표 및 업무 협약식 체결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 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위원회가 건축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부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의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처 간 연계와 조율을 통해 건축정책이 국가적 상징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되도록 조율했다. 본 협업은 위원회가 범부처 협업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 국가 건축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협약식 체결 현장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중)-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좌)-오세훈 서울시장(우))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자료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라 한다)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상호 협력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국가상징공간' 이란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국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랜드마크적 성격의 개별 공간
   - 시각적·행태적 연속성을 가진 영역·권역
   - 시각적·기능적으로 연계된 가로
2. '관계기관 협의체' 란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기관간 협력강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협업의 대상)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상징공간 및 권역은 협약 당사자 및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협업의 범위)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협약 당사자는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정의, 협력대상 사업, 권역별 조성방향, 공감대 확보방안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협약 당사자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하여 적극 논의하고, 법정·비법정 계획에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다.
3. 협약 당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상호 제공하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4. 국건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이견조율 등 제반 역할을 수행하고, 기관간 협업 관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5.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

제5조 (협업의 내용)

1.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공동계획 수립
2. 국가상징공간 조성 선도사업 공동 추진
3.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추진
4.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공동발표 등 공동 홍보

제6조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국건위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협의체 개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관계기관 협의체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행정·재정·기술·인력 등 기관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적극 협력한다.
3. 관계기관 협의체는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를 별도 구성·운영한다.

제7조 (홍보)

1. 본 협약의 당사자는 국가상징공간의 홍보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8조 (협약의 기간 및 해지)

1.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2. 협약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및 해석)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보안유지)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제11조 (기타사항)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성립과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9월 1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위원장 권 영 걸	장관 원 희 룡	시장 오 세 훈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서]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조성

9월 11일 국건위·국토부·서울시 업무협약… 국격 고양·국민적 자부심 고취

보도시점 : 2023.09.11.(월) 17:30 이후(09.12.(화) 조간) / 배포 : 2023.09.11.(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가상징공간: 도시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새로운 시대가치(폐쇄→개방·소통·생태·인간중심 등)를 담아내는 장소이자, 미래도시비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시민 소통공간을 의미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 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공동홍보 및 비전발표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협약당사자 외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요현안 논의

■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 역사 · 문화자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전체 서울시민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앞으로 국건위는 기획연구와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건축·도시적 관점(H/W)과 문화적 가치(S/W)를 접목한 통합적인 공간구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권영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국건위가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격을 높이는 국가상징공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가 SOC인프라의 주무 부처로서 국가상징공간의 방향과 연계한 국토도시의 미래비전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민들과 국내 · 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2023년 09월 12일 (화)
사회 25면

광화문~한강 7㎞ 구간 '국가상징거리'로 만든다

서울시, 정부와 MOU체결
청와대·용산공원·동작 현충원 등 녹지·보행자 휴식공간으로 조성
서울역 개선사업도 탄력 받을 듯
'서울로7017'은 철거 가능성 높아

서울 광화문~용산 한강을 잇는 7㎞ 구간이 공원과 녹지가 가득한 국가상징도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정부와 협력해 종로구 청와대, 용산구 서울역과 용산공원, 동작구 현충원 등 주요 장소를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11일 국토교통부,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과 서울 시내 유명한 장소를 국가상징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상징공간은 한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장소다. 이번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은 차량 중심의 세종로를 사람 중심의 '광화문광장'으로 새로 단장한 것과 비슷한 개념의 사업이다.

서울역, 청와대, 용산공원, 그리고 현충원 등이 유력한 사업 대상지로 거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3구역을 방문한 뒤 서울에도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처럼 서울 도심에도 녹지와 보행자 휴식공간이 많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역 개선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4월 서울연구원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사전 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역 개선 사업을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오는 10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역 철로 지하화와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 등 서울역 주변 개발에 대한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시는 서울역 인근 버스환승센터를 서울역 뒤편(서부역)으로 옮기고, 해당 위치까지 서울역 광장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역 인근 고가도로 공원인 '서울로7017'은 개보수되거나 철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로 7017은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약 60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나 해마다 방문객 수가 줄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해련 기자

머니투데이

2023년 09월 12일 (화)
종합 05면

서울 곳곳에 '국가상징공간' 만든다… 연내 선도사업 선정

국건위·국토부·서울시 협약… 내년초 조성비전 공개 목표
청와대·서울역·태릉 등 활용 구상… 3개 기관 협의체 가동
원희룡 "향후 전국으로 확대, 서울은 출발점이자 모범사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청와대와 서울역 등 서울 주요 명소에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연말까지 선도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국민에게 국가상징공간 조성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3개 기관은 11일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MOU(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상징공간은 서울시에게 산재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 국가 정체성을 표출하고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장소다. 청와대처럼 기존 폐쇄된 공간을 개방해 '소통' '권력' '인간 중심' 등의 테마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용산 대통령실 입대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내셔널몰'처럼 탈바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영걸 위원장은 "서울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이 광복과 강남을 연결하는 중심선에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국가상징공간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간조직을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상징공간은 시민에게 열린 개방적 공간이자 국격을 담아내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미래역산을 책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예컨대 정부는 청와대와 서울역을 중심으로 녹림문, 현충원, 태릉-강릉, 올림픽공원, 김포공항, 한양도성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성균 광화문광장도 국가상징거리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추진한 사업"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새겨진 서울의 주요 공간 곳곳을 단장해 국가상징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표협의체를 연 2회 개최하고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월 1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기본 구상방향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와 홍보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선도사업은 서울 전역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장소에 추진 중인 개별 사업 중 하드웨어적 솜무선과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를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부처 사업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 등은 이날 MOU 체결을 시작으로 다음주 중 정책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내이밍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연말까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월 3개 기관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해 내년 초에는 조성비전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원 장관은 "국가상징공간이 1차로는 대한민국 수도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응축한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범벅지(3개 "이는 일으로 전국으로 연결되고 확대될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성공한 출발점이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이경록 기자 lucky1004@

대한경제

2023년 09월 12일 (화)
건설 10면

서울 대표 역사·문화자원 '국가상징공간' 조성 팔걷어

市·국토부·국가건축정책委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체결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선도사업 선정과는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3개 기관은 11일 국건위 회의실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상징공간은 도시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미래도시비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역사·문화·시민 소통공간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공동 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공동홍보, 비전발표도 협력할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업 기자 starleaf@

서울신문

2023년 09월 12일 (화)
전국 12면



서울시·국토부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협약

청와대와 서울역, 현충원 등이 '국가상징공간'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양도성·용산공원 대통·독립문·올림픽공원도 검토

서울시는 11일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가상징공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3개 기관이 서울 전역의 대표적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며 향후 공동 계획 수립, 선도사업 추진, 공동홍보 및 비전발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상징공간이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로 관리해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내셔널 몰이나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국민들이 국가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대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세 기관은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국가상징공간 지정은 향후 이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청와대·서울역·현충원·한양도성·용산공원·태릉·경릉·독립문·올림픽공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로 7017' 활용 방안도 논의

세 기관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도시 및 건축적인 관점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략한 통합적인 공간구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광화문과 숭례문, 서울역과 한강을 잇는 약 7㎞를 국가상징가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조성된 '서울로 7017'의 향후 활용 방안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이와 관련해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사전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에서는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를 서울역 뒤편으로 이전하고 해당 공간을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국가상징공간에서 서울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YTN

2023년 09월 11일 17:56 (월)
사회

[서울] 서울 전역에 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만든다

서울 곳곳의 주요 공간이 국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간 조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상지로는 서울역과 청와대, 현충원, 용산공원, 올림픽공원 등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 공간이 거론됩니다.

주요 대상 지역을 관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상징공간은 도시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대내 비전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시민 소통 공간을 의미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KBS

2023년 09월 11일 17:32 (월)
경제

서울역·청와대,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검토 …MOU 체결

서울역과 청와대, 용산공원(용산 대통령실) 등이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국토부, 서울특별시가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1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상징공간은 국가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을 소통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2009년 시민에게 개방된 광화문광장이 국가상징공간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 국건위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과 숭례문, 서울역과 한강을 잇는 7km가량의 '국가상징가로'를 조성해 서울 도심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를 서울역 뒤편으로 옮기고, 남은 부지까지 서울역 광장을 확대해 국가상징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 SOC 인프라의 주무 부처로서 국가 상징공간의 방향과 연계한 국토도시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 정책브랜드 네이밍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2023.11.10.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의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미래 도시공간을 국민의 목소리로 함께 정의하는 것이며, 공모를 통해 결정된 브랜드는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통합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리집, SNS, 공모전 포털(씽굿)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권영걸 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이 국민의 삶과 맞닿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초기부터 국민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이 정책 설계에 국민이 함께하는 건축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새이름을 지어 주세요

9월 18일부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 공감대·소통 기반 브랜드로 활용

보도시점 : 2023.09.18.(월) 06:00 이후(09.18.(월) 석간) / 배포 : 2023.09.15.(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가치(폐쇄→개방·소통·생태 등)를 담아내고, 미래 도시비전이 구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브랜드는 개별 장소의 브랜드가 아닌 서울 곳곳에 조성하게 될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7일까지 국건위 누리집·사회관계망(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모전 포털사이트(씽굿)에 게시된 온라인(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아이디어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최종 당선작은 11월 10일 누리집에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50만원)을 선정한다. 이 밖에도 장려상 5명, 아이디어상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권영걸 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공모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년 09월 18일 06:00 (월)

경제

국가상징공간 정책 브랜드, 대국민 공모전으로 정한다

다음달 27일까지 아이디어 모집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공간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서울의 주요 공간을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드는 사업이다.

국가상징공간으로는 서울역과 청와대, 용산공원 등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브랜드를 개별 장소가 아닌 서울 곳곳에 조성할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통합해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27일까지 국가건축위원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공모전 포털사이트인 '씽굿' 링크에 접속해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당선작은 11월 10일 국가건축정책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을 준다. 장려상 5명, 아이디어상 2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news1

2023년 09월 18일 06:00 (월)

부동산

최우수상 1명 100만원·우수상 2명 50만원 선정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가치(폐쇄→개방·소통·생태 등)를 담아내고, 미래 도시비전이 구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브랜드는 개별 장소의 브랜드가 아닌 서울 곳곳에 조성하게 될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27일까지 국건위 누리집·사회관계망(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모전 포털사이트(씽굿)에 게시된 온라인(구글폼) 링크에 접속 아이디어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11월10일 국건위 누리집에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50만원)을 선정한다. 이 밖에도 장려상 5명, 아이디어상 2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걸 국건위 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간 내일신문

2023년 09월 18일 (월)

산업/무역 15면

국가상징공간 정책브랜드 공모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건위와 국토부,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주요 명소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추진을 알렸다.

국가상징공간은 서울 곳곳에 산재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장소다. 청와대처럼 기존에 폐쇄된 공간을 개방해 '소통' '생태' '인간중심' 등의 테마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브랜드는 개별 장소의 브랜드가 아닌 서울 곳곳에 조성하게 될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27일까지 국건위 누리집·사회관계망, 공모전 포털사이트 '씽굿' 링크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김선철 기자

국가상징공간 컨퍼런스 2023.12.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 서울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 및 조성 방향에 대한 민간·공공부문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가상징공간에 담을 핵심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장소	2023.12.12.(화) 13:30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국건위 민간위원, 관련 학·협회 회원, 학생 등 약 130명
주제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주최/주관	(주최)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주관)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공간연구원
주제발표 1	그린 유토피아, 새로운 이상도시의 과제 (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2	도시공공성과 공감도시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국가상징공간, 국민행복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담회	녹지 민주주의와 도시건축 (좌장)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패널) 이병담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성도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좌) 국가상징공간 컨퍼런스 포스터, (우) 행사 전경]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먼저, '그린 유토피아'와 '세종시 모델', '공감도시' 개념, 그리고 '국민 행복 플랫폼'으로서의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서울-대전 간 리니어 시티 구상, 국가 마을정원 네트워크, 상징의 인문학적 가치 등 다양한 실현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기능 중심에서 행복과 품격 중심으로, 단일 건축물에서 국토 네트워크로, 국가 주도에서 시민 참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발제와 토론 외에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여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경복궁과 광화문 같은 전통 건축물의 상징적 가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도시 녹지공간의 확충과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다양한 지역의 발굴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한국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도시 환경과 향유 측면에서의 상징공간 자원을 발굴하고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상)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에 대한 시민 인터뷰 영상, (중-하)국가상징공간 컨퍼런스 행사 전경]
출처 : (상)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VYbb3JqTMkk?si=RusS27EG2ZNjZpxH, (중, 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12일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을 위한 콘퍼런스 열려…핵심가치 발굴·국민적 공감대 형성

보도시점 : 2023.12.11.(월) 11:00 이후(12.12.(화) 조간) / 배포 : 2023.12.11.(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2월 12일(화)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콘퍼런스는 국건위-국토부-서울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 및 조성 방향에 대한 민간·공공부문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상징공간에 담을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국건위-국토부-서울시 3자간 MOU 체결 ('23.9.11)

■ 콘퍼런스는 개회식, 주제 발표, 좌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환영사 및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 첫 번째 세션은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도시·건축·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3인이 ▲그린 유토피아, 새로운 이상도시의 과제(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도시공공성과 공감도시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가상징공간, 국민행복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발표한다.
- 이어지는 좌담회는 '녹지 민주주의와 도시건축'을 주제로 김종헌(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제대학교 교수), 김성도(고려대학교 교수), 황두진(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병담(한국건축가협회 명예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있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상영될 예정으로 참가자들에게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콘퍼런스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및 행사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누리집(https://bitly.ws/33dNX)에서 할 수 있다.

■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도시 공간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국민적 자부심을 갖게하는 사업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가상징공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시의 정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유창수 서울특별시 부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과 국내 · 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역사 · 문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징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국제세미나 2024.02.01.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을 주제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나라의 상징공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의 국가적 핵심가치가 담긴 국가상징공간의 조성방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일시/장소	2024.02.01.(목) 15:00 /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시민 등 70여 명
주제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주최/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공간연구원
주제발표 1	상징공간의 인간학 서설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아고라에서 포럼을 거쳐 피아자 Piazza까지 : 상징적 장소로서의 로마의 광장들 (Massimo Leone 토리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기호적 도시로부터 의례적 도시로 : 세레모니적 도시성을 위한 이론적 이정표 (Pascal Lardellier 부르고뉴대학교 교수)
좌담회	(좌장)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패널)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도 교수, Massimo Leone 교수, Pascal Lardellier 교수





[(좌)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국제세미나 포스터, (우)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국제세미나 행사 전경]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사진







[(상) 권영걸 위원장 환영사, (중)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국제세미나 행사 참석인사 단체 사진, (하, 좌로부터)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권영걸 위원장,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사진

Press Report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국제세미나 개최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상징공간에 대한 담론 형성

보도시점 및 배포: 2024.01.30.(화)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2월 1일(목) 오후 3시부터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함께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표적 역사 · 문화자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 공감대 및 담론 형성을 위해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이번 국제세미나를 기획하였다.

■ 이번 국제세미나는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내는 장소이자 역사 · 문화 · 시민 소통공간을 의미하는 ‘상징공간’을 주제로 국내 · 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나라의 상징공간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국가상징공간의 핵심가치 발굴과 조성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상징공간에 대한 국내 · 외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주제발표는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가 ‘상징공간의 인간학 서설’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탈리아 토리노대학교 Massimo Leone(마시모 레오네) 교수가 ‘아고라에서 포럼을 거쳐 피아자 piazza까지: 상징적 장소로서의 로마의 광장들’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부르고뉴대학교 Pascal Lardellier(파스칼 라르들리에) 교수가 ‘기호적 도시로부터 의례적 도시로: 세레모니적 도시성을 위한 이론적 이정표’에 대해 발표한다.
- 발표에 이어서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재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 △Massimo Leone(마시모 레오네) 토리노대학교 교수, △Pascal Lardellier(파스칼 라르들리에) 부르고뉴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은 상징공간에 대해 “국가의 고유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상징공간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구현하는 장소로서, 우리 국토환경을 정체성과 이미지가 분명한 국가, 자존감이 있는 도시, 삶의 격(格)을 높이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상징공간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국가상징공간이 미래도시 비전을 구현하고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국제세미나는 사전참가신청을 통해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http://pcap.go.kr/), ‘건축공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소식-세미나/포럼(https://aur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분과] ESG+A의 비전과 가치 공유

목조건축정책 추진 현장방문 및 심포지엄 개최 2023.10.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건축 방안으로서, 목조건축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목조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부처·기관과 목조건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일자/장소	2023.10.12.(목) /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배재대 국제교류관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규린·김종헌·손진락·안용한·유이화·이인화·조세환 위원, 기획단, 국토부, 산림청, 산림진흥원, 목조협회, 현장관계자
내용	목조정책추진과 관련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방문 및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엄 개최

권영걸 위원장과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목조건축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설의 구조와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해당 건축물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조성 중인 국내 최고층(7층) 목조건축물로, 총 1,363㎥의 목재 중 71%를 국산 목재를 사용한 사례로,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기능과 의미와 함께 목조건축의 활용 가능성 대해 이해를 깊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조건축현장(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방문 현장]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현장탐방에 이어 대전 배재대학교에서는 목조건축협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탄소 저장 수단으로서 목조건축의 가치와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저장하는 목조건축의 활성화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축"이며,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가 목조건축과 목조도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시/장소	2023.10.12.(목), 13:00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8명, 기획단, 국토부, 산림청, 산림진흥원, 목조협회, 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등 115명
주제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
주최/주관	(주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 (사)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목조건축협회, 배재대학교
주제발표 1	목의건축-도시목조 건축화의 꿈(배기철 건축사사무소 IDS 대표)
주제발표 2	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전환을 위한 건축구조(이주나 서울시립대 교수)
주제발표 3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안(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전 회장)
주제발표 4	생태환경 미학의 가능성(조남호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대표)
좌담회	(좌장) 김종헌 배재대학교 교수·목조협회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패널) 김연희(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김명길(국립산림과학원 과장), 유이화(ITM건축연구소 대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차준호((주)신화건설 부장), 김지훈(국산목재협동조합 이사장), 공강민(한다움종합건설(주) 대표)





[(좌)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움 포스터, (우)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움 참석자 단체 사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목조건축의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찾는다

12일 국건위-국토부-산림청,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엄 개최

보도시점 : 2023.10.10.(화) 11:00 이후(10.11.(수) 조간) / 배포 : 2023.10.10.(화)

■ 국내 목조건축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2일(목) 오후 배재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생중계(pcap.mlive.kr)로 동시 시청 가능

■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자와 설계자 등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과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화의 꿈」, 「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전환을 위한 건축구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안)」이라는 네 개의 주제발표에 이어,
-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조건축 기술의 당면과제와 목조건축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행사에 앞서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2025)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최고층(7층) 목조건축 기술의 현황과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국건위 권영걸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장하는 목조건축의 활성화가 국가정책으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가 목조건축, 목조도시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 11일 (수)
건설 10면

대한경제

목조건축·도시, 미래 지향적 방향 찾는다

국가건축촛·국토부·산림청 공동
내일 배재대학교에서 심포지엄

우리나라의 목조건축 및 목조도시 선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오는 12일 배재대학교에서 국내 목조건축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4개의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된다.

국건위, 국토부, 산림청, 산림과학원, 산림복지진흥원, 배재대학교, 목조·건축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1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화의 꿈 △콘



크리트에서 목조로의 전환을 위한 건축구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안)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조건축 기술의 당면과제와 목조건축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건위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장하는 목조건축의 활성화가 국가정책으로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가 목조건축, 목조도시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목조건축물 현장 답사 - 한다움 팀버파크 2025.05.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과 민간위원 8명은 경기도 양평군 한다움 팀버파크를 방문해 중목구조 건축전시장을 둘러보고 중목구조의 기술적 장점과 실제 적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지금까지 주택에만 사용되던 목조건축을 상업시설이나 공공건축물로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위원들이 중목구조의 장단점*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목조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위해 필요한 현장 자료를 얻었다는 점과 앞으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기술 표준화, 전문가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 중목구조의 장점 : 중목구조는 기존 경량목구조보다 고층 건물과 넓은 공간 건설이 가능하며,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정밀도가 높고, 화재와 지진에 강한 성능을 보유
- 단점 : 시공비가 높고 목재를 일본과 유럽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계



[목조건축물 현장 – 한다움 팀버파크 답사]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 관련 워크숍 2024.09.24.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미래 교육 방식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학교공간 혁신 전략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육 분야 전문가와 학교시설 건축가 등과 함께, 미래 교육 플랫폼으로서 학교의 변화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시/장소	2024.09.24.(화) 14:00/ 버텍스코리아비즈니스센터(S타워 22층)
참석자	교육부, 교육청 담당 공무원, 학교설계 참여 건축가 등 30여명
주제	미래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학교 : 변화방향과 쟁점을 논하다
주최/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제발표 1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의 현안들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미래학습지원성능으로 같이 만드는 학교건축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학습자 중심 학교공간 조성 정책방안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좌담회	(좌장)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김소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서울시립대 교수, 이윤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은미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유웅상 둥지플랫폼 대표

먼저 세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 교육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미래 교육 플랫폼 조성을 위한 6가지 의제와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는 학교 공간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과거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사전기획 보고서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좌) 워크숍 포스터, (우) 워크숍 현장]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워크숍에서는 미래 교육 플랫폼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과 건축기획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학교건축물의 사전기획 단계에서 교육청의 주도적 역할과 교육·건축 간 협력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간 성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학교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의 복지, 돌봄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적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자율학습, 비교과 활동, 동아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구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워크숍 결과 미래 교육공간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로 다양한 학습 공간 조성, 지역 커뮤니티 연결, 지역사회 건강과 웰빙 실현이 도출되었으며,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와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부처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 관련 워크숍 사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 관계기관·전문가 워크숍 개최결과

2024.11.15.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학교 공간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두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연구발표와 좌담회로 진행되었고 연구발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선영 교수가 맡았다.

일시/장소	2024.11.15.(금) 14: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주최/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제	미래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학교, 무엇을 바꿀 것인가?
참석자	교육부, 교육청 담당 공무원, 학교설계 참여 건축가 등
연구발표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의 조성 방향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좌담회	(패널) 배정익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김태경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김응원 서울시 교육청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과장, 윤미선 창덕여자중학교 교장, 이병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업관리본부장

이선영 교수는 미래교육의 핵심은 학습과 돌봄, 커뮤니티를 위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중지능에 기반한 자기주도 학습과 융합교육이라고 언급하였다. 미래교육을 위한 주요 공간 혁신 방향으로는 △VR·AI를 활용한 몰입형 학습환경, △다변형 가구를 통한 공간 가변성 확보, △학습정원·치유정원 등 옥외공간 도입을 통한 생태적 학습 강화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카페테리아의 다목적공간 재구성, △체육관의 가변형 커뮤니티 공간 활용, △STEAM 융합교육 공간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 통합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후 토론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재난대응의 거점 및 AIP(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늘봄 공간을 통한 돌봄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현행 조달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기획의 개선과 예산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 관계기관·전문가 워크숍]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3분과]
K-도시건축의
비전과 가치 공유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현장방문 및 스마트모듈러 포럼 개최

2023.07.26.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과 민간위원, 기획단은 국내 첫 중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영덕경기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국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모듈러포럼에 참석했다.

일시/장소	2023.07.26.(수) 11:00 / 용인영덕경기행복주택, 수원컨벤션센터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세훈·김소라·김종헌·김현선·안용한 위원, 기획단
목적	'K-도시·건축 사업모델 발굴 및 수출'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현장방문 및 '스마트모듈러포럼' 참여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지하 1층부터 13층까지 총 106세대 거주가 가능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이면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모듈러 공법 사례를 보기 위해 권영걸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훈·김소라·김종헌·김현선·안용한 위원, 국토교통부 이정희 기획단장 총 7명이 현장을 찾아, 1인 가구용 주택과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았다.

현장 방문은 단순한 시찰을 넘어,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고 개선 기회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위원들은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된 모듈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립되는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모듈러 공법이 공기 단축, 품질 균일화, 안전성 향상, 폐기물 감소 등 다방면에 걸쳐 기여하는 바를 확인했다. 동시에,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술적 어려움, 제도적 제약, 그리고 시장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며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현장방문]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현장방문]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은 더 넓은 공론의 장으로 이어졌다.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현장방문이 끝난 후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스마트 모듈러 포럼이 진행되었다. '빅블러 시대-모듈러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진행된 스마트모듈러포럼에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 위원, 모듈러 제작·시공·스타트업 등이 대거 참가했다.

일시/장소	2023.07.26.(수) 14:00 / 수원컨벤션센터
주최/주관/후원	(주최) 스마트모듈러포럼, 경기주택도시공사 / (주관) 대한경제신문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주제발표 1	건축 종합 플랫폼, 모듈러 : 건축 넘어 가전, 의료 가구 콜라보 (안용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2	조선 ×모듈러 : 조선업에서 배우는 모듈러 (김영록 삼인이엔에스 대표)
주제발표 3	병원 × 모듈러 : 이동형 병원 플랫폼 상용화 (임태호 한양대 의대 교수)
토론	(좌장) 안용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패널)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경수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강건우 엔알비 대표, 홍윤택 스페이스웨이비 대표, 김현선 국가건축정책 위원

권영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조업, IT산업과 모듈러 기술이 융합된다면 세계 건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듈러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모듈러 건축은 건축계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한 축이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 의지를 표명했다.

총 3가지의 어젠다로 이루어진 이번 포럼에서는 안용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건축 종합 플랫폼 ‘모듈러’: 건축 넘어 가전, 의료, 가구 콜라보”를 주제로 모듈러 건축의 발전 방향, 콜라보, 확대 적용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가전, 플랜트, 가구,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듈개념이 신사업 창출과 사업범위 확장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영록 삼인이엔에스 대표는 조선업의 3D 정밀 치수관리 시스템을 건설업 모듈러에 적용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임태호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48시간 내 이동 가능한 모듈 기반 스마트 이동병원 개발로 의료-모듈러 융합 신시장 창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션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위원과 안용한 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모듈러 콜라보레이션 전략’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스마트 모듈러포럼 현장 사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디지털 건축과 미래 건설산업 관련 세미나 2024.07.05.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건축의 혁신 – 디지털과 모듈러”라는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대주택, 학교시설 등 K-모듈러 상품의 다양한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시/장소	2024.07.05.(화) 13:30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00여 명
주제	건축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건축사업의 미래, 스마트&모듈러 건축
주최/주관	(주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제발표 1	Simulation & data-driven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 Wei Hu(Design Principal, NBBJ, USA)
주제발표 2	Digital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to Solve the Social Issues – Ill Sam Park(Partners, Foster+Partners, UK)
주제발표 3	Integrated Facade Module Design and Fabrication – Brian Koh(CEO, Innovative Design, USA)
좌담회	(좌장) 안용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패널) Wei Hu(NBBJ), Ill Sam Park(Foster+Partners), Brian Koh(Innovative Design),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 조연우 LG 전자 스마트 Cottage company 대표, 최락우 LH 주거혁신처 처장





[(좌)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건축의 혁신 – 디지털과 모듈러 심포지엄 포스터, (우) 심포지엄 현장 사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모듈러 건축은 기존 획일화된 건축 양식과 달리 주거 형태에 따른 맞춤형 설계 및 제작은 물론 자유로운 이동·공급이 가능한 건축 양식이며 고령인구, 1인 가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반려동물 가구 등 각각의 필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건축의 혁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권영걸 위원장 환영사]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권영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건축이 도시가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건설업계의 노동생산성 저하, 건축 품질 저하, 그리고 안전사고의 빈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디지털 기술과 모듈러 기반의 건축 기술이 중요하며, 이 기술들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적응성이 높은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해 건물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이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융합한 건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축물과 도시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기술적·환경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 설계, 디자인, 친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디지털 및 모듈러 기술이 적용된 국내외 건축 사례와 건축 도시 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 Wei Hu(NBBJ)는 "Simulation & Data-Driven Architectural Design Process"에서 인재와 기업, 도시 간의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사회에 대비한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30년에는 밀레니얼 세대, Z세

대, 알파세대가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의 업무공간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고 리더십과 직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이 되어야 하며, 업무 공간 위주의 전통적인 공간은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이 전체 업무공간의 50%를 차지하는 복합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건축 설계는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함을 제안했다.




[Wei Hu(NBBJ) "Simulation & Data-Driven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발제]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박일삼 대표(Ill Sam Park, Poster+Partner)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인간 중심의 건축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실현 방안을 소개하였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한 시민이 만들어야 하며, 개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축은 정책, 환경, 재료, 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필요하며, 특히 햇빛, 바람 등 자연 요소를 첨단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을 이루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과 기후 조건을 고려한 건축은 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계 환경에서도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 건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인 Brian Koh(Innovative Design.Inc)의 "Integrated Facade Module Design and Fabrication"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모듈러 건축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다. 미국의 주택시장 현황을 소개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부족하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모듈러 건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9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한 아울러 모듈러 주택 공급이 가져올 막대한 시장효과와 함께 환경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40%, 한국은 30%에 근접하는 가운데, 한국은 약 730만 동의 기존 건축물 중 상당수를 리모델링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창호, 단열재, 외장재를 통합한 입면 모듈러 시스템(IUES)을 제안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공정 통합을 통해 하자 발생을 줄이며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삼(Poster+Partner), Brian Koh(Innovative Design.Inc) 발제]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2부는 좌장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안용한 위원(한양대학교 교수)과 Wei Hu(NBBJ), 박일삼(Foster+Partners), Brian Koh(Innovative Design), 조연우(LG전자), 최락우(LH 주거혁신처장), 추승연(경북대 교수) 총 6명의 패널이 토론자로 나섰다.

추승연 교수(경북대)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BIM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설계 규제가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의 디지털 설계 플랫폼 구축과 '세움터'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락우 처장(LH)은 설계 단계에서 모듈러 공법(PC, OSC)과 시공 단계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소개하며, BIM은 실시설계 단계에 효율적이며, OSC 기술의 현장 정착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연우 대표(LG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보다 공간에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코티지'라는 주택 모델을 개발 중이며, 주거와 가전의 융합이 스마트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 중 박일삼 대표(Poster+Partner)는 디지털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며, 기술과 인간 간의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고(Innovative Design Inc.)는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BIM의 융합적 사고에는 교육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철저한 교육과 국가별 기준 이해가 열쇠이며, Wei Hu(NBBJ)는 디자인의 핵심은 사람이며, 도구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통합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패널토론 (좌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안용한 위원)]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사진

이 행사에는 관계 부처,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디지털 기술과 모듈러 건축을 통해 건설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과제, 즉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ICT 기반의 K-건축 플랫폼 구축', '스마트건설 기술환경 구축'과 관련된 의견 개진의 장이었으며, 위원회가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와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며 K-모듈러 건축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Press Report

건설산업, 모듈러 기반으로 디지털화한다

7일 디지털&모듈러 심포지엄… 기후변화·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 해결방안 모색

보도시점 : 2024.07.07.(일) 11:00 이후(07.08.(월) 조간) / 배포 : 2024.07.05.(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7월 5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사, 모듈러 관련 제조사 등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 모듈러 건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주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디지털 건축, 스마트 건축, 모듈러 건축 등에 대한 정책 실현의 주체로서 이번 심포지엄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스마트모듈러포럼, 대한경제는 후원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 심포지엄은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건축의 혁신-디지털과 모듈러"를 주제로 열렸다. 국내외의 여러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학교시설 등 K-모듈러 상품의 다양한 사회적 활용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모듈러 건축은 기존 획일화된 건축 양식과 달리, 수요에 따라 필요한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공급*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동안 유연하게 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 1인 가구, 반려동물 가구 등 사회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 등 건축물을 설계·제작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 이동형 학교의 경우 모듈러 재사용률이 90% 이상으로, 건설폐기물 저감도 장점

** 기상 영향 등에 따른 공사 지연이 없어 기존 공법 대비 30% 이상 공기 단축 가능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과, 생산성 저하, 건설인력 고령화 등에 따른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외의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BIM을 적용하는 최적화 설계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설계 도입,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듈화 및 공장화,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이번 심포지엄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한명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 이어서, 디지털, 설계, 디자인, 친환경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건축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건축 및 모듈러 건축을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건축 업계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 또한 "오늘 심포지엄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수용하여 국가건축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K-House 심포지엄 2024.11.20.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024년 11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하우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에서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시/장소	2024.11.20.(수) 13:30 / DDP 디자인랩 디자인홀
참석자	한옥, AI, 인문학, 예술, 디자인 등 각계 전문가, 건축 및 디자인계 등 일반 참석자 등 100여 명
주최/주관	(주최)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주관)국토교통부
기조강연	스마트 한옥, K-HOUSE의 새로운 시작 (김현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1	한옥의 재탄생 (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 (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
주제발표 3	한옥의 창신(創新)(김재경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토론자) 장영희 한옥문화원 원장, 조연우 Smart Cottage Company 대표, 안인향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정책담당 주무관





[(좌) 한국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House 심포지엄 포스터
(우) 심포지엄 참석 내빈]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권영걸 위원장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 건축의 독창성과 전통 가치를 현대 기술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특히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서 한옥의 생태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첨단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주거공간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한 스마트 한옥의 대중화와 ICT 기반의 K-건축 플랫폼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 건축의 철학과 미학을 재조명하고 스마트 K-HOUSE의 성공적 정착과 세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영걸 위원장 개회사]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Session 1. 한옥의 재탄생

첫 번째 세션에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3명의 발제자의 K-HOUSE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김현선 위원은 '스마트 한옥, K-HOUSE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은평 한옥마을의 사례를 들며 가장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의 전통 '한옥'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한옥의 현실적으로 높은 건축비용과 규제와 제한,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한옥건축물의 개조와 확장이 어려운 가운데, 은평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 기술양식이 공존하는 사례였다. 특히, 스마트 조명과 난방 조절 기능, 스마트 필름을 입힌 한지 창문으로 채광 및 프라이버시 조절,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통해 스마트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외에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더 한옥 헤리티지하우스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스마트 K-House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창의적 활동과 교육, 전시 등 문화적·기술적·기능적 역할을 하는 다목적 건축물이자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후 주제 발표자로 나선 류성룡 교수는 K-Culture 속 한옥의 모습을 조명하며 한옥

건축의 확장과 발건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생애주기별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건축설계 분야 내에서 한옥설계에 대한 업역 정의가 불명확하며, 문화재 한옥 등 문화·예술 분야의 보수와 보존에 집중된 한옥 건축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한옥교육인증제도, 한옥인력 국가자격제도 등을 제시하였으며, AI 기반 한옥설계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도심지 밀도에 걸맞은 새로운 규모와 유형의 한옥 개발, 관련 정책, 법규 정립 등도 함께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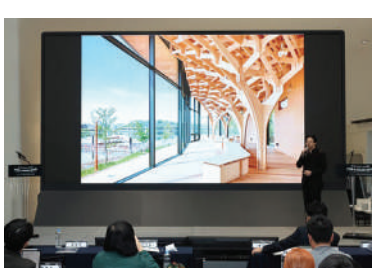




[(좌) 김현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조강연, (우) 류성룡 교수 발제]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두 번째 발제자 손경종 부회장은 스마트 한옥 시장의 확대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손경종 부회장은 매터(Matter) 표준과 ChatGPT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스마트 홈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ICT 융합기술 적용으로 생활 전 분야에서 홈 거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한옥의 경우 한옥의 전통적 외관과 구조적 특성은 유지하되, 설계 단계에서 AIoT기술 결합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기존 한옥이 지닌 난방과 조명, 방범 문제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한옥의 실현을 위해선 스마트 한옥 리모델링 지원, 스마트 홈 제품 서비스 시장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자 김재경 교수는 "'창신(創新)'은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의미로, 옛것을 새로운 창조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발제자가 동아시아 건축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 진행한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중 하나인 '치유의 집'은 한옥의 공간 체계와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한 사례로, 각 공간의 설계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한 회복, 명상, 관조라는 전통적 가치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설명했다.

[(좌) 손경종 부회장 발제, (우) 김재경 교수 발제]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Session 2. 스마트 K-HOUSE 세계화 방안 등 토론

이후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종헌 위원이 좌장을 맡고, 한옥문화원 장명희 원장, Smart Cottage Company 조연우 대표,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안인향 주무관이 참여하여 한옥의 세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옥문화원 장명희 원장은 한옥이 아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초등학생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과 함께 의 다양한 한옥의 세계화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LG전자의 스페인 마드리드 '어나더 한옥' 사례는 해외에 위치하는 한옥 양식의 건물에 AI 가전과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례인 'LG Smart Cottage'는 AI 기반 IoT 기술을 통합한 모듈러 주택으로 첨단 기술이 한옥과 융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안인향 주무관은 서울시의 한옥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옥의 전통적 가치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국가, 민간,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열띤 의견들이 오고 가며 한옥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했던 4시간여의 열띤 여정은 마무리되었다.



[스마트 K-House 심포지엄 종합토론]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한옥, 전통과 현대를 잇는 스마트 케이-하우스(K-HOUSE)로 재탄생 모색

한옥의 현대화·세계화 위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심포지엄 20일 열려

보도시점 : 2024.11.20.(수) 14:00 이후 (11.21.(목) 조간) / 배포 : 2024.11.20.(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11월 20일(수)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디자인홀(서울 중구)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한옥의 재탄생 –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개념의 정립'을 주제로 개최한다.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한옥의 현대적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먼저,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영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진행된다.

•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스마트 한옥, 케이(K)-하우스(HOUSE)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 이어서 건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 ▲한옥의 창신(創新)(김재경 한양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발표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종헌(배재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좌장이 되어, 기조 강연 및 발제를 맡았던 전문가 4인과 한옥 및 스마트 기술 관련 전문가 3인(장명희 한옥문화원 원장 등)이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의 세계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 권 위원장은 "한옥이 전통 건축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면서,

•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요구를 수용해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주거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우리의 케이(K)-하우스(HOUSE)가 미래 주거 공간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

종합

한옥의 재탄생 '스마트 하우스'로...20일 K-건축의 세계화 심포지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옥의 재탄생-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개념의 정립을 주제로 개최한다.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한옥의 현대적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영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선(홍익대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스마트 한옥, 케이(K)-하우스(HOUSE)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건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 교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 △한옥의 창신(創新)(김재경 한양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김종헌(배재대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좌장이 되어, 기조 강연 및 발제를 맡았던 전문가 4인과 한옥 및 스마트 기술 관련 전문가 3인(장명희 한옥문화원 원장 등)이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의 세계화를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권 위원장은 "한옥이 전통 건축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요구를 수용해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주거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케이(K)-하우스(HOUSE)가 미래 주거공간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경제

한옥의 현대화.세계화...스마트 K-하우스 심포지엄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 개최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하우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한옥의 현대적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인 김현선 홍익대학교 교수가 '스마트 한옥, K-하우스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건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주제발표한다. 류성룡 고려대 교수가 '한옥의 재탄생', 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 김재경 한양대 교수가 '한옥의 창신(創新)'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인 김종헌 배재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명희 한옥문화원 원장 등 전문가들이 스마트 K-하우스 세계화를 주제로 심층 논의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스마트 K-하우스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요구를 수용해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주거모델이 될 것"이라며 "미래 주거 공간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dyhlee@newsis.com)

[4분과] 지방소멸 대응의 비전과 가치 공유

도심캠퍼스 타운 조성 심포지엄 2023.11.03.-11.04.

'대구 원도심, 대학의 도시로 되살리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원도심 답사가 대구시 무영당과 근대건축자산 및 경상감영달성길 일대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국가건축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의 정책과제인 '지방소멸 대응(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과 관련하여 본 행사를 후원하고 권영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8명과 건축혁신기획단 관계자 등 총 16명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첫째 날은 도심캠퍼스 타운 조성 추진을 선언하는 '대학 포럼 총장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심 캠퍼스 타운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일시/장소	2023.11.03.(금) 13:30 / 대구광역시 무영당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성신·김현선·김규린·손진락·정진국 위원, 기획단, 발제자 및 토론자, 지자체, 시민 등 100여명
주제	대학의 도시 대구, 동성로에서 미래를 찾다
주최/주관/후원	(주최)대구광역시 / (주관)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 (후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포럼 총장협의체 발족식	대구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 착수 선포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호산대)
심포지엄	대구 원도심, 대학의 도시로 되살리다!
주제발표 1	대학중심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모종린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 2	무지개떡 건축 : 보편적 도시 복합 주거 유형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제발표 3	대학, 오래된 도심으로 오라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패널) 김종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재대학교 교수, 박혜선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이상훈 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인국 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대학포럼 총장협의체 발족식'에서는 대구지역 12개 대학의 총장 등 관계자들이 대구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의 착수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에 대한 간략한 미래구상을 담은 총장협의체 대표의 발족선언문 낭독이 이루어졌다.





[(좌) 도심캠퍼스타운 심포지엄 포스터
(우) 대학포럼 총장협의체 발족식 및 도심캠퍼스타운 심포지엄 참석 내빈]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심포지엄에서는 '도심캠퍼스 타운 조성'이라는 주제로, 대학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학 캠퍼스와 지역 시민들이 상호 소통하는 캠퍼스 조성을 제안했다. 유럽 대학들이 캠퍼스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를 국내에 접목할 수 있음을 소개하면서, 대학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요리, 체험 등 로컬 콘텐츠 기반의 타운을 조성해야 하며,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황두진 건축사가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다양한 기능과 용도를 하나의 건물 안에 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와 유럽의 복합시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한광야 위원은 '대학, 오래된 도심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뉴욕대학의 기숙사 건립 사례와 해외 대학 시설을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재생과 대학의 역할이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대구 원도심의 쇠퇴 원인을 진단하고, 대학과 도시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생 방안을 논의하였다.





[(좌) 도심캠퍼스타운 심포지엄 주제발표, (우) 도심캠퍼스타운 심포지엄 종합토론]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다음 날에는 대구 근대건축자산과 경상감영달성길 등 원도심 일대 답사를 통해 현장의 역사적 자산과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일자/장소	2023.11.04.(토) 09:30 / 대구 원도심 답사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광야 지역소멸대응 분과위원장, 조세환·김종헌·김현선·이인화·손진락·정진국 위원, 기획단
내용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관련 원도심 답사 (코스1)대구시 근대건축자산(무영당, 꽃자리다방 등) 및 경상감영달성길 (코스2)근대문화골목(동산선교사주택~종로 일원)

첫 번째 코스는 대구시가 보존을 위해 매입에 성공한 무영당, 꽃자리다방, 경북문인협회 등의 건축물과 근현대의 스토리가 축척된 화월여관, 르네상스 음악다방 등의 근대건축물들을 중심으로 탐방하였다. 두 번째는 종로, 진골목, 약전골목, 3.1만세운동길 등 역사적 골목과 구.제일교회, 계산성당, 선교사주택 등 종교 관련 역사자산들을 돌아보았다. 이를 통해 근대 역사문화적 도시공간의 가치를 살피고 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관련 대구 원도심 답사]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2023.12.07.

전주시 팔복예술공장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일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 · 유휴공간 재생'을 주제로 심포지엄과 현장답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폐교 및 유휴공간 재생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공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비롯해 기획단, 발제자 및 토론자,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일시/장소	2023.12.07.(화) 15:00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팔복예술공장 및 완주군 일대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성신·김현선·김규린·손진락·정진국 위원, 기획단, 발제자 및 토론자, 지자체, 시민 등 100여 명
주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주최/주관	(주최)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주관)군산대학교, 전라북도건축사회
주제발표 1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2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 (황순우 바인건축사사무소 소장/전 팔복예술공장 총괄감독)
토론	(좌장) 박성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군산대학교 교수 (패널) 유선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오병록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선자 전북교육청 재무과장, 김헌 일상건축사사무소 대표, 최병관 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포스터(좌) 및 현장(우)]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폐교 및 유휴공간 재생사례 현장 답사에서는, 삼례중 폐교 활용사례인 완주소셜 굿즈 센터와 삼례무화예술촌 일대를 둘러보며 교육시설의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성공적 전환 모델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권영걸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공공건축 및 폐공장 재생사례로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맘껏 숲,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여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점검했다.



[폐교 및 유휴공간 재생사례 현장 답사]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이후 진행된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폐교, 빈집, 폐산업시설 등의 폐·유휴공간을 지역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간 전략과 건축 정책을 모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 인구 변화와 소멸 위기를 중심으로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방소멸이 초래하는 공간적 이슈를 진단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과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황순우 前 팔복예술공장 총괄감독이자 바인건축사사무소 소장이 팔복예술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폐공장이 예술공장으로, 다시 예술공원과 예술공단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팔복예술공장은 창조적 공간 재생 방식으로 조성된 융복합 문화 플랫폼이으로써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와 함께 꿈과 영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기여한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후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공공건축과 지역재생의 연계, 전북지역 빈집 현황과 과제, 도시재생에서 지역건축가의 역할, 폐교 활성화 방향과 정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전북지역 내 폐교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재생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현장]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폐 · 유휴공간의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심포지엄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를 관련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후속 논의를 이어나갔다.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효과적인 대응 방향성 모색

보도시점 : 2023.12.06.(수) 11:00 이후(12. 7.(목) 조간) / 배포 : 2023.12.06.(수)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12월 7일(목)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여한다.

•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실무건축가들이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로 구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행사에 앞서 7일 오전에는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이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사례로 완주소셜굿즈센터, 삼례문화예술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과제 추진 및 발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국건위 권영걸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우리의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폐교 및 폐유휴공간을 창조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이번 행사가 지방소멸의 현실과 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함께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컨퍼런스 2024.06.14.

중소도시 인구 및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 순천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온라인 생중계로도 송출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눔으로써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시/장소	2023.06.14.(금) 14:00 / 순천시 생태비지니스센터 컨퍼런스홀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순천시장, 순천대학교 부총장, 한국도시설계학회장, 국건위 민간위원, 순천대 학생,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
주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주최/주관	(주최)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주관)순천시
주제발표 1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2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 (한동승 전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박태원 광운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남정민 고려대학교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 (패널)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김호정 단국대학교 교수, 송성욱 순천대학교 교수, 이은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컨퍼런스 포스터(좌) 및 현장(우)]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심포지엄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위원장은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소멸은 지역 교육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 인재의 감소는 결국 지역의 경쟁력 저하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4차 산업사회와 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대학의 역할 또한 변화해야 하며, 사회 변화에 발맞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 과제를 발굴·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중핵과제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건축계획'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컨퍼런스 권영걸 위원장 개회사]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이어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광야 위원은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로운 대학모델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지역과 함께 하는 평생고등교육'이란 주제로 진행된 전주대학교 한동승 교수의 발표에서는 지역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발표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시킨 성공 사례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소개하며 중소도시에서의 유사 모델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컨퍼런스 현장(사회 : 김규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발제 :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동승 전주대학교 교수, 박태원 광운대학교 교수)]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사진

이어진 토론회는 남정민 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으로 나서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또한 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시의 자원과 도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심포지엄은 교육과 도시재생, 지역경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지역대학의 캠퍼스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였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컨퍼런스 참석자 사진]

대학도 도시도 활력을 갖게되는 상생프로젝트 모색

14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보도시점 : 2024.06.13.(목) 11:00 이후(06.14.(금)) 조간) / 배포 : 2024.06.13.(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6월 14일(금)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하였다.

■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부총장과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 주제 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를 주제로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동국대학교 교수)이,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을 주제로 한동숭 전주대학교 교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발표한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학교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재대학교 교수), 김호정 단국대학교 교수, 송성욱 순천대학교 교수, 이은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과 도시가 모두 활력을 갖게 되는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ews i 경제

국건위, 14일 지방소멸 대응 심포지엄…구도심 활성화 방안 찾는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순천시와 오는 14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주제 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를 주제로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동국대 교수)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을 주제로 한동숭 전주대 교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재대 교수), 김호정 단국대 교수, 송성욱 순천대 교수, 이은재 이화여자대 이화창의교육센터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IS 경제

전남 순천서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지방소멸 대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순천시 공동으로 14일 개최
대학도 도시도 활력을 찾을 상생 프로젝트 모색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라남도 순천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순천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부총장과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를 주제로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동국대학교 교수)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을 주제로 한동숭 전주대학교 교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 등이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학교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재대학교 교수), 김호정 단국대학교 교수, 송성욱 순천대학교 교수, 이은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과 도시가 모두 활력을 갖게 되는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ty Revitalization) 2024.10.24.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를 주제로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국제 전문가들과 도시재생 및 건축 전략을 공유했다.

일시/장소	2024.10.24.(목) 09:30 / 강원도 원주시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참석자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지방 전문가, 국내 유관 부처, 공공기관, 기업, 언론, 대학생 등 총 139명
주제	지방 중소도시의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쉽과 실행 전략 Revitalizing Small and Mid-sized Cities: Leadership and Strategies of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Alternative Futures
주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원주시
세션 1	지역발전을 위한 新 공간전략
주제발표 1	독일의 역사적인 소도시 부흥 (이석정 독일 슈투트가르트,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대표)
주제발표 2	인구 감소 시대의 일본 도시 계획 (Shin AIBA 도쿄도립대학교 도시과학정책학과 교수)
주제발표 3	원주시 도시재생 현안 (원강수 원주시장)
주제발표 4	공동주거의 제도적 중요성과 지역 도시의 미래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발표 5	네덜란드 도시들의 축소 도시 담론 (이교석 네덜란드 로테르담, MVRDV 이사)
세션 2	지역발전을 위한 新 공간전략
주제발표 1	녹색 인프라와 교육: 촉매제로서 지속 가능한 동네 (Mario FLAMMANN 슈투트가르트 공과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주제발표 2	일본 지방 도시의 도시 재생 (Chie NOZAWA 메이지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
주제발표 3	지역 교육, 라인 갈탄 채굴 지역 내 변혁적 연구 및 디자인을 통한 연구 (Isabel Maria FINKENBERGER 핑켄버거 FH 아헨 응용과학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4	대구 도시캠퍼스 프로젝트: 도시 재활성화의 새로운 모델 (이상현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주제발표 5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영향: 순환형 건축 환경에 대한 TU 델프트의 접근 (Alexander WANDL 델프트 공과대학교 도시학과 부교수)





[지방소멸 대응 국제심포지엄 포스터(좌), 권영걸 위원장 개회사(우)]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권영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방소멸과 고령사회 등 지역사회 전반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건축 계획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순히 노후 건물과 인프라를 재건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도시계획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에 거점 공간을 육성해 글로벌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이 핵심적인 공간 거점으로서 지역과 연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영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심포지엄은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사례와 의견을 논의했다.

지방 중소도시의 위기는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이며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실천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력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맞춤형 혁신 전략과 대학-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도시 발전 모델 구축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방소멸 대응 국제심포지엄 현장]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Session 1. 지역발전을 위한 新공간 전략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광야 위원(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은 첫 번째 세션은 발표자 5명의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도시재생 사례 발표, 이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 참여, 교통 문제, 중소도시 활성화와 대학의 지역사회 역할 등 현대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상) 세션 1 좌장 한광야 위원, (하) 이석정 슈투트가르트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대표, Shin AIBA 도쿄도립대학교 교수]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슈투트가르트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이석정 대표는 '독일의 역사적인 소도시 부흥'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소도시 'Herrenberg', 'Fürstenfeldbruck'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구도심에 문화, 의료시설 등 모든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을 정도로 독일인들에게 구도심은 역사이자 자부심이다. 그러나 비싼 주거비, 녹지시설의 부재 등으로 사람들이 구도심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구도심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구도심과 같이 도시재생 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고,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석정 대표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구도심의 개발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 아이바(Shin AIBA) 도쿄도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 감소 특성과 도시계획 방법'을 주제로 일본의 도시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가 공간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쿄 외곽의 빈집 개선 사례를 비롯해, 대학 주변의 빈집을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공간으로 만든 사례도 소개했다.



[세션 1 발제자 (상) 원강수 원주시장, 백진 서울대학교 교수, (하) 이교석 MVRDV 이사]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세 번째 발제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원주시 도시재생 현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원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군사령부가 설치된 군사도시로, 탁월한 교통 여건을 갖춘 곳이다. 원강수 시장은 탈 서울 집중화와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도시로서 원주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네 번째 발제는 백진 교수가 '공동 주거의 제도적 중요성과 지역 도시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였다. 백진 교수는 지방 도시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3의 길을 찾아 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도시는 거대도시와 달리 새로운 실험이 가능한 곳이므로 전주의 도서관, waste zero shop, 싱가폴의 교회 사례와 같은 도시공간 구조 · 시설과 공동 주거 방식의 혁신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발제를 맡은 이교석 로테르담 MVRDV 이사는 '네덜란드 도시들의 축소 도시 담론'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중소도시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네덜란드 중소도시 정책의 핵심은 지역 소멸을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특히 네덜란드 '중소도시 유토피아' 정책을 통해 대도시 삶의 질과 중소도시의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결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를 공공 녹지공간으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했다. 대학공간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대학 캠퍼스를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생태적 다양성까지 확보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결돼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자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Session 2.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백한열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은 대학-지자체 간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5명의 발표자의 도시재생 사례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상) 세션 2 좌장 백한열 한남대학교 교수, (하) Mario FLAMMANN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교수, Chie NOZAWA 메지이대학교 교수]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마리오 플라만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교수는 중소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독일 남서부 지역에서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 과정에서 소도시들의 매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누었다. 플라만 교수가 제시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녹지 공간과 세대를 아우르는 도시 발전의 기반', △'매력적인 도심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교육의 기회-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촉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의 사례는 독일의 발링엔(Balingen)의 주민 참여로 공공공간을 개선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이며, 두 번째 전략의 사례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Land Baden-Württemberg)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교통 시스템 개선, 세 번째 전략의 사례로 하일브론(Heilbronn)의 교육시설과 녹지 네트워크를 결합한 도시 발전 전략이 소개됐다.

두 번째 발제는 '일본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치에 노자와 메이지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일본 지방 도시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예로 고베시 사례를 소개하였다. 고베시는 외곽의 지하철역을 리노베이션하고 있으며, 도심부 아파트 밀집 규제를 통해 고급 맨션이나 아파트가 도심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거주 균형을 맞추고 있다. 치에 노자와 교수는 특히 지방 도시재생을 위해선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연계와 상부상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자벨 마리아 핑켄버거 FH 아헨 응용과학대학교 교수는 ' 지역교육, 라인 갈탄 채굴 지역 내 변혁적 연구 및 디자인을 통한 연구'를 주제로 5년간 집중했던 독일 아헨(Aachen)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마을의 특성은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도시공간 구조를 개발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관계자 간 대화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지식과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학생은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발제는 '대구 도시캠퍼스 프로젝트: 도시 재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주제로 이상현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이 맡았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부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뿐만 아니라 대구 원도심에 읍성이 있던 자리까지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도심 내 빈 상점이나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대학 강의실로 사용하는 도심 캠퍼스 모델로 현재 1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성로 일대에 예술 전공 학생들을 위한 실습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발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영향 – 순환형 건축 환경에 대한 TU 델프트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알렉산더 반들 델프트 공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줌(Zoom)으로 만난 알렉산더 반들 교수는 네덜란드 서부의 소도시인 델프트(Delft)에 위치한 델프트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내용을 소개했다. 네덜란드 역시 기후변화, 주택 가격, 부동산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건축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들 교수는 바이오 기반 건축 방식으로의 전환을 비롯해 미래 순환화 체계 연구, 도시재생과 공공공간 활성화, 지방 도시와 대학의 협력, 국가 펀딩을 통한 지방 도시재생 등의 이슈와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상) sabel Maria FINKENBERGER 아헨응용과학대학교 교수, 이상현 대구광역시 주무관,
(하) Alexander WANDL 델프트공대 교수]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6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지방도시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은 맞춤형 혁신전략, 기후와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책 방안, 대학과 장학-자치단체의 리더십과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장(場)을 제공했다.



[지방도시 활성화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단체 사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지역 대학, 지방도시 활력 위한 공간거점으로 키운다

24일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위한 국제심포지엄… 대학 중심 지속가능 혁신 방안 모색

보도시점 : 2024.10.23.(수) 11:00 이후(10.24.(목) 조간) / 배포 : 2024.10.23.(수)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10월 24일 원주에서 열린다.

•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과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와 공동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쉽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일시) '24.10.24(목), 09:30~15:30 (장소) 원주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

■ 먼저,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내·외의 대학,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 네덜란드 건축디자인기업인 MVRDV의 이교석 이사는 지방중소도시의 대학 캠퍼스를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한 대학공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이석정 대표는 독일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한다.

■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에 거점공간을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 특히, "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공간 거점이며 앞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이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일 예정이다.

뉴스1

2024년 10월 23일 11:00 (수)
종합

24일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위한 국제심포지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24일 원주에서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십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의 대학,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기업인 MVRDV의 이교석 이사는 지방중소도시의 대학 캠퍼스를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한 대학공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이석정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대표는 독일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에 거점공간을 육성해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공간 거점이며 앞으로 지역과 연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한다.

뉴스핌

2024년 10월 23일 11:00 (수)
부동산

24일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위한 국제심포지엄…대학 중심 지속가능 혁신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과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쉽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의 대학,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기업인 MVRDV의 이교석 이사는 지방중소도시의 대학 캠퍼스를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한 대학공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에 거점공간을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공간 거점이며 앞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시스

2024년 10월 23일 11:00 (수)
사회

지방소멸 위기 해법 찾는다…원주서 정부.지자체 국제심포지엄

지방도시 활력 되살리기 개선 방안 도출
국내외 전문가 공간 전략.정책 사례 발표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국제심포지엄이 원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과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와 공동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쉽과 실행전략'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24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외 대학과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기업인 MVRDV 이교석 이사가 대학공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이석정 대표가 독일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에 거점공간을 육성해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공간 거점이며 앞으로 지역과 연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정책의 해외 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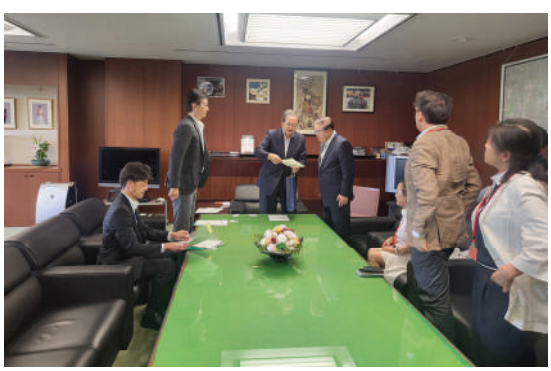
해외 국가·기관 면담 및 실무회의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일본 국토교통성, 외무성 등 주요 정부기관 및 건축기관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일 간 건축정책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로 일본 정부와의 공식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건축정책을 구체화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대신 면담 2024.07.26.

2024년 7월 26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대신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인류 문명사 중 동북아시아에서 목조건축이 발달한 역사 · 문화적 공통점과 한-일간의 목조건축 정책 추진 사항을 공유하였다. 특히 최근 일본이 관련 법률을 정비해 목조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법제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도심 집중 현상으로 인해 빈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이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의 정책과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일본 역시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자국의 목재를 활용한 고층 목조건축을 위해 법률을 개정했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문화 확산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사이토 데쓰오(Saito Tetsuo) 일본 국토교통대신 면담]

일본 국토교통성 면담 및 실무회의 2024.07.24.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면담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미우라 이쯔히로 주택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은 대도시 과밀화와 지방 빈집 문제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다.

하야시 나오토 건축기술정책분석과장 등과의 실무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교류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스마트+빌딩 분야의 AI 기반 기술과 UAM 대응 건축 R&D,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정책, 전국 13만 채 빈집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정보체계 정비 및 지자체 실태조사 추진 방안을 소개하였다.

일본 측은 2022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3천㎡ 이상 건축물의 방화 기준 완화, 고저층 복합건축물의 내화 기준 조정, 구조계산 자격 요건 완화 등의 정책 추진을 설명하며, 목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최대 4억엔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빈집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으로 빈집 385만 채가 존재하는 가운데, 2023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단순 철거 중심에서 유휴자산 활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여 소유주 지도·철거, 민간단체 위탁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빈집 해체 및 활용 시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관계자	
장관급 Minister	사이토 데쓰오 Saito Tetsuo
국장급 Deputy Director-General, City, Housing	미우라 이쯔히로 Miura Itsuhiro
과장급 Director for Building Technology Policy Analysis	하야시 나오토 Hayashi Naoto



[국토교통성 실무회의]

일본 외무성 실무회의 2024.07.26.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일본 외무성 소속 에쿠사 게이코 전략적 대외발신거점실장 등과 함께 '재팬하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과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재팬하우스'는 일본 외무성이 기획한 문화 교류 기관으로, 2017년 브라질 상파울루를 시작으로 영국 런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인 코디네이터와 현지 큐레이터가 협력하여 일본의 다양한 지역 문화를 소개하며 전시와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재 일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거점의 운영은 재팬하우스가 위치하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선정하고 현지 문화와 일본 전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획된다. 실제로는 상파울루에서는 대나무를 활용한 전시, LA에서는 포켓몬스터 관련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일본 측은 재팬하우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과 외국인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운영 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하고, 민간 디자이너 · 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 수요 맞춤형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관계자	
과장급 Director for Office for Strategic Communication Hub	에쿠사 게이코 Egusa Keiko



[외무성 실무회의]

현장방문

일본 국립건축연구소 현장방문 2024.07.25.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일본의 국립건축연구소(NILIM)를 방문하여 히로시 후쿠야마 부소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 내 빈집 증가 현황과 재해 대응 건축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빈집 증가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 도시 외곽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노후한 것

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도심 거주 수요가 늘면서 교외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빈집 문제는 향후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50년에는 65세 이상 독신 인구 중 미혼자의 수가 2020년 대비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들의 사후 상속의 어려움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빈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측은 2024년 기준 전국에 약 900만 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사용이 가능한 50만 동을 제외한 상당수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기술과 관련하는 건축기술 측면의 노력도 소개하였다. 그 사례로 재해 저항성을 갖춘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침수 가능성이 반영된 지도를 공개하는 등의 예방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건축물의 방재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고기초 설계, 일정 높이 이상의 콘크리트 벽 설치, 배수장치 확보 등의 다양한 설계와 시공기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들이 지나치게 고비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건축연구소(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Building Research Institute) 관계자	
부사장 Vice President	히로시 후쿠야마 Hiroshi Fukuyama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나카노 타쿠 Nakano Taku



[국립건축연구소 현장방문]

일본 주택건설회사 미사와 홈 현장방문 2024.07.25.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세계적인 모듈러형 목조주택 시공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대표적인 주택건설회사 ㈜미사와 홈을 방문하여 테츠야 미나미 대외홍보부장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당사(當社)의 기술력과 비전, 목조건축 시장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였다.

미사와 홈은 Pre-Fab(공장 조립식) 방식으로 목구조 단독주택 및 2층 규모의 집합주택을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서의 주거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극 쇼와기지의 연구·주거시설도 목조건축 방식으로 시공한 바 있다. 또한 미사와 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고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갖춘 시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지원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전통 주택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으며, 모듈러 주택의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의 개별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전체 매출의 약 80%가 이러한 자유 설계형 모듈러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미사화홈은 또한, 목조건축의 대중화를 위해 쇼룸을 운영하는 등 기술력 홍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과거 재해 발생 시 주변 건물은 붕괴되었으나 자사의 목조주택은 손상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5층 이상 고층 모듈러형 목조아파트 건축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간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미사와홈 Misawa Homes. Co 관계자	
부장급 General Manager (General Administration Group Public Relations and External Affairs Division)	테츠야 미나미 Tetsuya Minami
부장급 General Manager (Public Relations and External Affairs Division, and Product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	유이치로 노우라 Yuichiro Noura



[미사와홈 현장방문]

일본 아자부다이힐스, 아사쿠사문화관광센터, 켄고쿠마건축사설계사무소 현장방문

2024.07.26.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일본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 '아자부다이힐스(Azabudai Hills)'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대규모 개발을 통해 공간 혁신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자부다이힐스는 지상부에 고층 맨션과 업무시설, 지하부에는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배치하여 유동 인구를 효과적으로 유입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이 주로 마을형·소규모 건축물 개선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점과 비교할 때, 대형 업무 및 상업시설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맡은 쿠마 켄고 건축사사무소의 주재영 실장으로부터 설계과정과 주안점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해당 건축물은 과거 목조 단층 건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미감을 구현한 리모델링 사례이다.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아사쿠사 일대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존중하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례는 도시재생에 있어 해당 지역의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리모델링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체험과 경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쿠마켄고 건축도시설계사무소 KENGO KUMA & ASSOCIATES 관계자

실장급 Chief Project Manager 주재영 JAEYUNG JOO



[아자부다이힐스 현장방문]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타 현장방문]



[켄고쿠마건축사사무소 방문]

일본 니켄세케이 방문 및 MOU 체결 2024.07.26.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일본의 대표적 건축설계사무소 ㈜니켄세케이를 방문하여 와타루 다나카 부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형 친환경 목조건축물의 설계 사례로 주목받는 도쿄 W35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향후 목조건축 시장에 대한 전망과 도시재생에 있어 건축공간의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니켄세케이 측은 도쿄 마루노우치 등 도심 재생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구도심을 현대적 도시디자인으로 재창조한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고층 목조건축인 W350 프로젝트는 목재를 구조재로 활용한 초고층 친환경 건축의 대표 사례로, 지속가능성과 도시 미관, 에너지 효율 등을 함께 고려한 설계 전략이 돋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측 디자인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니켄세케이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양국 간 건축·디자인 분야 교류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확인된 주요 시사점은, 도심 재생 시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전략을 적용하고, 지역 자원과 녹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목조건축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니켄세케이 NIKKEN SEKKEI LTD 관계자	
임원급 Senior Executive Officer (Head of Global Business Department)	와타루 다나카 Wataru Tanaka
한국총괄대표 General Manager Global Business Department	김대중 Daijung Kim



[일본 니켄세케이 방문 및 MOU 체결]

권영걸 위원장, 지방소멸, 목조건축 등 한 · 일 건축정책 협력 확대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장관), 외무성 관계자 등 협의

보도시점 : 2024.07.26.(금) 14:00 (석간) / 배포 : 2024.07.25.(목)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권영걸 위원장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한 · 일 건축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여러 일본 정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 권영걸 위원장은 7월 26일(금)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와 면담을 가졌으며, 목조건축, 거리그린벨트, 스마트 건축 및 도시정책 등 일본 국토교통성과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과의 만남은 위원회 설립 이래 최초의 교류로서, 권 위원장은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4대 중핵과제*와 17개 정책과제**를 소개하였다.

  * 4대 중핵과제: 1. 국가상징공간 조성, 2. 기후변화대응 선진 생태도시 조성, 3. ICT 융복합형 K-도시 · 건축 사업 모델 개발 및 수출, 4. 지방소멸·고령화사회 대응 도시건축계획

  ** 17개 정책과제: 국가상징공간 기획 및 정책수립, 거리 그린벨트, 목조건축 대중화 및 목조도시 활성화, 스마트 한옥 대중화, 폐 · 유휴공간 재생 등

■ 권 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축, 도시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교류를 지속해나가자는 뜻을 전달하였다.

- 사이토 대신은 "권 위원장의 이러한 제안에 열린 마음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같이 고민하고 협조해나갈 것이며, 이번 첫 협의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되길 희망한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 권 위원장은 목조건축 산업화와 대중화에서 앞서간 일본의 정책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목조 건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국적으로 13만호 이상의 폐가와 공가(빈집)에 관한 대책, 스마트홈 설계와 양산 등에 관해 한일 간 기술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 이번 권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는 향후에도 목조건축의 대중화 및 활성화, 거리 그린벨트 및 보행친화거리 조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건축 및 도시관리정책 등 주요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일 건축협의회(국장급)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면담 이후, 권 위원장은 친환경 스마트 목조건축과 도시재생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외무성 전략적대외발신거점실장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를 비롯한 여러 현장과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설계사무소인 (주)니켄세케이도 방문할 계획이다.

도시문화융합컨퍼런스 호치민 2023 기조연설 2023.03.06.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베트남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코리아싸이오서밋이 호치민에서 개최한 'CICON Ho Chi Minh 2023'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권영걸 위원장은 베트남의 젊은 인적자원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호치민시의 글로벌 도시 매력도 제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영걸 위원장은 베트남 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에 주목하며 세 가지 협력 전략으로, 첫째, 한·미·일 주요 도시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도시연합' 구성, 둘째, 서울의 '디자인 서울' 성공 경험을 활용한 '디자인 베트남' 전략, 셋째,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미디어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베트남 스마트시티가 고유한 문화 코드가 반영된 '스마트매력도시'로 발전해야 하며,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한·베 양국이 새로운 공급망 거점으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좌) 도시문화융합컨퍼런스 호치민 2023 권영걸 위원장 기조연설,
(상우,하) 한국-베트남 양국 산·학·연 기관 관계자 면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언론인터뷰·강연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과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건축정책의 가치를 공유하였다.




CULTURE

"용산은 귀한 자산 – 역사·자연 아우른 스마트 K공원 만들것"

구분	언론사 (일자)	제목
1	중앙선데이 (2023.04.19.)	용산은 귀한 자산…역사·자연 아우른 스마트 K공원 만들것
2	서울경제 (2023.04.23.)	용산공원, 생태계·문화·AI 융합…세계 공원들의 모본 될 것
3	서울경제 (2023.04.23.)	건축문화 확산에 중점뒀던 국건위, 이젠 정책해법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4	이데일리 (2023.05.13.)	'녹지' 늘려 국민 행복 공간 확충…용산 개발이 첫 시험대될 것
5	이데일리 (2023.05.14.)	출산율·다자녀비율 1위 '세종'…비결은 '도시건축'에 있다
6	남도일보 (2023.06.20.)	'국가상징공간프로젝트' 첫 방문지로 순천 찾아
7	이코노믹리뷰 (2023.07.12.)	용산공원을 자연·역사 교육의 도장(道場)으로
8	대한건축사협회 월간건축사 (2023.09.15.)	건축사는 사회 공공재 '건축' 구현하는 전문가…보다 나은 업무환경 지원에 손 보탤것"
9	지방정부(2024.03.05.)	"세상만사가 도시 · 건축의 문제로 회귀한다. 국민행복, 국격, 인격도 공간이 결정한다"
10	대한경제(2024.03.07.)	[창간 60주년 인터뷰] "국건위,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도시건축 그리고 공간적 해법 제시할 것"
11	서울경제(2024.07.25.)	[특별인터뷰] 권영걸 "헌법정신 구현한 국가상징물 없어…미래지향적 공간도 조성해야"
12	월간중앙(2024.08.18.)	[이슈와 사람]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공원 국가 한국' 그랜드 비전
13	나무신문(2025.03.06.)	콘크리트 시대의 마감, 목조건축으로의 전환 "물꼬는 이미 터졌다"

구분	일시	장소	행사명
축사	2023.04.28.	부산 벡스코	2023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축사	2023.05.11.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대한여성건축사회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축사
인사말	2023.06.13.	서울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건축발전간담회
건배사	2023.09.01.	서울 어니언 안국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만찬
축사	2023.10.11.	서울 코엑스	2023 AIoT진흥주간 개막식
축사	2023.10.20.	서울 열린송현 녹지광장	제19회 대한민국 건축의 날
축사	2023.10.25.	서울 문화역서울 284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
축사	2023.11.02.	서울 래미안갤러리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심포지엄
축사	2024.03.05.	서울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 · 취임식
축사	2024.03.21.	건축공간연구원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면담	2024.06.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면담
축사	2024.07.23.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계-국토부 공동컨퍼런스
축사	2024.09.05.	아트하우스 모모	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축사
시상	2024.10.08.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제20회 건축의 날 – 국건위 위원장상 1점
축사	2024.10.23.	서울 더샵갤러리	여성건축가협회 '나혼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 'Living Community' 심포지엄
축사	2024.10.30.	서울 코엑스	AIoT Week Korea 2024
축사	2024.10.30.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기조강연	2024.11.26.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축사	2024.11.29.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24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축사	2024.12.17.	서울 더 플라자호텔	제2회 한국건설부동산업대상 시상식
인터뷰	2024.12.26.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세종시 인터뷰 '세종시를 말한다' 촬영
주제발표	2025.01.24.	부산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부산시 제1회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
축사	2025.02.19.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	한국건축가협회 신년회
축사	2025.04.03.	건축공간연구원	2024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축사	2025.04.24.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	대한여성건축사회, 2025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회식
축사	2025.05.20.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한국여성건축가협회, 2025 여성건축가 기획전

[특별인터뷰] 권영걸 “헌법정신 구현한 국가상징물 없어…미래지향적 공간도 조성해야”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2024.07.26.(금), 서울경제

“헌법정신 구현한 국가상징물 없어…미래지향적 공간도 조성해야”

권 영 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서울시가 자산관 광화문광장을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가 상징물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가 상징물과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중심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등 국가 상징물을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권영걸 (사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게양한 태극기의 크기를 세우는 방식, 무궁화 형상을 재현한 조형물과 조경, '커지지 않는 물꽃'이라는 작품 이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감대인 건설, 설계자인 전문가, 참여자인 시민이 공론 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김상용 건설부동산부장

에펠탑처럼 미래 가치 고려해 장기적 관점서 기획을
초대형 태극기, 발상 좋지만 작품 적정성 논의 필요
'개방·수평적 도시' 확산…전역에 통합성 부여할 것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게양한 태극기의 크기를 세우는 방식, 무궁화 형상을 재현한 조형물과 조경, '커지지 않는 물꽃'이라는 작품 이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감대인 건설, 설계자인 전문가, 참여자인 시민이 공론 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용 기자 kimyy@sedaily.com

권 위원장은 다른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현재 정신을 구현한 상징물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 상징 공간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 "그러나 미국 워싱턴DC(컬럼비아)처럼 상징성은 비슷한 공간이라도 넓은 개방 공간에서 의미와 효과가 증폭되는 점에서 이미 많은 상징물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국가 상징 공간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과거가 아닌 신(新)인류의 새로운 관념과 경험까지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지향적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8년 제17대 서울시장 출범 10년이 지난 국면에는 건축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큰 계획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용산처럼 계기·수평적 도시' 전환

-최근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 상징 공간에 관한 가장 큰 논의 배경으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남경에서부터 이어온 조선의 중심 공간인 경복궁 관역을 떠나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국민 조직에 대한 구성 체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작용했다. 6·10에 넓은 통치에서 공간이었던 덕분에 현대의 공간에 머무르는 한 조선의 상징력을 뛰어넘지 못했다.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그동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도시 구성 체계를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 역시 여유가 생겼다.

-국가 상징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추진돼야 하나.

△국가 상징 공간은 국격을 대표하는 최상위의 공간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리매김 국추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나라의 역사적 상징성과 시대적 정소적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구현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디에서나 조망할 수 있는 시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으로 국격과 국정 가치가 반영된 대표 공간이야 시민들이 살아 있 랑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국가 상징 공간의 지위를 얻으려면 어떤 공간 조건이 필요한가.

△국가 상징 공간이 유명으로는 먼저 역사·건축·교육의 지향이자나 관계 교통 인프라 등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역사 지향형' 공간이 있다. 두 번째로는 녹지·하천·강역 등으로 자연 정체성과 결부되거나 보존이나 주요의 기능을 가진 '공원 공간형' 공간을 상징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기술·문화·인프라가 집적된 '문화 자산형' 공간이 있다. 공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국가적 가치', 대한민국을 보편타당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국제적 가치'를 가질 때 국가 상징 공간으로 선정될 수 있다.

역사·문화 고려한 공간 구현 필요

-한국은 그동안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지 못했는데.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대한민국이 건국과 이후 산업화·민주화·정보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한 세계가 놀랄 만한 발전을 이뤄왔지만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공간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과거 지향적인 식고방식의 영향이 있다. 1446가 조선 개국 이후의 몇 가지 역사적 전개과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을 반성해야 할 때다. 2018년 동일선언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 서울의 현행 한양성 한번도의 천도(논산)를 염두로 하는 대한민국 수도인 만큼 대한민 역사·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공간 구현이 필요하다.

-광화문광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등 국가 상징물로 적절한가.

△광화문광장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찾는 상징성이 높은 공간이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 관점에서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의 입지 중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 태극기를 소재로 한 대형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기본 발상은 좋다. 다만 기획에서 서울 느낌이 있고 예산에서 참신함이 결여돼 있다. 광화문광장에 게양한 태극기의 것과를 세우는 방식과 무궁화 형상을 재현한 조형물과 조경을 하는 것, 그리고 '커지지 않는 물꽃'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광화문광장에 제안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스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에서 시작된 '광장'은 원래 '무구정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인 공간이다. 프로이드·큐빗·드레퓌스광장·번던먼광장 등 유럽 구석구석 광장 대부분은 가로수나 벤치 같이 그냥 비워 있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등 조선 시대 가치의 상징물로 채워져 있다. 대한민국 현행 정신을 구현한 상징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천년대계 차우철단 우리의 문화적 다양을 국제에고 이해는 근대로 거듭는 서울시의 최적에 놓여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도시를 전쟁기념비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재평가를 받았다. 또 시민들이 석조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에 철골 건축물이 보여준 기계 이미에 정주 막식에지가 시작했다. 이후 에펠탑은 파리와 프랑스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이 됐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국가 상징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원시안으로 기획되고 추진돼야 한다.

국민 일상 속에서 누리는 공간으로

-국가 상징 공간은 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나.

△요즘은 정보기술(IT) 기반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때문에 모든 공간이 콘텐츠로 분리돼야 한다. 콘텐츠화될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은 구태 또는 '올드 패션'으로 치부된다. 국가 상징 공간은 무수한 데이터와 기기의 연결로 인해 시간 혁로 자세가 바뀌어 버린 신인류의 새로운 관념과 경험까지를 고려한 콘텐츠화가 필요하다. 고기의 문화유산에서 콘텐츠를 입어 올라지만 반드시 미래를 향한 정신(DNA)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표근 인스타그램에서 포스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있는 고민이라고 본다. 전 세계인이 보는 소셜미디어(SNS)라고 해서 공개했을 때 미래가 흔들이 변질되고 효과를 잃어 실패하에 한다. 국가 상징 공간을 역사적 유물처럼 바라만 보는 대신 미래를 살아갈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의 국가 상징 공간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서울의 도시 공간 체계의 변화는 지방 소도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국 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성 체계로 변화하는 것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가진 풍부함은 도시 인프라으로 부족한 부분은 녹지다. 자본으로 감수해 부족한 것이 도시 인프라으로 풍부한 것이 녹지다. 이처럼 녹지를 매개로 대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체계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는 국가적 인프라다. 서울 종심의 국가 상징 공간 구축 이후 이어질 전국 지역의 상징 공간 조성은 대한민국 전체에 풍요를 부여하는 국가전략이 될 것이다.

정두수·이지은 기자 kid2@ 성동주 기자

부산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 강연 2025.01.24.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실국장, 지역 주요 공공기관장, 부산 디자인혁신 협의체, 구·군 관계자 등 총 240명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권영걸 위원장은 부산이 세계 제일의 첨단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세부 실행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핵심 정책방향으로 부산의 고유한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범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하며, 표준화·첨단화된 신도심과 자연발생적 무정형성을 지닌 구도심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권영걸 위원장은 또한 디자인을 단순한 심미적 요소가 아닌 도시에 내재된 문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세계의 인재와 기업, 자본을 유치하고, 시민 결속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며 인구 유출 저감을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로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 공간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力說)하였다.

일시/장소	2025.1.24.(목) 14:00 /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외 실·국장, 지역 주요 공공기관장, 부산 디자인혁신 협의체, 구·군 등 총 240명
주제	글로벌 부산의 디자인 펀더멘탈(디자인 부산을 위한 32개의 질문) – 주제발표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좌)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우)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

원주시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2023.10.23.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시 제2기 총괄·공공건축가로 위촉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건축정책 협력체계 마련에 기여하였다.

위원장은 위촉 이후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과 지자체 공공건축 사업이 연계되는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함께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유이화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공공건축가와 중앙정부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국건위의 활동은 지자체 공공건축 품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평가된다.



[(상)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원주시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하) 권영걸 위원장, 원강수 원주시장, 유이화 ITM유이화건축사사무소대표 등 총괄·공공건축가]

부산이니셔티브 포럼 기조강연

2024.11.19.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6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부산, 디자인부산'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먼저 부산이 글로벌도시 조건을 갖췄으나 제조업 수출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공공기관 유치 등의 외생변수보다 부산의 경관과 시민 삶의 질이라는 내생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디자인부산은 디자인서울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며, 부산의 인문지리, 역사문화, 기후풍토, 시민의 형질에 기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을 디자인부산의 우선 과제로 제안하고, 부산을 세계 제일의 첨단 해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시/장소	2024.11.19.(화) 14:00 / BEXCO 제2전시장
참석자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최도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승구 동명대학교 교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주제	글로벌 디자인 도시 부산, 시민행복의 가치를 담다
기조강연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장주영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장, 나건 부산광역시 총괄디자이너,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권태정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표
종합토론	신혁선 부산연구원장(좌장), 최도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승구 동명대학교 교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상필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유진 부산광역시 미래디자인본부장, 박대은 언더독스 파트너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SNS 콘텐츠 홍보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의 SNS를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시리즈물을 기획하여 건축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공공건축 탐방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건축정책의 대중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진한 총괄건축가 콜로키움과 각종 심포지엄 현장 영상부터 목조건축 대중화, 공공건축 탐방, 건축대상 수상작 소개까지 총 21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SNS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전문적인 건축 담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위원장과 각 분야 위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건축 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건축 탐방 콘텐츠



| 도심 속 정원을 찾아, 도시 산책 | 조세린 교수와 함께 걷다

- 가야금 연주자 겸 대학교수 조세린과 함께 서울을 산책하며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공건축과 한옥의 현대적 활용을 통한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



|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찾아, 제주 건축 답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걷다

- 유이화 위원과 함께 섬마을 제주에서 특히 어우러지는 이타미 준의 건축을 살펴보며,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의 의미를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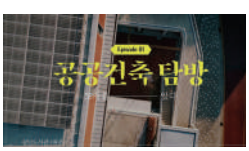
| 건축가의 시선 |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분야 대상 수상작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분야 대상 수상작 : 경기 화성시 시립 장지하나어린이집 설계자 임재용 건축가가 방문해 공공건축의 사회적 의미와 설계 철학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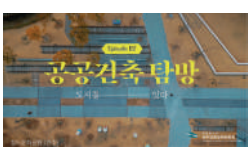
| 건축가의 시선 |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한옥분야 대상 수상작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한옥분야 대상작 서울 은평구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설계자 조정구) 건축가가 콘크리트와 전통 한옥을 결합한 현대적 사찰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 공공건축 탐방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공공건축 -파주 광탄도서관

- 김규린 위원과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 지역민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광탄도서관에서 공공건축의 다층적 역할에 대해 논의



| 공공건축 탐방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공공건축 -진주 철도문화공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규린 위원과 최삼영 총괄계획가, 왕성한 건축가가 현장에서 공공건축의 도시 회복과 연결 역할에 대해 논의

공공건축 탐방 도시를 잇다 - 진도철도문화공원

https://youtu.be/Cf_7olauvEQ?si=YClhdKVfEv9kkeJ_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규린 위원은 2024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진주 철도문화공원을 방문해 공공건축이 단절된 지역사회를 어떻게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살펴보았다.

진주 철도문화공원은 1920년대부터 운영되던 철도역사가 이전한 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부지를 2019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김규린 위원은 최삼영 진주시 총괄계획가와 왕성한 건축가와의 대담을 통해 이러한 철도문화공간의 변화 과정과 가치를 조명하였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70년 된 차량정비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면서도 6.25 총탄 자국 등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한 점이다. 특히 유리 바닥을 통해 과거 정비 공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간의 적층을 시각화한 건축적 접근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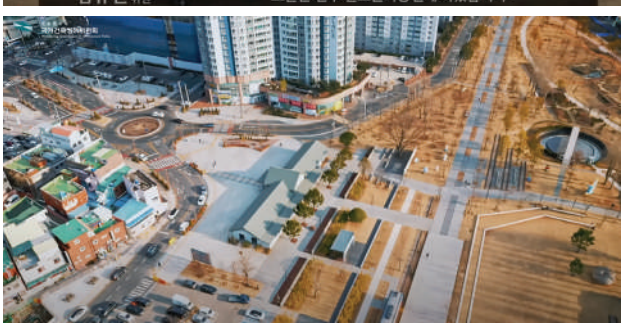
김규린 위원은 이 프로젝트를 좋은 설계자, 기획자, 공공기관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성공 사례로 평가하며, 총괄건축가가 설계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행정과의 소통을 원활히 진행한 점을 핵심 성공 요인으로 언급했다.

영상은 진주 철도문화공원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공공공간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공공건축의 본질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공성"에서 찾고 있다. 일상의 삶과 연결된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된다.









공공건축 탐방 - 건축대상 수상작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https://www.youtube.com/watch?v=dWg45aGH3yw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한옥분야 대상을 수상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은 은평한옥마을 끝자락 진관사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한옥 처마 아래 'ㅁ'자 중정을 품은, 이 건물은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건축언어를 조화롭게 구현하며, 특히 전통 한옥 기둥을 현대적 커튼월로 감싸 단열 효과와 차경 효과를 동시에 창출한 점이 주목받았다.

설계자 조정구 건축가는 전통 목구조와 콘크리트 구조를 결합한 혁신적 접근을 시도했다. 공간구성을 층별로 차별화하여 1층은 개방적인 현대적 구법을, 2층은 전통 목구조와 현대적 스킨의 결합을, 3층은 명상과 수행을 위한 전통 구법을 적용함으로써 기능과 형태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탐방 영상은 이러한 설계 철학을 조정구 건축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도 있게 조명한다. 그는 "한옥이 21세기 건축의 새로운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창의적인 현대한옥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통 건축의 현대적 재해석과 한옥의 미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 고유 가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행사 스케치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년간 개최한 주요 정책 행사를 영상으로 기록·보존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국제심포지엄, 세미나, 콜로키엄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발제와 토론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건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도 핵심 정책 논의 과정과 결과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정책 토론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건축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문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 스케치



지방도시 활성화 국제 심포지엄

-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대학과 지자체 주도의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논의



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House 심포지엄

- 문화·예술·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K-HOUSE 개념 정립과 한옥의 현대적 활용 방안 논의



지방소멸 대응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 순천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학과 구도심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



디지털& 모듈러 건축 심포지엄 스케치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설계·디자인·친환경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듈러 건축과 디지털 건축의 미래 방안을 논의

젊은 건축가 이야기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주목할 만한 젊은 건축가를 만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건축철학과 건축가로 사는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작품에 담아낸 가치를 조명하였다.



젊은 건축가 인터뷰 ① 김영수 (2025.03.17.)

내용 2023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인 김영수 건축가 소개
'이성적 구축, 감성적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담은 김영수 건축가의 수상작 소개



젊은 건축가 인터뷰 ② 조경빈 (2025.03.21.)

내용 2024년에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한 조경빈 건축가 소개
'대영빌라 220', '회색켜',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가의 주요 설계작품 소개



젊은 건축가 인터뷰 ③ 이대규, 김우상 (2025.03.24.)

내용 2022년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한 카인드건축사사무소의 이대규, 김우상 건축가 소개
'서로재', '몽재', '밴드하우스', '7377 하우스' 등 건축가의 주요 설계 작품 소개



젊은 건축가 인터뷰 ④ 박정환, 송상헌 (2025.03.25.)

내용 2022년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한 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의 송상헌, 박정환 건축가 소개
'이사부독도기념관',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종암스퀘어' 등 주요 설계 작품 소개

젊은 건축가 인터뷰 | 김영수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2023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자체 블로그를 통해 2023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인 김영수 건축가를 소개했다. 김영수 건축가는 자신의 건축 철학을 '이성적 구축, 감성적 공간'으로 정의하며, 단순한 형태보다는 비례와 질서를 통해 공간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대표작인 제주 지역의 '나지요네', '수리움' 등에서는 송이석과 같은 지역 재료를 적극 활용하여 장소성을 구현하고, 실용성을 넘어 공간이 전달하는 감성적 가치에 주목한 접근을 보여준다.

젊은건축가상 심사위원회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과 공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구현하는 그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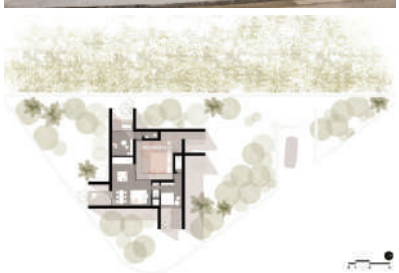
김영수 건축가는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건축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과 실무 경험은 차세대 건축가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5MM빌딩(35MM BUILDING)]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용도 :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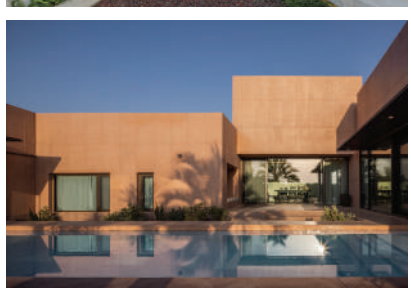
[나지요네(NASILLONNER)]
위치 : 제주시 청수리
용도 : 단독주택(스테이)
준공연도 : 2018년





[수리움(SURIUM)]
위치 : 제주시 청수리
용도 : 단독주택(스테이)
준공연도 : 2022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pcap2019/22379918386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젊은 건축가 인터뷰 | 조경빈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4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4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인 조경빈 건축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조경빈 건축가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절제된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 건축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자신의 건축관을 밝혔다.

그의 대표작인 '회색커', '후암동 반반', '대영빌라 220' 등은 주변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를 통해 겸손하고 차분한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일상의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건축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그만의 접근법이 잘 드러난다.

심사위원회는 조경빈 건축가가 주어진 건축적 상황에서 적정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치열하면서도 꾸준한 자세와 차분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회적 환경을 책임지는 건축가로서 공공성과 감수성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점이 수상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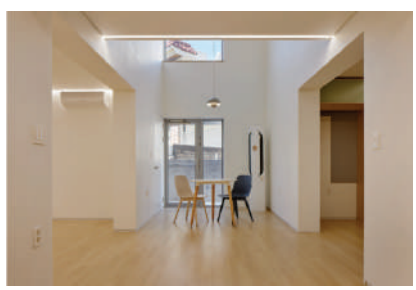
[회색커]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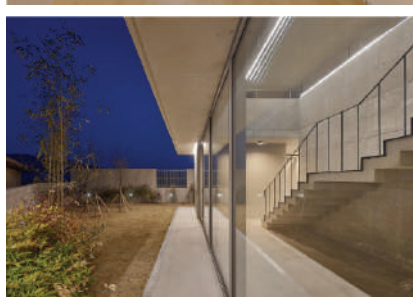
[대영빌라 220]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2022년





[남산동 주민공동시설]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도: 주민공동시설
준공연도: 2022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pcap2019/2238049300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젊은 건축가 인터뷰 | 이대규, 김우상

2022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2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인 이대규, 김우상 건축가를 조명했다. 두 건축가는 '자연스러운 건축'과 '정서적 공간'을 추구하며, '건축은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것에 의존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대지의 다양한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관계 맺도록 중재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표작인 '서로재', '몽재', '벤디드하우스', '7377하우스'에서는 클래식 협주곡의 '카덴차'처럼 예상치 못한 공간적 경험과 설명하기 어려운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시각문화가 지배적인 디지털 시대에 공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공간 체험이 갖는 건축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젊은건축가상 심사위원회는 진지한 작업 태도와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몰입을 통해 일관성 있는 공간 철학을 구축해온 점을 수상 이유로 꼽았다. 이들이 보여주는 '감각적 절제미'와 민간 건축물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건축가 의식'은 효율성 중심의 현대 건축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재]
위치: 강원도 고성군
용도: 숙박시설
준공연도: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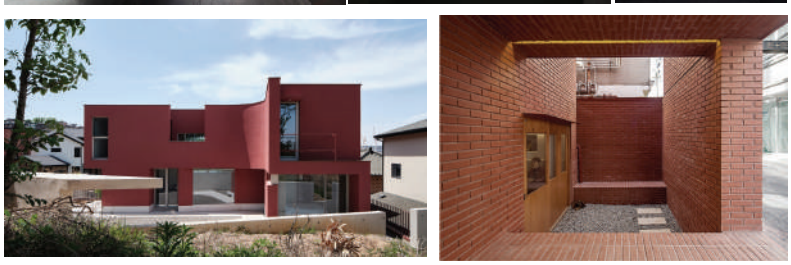


[몽재]
위치: 서울시 종로구
용도: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2021년



(좌) [벤디드하우스(bended house)]
위치: 김포시 양촌읍
용도: 단독주택
준공연도: 2021년

(우)
[7377 하우스]
위치: 서울시 강북구
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공연도: 2018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pcap2019/2238080704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젊은 건축가 인터뷰 | 박정환, 송상헌 (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

2022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네 번째 젊은 건축가 인터뷰를 통해 2022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인 박정환, 송상헌 건축가를 소개했다. '심플렉스(Simplex)'라는 사무소명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단순함 속의 복합성을 추구하며,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을 막론하고 공간의 본질과 맥락을 깊이 탐구하여 사용자 경험 중심의 공간설계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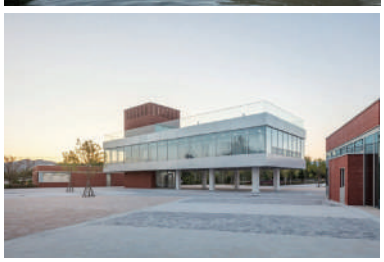
심사위원회는 두 건축가가 한국 공공영역 건축의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해결하며, 정제된 이미지와 세밀한 디테일로 높은 완성도를 구현해내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도시에서 건물이 가져야 할 공공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사부독도기념관',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종암스퀘어', '살롱드파리' 등의 작품들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극도로 단순화한 해결책을 통해 각 대지에 가장 적합한 건축적 답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복잡성을 단순함으로 승화시키는 건축적 사고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사부독도기념관]
위치: 강원도 삼척시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준공연도: 2022년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위치: 강원도 춘천시
용도 :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준공연도: 2022년




[종암스퀘어]
위치: 서울시 성북구
용도: 운동시설
준공연도: 2020년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pcap2019/2238080704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소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개 주요 정책과제에 따른 17개 세부과제의 의미와 성과를 다각도로 소개하여 정책 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책 이해도 향상에 기여했다.
유튜브에서는 권영걸 위원장의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철학과 녹지 민주주의 개념, 목조건축의 미래, 용산공원 조성 방향 등을 영상 콘텐츠로 제시했다. 블로그에서는 분과별 위원 인터뷰를 통해 리본시티, 거리 그린벨트, K-건축 플랫폼, 지방대학 활성화, 목조건축 대중화 등 각 정책과제의 구체적 추진 성과를 상세히 다뤘다.
이를 통해 복잡한 건축정책을 일반 시민과 전문가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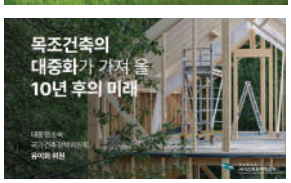
주요 정책과제 살펴보기



왜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인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https://youtu.be/mD_HZwSPswQ?si=7RvIGVreteKnr9Qd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이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제정한 배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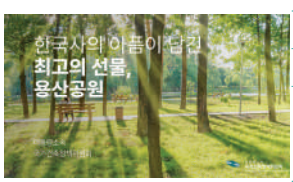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https://youtu.be/NN9xb2XKluE?si=FQyfQzGM5azd6CdP
– 녹지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녹지 향유권 확보를 위한 녹지 민주주의 철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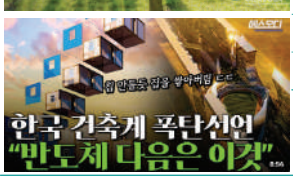
목조건축의 대중화가 가져 올 10년 후의 미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https://youtu.be/OSLs0CtS1ac?si=-EfLytkLKz9Q8kp8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이화 위원이 ‘목조건축의 대중화가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를 주제로 목조건축의 환경 보호 효과, 기후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논의



글로벌부산, 디자인부산을 위한 32개의 질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https://youtu.be/hx9pfWEk_VE?si=LoCmKxKqqBKBrmh0
– 권영걸 위원장 제6회 부산 이니셔티브포럼에 참석해 ‘글로벌부산, 디자인부산’을 주제로 기조강연 진행



용산공원,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https://youtu.be/hGmvqEX9zZY?si=KZ9aboO6gy-FVkPN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종헌 위원이 ‘용산공원,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용산공원의 역사와 시기별 지형 복원, 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인플루언서 SOD 협업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모듈러 주택의 미래와 정책 소개
https://youtu.be/AGEEkXg_Pag?si=99xgzH8lGsf6DLzf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안용한 교수가 인플루언서 SOD와 모듈러 주택 기술의 소개와 향후 전망에 관한 논의

주요 정책과제 살펴보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위한 모색

(1부) https://youtu.be/5Fv8jgU5Blk?si=nEJKsyXG4NCwCrMW

(2부) https://youtu.be/tPWKL-nvrHY?si=IPq1U4xbMerQtajt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주관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에서는 2008년 민간전문가제도 도입 이후 16년간의 성과 고찰과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 모색



지방소멸 대응의 신모델, 리본 시티(RE-BORN CITY)(손진락 위원)

- 소멸위기 지방 도시에 노후주택 개량과 세대 간 셰어하우스 구축, 소규모 거점별 특화 프로그램 도입 등 대응방안으로 세대 통합형 자생력 있는 도시 모델 제시



삶과 문화가 있는 생태문화보도, 거리 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김개천 위원)

- 서울의 도로 다이어트와 덮개공원 등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보행중심 녹색도시로 전환하여 '걷고 싶은 녹지 민주 도시'를 만드는 성과 추진 소개



'ICT 융복합형 K-도시·건축_ ICT기반 K-건축 플랫폼 구축 (이인화 위원)

- 한국 고유의 건축적 특성과 첨단 IT·친환경 기술을 융합한 K-건축의 개념과 글로벌화 전략 제시



지방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변신 (한광야 위원)

- 지방소멸 위기 원인 분석과 함께 지방대학의 원구도심 기능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하 의미와 추진성과 제시



지속 가능한 대안, 목조건축의 미래를 그리다(유이화 위원)

- '목조건축 대중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정책과제 추진 성과 소개

목조건축의 대중화가 가져 올 10년 후의 미래

https://www.youtube.com/watch?v=OSLs0CtS1ac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목조건축의 대중화·목조도시의 활성화'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목조건축의 미래를 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 영상은 한옥과 같은 전통 문화유산 정도로 여겨지던 목조건축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춰, 목조건축이 실제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100㎡ 목조건축을 조성할 때 창출되는 탄소 저감 효과가 400㎡ 소나무 숲이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목조건축의 환경적 가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일본 요코하마 등 고층 목조건축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목조건축의 발전 가능성과 전 세계적 확산 추세를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표준기준 부재, 기술 미비, 전문 인력 부족, 탄소 배출량 정량화 기술 부재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위원회는 전과정 평가(LCA, LCA, Life Cycle Assessment) 시스템 구축과 인센티브 운영기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5, 3월 7일). 목조건축의 대중화가 가져 올 10년 후의 미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비디오]. 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OSLs0CtS1ac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
출처:국립산림과학원 ©박영채



the hybrid construction concept of the office complex, HoHo Next BT South, Vienna
출처:https://monitor.aspern-seestadt.at/hoho-next-bt-sued.htm, ©DERFRITZ

용산공원,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https://youtu.be/hGmvqEX9zZY?si=KZ9aboO6gy-FVkPN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종헌 위원은 '용산공원,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용산공원의 역사와 시기별 지형 복원, 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용산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일본군과 미군 기지로 사용되면서 공간이 분절되고 시간이 단절된 아픔의 땅이다. 그러나 이곳은 본래 둔지미 마을을 비롯한 선조들의 삶터였으며, 남단 기우제 터가 있던 왕의 제사 공간이자 독서당과 용산팔경으로 유명한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세계사의 흐름이 집중된 용산은 서양의 응접실, 러시아의 빼치카, 일본의 다다미, 한국의 온돌 등 동서양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원지형 조사와 역사 연구를 진행하고, 용산공원 정책연구 참여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연구 성과를 검토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용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용산공원의 지향점을 '모든 국민이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의 끊어진 옛길 복원을 통한 공간 연결성 회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경복궁에서 세종로를 거쳐 용산과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조성하여 뉴욕 센트럴파크와 차별화된 역사문화 공원을 구현한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출처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용산공원,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비디오]. 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hGmvqEX9zZY

디지털과 모듈러 건축 - 인플루언서 SOD와 협업

https://youtu.be/AGEEkXg_Pag?si=edt2E53L2LhHfOmz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안용한 위원(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과 인플루언서 SOD의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 동력으로서 모듈러 건축의 혁신성과 정책적 의미를 조명했다.

모듈러 건축은 자재와 부품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脫) 현장 건설공법으로, 통상적인 아파트 건설기간을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콘텐츠에서는 크래프톤 정글 교육연구시설 건설 현장을 소개하며 "반도체 만들 듯이 집을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공장 생산의 정밀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의 모듈러 건축 진출과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해외 진출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관련 기술과 가전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정책과제로 모듈러 건축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기존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을 모듈러 사업에 적합한 발주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토교통부, LH공사, GH공사와 협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탄소배출 저감 등 국가 과제 해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에스오디 SOD. (2024년 12월 20일). "반도체 다음은 이것".. 한국 건축계 폭탄선언ㄷㄷ 전세계 원톱 기술로 대박터졌다. [비디오]. 유튜브. https://youtu.be/AGEEkXg_Pag?si=edt2E53L2LhHfOmz

SNS를 통한 대외 협력과 소통 성과 공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양한 대외 협력과 소통 활동을 온라인 콘텐츠로 공유하여 정책 추진 성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조경가 정영선의 '땅에 쓰는 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통한 건축·조경 분야 전문가 교류, 권영걸 위원장의 일본 방문을 통한 한일 건축정책 협력 확대,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을 통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안 모색 등이 있으며, 이러한 대외 활동 과정의 영상과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특히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슬로건은 반려견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영상을 통해 제주 용담공원과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비전을 친근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전달했다. 이는 전문적인 건축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큐멘터리(땅에 쓰는 시) 영화 상영회 현장

내용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진행된 조경가 정영선의 '땅에 쓰는 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및 좌담회 개최 성과 소개



권영걸 위원장 건축정책 협력 확대 위해 방일

내용 권영걸 위원장의 방일



국립서울현충원 방문 스케치

내용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행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과 민간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국가보훈부장관, 국립서울현충원장 등 각개 인사 참여,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의의 등에 관한 환담 진행



합동 연석회의 스케치

내용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논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슬로건 홍보영상 제작(인플루언서 협업)

내용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슬로건 홍보를 위해 반려견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제주 용담공원 등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생태도시 공간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 공유



장소탐방 –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용 반려견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후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만들기 비전을 실현한 성과를 홍보

[부록-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행사목록

구분	주요 내용
제7기 국건위 민간위원 간담회	· (時/所) 2023.04.14.(금) / 서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내 용) 제7기 위원회 정책아젠다, 운영방안 및 민간위원 분과배정 등 논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5명, 기획단 직원 등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현장방문	· (時/所) 2023.06.20.(화)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일원 · (내 용) 제7기 위원회의 정책 비전('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관련 정책 발굴 및 구체화 등 논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9명, 기획단 8명
용인영덕 경기행복 주택 현장방문 및 스마트 모듈러 포럼 개최	· (時/所) 2023.07.26.(수) /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수원컨벤션센터 · (내 용) 제7기 위원회의 정책비전('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 관련 정책 발굴 및 구체화 등 논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7명, 기획단 12명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	· (時/所) 2023.09.11.(월) / 서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내 용) 국가상징공간 및 협의체 운영(안) 발표, 업무 협약식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 국건위 민간위원 등 20명
목조건축정책 추진 현장 방문 및 심포지엄 개최	· (時/所) 2023.10.12.(목) /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배재대 국제교류관 · (내 용) 목조정책추진과 관련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방문 및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엄 개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8명, 기획단 9명, 기타 115명(국토부, 산림청, 산림진흥원, 목조협회, 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등)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및 현장답사(대구)	· (時/所) 2023.11.03.(금) ~ 04.(토) / 대구시 무영당, 경상감영달성길 · (내 용) 대학포럼 총장협의체 발족, 도심캠퍼스 타운 심포지엄, 도심캠퍼스 타운 조성관련 원도심 답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8명, 기획단 8명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및 현장답사(전주)	· (時/所) 2023.12.07.(목) / 전주 팔복예술공장,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 (내 용) 폐교 및 유휴공간 재생사례 답사 및 지방소멸 관련 심포지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6명, 기획단 7명, 발제 및 토론자 8명
국가상징공간 콘퍼런스	· (時/所) 2023.12.12.(화) /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 · (내 용)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국건위 민간위원, 관련 학·협회 회원, 학생 등 약 130명

구분	주요 내용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국제세미나)	· (時/所) 2024.02.01.(목)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 (내 용)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 및 의미 공유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시민 등 70여명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 (時/所) 2024.04.30.(화) / 백범김구기념관 · (내 용)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지자체 총괄건축가 등 약 100여명
정책조정분과 워크숍 및 정책 현장 방문	· (時/所) 2024.05.09.(목) ~ 05.10.(금) / 부산광역시 일원 · (내 용) 제도혁신소위 제도개선 과제 논의,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국가시범도시) 및 벡스코 견학·현장방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현선 · 조승구·이인화·안용한·김규린·김소라·박성신·손진락 위원, 기획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 (時/所) 2024.06.14.(금) / 순천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 · (내 용)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순천시, 한국도시설계학회, 순천시문화재단 등 100여 명
디지털 건축과 미래 건설산업 관련 세미나	· (時/所) 2024.07.05.(금) /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 (내 용) 건축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건축산업의 미래, 스마트&모듈러 건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00여 명
미래교육플랫폼 학교 조성방안 연구 관련 워크숍	· (時/所) 2024.09.24.(화) / 버텍스코리아비즈니스센터(S타워 22층) · (내 용) 미래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학교 변화방향과 쟁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담당 공무원, 학교설계 참여 건축가 등 30여 명
지방소멸 대응 국제 심포지엄	· (時/所) 2024.10.24.(목) / 원주시(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 · (내 용) 위원회 정책과제(지방소멸 대응)의 구체화 전략 마련을 위한 해외 중소도시 전문가 초청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국토부, 건축사 협회, 건축학회 등 200여 명
K-HOUSE 컨퍼런스	· (時/所) 2024.11.20.(수)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내 용) 문화·예술·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K-HOUSE 개념 소개 및 K-HOUSE가 세계의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 도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국토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100여 명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 건축가 콜로키움	· (時/所) 2024.11.28.(목) / 메종글래드 제주 · (내 용)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 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국토부, 지자체 총괄 · 공공건축가 등 250여 명

[부록-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과제 목록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담당위원)
국가상징 공간	정책 과제	1. 국가상징공간의 인지와 표상	정진국 위원
		– 국격 상징화의 이론적 기반 구축	
		2. 용산국가공원 조성 관련 계획	김종헌 위원
		(연구) 시기별 지형변화 분석을 통한 용산공원조성 정책방향 검토 연구 –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역사·인문·사회적인 가치 심화 – 용산공원의 원지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3차원 기록화 – 시기별 3차원 지형변화분석을 통한 용산공원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파악 – 용산공원에 대한 자료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3. 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개발 등 관련 개발모델의 전국적 확산	조세환 위원
		– 용산국가공원 주변부 공원 – 도시결합형 융복합 개발을 통한 '스마트 네오 가든 시티 (Smart Ned Garden City : SNGC)' 조성 – 용산 '스마트 네오 가든 시티(SNGC)' 개발 모델의 전국 도시 적용 및 조성	
		4. 국가상징 거점공간 조성	김세훈 위원
		(연구)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 – 국가상징공간의 개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 및 심화 정리 –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우선순위 검토 – 국가상징공간의 유형별 조성방안 도출 및 결과 활용	
		5. 지역별 상징 국가도시공원 조성	조경진 위원
		(연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국가도시공원의 개념 심화 발전 – 국가도시공원 개념에 따른 지정기준 및 유형 수립 – 국가도시공원의 국비지원 타당성 검토 – 유형에 따른 지원 및 운영 방법 제시	
ESG + A	정책 과제	6. 거리 그린벨트(Street Green belt)	김개천 위원
		(연구) 거리 그린벨트 조성방안 연구 – 도로구조 및 환경관련 법령, 제도 검토 – 거리 그린벨트 조성방안 제시 – 환경성 제고 방안 및 국내 적용 및 실현방안 검토 – 선도 프로젝트 사업 제시 및 예시 작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담당위원)
ESG + A	정책과제	7. 기후변화 대응 도시변화	조세환 위원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문화 환경 및 도로 구조 개선	
		8.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김소라 위원
		(연구)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건축 조성방안 연구 - 교육방식 변화에 따른 장·단기 공간 변화 수요 발굴 - 학교공간 혁신방안 및 전략 도출 - 학교건축 추진사업 개선 및 내실화 방안 - 학교공간 혁신을 위한 실행 장·단기 전략	
		9.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	유이화 위원
		(연구)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내 목조건축의 최근 동향 등 분석 - 해외 도시형 목조건축 관련 최근 동향 등 분석 - 도시형 목조건축 현행 법령 및 제도 검토 -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방안	
ICT 융·복합형 K-도시·건축	정책과제	10. 스마트 한옥의 대중화	김현선 위원
		(연구) 스마트 K-HOUSE 활성화 및 시장확대 방안 연구 - 한옥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한옥의 문화·역사성 파악을 통한 특성, 한옥의 우수성 등 정립 - 한옥과 문화·예술·디자인·ICT 융합 방안 - 스마트 K-HOUSE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및 로드맵 제시	
		11.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안용한 위원
		- 모듈러 건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및 해외 진출 방안	
		12. ICT 기반의 K-건축 플랫폼 구축	이인화 위원
		(연구) ICT 기반 스마트 그린 'K-건축 플랫폼' 개발 및 수출전략 기획연구 - 첨단 ICT/AI 기반 스마트그린 건축기술 활용 선도 사례 조사 - 행동경제학적 측면에 근거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 - 건축 용도별 ICT 기반 스마트그린 'K-건축 플랫폼' 기준 설정 - 'K-건축 플랫폼' 테스트베드 운용 방안 로드맵 제시 - 'K-건축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방안 및 홍보 방향성 도출	
		13. 스마트건설 기술 환경구축	조승구 위원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담당위원)
지방소멸 대응	정책 과제	14. 대학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한광야 위원
		(연구)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표준사업 방안 연구 -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과 시사점 도출 및 대안 제시 - 협력 시나리오 분석, 참여 주체별 역할·기대효과·거버넌스 분석 및 제안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사업 방안 제시	
		15. 폐·유휴공간 재생으로 지역 거점화	박성신 위원
		(연구) 폐·유휴공간 지역 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 지역의 폐·유휴공간의 현황, 관련 정책 및 제도와 사업의 성격 파악 - 델파이조사를 위한 전문가 선정 및 델파이조사 실시 - 폐·유휴공간 공간전략 과제 도출 - 폐·유휴공간 지역 거점화 실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제안	
		16.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김규린 위원
		- 지역 유형에 대응하는 공공건축과 사업유형의 개발	
		17. 지속 가능한 농 · 어촌마을 구축	손진락 위원
		- 세대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리본 시티(RE-BORN CITY) 구현	
		18.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개발	권영걸 위원장
		(연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학도시 모델 개발 - 해외 대학도시 특성 분석 - 국내 대학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내 대학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관련 전문가 및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대학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 지방소멸 대응형 대학도시 모델 제시	
제도혁신 소위		19.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ESG+A 분과와 연계)	권영걸 위원장
		(연구) 녹지 민주주의 이념 및 확산 전략 연구 - 녹지 민주주의 이념 정의 및 고찰 -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 및 모델 개발 등 - 도시설계, 건축·조경 설계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 신설방안 구체화 등	
		20. 모듈러 주택 활성화 (ICT 융·복합형 K-도시·건축과 연계)	안용한 위원
		(연구)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철골구조 등 다양한 구조에 대한 장수명 주택 정의 검토 - 표준시방서 등 기반의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개선방안 도출 - 내구성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 및 배점표 신설방안 구체화	

[부록-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참여 행사

구분	일시	장소	행사명
축사	2023.04.28.	부산 벡스코	2023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축사	2023.05.11.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대한여성건축사회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축사
인사말	2023.06.13.	서울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건축발전간담회
건배사	2023.09.01.	서울 어니언 안국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만찬
축사	2023.10.11.	서울 코엑스	2023 AIoT진흥주간 개막식
축사	2023.10.20.	서울 열린송현 녹지광장	제19회 대한민국 건축의 날
축사	2023.10.25.	서울 문화역서울 284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
축사	2023.11.02.	서울 래미안갤러리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심포지엄
축사	2024.03.05.	서울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 · 취임식
축사	2024.03.21.	건축공간연구원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면담	2024.06.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면담
축사	2024.07.23.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계-국토부 공동컨퍼런스
축사	2024.09.05.	아트하우스 모모	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축사
시상	2024.10.08.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제20회 건축의 날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1점
축사	2024.10.23.	서울 더샵갤러리	여성건축가협회 '나혼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Living Community' 심포지엄
축사	2024.10.30.	서울 코엑스	AIoT Week Korea 2024

구분	일시	장소	행사명
축사	2024.10.30.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기조강연	2024.11.26.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축사	2024.11.29.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24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축사	2024.12.17.	서울 더 플라자호텔	제2회 한국건설부동산업대상 시상식
인터뷰	2024.12.26.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세종시 인터뷰 '세종시를 말한다' 촬영
주제발표	2025.01.24.	부산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부산시 제1회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
축사	2025.02.19.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	한국건축가협회 신년회
축사	2025.04.03.	건축공간연구원	2024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축사	2025.04.24.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	대한여성건축사회, 2025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회식
축사	2025.05.20.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한국여성건축가협회, 2025 여성건축가 기획전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한 사람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위원명은 가나다순으로 명시

성명		소속	주요경력	활동기간	소속분과 (소분과·소위)
권영걸 위원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초대회장	2023.3.27. ~ 2025.3.26.	위원장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 명예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 • LH 청렴시민감사관	2024.10.31. ~ 2026.10.30.	정책조정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권경현		용산법률 대표변호사	• 조달정책심의위원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 LH국민편익증진위원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위원	2024.10.31. ~ 2026.10.30.	정책조정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김개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 국민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장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명예회장	2023.3.27. ~ 2025.3.26.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 건축문화진흥 (ESG+A, 분과위원장)
김규린		좋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15대 회장 • 행복중심복합도시/충청남도/경상북도 공공건축가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23.3.27. ~ 2025.3.26.	건축문화진흥 (지방소멸 대응)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 서울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총괄기획가 • 유진그룹 (주)동양사외이사	2023.3.27. ~ 2025.3.26.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성명		소속	주요경력	활동기간	소속분과 (소분과·소위)
김소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 서울시 도시 재정비 위원회 (2024~현재) • 평택 고덕 신도시 MP 위원 (2010~현재)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 (2020~2022)	2023.3.27. ~ 2024.12.26.	건축문화진흥 (ESG+A)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저탄소사회를 지향하는 목조건축 협회 회장 •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관장 • 용산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2023.3.27. ~ 2025.3.26.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김현선		홍익대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	• (재)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회장 •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 • (전)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교수 •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2023.3.27. ~ 2025.3.26.	정책조정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분과위원장) · 제도혁신 소위 (분과위원장)
박성신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KSNU 지역재생연구센터 센터장 • 대한건축학회 위원장 •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제7기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2023.3.27. ~ 2024.12.4.	건축문화진흥 (지방소멸 대응)
손진락		화성 건축사사무소 대표	•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장	2023.3.27. ~ 2025.3.26	건축문화진흥 (지방소멸 대응)
안용한		한양대 건축공학 교수	• 한양대 ERICA 건축공학전공 교수 • 한양대 ERICA 공학대학교무부학장 • 한양대 ERICA 인공지능 건설기술연구센터장 • 한양대 ERICA 조기취업형계약학과대학원 부단장	2023.3.27. ~ 2025.3.26.	정책조정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 제도혁신 소위
유이화		ITM 유이화건축사 사무소 대표	• 이타미준 건축문화재단 이사장 • 원주시 총괄 건축가 • 유동룡 미술관 관장 • 서울디자인 2024 큐레이터	2023.3.27. ~ 2025.3.26.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 건축문화진흥 (ESG+A, 분과위원장)

성명		소속	주요경력	활동기간	소속분과 (소분과·소위)
이인화		도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2023.3.27. ~ 2025.3.26.	정책조정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 제도혁신 소위
정진국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한국건축역사학회 부회장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무총장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2023.3.27. ~ 2025.3.26.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 한국조경학회장 •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23.3.27. ~ 2024.12.26.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 한양대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교수 •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 • 용산국가공원포럼 명예의장	2023.3.27. ~ 2025.3.26.	국토환경디자인 (국가상징공간, 분과위원장) · 건축문화진흥 (ESG+A, 분과위원장)
조승구		동명대 건축대학 교수	• 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 • 동명대학교 부총장 •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이사 • 국제건축가연맹(UIA) 집행위원	2023.3.27. ~ 2025.3.26.	정책조정 (ICT 융합형 K-도시 · 건축) · 제도혁신 소위
한광야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해방촌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 한국도시설계학회 상임이사	2023.3.27. ~ 2025.3.26.	건축문화진흥 (지방소멸 대응, 분과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구분	성명	원소속	직급	근무기간
단장	엄정희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2021.03.~2023.02.
	이정희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2023.02.~2023.09.
	이진철(직무대리)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2023.09.~2023.12.
	이우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2023.12.~2024.07.
	이진철(직무대리)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2024.07.~2024.09.
	장우철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2024.09.~2025.04.
	문석준(직무대리)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2025.04.~
팀장	권유정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서기관	2022.08.~2023.12.
	공경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서기관	2023.12.~2024.06.
	김희천	국토교통부	서기관	2024.07.~
직원	강맹화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2022.04.~2024.11.
	장동환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2025.01.~
	김정란	국토교통부	행정주사	2020.07.~2023.07
	김은실	국토교통부	행정주사보	2023.04.~2024.11.
	허성현	국토교통부	공업주사	2024.10.~
	고민정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2022.08.~2023.07.
	육미경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2023.08.~2024.02.
	오수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2024.02.~
	박소정	서울특별시	지방시설사무관	2023.01.~2025.01.
	우종우	서울특별시	지방시설사무관	2025.01.~
	김경훈	부산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2023.01.~2024.01.
	현지영	부산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2024.01.~2025.01.
	김영란	부산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2025.01.~
	최한주	인천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2022.08.~2023.07.
	서영국	인천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2023.07.~2024.07.
	박철규	인천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2024.07.~2025.01.

구분	성명	원소속	직급	근무기간
	백선경	인천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2025.01.~
	한효종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설사무관	2025.01.~
	정의정	경기도	지방시설사무관	2023.01.~2024.01.
	권순식	경기도	지방시설사무관	2024.01.~2025.01.
	곽재민	경기도	지방시설사무관	2025.01.~
	구기명	충청남도	지방시설사무관	2023.01.~2024.01.
	신태순	충청남도	지방시설사무관	2024.01.~2025.01.
	안동수	충청남도	지방시설사무관	2025.01.~
	장기정	경상남도	지방시설사무관	2023.01.~2023.08.
	김형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설주사	2023.06.~
직원	노태극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위원	2023.01.~2024.01.
	윤홍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위원	2024.01.~
	박태홍	건축공간연구원	전문위원	2023.01.~2024.01.
	류수연	건축공간연구원	전문위원	2024.01.~2025.01.
	유제연	건축공간연구원	전문위원	2025.01.~
	김현우	국토교통부	사무원	2011.02.~
	유호걸	국토교통부	운전원	2011.12.~
	이승경	국토교통부	비서	2021.08.~2023.06.
	서채은	국토교통부	비서	2023.07.~2023.10.
	한지영	국토교통부	비서	2023.11.~2023.11.
	김소영	국토교통부	비서	2023.1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위촉일
1	강성덕	(주)충주산업	대표	2024.02.14.
2	권혁례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2024.02.14.
3	김영수	㈜엠투파워	대표	2024.02.14.
4	김정곤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부	명예교수	2024.02.14.
5	김천수	용산문화원	연구실장	2024.02.14.
6	김형주	인터씨티그룹	대표	2024.02.14.
7	김홍렬	(주)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전무	2024.02.14.
8	나 건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2024.02.14.
9	노봉호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2024.02.14.
10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2024.02.14.
11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2024.02.14.
12	심주영	퍼블릭 어라운드(주)	대표	2024.02.14.
13	여화수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2024.02.14.
14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2024.02.14.
15	이승택	열린도시연구소	대표	2024.02.14.
16	이우연	(주)토펙엔지니어링	전무	2024.02.14.
17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	2024.02.14.
18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2024.02.14.
19	최인규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2024.02.14.
20	최재훈	TBO 헬스케어	대표	2024.02.14.
21	최종천	(주)제이앤제이건축사사무소	대표	2024.02.14.
22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2024.02.14.
23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24.02.14.
24	하기주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24.02.14.
25	허 훈	서울시의회	의원	2024.02.14.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성과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

발행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행일 2025.07.

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